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KINU 연구총서 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종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 이용재 | 윤정현 | 정승호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연구책임자

이재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용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정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승호(인천대 교수)



KINU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KINU 연구총서 23-15

| | |
|---------|---|
| 발행일 | 2023년 12월 30일 |
| 저자 | 이재영, 이용재, 윤정현, 정승호 |
| 발행인 | 김천식 |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 편집인 | 국제전략연구실장 |
| 등록 | 제2-02361호 (97.4.23) |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 전화 |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
|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 |
| 기획·디자인 |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
| 인쇄처 | 명문인쇄공사(02-2079-9200) |
| I S B N | 979-11-6589-156-5 93340 |
| 가격 | 16,000원 |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11

Chapter I

서론 | 이재영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26

Chapter II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이론과 사례 31

1. 미중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 이론(이재영) 33
2. 섹터·규범별 미중 공급망 재편 사례(윤정현·이재영) 56

Chapter III

미중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재편 요인 99

1. 공급망 재편 요인 분석: 무역 기대와 글로벌 가치사슬(이재영) 101
2. 대외 요인: 미중 관계 구조와 인식 변화(이재영·윤정현) 136
3. 대내 요인: 국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념, 이익, 제도(이재영·윤정현) - 158

Chapter IV

중러북 경제 관계 변화와 한반도 ————— **181**

1. 중러 경제 관계 밀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용재) ————— 183
2. 중러북 경제긴밀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정승호) ————— 213
3. 중러북 경제협력 전개 양상 전망(정승호) ————— 244
4. 중러북 경제변화와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이용재) ————— 253

Chapter V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안보 외교 ————— **275**

1. 중러 경제 관계 밀착 관련 한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이용재) ————— 277
2.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윤정현) ————— 291
3. 미중공급망 재편과 남북경협 방향(정승호) ————— 307
4. 한국의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이재영) ————— 322

참고문헌 ————— **34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67**

〈표 II-1〉 2009~2023년 미중의 상대국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조치 42

〈표 II-2〉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 관계와의 관련성 54

〈표 II-3〉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2.8.9.)의 주요 내용 72

〈표 II-4〉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현재 시행·부과한 중국기업의 강제노동
관련 인도 보류 명령 건수 順 제품의 종류 96

〈표 III-1〉 GDELT 데이터 코드 설명 103

〈표 III-2〉 2016~2023년 3월 미중 관계 QuadClass 구두·실질적 위협
사건량 순위별 CAMEO 이벤트 코드 종류 111

〈표 III-3〉 2016~2023년 3월 중미 관계 QuadClass 구두·실질적 위협
사건량 순위별 CAMEO 이벤트 코드 종류 112

〈표 III-4〉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관련 상위 키워드 빈도표 116

〈표 III-5〉 미중 관계 부정적인 보도량 많은 주요 언론사 순위 125

〈표 III-6〉 회귀모형 결과 보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 톤 .. 129

〈표 III-7〉 회귀모형 결과 보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 톤 .. 131

〈표 III-8〉 공급망 정책추진 1주년 보고서(2022.2.) 주요내용 141

〈표 III-9〉 중국의 수출통제 보복 제재 사례와 제재 가능 품목 149

〈표 III-10〉 최근 중국의 무역 투자 공급망 관련 법률 및 규정 발표 내용 .. 177

〈표 IV-1〉 EU 대러시아 수출금지 상품 186

〈표 IV-2〉 EU 대러시아 수입금지 상품 187

〈표 IV-3〉 러시아의 중국상품 수입량 변화 192

〈표 IV-4〉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 193

〈표 IV-5〉 러시아 가전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화 194

〈표 IV-6〉 러시아 자동차 시장점유율 변화 195

〈표 IV-7〉 세계 주요국의 군수품 수출액 196

| | |
|---|-----|
| 〈표 IV-8〉 러시아 군수품 주요 수입국 | 197 |
| 〈표 IV-9〉 주요국의 탄소집약도 변화 | 207 |
| 〈표 IV-10〉 북한의 경제성장과 무역액 추이 | 214 |
| 〈표 IV-11〉 북한 대외무역에서 주요국의 비중 추이(1962~2018년) | 217 |
| 〈표 IV-12〉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무역 분야 주요 내용 | 219 |
| 〈표 IV-13〉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2016~2023년) | 221 |
| 〈표 IV-14〉 최근 북한의 10대 수출 품목 변화 | 223 |
| 〈표 IV-15〉 최근 북한의 10대 수입 품목 변화(2016~2022년) | 224 |
| 〈표 IV-16〉 가공단계별 분류(BEC)에 따른 북한의 대중 수입(2016~2022년) | 225 |
| 〈표 IV-17〉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2016~2021년) | 226 |
| 〈표 IV-18〉 러시아의 2021년 주요 수출입 품목 | 229 |
| 〈표 IV-19〉 중북, 러북관계 GDELT 데이터 요약통계량 | 233 |
| 〈표 IV-20〉 중북 간 사건유형별 주요 CAMEO 이벤트 코드와 개수 | 237 |
| 〈표 IV-21〉 러북 간 유형별 주요 CAMEO 이벤트 코드와 개수 | 241 |
| 〈표 IV-22〉 중러북 간 가능한 경험 시나리오 | 247 |
| 〈표 IV-23〉 신냉전과 냉전의 유사점과 차이점 | 260 |
| 〈표 V-1〉 한국 배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변화 | 280 |
| 〈표 V-2〉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 286 |
| 〈표 V-3〉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 288 |
| 〈표 V-4〉 한미일 주요기업의 탈중국-베트남 이전 사례 | 313 |
| 〈표 V-5〉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현황 | 315 |
| 〈표 V-6〉 베트남의 WTO가입과정 | 317 |
| 〈표 V-7〉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 세계은행의 다자간 신탁기금 활용사례 | 319 |
| 〈표 V-8〉 북한의 장기(T+25) 인력수요 전망 | 321 |
| 〈표 V-9〉 국가별 공급망 실사법 현황 | 336 |

<그림 II-1> 2009~2023년 전 세계 무역 관련 정부 개입 40

<그림 II-2> 2009~2023년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종류 41

<그림 II-3> 세계 대중 여론 조사에서 미국(X축) 혹은 중국/러시아(Y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나라들 분류 45

<그림 II-4> 가상의 지정학 블록 내부와 외부 무역 47

<그림 II-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안보 관계 경로 분석 틀 55

<그림 II-6> 기술품목에서 공급망-표준경쟁으로 확장되는 미중 경쟁 59

<그림 II-7> 중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기업별 D램과 낸드플래시 점유율 74

<그림 II-8> 글로벌 및 지역별 배터리 수급 현황 77

<그림 II-9> 세계 배터리 공급 프로세스의 핵심단계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77

<그림 II-10> 중국 기업의 글로벌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배터리 점유율 80

<그림 II-11> 북미지역 배터리 공장 가동 현황(2022년) 81

<그림 II-12> 최근 무역 관련 환경 정책의 증가 추세 90

<그림 II-13>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현재 시행·부과한 중국기업의 강제노동
관련 인도 보류 명령 연도별 건수 변화 95

<그림 III-1> 2016~2023년 3월 미중/중미 관계 전체 데이터양 변화 102

<그림 III-2>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 갈등과 무역정책 불확실성 106

<그림 III-3> 미중 정치 관계 추세 변화 107

<그림 III-4> 2016~2023년 3월 미중 간 전체 이벤트 톤(tone) 평균 변화 108

<그림 III-5> 2016~2023년 3월 미중/중미 관계 CAMEO 이벤트 전체 코드별 사건량 109

<그림 III-6> 2016~2023년 3월 미중(상단)/중미(하단) 관계 QuadClass
구두·실질적 위협 CAMEO 이벤트 코드별 사건량 변화 110

<그림 III-7> 미중(상)/중미(하) 관계 빈도수 높은 단어의 워드클라우드 ... 118

<그림 III-8> 미중/중미 관계 빈도수 높은 단어의 의미연결망 119

<그림 III-9> 미중(상)/중미(하) 관계 빈도수 높은 단어의 중요 날짜별 대응분석 121

| | |
|---|-----|
| 〈그림 Ⅲ-10〉 중미 관계 빈도수 높은 단어의 다차원척도 | 122 |
| 〈그림 Ⅲ-11〉 미중 관계 빈도수 높은 단어의 주요 언론사별 대응분석 | 124 |
| 〈그림 Ⅲ-12〉 2016~2023년 3월 미국(Actor 1)과 중국/러시아/한국/북한 간 전체 이벤트 톤(tone) 변화 비교(-) | 127 |
| 〈그림 Ⅲ-13〉 2016~2023년 3월 중국(Actor 1)과 미국/러시아/한국/북한 간 전체 이벤트 톤(tone) 변화 비교(-) | 128 |
| 〈그림 Ⅲ-14〉 미중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33 |
| 〈그림 Ⅲ-15〉 한국, 러시아, 북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134 |
| 〈그림 Ⅲ-16〉 미중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 | 135 |
| 〈그림 Ⅲ-17〉 한국, 러시아, 북한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 | 135 |
| 〈그림 Ⅳ-1〉 중러 간 ‘시베리아 파워2’ 송유관 | 199 |
| 〈그림 Ⅳ-2〉 최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2018~2023년) | 227 |
| 〈그림 Ⅳ-3〉 러시아의 실질 수출입 규모 추이(2010~2021년) | 228 |
| 〈그림 Ⅳ-4〉 중북 간 Goldstein Scale 연도별 평균 추이 | 235 |
| 〈그림 Ⅳ-5〉 이벤트 유형별 중북 간 개수의 변화 추이(QuadClass 기준) | 236 |
| 〈그림 Ⅳ-6〉 러북 간 Goldstein Scale 연도별 평균 추이 | 238 |
| 〈그림 Ⅳ-7〉 러북 간 유형별 이벤트 개수의 변화 추이(QuadClass) | 239 |
| 〈그림 Ⅳ-8〉 북한의 대중수출 상대 가격지수 추이 | 250 |
| 〈그림 Ⅳ-9〉 북한의 대중-대한국 가공무역 수출고도화지수 추세 | 253 |
| 〈그림 Ⅳ-10〉 중국의 대미국 무역 변화 | 254 |
| 〈그림 Ⅳ-11〉 북중 무역 변화 | 271 |
| 〈그림 Ⅴ-1〉 중국의 대북투자: 2013~2018년 | 309 |
| 〈그림 Ⅴ-2〉 중국의 전체 수출, 수입 중 CLMV국가의 비중 | 310 |
| 〈그림 Ⅴ-3〉 베트남의 상품수출액과 FDI 순유입액 추이 | 314 |
| 〈그림 Ⅴ-4〉 ‘알타시아(Altasia)’의 제조업 노동 비용(시간당 달러), 전체 노동력 수, 고등 교육을 받은 핵심 취업 연령 성인 수, 대미 재화 수출(십억 달러) | 331 |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미중 간 무역, 첨단기술, 공급망, 인권, 군사 안보 등 영역에서 갈등과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을 통한 편 가르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 한미일/중러북 신냉전 구도와와의 연관성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 디커플링 현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중 공급망 재편이 한반도 지정학·지경학에 초래하는 결과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특히 대북제재 실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구도와 중러북 안보-경제 관계 사이 현실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이론적 설명과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미중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재편에서 산업 섹터, 가치와 규범, 중러북 경제블럭화를 중심으로 여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안보 외교 전략의 구체적인 대응·협력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에 관한 사례 비교 분석,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 사례 분석,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 연구, 그리고 무역 및 산업 공급망 데이터 분석이다. 단 보완적인 방법으로 미중의 전반적인 갈등 관계와 공급망 갈등과 관련이 있는 GDELT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GDELT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중 갈등 중 비관적인 무역 기대를 도출하고, 그러한 무역 기대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참여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우선 미중의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무역 효과 간 관계를 탐색한 후, 주요 섹터와 가치·규범의 영향 요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중 관계 구조·인식의 대내외적 영향 요인, 고위-저위기술 간 공급망 재편 메커니즘으로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라는 ‘삼중 요인’을 통해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느슨한 관계 혹은 블록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다.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구도가 고위기술 섹터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 블록화를 촉진한다면, 중러북은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대응과 제재 무력화를 위해 더욱 밀착할 것이고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미중 경쟁 구도가 저위기술 섹터의 디리스킹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중러북의 느슨한 경제-안보 관계를 초래한다면 섹터(기술)나 분야별로 중러북은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을 선호할 것이고 제재 무실화를 위한 협력도 느슨해져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이 주도하는 공급망·안보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과 견제가 강해질수록 중국은 공급망에서 대북/대러 영향력을 확대해 이를 대미 관계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의 대북/대러 압박과 봉쇄가 강해질수록 러북은 경제-안보 관계 밀착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협박하고 실제 필요한 안보·경제적 이익을 교환할 것이다. 두 번의 경로를 거쳐 결과적으로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는 블록

화된다. 다른 한편 미국과 서방이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규범 기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중러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장벽이 거의 없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가치·규범 측면에서 참여하기가 더 쉬운 중국이 구축한 자체 공급망에 편입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다.

주제어: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미중 무역 전쟁, 미중관계, 경제안보, 지정학, 지경학, 국가 책략, 제재, 중러북 삼각관계, 경제블록화, 디커플링, 디리스팅



Strategies to Respond to US-China Competition over Supply Chain Reshaping and China-Russia-North Korea's Changing Economic Relations

Strategic competition and tension are escalating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reas including trade, supply chain, military security, high technology, human rights, and others. Particularly, as the US and China start choosing countries as their own side by reshaping their respective supply chain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is supply chain reshaping is interrelated to a newly emerging Cold War structure of South Korea-US-Japan and China-Russia-North Korea. Thus, this study mainly examine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S-China rivalry over supply chain reshaping, and US-China decoupling'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Specifically, this study explains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outcome that US-China supply chain reshaping would cause on the Korea Peninsula in connection with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long with analysis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su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realistic paths to take between US–China competition over supply chain reshaping and China–Russia–North Korea's security and economic relations, with an intention of building an aligned global community to facilitat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lays out theoretical explana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US–China competition over supply chain restructuring, followed by examination on correlation between US–China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n, multiple cases are compared and analyzed that mainly include industry sectors, along with values and norms regarding supply chains, China–Russia–North Korea economic bloc amid reshaping supply chains driven by the US and China,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will be explored. Lastly, this study presents South Korea's supply chain strategies and specific plans for response and cooperation as part of its economic security–diplomatic strategies.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US and China's reshaping supply chains, case study of China–Russia–North Korea's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study of Korea's economic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ies, and trade and industry supply chain data analytics were mainly deployed as major study methods. The GDELT data analytics derives a negative

trade expectation amid US–China conflict, and also explains the correlation between such trade expectation and influence and participation played out by the Korean Peninsula's stakeholders in the global value chain.

Lastly, this study's analysis framework explores the correlations between negative security effect and economic and trade effects of the US and China, and then breaks down influencing factors across major sectors as well as value and norms regarding supply chains. Also, it explores channels through which “triple factors”—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ing factors on structure and perceptions of US–China relationship; decoupling and derisking as supply chain restructuring mechanisms that occur between low tech and high tech; and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influence China–Russia–North Korea's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loose ties and economic bloc). If US–China supply chain reshaping competition is dominated by high–tech sector's complete decoupling, resulting in economic and security bloc of China–Russia–North Korea,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re likely to bond together more strongly to respond to US–China rivalry over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to disarm sanctions, which would mak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ore difficult to pursue. On the contrary, if US–China supply chain reshaping competition is dominated by low–tech sector's derisking, resulting in loose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of China–Russia–North Korea, the

three countries are likely to prefer their individual responses to US–China rivalry per each sector or technology, which presents a good opportunity to boost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f pressure and check on China grow stronger through supply chain and security cooperation driven by Korea–US–Japan, China is likely to leverage its outsized influence on North Korea and Russia in its supply chain as its important bargaining chip to the US. Also, if Korea–US–Japan’s pressure and containment on North Korea and Russia would be strengthened, Russia and North Korea are likely to threaten the US and its allies through closer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xchange security and economic gains that they actually need. China, Russia, and North Korea’s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hip would eventually evolve into a bloc after two rounds of courses. Meanwhile, if the US and the West impose non-tariff trade barriers based on values and norms regarding supply chains such as environment, labor, human rights, and so forth, resulting in stronger sanctions and pressure on China–Russia–Nor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are likely to be more motivated toward the supply chain built by China as China-led economic security block, as it has almost no barrier, is more easily accessible for them to join in terms of values and norms regarding supply chains, and also with no additional cost.

Keyword: US–China supply chain reshaping competition, US–China trade war, US–China relations, economic security, geopolitics, geoeconomics, statecraft, sanction, China–Russia–North Korea trilateral partnership, economic blocking, decoupling, derisking

I. 서론

이재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중 간 무역, 첨단기술, 안보, 인권 등의 영역에서 갈등과 전략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을 통한 편 가르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편 가르기와 한미일/중러북 신냉전 구도와의 연관성 파악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도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지역은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세계 통상질서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전쟁이 초래한 공급망 불안정과 교란의 ‘채찍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는 최종 소비자 차원에서 생긴 갑작스러운 변동이 공급망 상류 차원의 제조업체로 전이되면서 그 효과가 확대되는 효과이다.^{1/} 구체적으로 팬데믹으로 수요 변화와 최종 소비자의 소비 변화가 확대되었는데, 전염병 관련 봉쇄와

^{1/} Yossi Sheffi, *The new (ab)normal: reshaping business and supply chain strategy beyond covid-19* (Cambridge: MIT CTL Media, 2020), p. 19.

격리로 인한 생활필수품, 개인 의료 용품의 수요 급증과 관련된 공급망 교란이다.

따라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한국의 공급망 대응과 경제안보 외교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이는 한 반도를 둘러싼 국제통상환경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대응 전략과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적 기술 경쟁으로 재편되는 양국 공급망 전략의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 미치는 위협과 도전 및 기회 요인을 찾아낸 후 기민한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미중 간 공급망 재편 경쟁에 관한 한 연구는 공급망 재편 경쟁 시각에서 볼 때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간 경쟁이 강조되면서, 미중은 자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을 각각 구축하게 될 경우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경제와 산업환경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공급망 경쟁의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국익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2/}

미중 공급망 경쟁은 복합 지경학의 특징을 보이는데, 즉 지경학(geo-economics) 경쟁이 지정학적으로 전환(geopolitical turn)되는 것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경제무역의 네트워크화가 이러한 복합 지경학이 부상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 복합 지경학이 부상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통치술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통치술은 스마트 제재, 네트워크 제재, 표적 제재 등 혁신적인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2/ 유현정, “미중간 공급망 경쟁과 시사점,” 『국가와 정치』, 28권 1호 (2022), pp. 1~37.

정부는 공급망 재편의 구체적 방식으로 우방 쇼어링(friend 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리쇼어링(reshoring) 등을 추진한다.^{3/}

미중 무역전쟁 차원에서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을 설명할 수도 있다. 중국의 환율 조작, 불공정 무역관행, 무역 관련 인권침해, 기술 탈취 등에 대해 미국은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의 한계, 미중 간 세력 배분의 변동, 중국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인식 등 변수들에 기인한다. 무역에 관한 정치경제 이론 가운데 미국 정치에 중점을 둔 무역 이론, 양자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그리고 국제체제 이론 가운데 개인의 경제적 인식과 상황 변수를 강조하는 것과 내부발생적 관세에 관한 가설, 그리고 미중 간 세력 분배 변화를 설명하는 패권안정이론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무역 전쟁을 설명하는데 가장 타당한 이론으로 간주 되기도 한다.^{4/}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을 설명할 때 기업의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와 인식뿐 아니라 미중 간 권력 분배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은 전통 경제와 과학기술의 이중구조, 정치와 경제의 차원, 양질 전화 속 중요도의 급속한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5/} 즉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경제안보 블록화가 강화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경제의 안보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와 첨단기술의 안보화가 급속히 확대되어 양질의 전화가 이루어진다.

3/ 이승주,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정학의 부상,” 『정치·정보연구』, 24권 3호 (2021), pp. 51~80.

4/ 김석우, “무역전쟁의 운명: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55권 5호 (2021), pp. 119~143.

5/ 백우열,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 2020년대 안보 맥락에서,” 『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 (2022), pp. 325~364.

하지만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 디커플링 현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중 공급망 재편이 한반도 지정학·지경학에 초래하는 결과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특히 중러북 경제 관계에서는 대북 제재 실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구도와 중러북 안보-경제 관계 사이 현실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이론적 설명과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미중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재편에서 산업 섹터, 가치와 규범, 중러북 경제 블럭화를 중심으로 여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 안보 외교 전략의 구체적인 대응·협력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가.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에 관한 담론 비교분석, 그리고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 변화 사례, 한국의 경제 안보 외교에 관한 정책 연구와 무역 및 산업 공급망 데이터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 한국 최고 지도자 및 정치 엘리트들의 공식 외교 문건과 외교부의 공식성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연구는 공급망과 경제 관계에 적용된 이념과 가치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내외 인터넷, DB 자료, 학술논문, 단행본, 그리고 주

요 싱크탱크 정책보고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헌 조사와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비교 사례연구에 기반을 둔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사례와 중북, 중러, 러북, 중러북의 경제 관계와 공급망을 비교 분석하고, 첨단 반도체, 사이버, 2차전지, 군사 무기 등 주요 섹터별로 공급망의 재편 구도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미중의 전반적인 갈등 관계와 공급망 관련 갈등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미중 갈등 중 비관적인 무역 기대를 도출하고 그러한 무역 기대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참여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영문 뉴스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갈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GDELT^{6/}(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주로 활용했다.

나. 연구 내용

미중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가능한 경로는 우선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신냉전으로의 확대와 미국 중심 가치동맹과 중국 사이 탈동조화로 인한 냉전 시기와 유사한 블록화 귀결 가능성이다. 그리고 미중 간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탈동조화 진행, 즉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만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비전략 업종이나 품목에서 일부 탈중국화 혹은 중국 이외 지역 생산과 같은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되는 것이다.^{7/}

6/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 <<https://www.gdeltproject.org>>.

7/ 이석기,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분석, 2022.12.30.), p. 71, <<https://www.kiet.re.kr/research/ec>>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과 중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현황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평가와 전망을 할 것이다. 특히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다룰 것인데, 디지털화로 인한 데이터의 국경이동과 탄소 배출 감축 등 디지털 무역과 환경에 대한 다자 규범 형성, 무역과 인권 문제 등 공급망 이슈(안보, 기술, 환경, 인권, 보건)와 쟁점이 중러북 경제·안보 관계 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은 미중 공급망 재편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대외 요인 가운데 중국의 부상(혹은 피크차이나)과 정체성 변화, 미중 패권 경쟁, 대미/대중 인식 변화, 이념과 제도 갈등, 미국의 중국 배제 공급망 구축, 중국의 자국 중심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 구축과 미국 제재 우회 등을 살펴볼 것이다. 대내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치경제 요인, 최고 리더십과 정치 엘리트(미국 의회 포함), 중앙과 지방 관계, 산업(협회)과 기업 행위자 등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재편이 한반도에 미치는 위협과 도전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미중 공급망 재편 과정에 노출된 한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아야 한다. 2023년 5월 26일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원에서 발표한 경제안보 지수에서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 개념이 제시되었다. 수출 권력은 주요 수출기업이나 수출 제품을 보유한 국가가 수출제한을 통한 경제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수입 취약성은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공급망 교란에 의한 피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지수에서 한국의 수출 권력은 11위였지만 공급망 교란에 가장 취약한 수입 취약성 1위 국가로 밝혀졌다.^{8/}

onomyDetailView?detail_no=2775&year=&month=&stype=&sval=) (검색일: 2023.2.20.).

8/ 이 밖에도 수출 권력 상위권은 중국, 독일, 미국, 수입 취약성 2위는 일본, 3위

더 나아가 미중 공급망 재편이 북한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북한이 적극성을 보일 때 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을 활용한 북한의 산업 발전전략 논의도 필요하다.^{9/} 특히 북한은 중국 주도의 공급망(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 심화, 특히 북한의 스마트폰과 태양광 전지 등 핵심 기술과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 심화가 한반도 경제통합과 평화통일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단기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으로써 북한의 중러북 경제 관계를 활용한 제재 우회와 상쇄 전략,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공간 축소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편 가르기 압력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중/한중북 삼각 공급망 협력 혹은 미중/한중 등의 양자 경제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재편이 한국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위협과 도전을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망 병목 현상과 공급망 편 가르기 압력의 심화, 요소수와 같은 범용품목과 리튬·마그네슘 등 2차 전지와 반도체 핵심 품목 대중국 수입 의존도 증가,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제재 재발 우려 증가,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밀 정보 요청과 중국공장 최신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같은 미국의 법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 등이 있다.

베트남, 4위 태국이었다. “한국, 공급망 교란에 가장 취약한 나라...“경제안보지수 높여 위기 대비해야,” 『중앙일보』, 2023.5.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5614#home>> (검색일: 2023.6.2.).

9/ 이석기,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 p. 70.

이에대한 기민한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시장 자본주의와 다자 자유무역의 가치, 비차별 및 상호주의 원칙 존중에 바탕을 둔 국익 최우선 원칙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핵심통상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견인하는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 인권 존중, 소외 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능동적 수용 관련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포용적 통상규범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추진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국의 경제안보 조치 남용을 상쇄하고 경제 강압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적 자율성과 필수성, 정치적 실행력에 기반한 경제 억지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등과의 연합 형성을 통한 전략적 관여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 입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지 않지만, 북한 비핵화,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구체적으로 어떤 공급망 협력 혹은 대응이 가능할지, 중국을 중심으로 중러와 중러북의 경제블록이 형성된다면 이러한 경제블록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이론과 사례

이재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정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이론과 사례

1. 미중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 이론(이재영)

가. 무역의 안보 외부효과: 무역(공급망)과 정치적 갈등의 상관관계

무역의 안보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y of trade)가 주목하는 점은, 무역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다른 자원 가용성도 증가한 결과 경제 자원의 군사력 전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정치-군사 동맹 밖에서보다 내부에서 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극보다 양극 시스템이 더 자유무역 연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10/} 그리고 위협 회피 성향의 기업 행위자들은 상업 거래에 지장을 주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추구한다.^{11/}

최근 미중 무역과 공급망을 통해 중국이 경제적 자원을 군사 기술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중 간 전략경쟁을

10/ Joanne Gowa, *Allies, adversaries, and international tra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 6~7.

11/ Joanne Gowa and Edward D. Mansfield, "Power politics and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2 (1993), pp. 408~420.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실제 중국의 기술혁신과 제조역량 진보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일조했다.^{12/} 이러한 중국의 군민 양용 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안보외부효과’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훼손처럼 ‘부정적인 질서외부효과’ 역시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부정적인 질서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이다.^{13/}

따라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가 아닌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같은 경제 네트워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무기화된 상호의존성’이다. 즉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네트워크에 더 많이 연결되어 허브가 되고, 이러한 허브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은 더 많은 취약성을 보인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 허브 국가들은 네트워크를 무기화하면서 강제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정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한다.^{14/}

동맹과 무역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경험적 연구는 동맹이 무역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15/} 동맹과 전쟁 등 전통적인 정치적 관계 혹은 사건에서 최근에는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불일치, 국가 지도자들 사이 적대감,

12/ M. Taylor Fravel, *Active defense: China's military strategy since 194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13/ Andrew B. Kennedy and Darren J. Lim, “The innovation imperative: technology and US-China rival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3 (2018), pp. 553~572.

14/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1 (2019), pp. 43~46.

15/ Joanne Gowa, *Allies, adversaries, and international trade*; Edward D. Mansfield and Rachel Bronson, “Alliance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1 (1997), pp. 94~107.

부정적인 여론과 같은 ‘정치적 긴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16/}

반면에 공급망 협력 및 무역과 같은 국가 간 경제 관계 속에서 경제적 교란과 불안정의 기회비용이 심각하게 고려될 때,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평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는 가설이 있다.^{17/}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평화적 효과를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은 무역 이권이 결부된 국내 집단이 무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위협하는 정책을 거부하는 로비를 하고, 산업과 무역 협력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내어, 국가 사이에 신뢰 형성 차원의 정보 채널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18/} 또한, 산업 내 무역과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가 상업적 거래에 정치적 긴장이 미칠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9/}

16/ Christina L. Davis and Sophie Meunier,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5, no. 3 (2011), p. 628. 이러한 정치적 긴장은 전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인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혹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덜 한 부정적인 정치 관계를 말한다. Yingxin Du et al, “Bilateral trade and shocks in political relations: Evidence from China and some of its major trading partners, 1990–201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08 (2017), pp. 211~225.

17/ Solomon Polachek and Jun Xiang, “How opportunity costs decrease the probability of war in an incomplete information gam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4, no. 1 (2010), pp. 133~144. 또 다른 선행 연구는 현재의 투자와 무역 중 매몰 비용으로 인해 기업, 소비자, 정부가 정치적인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해 자신들의 선호와 행위를 변경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Christina L. Davis and Sophie Meunier,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s,” pp. 628~646.

18/ Scott L. Kastner, “When do conflicting political relations affect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4 (2007), pp. 664~688; Erik Gartzke, Quan Li, and Charles Boehmer,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2001), pp. 391~438.

19/ Christina L. Davis and Sophie Meunier,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s,” pp. 628~646. 미중 관계 외에도 중국과 유럽 혹은 일본

하지만 이 주장에 따르면 미중 무역 규모가 1980~2010년 백배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정치적 충돌 가능성은 희박해야 한다. 매몰 비용 혹은 기회비용 증가에 따른 상호의존의 평화 촉진 결과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가설에 따라 최근 미중 전략경쟁을 분석하면 평화와 관련된 이익과 갈등이 초래하는 잠재적 경제 피해는 확실히 증가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평화 효과가 유효한 범위 조건을 찾는 것이다.^{20/} 특히 기회비용이나 매몰 비용 같은 경제적 조건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전략경쟁이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21/} 정치적 갈등이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범위 조건은 무역에 관한 기대이다. 즉

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높은 수준의 상업적 상호의존이 정치적 긴장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Xianwen Chen and Roberto Javier Garcia, "Economic sanctions and trade diplomacy: Sanction-busting strategies, market distortion and efficacy of China's restrictions on Norwegian salmon imports," *China Information*, vol. 30, no. 1 (2016), pp. 29~57.

20/ Yuleng Zeng, "Microchips and sneakers: Bilateral trade, shifting power, and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2023), p. 1.

21/ Ka Zeng et al, "Bilateral Tensions, the Trade War, and US-China Trade Relations," *Business and Politics*, vol. 24, no. 4 (2022), pp. 399~429. 다른 한편 무역과 경제 관계의 정치적 갈등 효과 범위 조건 연구 가운데 낮은 출구 비용(Timothy M Peterson, "Dyadic trade, exit cost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4 (2014), pp. 564~591), 경제 경쟁과 시장 권력 추구 야심(Stephen E. Gent and Mark JC Crescenzi, *Market Power Politics: War, Institutions, and Strategic Delay in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네트워크 효과(Timothy M. Peterson, "Reconsidering economic leverage and vulnerability: Trade ties, sanction threats, and the success of economic coerc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7, no. 4 (2012), pp. 409~429), 갈등의 실제 경제 비용(Andrew G. Long, "Bilateral trade in the shado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no. 1 (2008), pp. 81~101), 경제와 안보공동체 구성원 여부(Frederick R. Chen, "Extended dependence: trade, alliances, and peac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83, no. 1 (2021), pp. 246~259), 다자 무역 개방성(Pavel Yakovlev and Brandon Spleen, "Make concentrated trade not war?"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26, no. 2 (2022), pp. 661~686).

미래 추세에 대한 무역 기대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보는 방식의 조건을 형성한다.^{22/}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갈등 혹은 협력을 야기했는지는 이론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상호의존성은 경제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맥락, 개별 국가의 경제적 상황, 산업 섹터와 지역의 협소한 이익과 같은 국내 정치 요인이 중요하다.^{23/} 즉, 본 연구는 모든 경제적 상호의존이 취약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특정 환경과 조건,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취약성 차이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미중의 무역 기대이다.

마지막으로 무역의 안보 외부효과 분석 틀을 통해 미중 간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공급망 교류가 유지 혹은 확대·감소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3장의 공급망 재편 요인에서 GDELT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설명하고 무역 및 공급망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3장 요인 분석 가운데 3절의 대내 요인은 미중 간 정치·경제적 갈등에 따르는 무역 및 공급망의 변화에 국내 세력(기업, 의회, 산업협회, 지방정부 등)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주로 설명할 것이다. 또한,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의 관점에서 정치지도자나 재계 지도자의 무역 기대에 관한 담론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의 어조 변화를 GDELT 자료를 통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무역 기대가 양국 정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그러한 무역 기대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22/ Dale C. Copel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A theory of trade expect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1996), pp. 5~41.

23/ Avery Goldstein and Edward D. Mansfield, "1.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in *The Nexus of Economics,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eds. Avery Goldstein and Edward Mansfield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p. 23.

나. 지경학과 경제안보 수단으로서 경제 책략

‘지경학’은 경제 도구 사용으로 국익을 촉진하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득이 되는 지정학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경제적 행위가 한 국가의 지정학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지경학이 부상하는 이유는 국가 책략의 지정학적이고 정치·군사적 측면이 상호 강화 작용을 일으키고, 특히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 국가는 직접 처분할 수 있는 더 많은 경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국가의 지정학적 선택과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4/} 지경학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책략을 사용하는 동기는 주로 동맹 안정성과 안보 위협 수준이 변화했을 때이다.^{25/}

지경학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책략은 ‘표준 설정’이다. 미국 정부 당국은 미국의 선도적인 표준 설정 기업들이 글로벌 무형 경제에서 우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했고, 이를 위해 국가 책략의 선택된 방식은 국가안보 기관을 통해 국가 대표 기업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26/}

이 밖에도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 책략 가운데 ‘경제적 강압’이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와 호주의 코로나바이러스 기원 조사 촉구 등 자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전략적 이슈에 대해 외교적 접근보다는 상대국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경제적 보복 조치와 같은 국가 책략을 활용했다.^{27/}

24/ Robert D. Blackwill and Jennifer M. Harris,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p. 9.

25/ Michael Mastanduno, “Economics and security in statecraft and scholarship,”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pp. 825~854; Lars S. Skâlnes, *Politics, markets, and grand strategy: foreign economic policies as strategic instrument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26/ Anton Malkin, “The made in China challenge to US structural power: industrial policy, intellectual property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9, no. 2 (2022), p. 562.

무기화된 상호의존의 세계에서 ‘파놉티콘 효과(panopticon effect)’와 같은 정보 흐름과 의사소통에서 핵심 지식 통제, 그리고 ‘초크포인트 효과(chokepoint effect)’와 같이 제삼국이 네트워크 허브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사용에 대해 처벌을 하는 국가의 능력은 국가 책략의 중요한 도구이다. 이러한 무기화된 상호의존은 허브 노드(hub node)에 대한 물리적 혹은 법적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국내 법 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의미 있는 국가 책략으로 활용된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첫째, 동맹과 안보 위협 수준 변화에 따른 경제 책략(특히 경제적 강압) 사용 빈도와 사용 방식이다. 둘째, 지정학적 우위 확보전략으로서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의 표준 설정, 경제 강압, 파놉티콘, 초크포인트 효과 등 어떤 국가 책략이 사용되고, 이러한 책략이 왜 사용되는지, 비국가 행위자(기업, 산업협회, 국민)들은 어떻게 이러한 책략에 협력 혹은 대응하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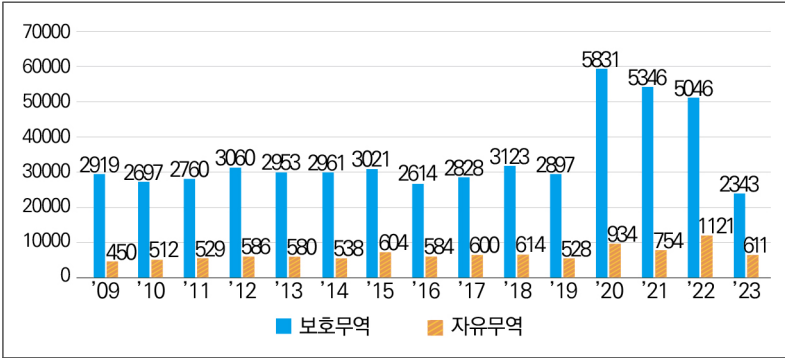
우선 <그림 II-1>에서 2009~2023년 전 세계 무역 관련 정부 개입의 변화를 보호무역(harmful) 조치와 자유무역(liberalizing) 조치로 나눠서 살펴보면, 2020~2022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9년 2,897건에서 2020년 5,831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2022년에도 각각 5,346건, 5,046건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보호무역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자유무역 조치도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 속도와 전체 건수 면에서 보호무역 개입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27/ 최진백, “미국의 중국 수정주의 국가론 검토: 중국의 GDI와 GSI 논의를 포함해서,” (외교안보연구소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52, 2023.5.16.), p. 23,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191&menuCl=&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검색일: 2023.5.23.).

28/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pp. 54~58.

그림 11-1 2009~2023년 전 세계 무역 관련 정부 개입

(단위: 억)



출처: Global Trade Alert, 2023.10.2., <<https://www.globaltradealert.org/>> (검색일: 2023.10.26.).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화 무역 관련 정부 개입 가운데 첨단기술 섹터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09~2017년 첨단기술 섹터에서 무역 조치의 비중은 40%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8~2021년 45%를 조금 넘었고 2022년에도 45%에 육박했다.^{29/} 이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화웨이의 5G(5th Generation, 5세대 무선 셀룰러 기술)와 중국 대표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중신궈지(SMIC)의 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섹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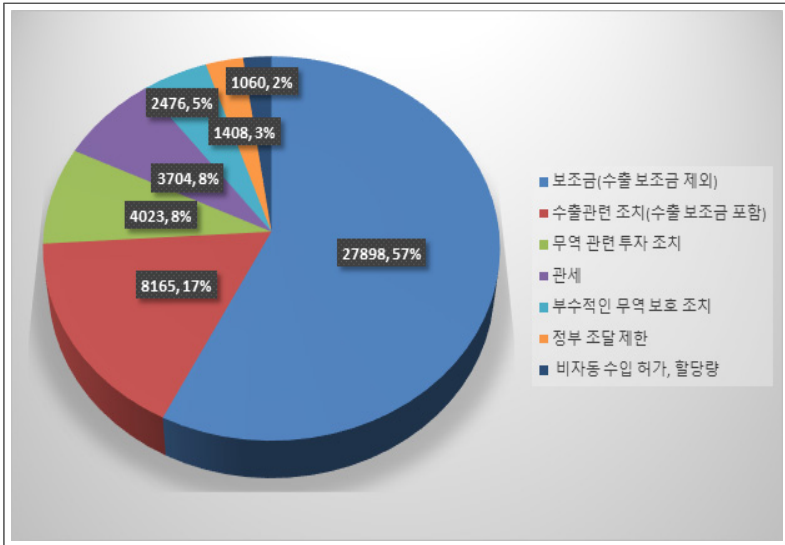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구는 수출 보조금을 제외한 각종 정부 보조금(57%)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법안 등에서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이 있다. 그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 보조금을 포함한 수출 관련 정책(17%)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무역 관련 투자 조치(8%) 역시

^{2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Sailing into Headwinds,” 2022.10.,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REO/APD/2022/October/English/text.ashx>> (검색일: 2023.10.26.).

많이 활용되었는데, 대표적인 정책은 국산 부품 사용 의무, 외환 규제, 생산제품의 국내 판매 의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관세(8%) 부과, 정부조달 제한(3%), 쿼터제(2%) 등이 있다. 기타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조치(533건), 자본 통제 조치(384건), 불분명한 도구(283건), 이주 정책(244건), 세금 추징 포함 가격 통제 조치(158건), 정부 재정 조치(Government Finance measures, 40건), 출하 전 검사 및 기타 절차(15건), 지적 재산권(6건), 무역상 기술장벽(2건)을 포함한다.

그림 II-2 2009~2023년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종류

(단위: 건수, 비중 %)



출처: Global Trade Alert, 2023.10.2.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미중의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 조치도 급증했다. 예를 들어 <표 II-1>을 보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2017년 132건에서 2018년 25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과 2021년 각각 320건, 362건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624건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중국 역시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미국에 영향을 주는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했다. 예를 들어 2017년 281건에서, 2018년 354건, 2019년 531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615건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반면에 자유무역 조치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미국의 경우 2016년 39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급감했고, 중국 역시 2016년 34건에서 2022년 7건으로 하락했다.

표 II-1 2009~2023년 미중의 상대국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조치

| | 미국의 자유무역 조치 |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 중국의 자유무역 조치 |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
|------|-------------|-------------|-------------|-------------|
| 2009 | 6 | 225 | 35 | 111 |
| 2010 | 6 | 351 | 23 | 136 |
| 2011 | 9 | 211 | 29 | 183 |
| 2012 | 4 | 225 | 25 | 223 |
| 2013 | 11 | 196 | 24 | 232 |
| 2014 | 19 | 249 | 28 | 259 |
| 2015 | 38 | 192 | 30 | 310 |
| 2016 | 39 | 180 | 34 | 329 |
| 2017 | 32 | 132 | 17 | 281 |
| 2018 | 31 | 253 | 30 | 354 |
| 2019 | 26 | 189 | 23 | 531 |
| 2020 | 37 | 320 | 24 | 615 |
| 2021 | 21 | 362 | 10 | 497 |
| 2022 | 14 | 624 | 7 | 235 |
| 2023 | 5 | 168 | 7 | 30 |

출처: Global Trade Alert, 2023.10.2.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중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섹터는 가공 금속 제품(1,020건), 철강 제품(1,988건), 기본 철강(1,916건), 양곡 제분 제품(431건), 자동차,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및 부품(226건)이다. 반면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섹터는 컴퓨터 기계와 부품(946건), 자동차,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및 부품(889건), 화학제품(n.e.c. 781건), 다른 특수목적 기계와 부품(772건), 다른 전자 장비 및 부품(769건)이다.^{30/}

이처럼 미국은 중국산 철강, 중국은 미국산 컴퓨터와 자동차에 대해 가장 많은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미중 공급망 재편에서 핵심 섹터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5G 등 분야에서 미중의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의 배경에는 전 세계 경제와 무역,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의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다. 공급망에서 가치와 이념의 역할

정치적인 관계가 상업 관계 혹은 무역을 추동하지만, 그 반대는 아니라는 관점이 있다.^{31/} 반면 경제적인 현상은 정치적인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인 갈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32/} 미국과 중국 사이 공급망

^{30/} Global Trade Alert, 2023.10.2.

^{31/} Omar M. G. Keshk, Brian M. Pollins, and Rafael Reuveny, "Trade still follows the flag: The primacy of politics in a simultaneous model of interdependence and armed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6, no. 4 (2004), p. 1175.

^{32/} Edward D. Mansfield, *Power, trade, an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32.

재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인 현상 역시 정치적인 갈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 문제에서 가치와 이념은 체제를 통해 무역과 공급망 같은 경제적인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민주주의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그러한 제도가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경제적 행위자들은 소비자의 취향, 비즈니스 추세, 정부 규제 제한 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33/} 하지만 체제의 유형은 경제적 자유화나 보호주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34/}

그리고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러한 신뢰 역시 무역과 같은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에 의해 측정된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무역과 직접 투자를 하고 있었다.^{35/} 민주평화론은 유사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들은 정치적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36/}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서로 다른 정치 시스템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 두 국가의 핵심 이익은 객관적으로 충돌한다.^{37/} 특히 미국 정부는 미중 사이 엄청난 무역 적자 속에서 무역

33/ James D. Morrow, Randolph M. Siverson, and Tressa E. Tabares,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ade: the major powers, 1907-199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3 (1998), pp. 649~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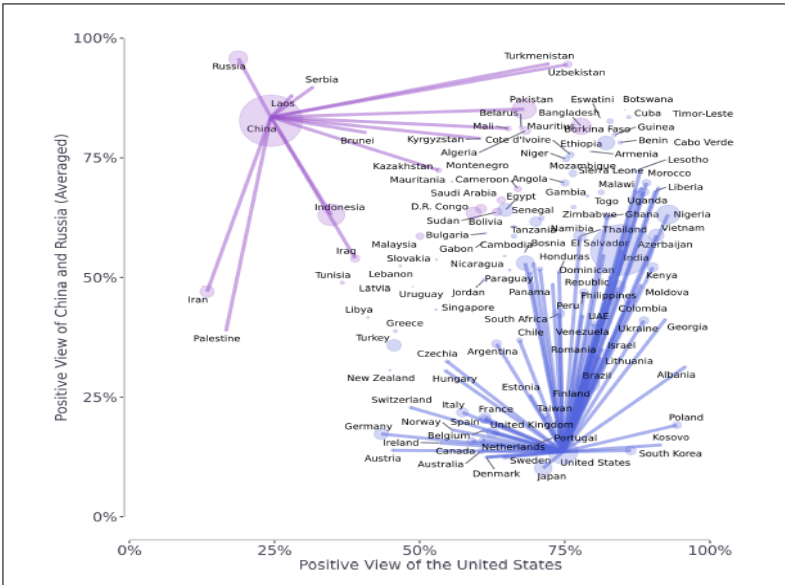
34/ Etel Solingen, *Regional orders at century's dawn: global and domestic influences on grand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113.

35/ Luigi Guiso, Paola Sapienza, and Luigi Zingales, "Cultural biases in economic exchang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4, no. 3 (2009), pp. 1095~1131.

36/ John R. Oneal, Bruce Russett, and Michael L. Berbaum, "Causes of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885-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no. 3 (2003), pp. 371~393.

전쟁을 발동하고 있고, 중국의 대미 수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미중 간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정치 갈등의 원인은 무역 불균형일 뿐만 아니라 두 국가의 정치 시스템과 이데올로기 사이 충돌이다.^{38/}

그림 II-3 세계 대중 여론 조사에서 미국(X축) 혹은 중국/러시아(Y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나라들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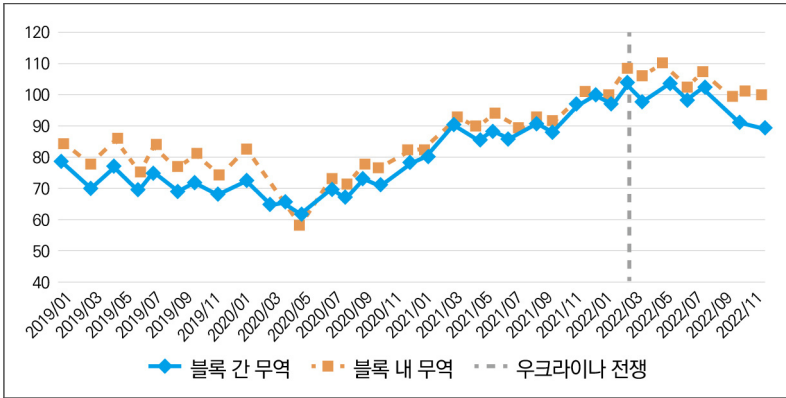
출처: Roberto S. Foa et al., “A World Divided: Russia, China and the West,” Cambridge, United Kingdom: Centre for the Future of Democracy, 2022.10., p. 8. (https://www.bennettinstitute.cam.ac.uk/wp-content/uploads/2023/01/A_World_Divided.pdf) (검색일: 2023.10.26.).

37/ Chih-yu Shih and Chiung-chiu Huang, “Competing for a Better Role Rel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Sino-US Rivalry and Game of Weiqi,”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25 (2020), pp. 1~19.

38/ Yu Song, Bo Chen, and Na Hou, “Trade Dependence, Uncertainty Expectations, and Sino-US Political Relation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022), p. 14.

〈그림 II-3〉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여러 종류의 여론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중국/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나뉜 국가들의 미국을 지지하는 그룹과 중국/러시아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가치, 중국/러시아에 대한 지지는 권위주의 가치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선으로 연결된 국가들은 특정 국가(미국 혹은 중국/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다른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보다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파란색이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이고, 보라색은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들이다. 이를 인구 규모로 따지면 25억 명 인구가 미국의 블록에 들어가고, 23억 명 인구가 중국과 러시아 블록에 들어가서 각 블록은 세계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했다. GDP 규모 측면에서, 미국 블록은 70조 달러, 중국과 러시아의 블록은 그 절반인 35조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사 입장 국가들 사이에 무역과 공급망 분야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교류가 더 활발한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가치 및 이념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할 수 있고, 미중 무역 전쟁과 첨단기술에서의 공급망 재편 경쟁 양상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앞으로 가치와 공급망 사이에 더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4 가상의 지정학 블록 내부와 외부 무역



출처: WTO, “World Trade Report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2023, p. 33,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23_e/wtr23_e.pdf> (검색일: 2023.10.26.).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무역은 유엔(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총회 투표 성향의 차이로 정의된 지정학적 거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가상의 지정학적 블록^{39/} 사이 재화 무역의 흐름은 이러한 블록 내부의 무역보다 4~6% 더 느리게 성장했다.^{40/} 이러한 가상의 지정학 블록에서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다른 블록에서 무역 규모로 볼 때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체로 미국 주도 블록과 중국(러시아) 주도의 블록 사이에 무역 성장률이 블록 내부 무역 성장률보다 더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39/ 가상의 지정학 블록은 외교 정책 유사성에 따라 차별화된 점수 기준으로 서방의 블록과 동양의 블록으로 분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 Carlos Góes and Eddy Bekkers, “The Impact of Geopolitical Conflicts on Trade, Growth, and Innovation,” WTO, 2022.7.4., <https://www.wto.org/english/res_e/reser_e/ersd202209_e.htm> (검색일: 2023.10.26.).

40/ Michael Blanga-Gubbay and Stela Rubínová, “Is the global economy fragmenting?” WTO, Staff Working Paper, forthcoming, 재인용: WTO, “World Trade Report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2023, p. 32,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23_e/wtr23_e.pdf> (검색일: 2023.10.26.).

하지만 공급망 문제에 있어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처럼 가치와 이념이 유사한 유사 입장 국가들(like-minded states) 사이에서도 분명히 국익에 있어 미세하게나마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미일과 중러북 등 유사 입장 국가들 내부의 입장 차이가 공급망 재편 경쟁과 정치 군사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가치-인센티브 호환성(values-incentives compatibility)의 측면에서 공급망 재편 경쟁을 분석할 것이다.^{41/}

마지막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이념(환경, 인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이념, 다자주의와 다극 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집단경제안보나 집단과학기술안보 같은 경제안보 블록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42/} 둘째, 가치의 매개변수로서 체제와 제도는 공급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가치와 체제가 유사한 국가들(민주주의, 권위주의) 사이에는 무역 갈등, 공급망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유사 입장 국가들 사이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것인지 이것이 정치 경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가치와 블록화 사이 관계는 중러북 경제 관계 변화에서 주로 고찰할 것이다.

41/ Tucker Paul, *Global Discord: Values and Power in a Fractured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42/ Joseph S. Nye, "Collective economic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4-)*, vol. 50, no. 4 (1974), pp. 584~598; 백우열,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 2020년대 안보 맥락에서," pp. 352~353.

라. 미중 경제-안보 연계 방식과 중러북 경제 관계 변화 분석 틀

경제와 안보의 연계 차원에서 과거 미중 관계를 분류하면 ‘경제적 통합(integration)’과 소원(estrangement), 안보 측면에서 ‘안심시키기(reassurance)’와 ‘경쟁’의 네 가지 변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긍정적인 동조화는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 협력적인 행위가 지배적인 경우이다. 둘째, 안보 탈동조화는 미중이 안보 영역에서 심하게 경쟁하지만 경제적인 협력은 강한 경우이다. 셋째, 경제적인 탈동조화는 우호적인 안보 관계가 동반되는 경쟁적인 경제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동조화는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에서 대결적 행위가 지배적인 경우이다.^{43/}

미중 관계의 경제-안보 연계는 미국의 대전략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분쟁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군사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 경제적 수용을 선택한다면, 공격적 수용의 대전략에 따라 미중 간 안보 탈동조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경쟁 비용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방어적 수용을 선택하고, 분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탈적 수용을 선택하는 식으로 두 가지 미국의 대전략에 따라 긍정적인 동조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봉쇄를 선택한다면 방어적 봉쇄 혹은 이탈적 봉쇄에 따라 경제적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미국의 공격적 봉쇄 대전략에 따라 부정적인 동조화로 귀결된다.^{44/}

43/ Feng Liu and Ruonan Liu, “China, the United States, and order transition in East Asia: An economy-security Nexus approach,”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6 (2019), pp. 984~995.

44/ 일극 체제에서 미국의 대전략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Nuno P. Monteiro, *Theory of unipolar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정성철, “일극체제와 상호의존을 통해 본 21세기 국제정치,” (통일연구원 통일+ 연구동향과 서평 2015년 가을호 vol. 1, no. 3, 2015.9.7.), pp.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 환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화와 안정이었다. 이 기간 중국의 외교 정책은 경제 영역에서의 통합과 안보 영역에서의 자제력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 개혁과 외부 세계와의 경제협력 심화를 추진했고, 미중 간 비대칭적 경제 관계는 중국 경제를 세계 시장으로 통합시킨 상호의존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미중 정책은 경제적 관여와 예방적 방어의 조합으로 요약된다.^{45/} 코퍼랜드(Dale Copeland)의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에 따라 이 시기 미국과 중국은 경제 협력의 긍정적 기대와 전망을 공유했고, 이는 중국이 이득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낮은 위험을 선호하도록 만들었다.^{46/}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쇠퇴 속에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군사 현대화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오바마 정부 시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의 안보 환경 악화를 초래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싱통신(ZTE)과 화웨이 등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중국 내부에서는 탈동조화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보 탈동조화와 경제적 탈동조화의 두 방향이 아직은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동조화 차원까지는 악화되지 않았다.^{47/}

47~48,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7c3e4609-f6e7-4960-9ff4-10abd43d13ef>> (검색일: 2022.10.30.).

45/ Feng Liu and Ruonan Liu, "China, the United States, and order transition in East Asia: An economy-security Nexus approach,"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6 (2019), pp. 985~986.

46/ Dale C. Copel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47/ Feng Liu and Ruonan Liu, "China, the United States, and order transition

이 시기 미중 간 안보 탈동조화에서 경제적 탈동조화가 더해지면 서 미국의 공격적/방어적 수용은 점차 봉쇄로 바뀌고,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봉쇄에서 공격적/방어적 봉쇄로 가는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중국은 부정적인 무역 기대와 함께 손실영역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며 현상 변경까지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미중 관계는 완전히 부정적인 동조화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미중은 무역 전쟁과 대만 문제, 북핵 문제, 인권 등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영역 외에 완전한 봉쇄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자국 중심의 신질서로 대체하기 위한 수정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이러한 수정주의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새롭게 구성 혹은 형성하는 대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전략 경쟁에서 미국 자신의 우위 확보를 위해 산업 정책과 제재, 수출통제 등 다양한 경제 책략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48/}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무역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존 자유주의 질서를 완전히 타파하려는 의도로 미국과의 전면 대결까지 자처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제이크 셸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신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의 개념을 제기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 이러한 안보와 경제의 부정적 연계가 중장기적으로

in East Asia: An economy–security Nexus approach,” pp. 987~990.

48/ 최진백, “미국의 중국 수정주의 국가론 검토: 중국의 GDI와 GSI 논의를 포함해서,” pp. 18~21.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를 확정하면서, 지정학적 의미의 공급망 재편과 경제적인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이 우선시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경제 도구 중 산업 정책은 국가안보 목표로써 중국 봉쇄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관적인 신 워싱턴 컨센서스가 낙관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면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 대변하는 글로벌 경제무역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는 붕괴된다.^{49/}

다른 한편 EU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제기했는데, 디리스킹은 유럽과 중국 간 경제 관계 재평가를 통한 재균형이다. 특히 EU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자(partner),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 체제 경쟁자(systemic rival)의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중국과 계속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50/} 이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이러한 EU의 세 가지 정의는 상호 모순된 것으로 유럽은 중국에 대해 이데올로기의 색안경을 벗고,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은 디리스킹이 거짓 명제이고, 중-유럽 관계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의 기초가 탄탄할 뿐 아니라 성과를 많이 거두어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위험과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 공평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 경제통상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51/}

49/ "The New Washington Consensus," *Financial Times*, 2023.4.19., <<https://www.ft.com/content/42922712-cd33-4de0-8763-1cc271331a32>> (검색일: 2023.10.26.).

50/ European Union, "EU-China Relations factsheet," 2023.12.7., <https://www.eeas.europa.eu/eeas/eu-china-relations-factsheet_en> (검색일: 2023.12.8.).

5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年5月15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이러한 디리스크링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첨단 반도체와 같이 국가안보 함의가 있는 전략적 분야에서 중국의 능력을 제한한다. 둘째, 핵심 광물을 포함하는 특정 핵심 투입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중국과 서방 사이 무역의 갑작스러운 교란이 발생할 때 잠재적인 비용 축소를 위해 기업의 경제 노출을 더 광범위하게 다각화한다.^{52/}

한편 최근 한미일과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와 공급망에서까지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이 두 영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고 견제하면서, 중러북의 경제안보 블록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블록화는 냉전 시대 상호 폐쇄적인 블록이 아닌 반미 혹은 반서방 연대 및 호혜성에 근거한 다소 개방적인 지경학적 블록으로 중국이 경제 기술적 우위로 주도하고 러시아가 이에 공조하며, 북한은 중국의 지원 및 중러와의 무역 교류로 체제 생존에 도움을 받는 형태이다.^{53/}

2023.5.15.,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305/t20230515_11077846.shtml> (검색일: 2023.6.12.).

52/ Jami Miscik, Peter Orszag, and Theodore Buzel, "The U.S.-Chinese Economic Relationship Is Changing—But Not Vanishing How “De-Risking” Can Preserve Healthy Integration,” *Foreign Affairs*, 2023.5.24.,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us-chinese-economic-relationship-changing-not-vanishing>> (검색일: 2023.10.26.).

53/ 이재영,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북·중·러 경제블록화 및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3-24, 2023.8.25.),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382&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10.26.); Shekhar Aiyar et al.,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

표 II-2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 관계와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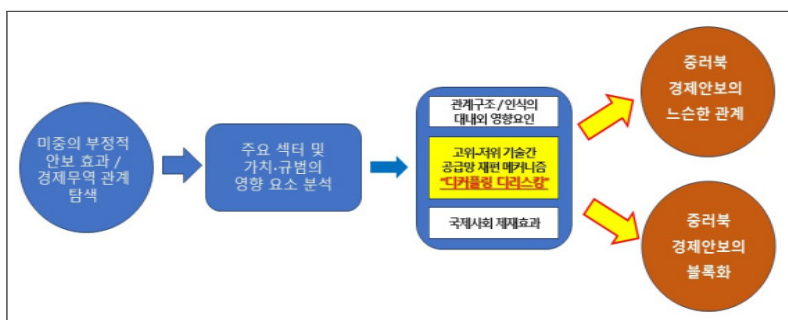
| 주요 섹터와 가치 규범 | 미중의 우위적 고려요소 | 공급망 재편 구도 | 중러북 경제-안보 관계 |
|--------------------------------|-------------------------------------|-----------|---|
| 첨단 반도체와 군민 양용 섹터(사이버 보안, SI 등) | 부정적 안보 효과 압도 | 강한 디커플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중, 대북, 대러 제재 우회와 상쇄 전략으로 블록화 추진 가능성 큼. -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큼. - 첨단 산업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가 |
| 핵심 광물 |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무역 효과의 경합 | 강한 디리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광물 가공 수입원의 다각화 과정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 하락 가능성 - 제재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핵심 광물 거래 |
| 환경 | 청정에너지 섹터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무역 효과의 경합 | 약한 디리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규범 중러북 간 입장 차이: 중국은 적극적 탄소 중립, 러시아는 소극적, 화석연료 관련 국익 수호 - 북한은 아직 환경보호보다 발전권 우선, 국제사회 지원과 협력에 개방적 |
| 노동(인권) |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부정적 안보 효과 우위와 약한 경제무역 효과 | 약한 디커플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노동 관련 미국과 서방의 제재 강화와 중국의 맞대응 지속 - 강제노동 관련 섬유 의류와 태양광 섹터 등 공급망에 북한과 러시아 연계 가능성 큼. |

출처: 저자 작성.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공급망 재편이 주요 섹터와 가치 규범의 변수를 거쳐 서로 다른 구도로 펼쳐지며, 이러한 차이가 중러북 경제안보 관계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와 군민 양용 섹터에서 미중은 압도적인 부정적 안보 효과를 우선 고려하고, 이로 인해 미중 공급망 재편 구도는 강한 디커플링의 양상을 띠게 된다. 미중이 완전히 디커플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우회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흥색 공급망에 결속시키려는 동기가 증가한다. 이러한 공급망을 통해 중국은 북한 체제 생존을 유지시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시장에서 서방 기업과 기술이 빠져나간 공백을 중국 기업들이 메워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한다.

그림 1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안보 관계 경로 분석 틀



출처: 연구진 작성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우선 미중의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무역 효과 간 관계를 탐색한 후, 주요 섹터와 가치·규범의 영향 요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중 관계 구조·인식의 대내외적 영향 요인, 고위-저위기술 간 공급망 재편 메커니즘으로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크,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라는 ‘삼중 요인’을 통해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느슨한 관계 혹은 블록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다.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구도가 고위기술 섹터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 블록화를 촉진한다면, 중러북은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대응과 제재 무력화를 위해 더욱 밀착할 것이고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미중 경쟁 구도가 중저위기술 섹터의 디리스크가 지배적

이고 이것이 중러북의 느슨한 경제-안보 관계를 초래한다면 섹터(기술)나 분야별로 중러북은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을 선호할 것이고 제재 무실화를 위한 협력도 느슨해져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이 주도하는 공급망·안보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과 견제가 강해질수록 중국은 공급망에서 대북/대러 영향력을 확대해 이를 대미 관계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의 대북/대러 압박과 봉쇄가 강해질수록 러북은 경제-안보 관계 밀착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협박하고 실제 필요한 안보·경제적 이익을 교환할 것이다. 두 번의 경로를 통과해 결과적으로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는 블록화된다. 다른 한편 미국과 서방이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규범 기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중러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장벽이 거의 없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가치·규범 측면에서 참여하기가 더 쉬운 중국이 구축한 자체 홍색 공급망에 편입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다.

2. 섹터·규범별 미중 공급망 재편 사례(윤정현, 이재영)

가. 디지털 및 사이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윤정현)

미중 공급망 재편 과정은 중러북 안보·경제적 밀착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전제하는 분석틀이 미중의 부정적 안보효과와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긴장과 갈등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로서의 핵심 기술 선도의 필

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54/} 미국은 특히 고위도 기술의 경우, 중국과 일정 격차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를 최대한 확장하고, 나아가 아예 추격 의지를 꺾어야 할 필요성까지 인식하고 있다. 즉,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사실상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차세대 핵심 고위도 기술인 디지털 ICT 분야 및 첨단 반도체,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바이오(합성생물학), 배터리(친환경 기술) 등에서 좀 더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펼치고 국내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체적으로, 혹은 동맹과 함께 공급망을 재편해가고 있다. 이는 각 산업 섹터에서의 경쟁력 논리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가치·규범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디지털 ICT 분야

디지털 분야는 미중 간의 정치적 디커플링 노력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통신·인프라 등 정보통신 기술산업의 경쟁력 측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보안 이슈가 부각되는 등 사이버안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주도권 경쟁은 화웨이 5G 이동통신 장비를 둘러싼 디지털 무역 경쟁 → 장비 활용의 고도화와 직결된 클라우드, 데이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을 둘러싼 디지털 안보 경쟁 →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해저, 네트워크, 우주 등 인프

^{54/} The White House,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at the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 Global Emerging Technologies Summit," 2022.9.1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9/16/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at-the-special-competitive-studies-project-global-emerging-technologies-summit/>> (검색일: 2023.10.26.).

라를 포함한 우주 경쟁으로 영역과 범위가 다차원화하고 있는 양상까지 관찰되고 있다.^{55/}

특히, 글로벌 신흥기술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과학기술의 우위가 곧 국가안보임을 확인한 이른바 Sullivan Tech Doctrine에서 보듯이,^{56/}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용인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과 일정 격차를 유지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되며, 핵심 전략 기술에 있어 중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벌리고, 아예 추격 의지를 꺾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국과의 디커플링 노력은 당장 이행해야 할 과제임을 언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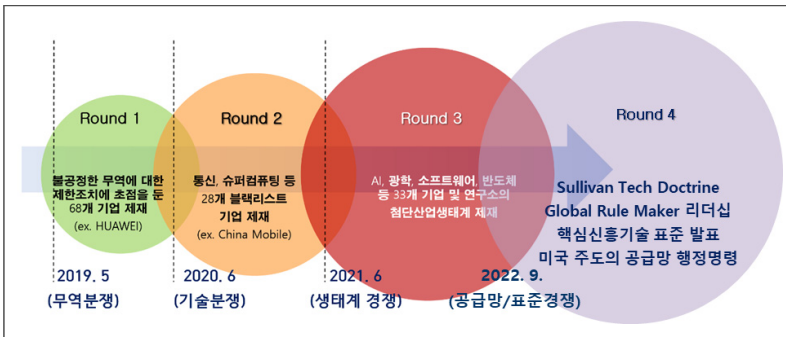
특히, 미국은 우방국과의 기술동맹, 신산업 및 기술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국 견제 강화 및 압도적 기술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이어 디지털 분야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경쟁양상은 무역 분쟁에서 기술 분쟁으로, 나아가 생태계 경쟁에서 공급망·표준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중 경쟁 시대의 국제 표준 경쟁은 기존 체제가 새로운 대안적 질서의 도전에 직면하는 국면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57/}

55/ 김영은 외, “디지털 기술 주도권 확보전략 및 대응방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GDX REPORT 2022-5, 2022), p. 3,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24863&parentSeq=24863> (검색일: 2023.10.25.).

56/ The White House,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at the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 Global Emerging Technologies Summit,” 2022.9.1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9/16/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at-the-special-competitive-studies-project-global-emerging-technologies-summit/>> (검색일: 2023.10.26.).

57/ ‘네트워크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표준 수립’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자신의 우호적 세력에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관계의 양적인 증대 차원을 넘어 새로운 보편성을 획득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신질서와 규범 창출을 의미한다. 김상배, “신흥안보와 메타거버넌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2016), pp. 79~80.

그림 II-6 기술품목에서 공급망-표준경쟁으로 확장되는 미중 경쟁



출처: 연구진 작성

2023년 5월 4일 백악관은 ‘핵심 및 신기술’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는데,^{58/} 이는 미국이 단순한 기술품목과 제품을 넘어 글로벌 규칙 제정으로까지 중국과의 경쟁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59/} 이는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컴퓨터와 메모리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에너지 및 양자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 정부가 이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58/ The White Hous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mote Responsible AI Innovation that Protects American’s Rights and Safety,” 2023.5.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5/04/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actions-to-promote-responsible-ai-innovation-that-protects-americans-rights-and-safety/>> (검색일: 2023.5.4.).

59/ 윤정현, “미국의 「핵심·신기술 표준 전략」 발표와 주요 시사점,” (INSS 이슈브리프 제436호, 2023.6.1.), p. 1,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6899> (검색일: 2023.10.26.).

중국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디지털 무역 공동체, 디지털 실크로드 공동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은 AI, 5G, 스마트 시티, 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연대와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중국의 전략이다. 이 전략은 인프라 구축, 디지털플랫폼 구축,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디지털 일대일로 정상포럼(2017.2.), 중국 표준 2035(中国标准 2035, 2021.4.)에 이어 국가표준화 발전 개요(國家標準化發展綱要, 2021.10.)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표준 굴기의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디지털 핵심 인프라인 차세대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 중인데, ‘디지털경제 3단계 추진계획’이 대표적이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인터넷, 3G, 4G 보급, 5G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전자상거래 38조 위안 돌파, 정보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2단계는 2025년까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즉시 응용, 광대역망 보급률의 글로벌 수준 달성, 세계 최고 이동통신망 구축, 전자상거래 67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단계는 2050년까지 정보를 전면 뒷받침하는 현대화 달성, 네트워크 강국 공고화, 글로벌 정보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결합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60/}

중국의 국제 표준화 기구 내 영향력 확대에는 관련 기업과 중국정부 산하 싱크탱크 간의 협력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향후

60/ 정혜영,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블록(1편): ‘아세안의 5G 통신인프라 협력을 중심으로,’” (CSF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오피니언, 2022.8.23.),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7263&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3.10.27.).

통신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중국 통신기술 기업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국제표준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61/} 중국의 데이터 경제는 미국과 비교 시 데이터 생산량, 유통, 운영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원격치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선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보다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화 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중국표준 2035’를 보면,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5G 기술 국제화 표준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62/} 즉, 디지털 ICT 분야에서의 미중 공급망 재편 흐름은 관련 무역 관세에서 기술품목으로, 생태계 전반을 넘어 선제적인 표준으로 쟁점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주도하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또한 완제품에서 요소기술로, 연구개발 인프라와 규격·표준으로 초점이 모아지면서 경제적 탈동조화의 기초가 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트럼프-바이든 행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현상이 일관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미국은 EU와 2022년 ‘대서양 횡단 데이터 프레임워크(Trans-Atlantic Data Policy Framework)’의 합의를 통해 양국 간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와는 2021년 「합법적인 해외

61/ 최원석 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브리핑 22-16, 2022. 7.6.), p. 193,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10000&bid=0002&act=view&list_no=10191&cg_code=> (검색일: 2023.10.26.).

62/ 위의 글, p. 5.

데이터 사용에 관한 법(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CLOUD Act)」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과는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 공고화, 개방형 무선 접속망(Open-Radio Access Network, 이동통신 장비들을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의 발족,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한 바 있다.^{63/}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은 ‘부정적 안보 외부효과’로 인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의 글로벌 확산을 제약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중국 차세대 통신기술의 군사안보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미국 하원의 화웨이와 중싱통신에 대한 조사결과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군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해당 통신 장비를 사용한다면 비상시 중대한 안보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64/} 2016년 11월, 중국회사들이 미국에 판매한 수백만 대의 폰에 백도어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해커들에게 화웨이 장비는 보안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고, 이들 장비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주의를 요한 바 있다.^{65/} 이러한 흐름 가운데 2019년 5월

63/ 대통령실, “2023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2023.4.27., p. 5,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B4x547qk>> (검색일: 2023.10.26.).

64/ “美 하원 “중국 통신장비 제품, 미국 안보 위협,” 『KBS 뉴스』, 2012.10.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48464>> (검색일: 2023.6.2.).

65/ “영국, 화웨이 장비 분석 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비판,” 『보안뉴스』, 2019.4.1., <<https://www.boanews.com/media/view.asp?idx=78285>> (검색일: 2023.6.2.).

15일,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제13873호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그 결과 화웨이는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퇴출당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 1월 미국 하원은 「5G 및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법 (Secure 5G and Beyond Act of 2019)」, 「미국 무선리더십진흥법 (Promoting United States Wireless Leadership Act of 2019)」, ‘하원 결의안 575(House Resolution 575)^{66/}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백악관은 2020년 3월 ‘5G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이른바 ‘악의적 행위자(malicious actors)’들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업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5G 통신망을 개발 및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67/} 2020년 8월에는 중국 등 악성 행위자의 침입으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민감정보 등 국가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Clean Network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Clean Network는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Clean Carrier, 미국 모바일앱 스토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Clean Store,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앱 사전설치나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Clean Apps, 미국 시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와 지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Clean Cloud, 미국의 인터넷에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Clean Cable, 미국 외교시설에 송수신하는 모든 5G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안전한 경로를 보장하는 Clean Path 등 6개로 세분

66/ 2019 프라하의 5G 보안 컨퍼런스에서 32개국이 제안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결의한 것이다.

67/ Cyber Security&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5G Security and Resilience,” <<https://www.cisa.gov/topics/risk-management/5g-security-and-resilience>> (검색일: 2023.10.23.).

화되어 추진중이다.^{68/} 더불어 동일한 시기에 국토안보부의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새로운 ‘5G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CISA 5G Strategy: Ensuring the Security and Resilience of 5G Infrastructure in Our Nation)’을 발표하면서 5개의 전략적 목적에 15개 목표를 제시하였다.^{69/} 이러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5G 네트워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 같은 ‘오픈랜 동맹’이나 Clean Network의 확대가 제기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3가지 접근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다. 첫째로 기술수출 통제 분야에서 「수출 관리·통제법(出口管制法, 2020.12.)」 발표를 통해 국가안전 관련 물품과 기술, 서비스 등 수출통제 대상을 지정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한 애플, 시스코 등에 대한 수출입 투자를 제한하기도 하였다.^{70/} 둘째로 국가안보 관련 통신·데이터를 보유한 기술기업의 해외상장을 금지 또는 제한하였으며, 외국인의 자국 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리

68/ 이응용, “미국과 중국의 5G 사이버보안 최신 정책 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REPORT 2020 vol. 9, 2020.9.), p. 6, <https://www.kisa.or.kr/20302/form?postSeq=449&lang_type=KO&page=#fnPostAttachDownload> (검색일: 2023.10.26.).

69/ Cyber Security&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 5G Strategy: Ensuring the Security and Resilience of 5G Infrastructure in Our Nation,” 2020, <https://www.cisa.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cisa_5g_strategy_508.pdf> (검색일: 2023.10.26.).

70/ 세계법제정보센터, “중국 수출 관리·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5%2587%25BA%25E5%258F%25A3%25E7%25AE%25A1%25E5%2588%25B6%25E6%25B3%259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1&searchNtnl=CN&pageIndex=1&CTS_SEQ=49084&AST_SEQ=1086> (검색일: 2023.10.26.).

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1.12.)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셋째, 통신·데이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 유출 백도어 설치 자제를 촉구하였으며,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2020.9.), 「데이터 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제정(2021.6.),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보호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하였다.⁷¹⁾

2023년 2월 중국은 국가 디지털 전략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디지털 중국 건설계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을 공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촉진,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이 플랜을 중심으로 디지털 중국 전략 실현과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확대 및 국가데이터국 설립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⁷²⁾

특히,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지를 더욱 강화하는 ‘홍색 공급망’ 전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오프라인의 일대일로가 수많은 부작용과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보완하는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결제, 보안 감시 등 차세대 첨단기술의 중국우위를 바탕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실크로드(DSR, Digital Silk Road)’ 프로젝트가 부상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25년까지 전세계 네트워크의 41%를 중국 기업

71) 김영은 외, “디지털 기술 주도권 확보전략 및 대응방안,” p. 5.

72) 오종현, “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6권 8호, 2023.4.27.), p. 2,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4&list_no=10700&seq=1> (검색일: 2023.10.26.).

이 제공하고, 5G 단일사업으로만 중국 전체 GDP의 3%에 이르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2017)’을 통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73/} 이 같은 흐름은 개방성을 표방한 O-RAN 조차 부정적 안보의 외부효과로 인해 미중 경쟁의 진영 간 장벽을 넘는 표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미중의 정치경제적 긴장이 각자의 우호국이나 전략적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디커플링 차원’의 공급망 진영화를 가속화시키는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사이버보안 분야

지금까지의 사이버 보안정책이 ‘네트워크의 모든 접근 통로를 제어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경계 기반 보안’이었다면 바이든 정부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악성 사용자로 의심되는 행위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74/} 미국은 이러한 개념의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의거하여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짚으면서 해당 품목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미국 내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로서 중국산 장비에 대한 미국 기업의 사용 차단 및 배제, 우방국들에 중국산 장비의 사용 배제 참여 촉구, 관련 법률 제정,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급망 강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75/} 특히 2020년 들어서는

73/ 김영은 외, “디지털 기술 주도권 확보전략 및 대응방안,” pp. 31~32.

74/ 김소정, “미국 사이버 공급망 보안강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제201호, 2022.12.6.), p. 5,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595&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EC%82%AC%EC%9D%B4%EB%B2%84+%EA%B3%B5%EA%B8%89%EB%A7%9D> (검색일: 2023.10.26.).

네트워크 및 통신 관련 사이버보안 정책이나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2022년 3월 「2022년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법(Strengthening American Cybersecurity Act of 2022)」에 서명했는데, 주요 내용은 핵심 인프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사건 발생 시 신고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주요 목적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나 영업비밀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은 2021년 6월 중국이 제정하여 발효한 「데이터보안법」 등 사회주의 국가의 사이버보안법 체계와 일부 유사하다.^{76/} 즉, 사이버 위협 증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미국은 주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이 해킹을 당할 경우,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게끔 하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국토안보부의 CISA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으면 랜섬을 지불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77/} 이러한 강화된 사이버보안 정책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다양한 사이버 보안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사이버보안 강화법에 의거하여 갱신되는 ‘연방 사이버보안 연구 및 개발 전략 계획(Federal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및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

75/ 위의 글, p. 1.

76/ 정민정, “바이든 대통령의 사이버보안 강화법 서명의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37호, 2022.4.13.), p. 3,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8714>> (검색일: 2023.10.26.).

77/ Strengthening American Cybersecurity Act of 2022, S. 3600.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INSSG)’을 통해 사이버안보를 최우선과제로 설정,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역량 및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천명하였다. 미국은 ‘국가 사이버보안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Improving the Nation’s Cybersecurity(EO 14028))’ 4절에서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실행 지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코드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도입,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한 적합성 증명 등을 포함한다.^{78/}

나아가, ‘안전한 5G를 위한 국가전략 구현계획(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 Implementation Plan)’에서 보듯이, 동맹국과 전략파트너의 통신장비 공급망 위협 식별 후 ICT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부적에 대한 평가 시행, 위협 완화 방안 도출, 표준 및 보안원칙 제정을 위한 외교적 실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ICT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식별·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공급망위험관리(SCRM) TF’를 발족하고, 국제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 2023년까지 소프트웨어 보증 및 자재명세서(Software Bill of Material, SBOM) 정보까지 투명하게 할 것임을 발표하였다.^{79/}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부터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피력해 왔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인터넷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중앙 사이버보안 위원회 출범식에서 “사이버 보안이 없으면 국가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중국을 인터넷 대국에서 사이버 대국으로

78/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Improving the Nation’s Cybersecurity,” 2021, 5, 1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5/12/executive-order-on-improving-the-nations-cybersecurity/>> (검색일: 2023.10.26.).

79/ 손호현·김동희·김소정,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 연구: SBOM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2호 (2020), pp. 9~20.

전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80/}이에 국가 인터넷 및 정보안보시스템 건설, 사이버공간주권 수호 등을 국가안전 개념에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시기 사이버보안 전략은 기존 사이버 보안 정책을 재정비하고, 담당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 정책 시행을 위한 환경 조성 and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이 국가 대응 이슈로 부상하면서 사이버공간 침해에 대한 예방, 대응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2017)」을 통해 관련 주요 이슈에 대응해 왔는데,^{81/} 이 법은 중요 정보 핵심기반시설 관련 개인 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중국 현지 서버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보안 감시 데이터분석보고서(网络安全监测数据分析报告, 2020. 5.)’를 통해 APT공격, 데이터보안, 취약성, 악성코드, 공급망, 산업용 제어시스템 보안 등 사이버보안 동향을 점검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5G 사이버보안 표준화 백서(5G网络安全标准化白皮书, 2021. 5.)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데이터 보안법(2021.9.)」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보의 요소이자 전략적 국가자원으로 간주, 국가 차원의 감시, 평가, 수출규제 등 데이터 보안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결국, 사이버 보안 측면은 미중 간 안보적 고려에 의한 경제적 탈동조화로의 기초가 가장 강력히 나타나는 분야이다. 나아가 그 파급력은 EU, 영국, 일본 등 미국의 우호국이나 전략적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주요 입장국들에게까지 미치면서 진영 간 탈동조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 박민숙,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 20.

81/ 「사이버보안법」에서는 사이버보안 표준체계 구축, 사이버공간운영 안정, 핵심정보 기반시설 보호, 온라인 실명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반도체 분야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대란 이후, 반도체의 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반도체의 대외적 취약성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견제는 동맹국 관계 강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Fab4', 가치동맹, 다자간 협력 체제가 모색되는 가운데 동맹국과 중견국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양국 갈등의 상징이 되는 핵심이슈로,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재편과 진영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거진 양안 위기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과 대만에 극도로 의존 중인 미국 반도체 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다른 핵심기술부문과 달리 반도체는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 뿐만 아니라, 우호국 진영 내에서도 특정 생산단계와 품목에 대한 심각한 대외의존성이 가진 문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미국이 동맹·우호국인 한국, 일본, 대만에 각자의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별 협력을 위한 'Fab4'^{82/} 참여를 제안하면서도 참여국이 기 투자한 경쟁국(중국) 생산시설의 증대,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약은 물론, 미국 내에 생산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참여국 간 경쟁을 촉발시키거나 차별적·반시장적 요소가 내포된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82/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의 긴밀한 반도체 협력체로서, 언론에서는 주로 'Chip4 동맹'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반도체 공정 단계 중 '제조(fabrication)'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특정 적대세력을 상징하고 배타성을 띤 '동맹'이 아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 진흥을 강조한 긴밀한 협의체임을 고려할 때, 'Fab4'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적으로 '팹4'로 통용하고 있다. 외교부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협력대화'로 언급한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에 부딪혔으며, 진영 내 유사입장국 간의 불만과 이를 ‘디리스크(위험완화)’ 차원으로 재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일관된 디리스크의 접근을 펼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The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 SIA)를 중심으로 반도체 분야를 국가안보 및 미국의 혁신기술 주도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요청해왔다.^{83/} 당시 민주당 척 슈머(Charles Suhumer)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반도체 생산에 인가된 예산을 현재 반도체 부족난 해소에 배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백악관은 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을 준비 중임을 언급했으며, 실제로 2월 24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부품과 광물 품목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발효한 것이다.^{84/}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시도는 일자리와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와 중장기 혁신 기술 향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83/ “By investing boldly in domest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centives and research initiatives, President Biden and Congress can reinvigorate the U.S. economy and job creation,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nd ensure the U.S. remains the leader in the game-changing technologies of today and tomorrow.”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emiconductor Industry Leaders Urge President Biden to Prioritize Funding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Research,” 2021.2.1., <<https://www.semiconductors.org/semiconductor-industry-leaders-urge-president-biden-to-prioritize-funding-for-semiconductor-manufacturing-research/>> (검색일: 2023.2.15.).

84/ 윤정현, “반도체 공급망 안보의 국제정치: 미국의 ‘Fab4(Chip4)’ 제안의 시사점,” 『국가전략』, 29권 1호 (2023), p. 189.

표 II-3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2.8.9.)의 주요 내용

| 기금명 | 소관부처 | 내용 | 규모 |
|---|-------------|--|--------|
| CHIPS for America Fund | 상무부 | 반도체 제조 지원(\$390억) * 성숙공정(Mature Nodes)지원 \$20억 포함 | \$500억 |
| | | 반도체 R&D(\$110억) *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신설, 첨단 패키징, 표준화 및 지적권 보호 등 지원 | |
|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 국무부 | 신뢰가능 통신망 및 장비 보급 촉진 다자간 반도체 공급망 재편 * 반도체 공급망을 우방·동맹 함께 비용 분담하는 구조로 조직, 비시장경제에 대해 공동 대응 | \$5억 |
|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 국방부 | 초소형 전자공학기술개발 지역 혁신 허브(Microelectronics Commons) 지원 | \$20억 |
|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 국립과학재단(NSF) | 반도체 부분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2억 |

출처: 최용호,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 Review 23-07호, 2023.4.19.), p. 6. (https://www.mofa.go.kr/www/brd/m_25699/view.do?seq=369051&page=3) (검색일: 2023.10.26.).

문제는 이처럼 위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일부 반시장적 요소뿐만 아니라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이 “반도체과학법과 미국 기술패권을 위한 장기 비전(The CHIPS Act and a Long-term Vision for America’s Technological Leadership)”을 발표하면서, 동 법안의 궁극적 목표가 당초의 Fab4와 간극이 있음을 여과없이 보였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제조역량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넘어 국방 및 의료분야 활용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 기반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첨단패키징 및 후공정 단계까지 미국이 포괄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표명한 것이다.^{85/}

^{85/} Gina M. Raimondo, “Remarks by U.S. Secretary of Commerce Gina Raimondo: The CHIPS Act and a Long-term Vision for America’s Technological Leadership,”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3.2.23.,

이어, 일본과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에 공동투자하며, 아직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Limited)와 삼성전자도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2nm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에 요구되는 장비 및 처리 기술 등의 개발에 협력할 것을 양국 외무부·상무부 간 2+2 회담을 통해 밝혔다.^{86/} 이는 Fab4 내에서도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Fab4를 넘어 미국 내 자체 반도체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접한 캐나다-멕시코와 북미에 기반한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등 연계산업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 의존도 완화를 위해 인도에 구형 레거시 반도체의 제조와 후공정 단계의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도 내 반도체 전문가 양성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87/} 이 같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시도는 한국을 비롯한 Fab4 참여국에게 해당 공급망의 참여가 안정성을 담보해주지 못하며, 이에 따라 개별국이 독자적인 디리스크잉의 수단을 확보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23년 5월 23일 세계 제3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자, 미국내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Micron) 제품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3년 5월 21일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기관인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网络安全审查办公室)은 중국 내 판매 중인 제품들에 사이버 안보 심사를 거친 뒤 결론을 이와같이 내린 것이다. 중국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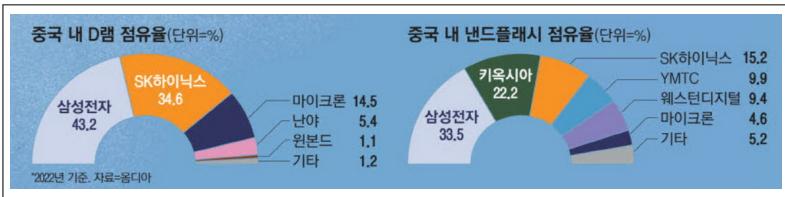
<https://www.commerce.gov/news/speeches/2023/02/remarks-us-secretary-commerce-gina-raimondo-chips-act-and-long-term-vision> (검색일: 2023.10.26.).

86/ 윤정현, “반도체 공급망 안보의 국제정치: 미국의 ‘Fab4(Chip4)’ 제안의 시사점,” p. 189.

87/ 최용호,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 p. 11.

국은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의 제품에는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협이 있다”라며 “이는 중국의 중요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위협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88/} 중국에서 연간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이크론의 중국매출은 전체의 11% 정도이며, 이 경우, 마이크론 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89/}

그림 11-7 중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기업별 D램과 낸드플래시 점유율



출처: “최대시장 중에 팔지말라니 ... 삼성·SK, 도넛은美압박에 속았어.” 『매일경제』, 2023.4.24., <<https://www.mk.co.kr/news/it/10720486>> (검색일: 2023.10.26).

그러나 이미 이 같은 제재 가능성이 점쳐지던 4월 말부터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핵심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의 물량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서였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동맹이자 우방국의 반도체 수출 자체를 통제

88/ “중국, 결국美 ‘마이크론’ 제재... 예상됐던 시나리오, 韓 반도체에도 불뚱될까,” 『디지털데일리』, 2023.5.22.,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52210052821261>> (검색일: 2023.10.26.).

89/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발표한 5월 22일의 중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중국 고객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D램,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낸드플래시 등 중국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주문을 옮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美 마이크론 제재, 삼성·하이닉스에 득일까 독일까,” 『조선비즈』, 2023.5.23.,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3/05/23/HSQ6XVNFZBGIXEJLXAPC2JYK7U/> (검색일: 2023.10.26.).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낳았으며, 외국 기업인 한국 기업에 대한 개입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또한, 마이크론의 시장 공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 역시 부재하며, 향후 중국 내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없도록 판매량의 절대 수준에 제한을 두는 방법 역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0/} 더욱이, 한국은 미국 정부가 2022년 10월 시행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가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에 제한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이중적으로 불합리한 조치라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를 제약받은 네덜란드 ASML과 같은 원치않는 디커플링을 요구받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종합하면, 반도체 분야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 추격속도의 지연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국과 동맹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과도 거리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5) 배터리 분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도 배터리(이차전지)는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는 급증하는 광물 자원 수요의 증대와 함께 특정국에 대한 자원 편재성과 비탄력적인 공급 구조, 자원 민족주의, 상이한 환경 규제 등, 광물 자원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불안을 내재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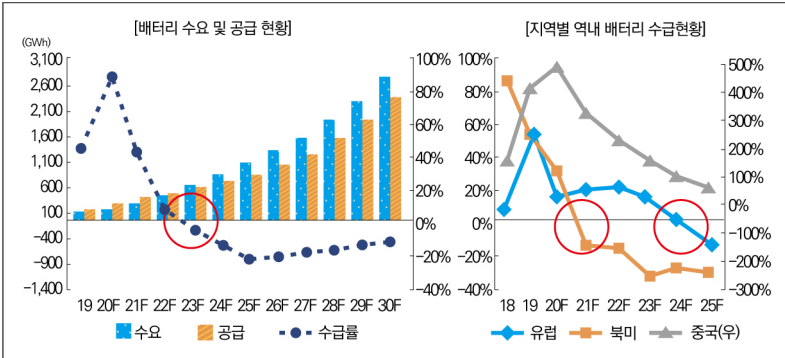
90/ “최대시장 中에 팔지말라니 ... 삼성·SK, 도넨은 美압박에 속았어,” 『매일경제』.

91/ ““핵심 광물-1”... 국내 해결을 위한 현주소,” 『디지털비즈온』, 2023.6.20., <<https://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321>> (검색일: 2023.10.26.).

미중 배터리 공급망 갈등은 중국이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분야로 배터리를 선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의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통해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중국 내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중국 브랜드 배터리 제품을 100만 대 이상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92/} 배터리는 최종 수요에 이르기까지 ‘채굴(Upstream)’-‘가공과 정제(Midstream)’-‘배터리 팩/셀의 생산(Downstream)’의 3단계로 전개된다. 그런데, 실제 니켈, 리튬, 흑연, 코발트 등 핵심 주요 광물들은 원자재별로 각국 매장량이 다르나, 가공과 정제, 생산에 있어 대부분 중국을 거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그 결과, 2023년 현재 배터리 산업의 시장 지배력은 중국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배터리 채굴, 정제,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조달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자체 수직계열화 시도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고민에 이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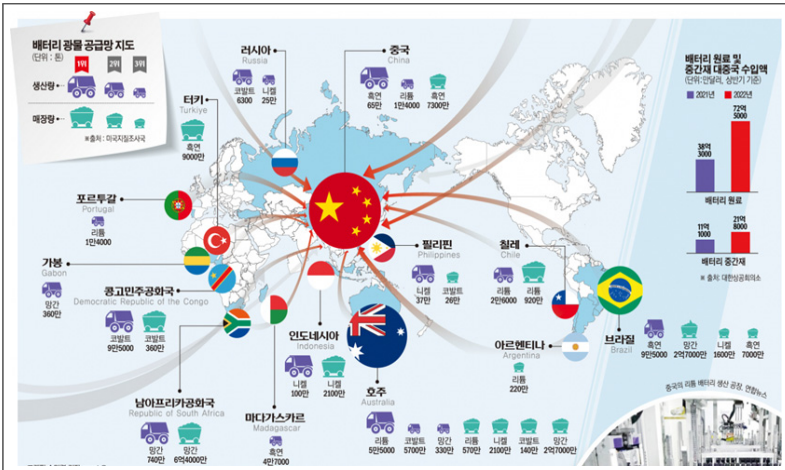
92/ PRC State Council(国务院), “Notice of the State Council on the Publication of “Made in China 2025”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2015.5.8., <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t0432_made_in_china_2025_EN.pdf> (검색일: 2023.10.26.).

그림 11-8 글로벌 및 지역별 배터리 수요 현황



출처: 전창현, “2차전지 배터리 세계시장 수요 전망,” C&Story, 2021.5.24., <<https://yrchoi.tistory.com/entry/2%EC%B0%A8%EC%A0%84%EC%A7%80-%EB%B0%ED%84%B0%EB%A6%AC-%EC%84%B8%EA%B3%84%EC%8B%9C%EC%9E%A5-%EC%88%98%EC%9A%94%EC%A0%84%EB%A7%9D>> (검색일: 2023.10.27.).

그림 11-9 세계 배터리 공급 프로세스의 핵심단계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출처: “[취청이는 공급망①] 세계 곳곳서 캐낸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에 몰려,” 『이투데이』, 2022.10.5., <<https://www.etoday.co.kr/news/view/2175601>> (검색일: 2023.5.20.).

이 같은 문제를 직시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및 광물 가공을 하는 기업^{93/}을 선정하여 사업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리튬, 흑연, 니켈 등)에 대한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물가 안정 방안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방향까지를 포괄하는 목표로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94/}은 보조금 지급요건을 둘러싼 쟁점으로 오히려 한국, 일본, EU와 같은 우호국들의 반발을 낳게 되었다. 투자예산의 80%가 집중되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 미국산 혹은 북미산 조립 공정, 광물채굴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서^{95/} 이들 국가들에 막대한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탑재 배터리의 원료와 부품 비율뿐만 아니라 최종조립 요건까지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며, ‘우려국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의 광물이나 부품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세액공제 지급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됨

93/ 일차적으로 미 에너지부가 미국 내 12개 주의 20개 기업을 선정해 2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전부 미국 소재의 미국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94/ Senate Democrats, “Summary of the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nvestment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2022.8.22.,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summary_of_the_energy_security_and_climate_change_investments_in_the_inflation_reduction_act_of_2022.pdf> (검색일: 2023.10.26.).

9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2022.11.4.,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295&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ED%95%98%EC%9C%84%EA%B7%9C%EC%A0%95%20%EA%B4%80%EB%A0%A8%20%EC%A0%95%EB%B6%80%20%EC%9D%98%EA%B2%AC%EC%84%9C> (검색일: 2023.10.26.); European Commission, “Critical Raw Materials: ensuring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for EU’s green and digital future,” 2023.3.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661> (검색일: 2023.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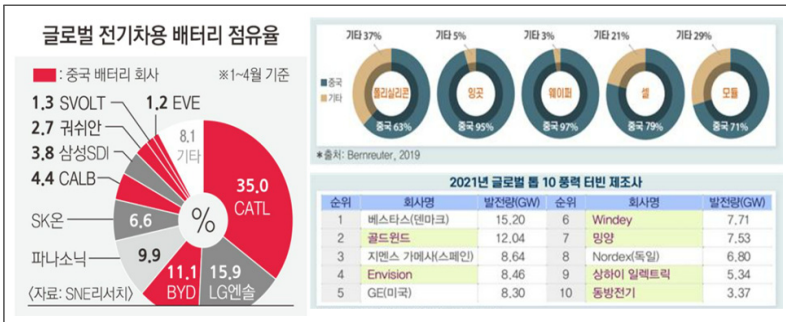
을 규정하고 있었다.^{96/} 2025년부터 미국 내 현지 생산이 가능한 국내의 친환경차 기업과 중국산 정제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당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공급망을 재편해야하는 어려운 숙제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일본이나 EU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반도체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CHIPS법)」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법안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도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부재한 채, WTO의 자유무역원칙과 충돌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교역국들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EU 역시, 중국·러시아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고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안(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3월 말 입법화함으로써 배터리, 친환경 기술을 둘러싼 또 하나의 블록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정 우려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해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CRMA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추출, 40%를 가공하고, 15%를 재활용하는 역량을 보유하며, 연간소비량 65% 이상을 단일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을 다변화한다는 구체적 목표 또한 수립하였다.^{97/}

9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2022.11.4.,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_s2/bbs/bbsView.do?bbs_seq_n=166295&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ED%95%98%EC%9C%84%EA%B7%9C%EC%A0%95%20%EA%B4%80%EB%A0%A8%20%EC%A0%95%EB%B6%80%20%EC%9D%98%EA%B2%AC%EC%84%9C> (검색일: 2023.10.26.).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촉발된 역외 차별성 문제는 EU의 CRMA 공표에서도 나타났으며, 진영 내 갈등과 블록화 이슈를 촉발시켰다. 나아가 역내 블록에 속하지 않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호국들의 반발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규정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98/} 이를 반영한 하위규정 마련과 예외, 유예 조치들은 경제적 탈동조화의 시도가 진영의 반발을 넘기 어려운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10 중국 기업의 글로벌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배터리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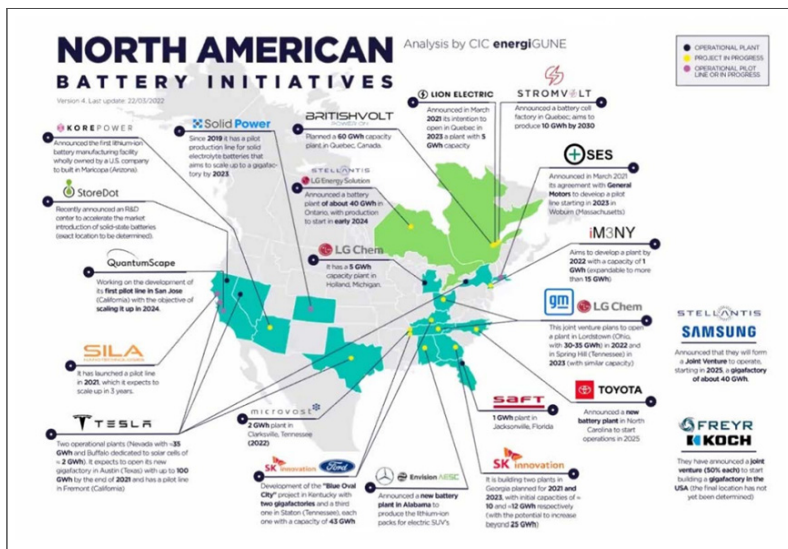
출처: 오경진 “중 배터리 ‘글로벌 공습’ 무섭네.” 『서울신문』, 2022.5.3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1016010>> (검색일: 2023.10.26).

97/ European Commission, “Critical Raw Materials: ensuring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for EU’s green and digital future.”

98/ 정보위원회 소속의 마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지난 3월 9일 “우리국가 기업이 운영하거나, 우려국가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기술 도입 기업도 보조금 자격이 박탈함”을 명시한 ‘IRA 보조금 차단법’ 발의했고, 민주당 조 맨틴 의원 등도 ‘CATL의 움직임을 제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화당 루비오 의원의 법안을 적극 지지함을 표명했다. “Rubio takes aim at planned Ford US battery plant using Chinese technology,” *Reuters*, 2023.3.10.,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senator-rubio-seeks-block-credits-ev-batteries-using-chinese-technology-2023-03-09/>> (검색일: 2023.10.26.).

그러나 2023년 중국은 전기차에 이어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까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합산점유율은 55.7%로 한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 3사(LG엔솔, SK온, 삼성 SDI)의 합산점유율 26.3%의 2배 이상이다. 또한, 중국산 배터리는 그동안 가성비가 좋은 ‘리튬인산철(LFP)’ 위주여서 부가가치가 낮았으나, 최근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이 ‘셀투팩’ 기술 기반의 고성능 배터리를 출시, 한국이 강점을 지닌 프리미엄 시장에 균열을 낸 바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 에너지 위기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가속화시켰다.

그림 11-11 북미지역 배터리 공장 가동 현황(2022년)



출처: CIC Energy Gune, "North America Accelerates Its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Gigafactory Industry," 2022.3.22., <<https://cicenergigune.com/en/blog/north-america-accelerates-commitment-development-gigafactory-industry>> (검색일: 2023.3.12).

문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심지어 미국 기업조차도 이 같은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제기하는 부작용을 회피하고자 오히려 중국기업과 합작회사 형태로 우회하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당초 우려국가의 소재·부품 사용을 배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요건에 따라 미국시장 전망이 어두웠던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예상과 달리 포드와 합작 방식을 통해 미시간에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당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약을 뚫고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포드와 CATL의 제휴내용을 보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35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시간 합작공장은 포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CATL은 설계와 기술들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즉, CATL은 합작공장에 기술 라이선스를 공유할 뿐 직접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규정한 우려국 소재·부품 제한 조항을 피해 세액공제 혜택을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99/} 이는 당초 「인플레이션 감축법」시행으로 CATL이 북미 투자를 철회할 경우, 한국이나 일본의 배터리 3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면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 전망을 뒤엎는 것이었다.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차단법」을 발의하며 대처에 나섰다. 법안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포드-CATL 합작 사례를 통해 보듯이, 배터리 부분의 미중 공급망 갈등 구도는 미국 국내 이해관계자(기업)의 경제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ICT, 사이버보안 분야와 달리 안보적 고려에 따른 경제적 탈동

^{99/} “Ford will build a US Battery Factory with Technology from China,” *The New York Times*, 2023.2.13., <<https://www.nytimes.com/2023/02/13/business/energy-environment/ford-catl-electric-vehicle-battery.html>> (검색일: 2023.10.26.).

조화 압박이 경제적 유인을 압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대중국 탈동조화뿐만 아니라 위험 완화의 정책 이행 또한 쉽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6) 바이오 분야

첨단 바이오는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 및 치료, 유전자 및 세포 치료, 의료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세부 기술로 구분된다. 합성생물학은 유전자의 생물학적 체계를 재설계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물학 개체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다.^{100/} 감염병 백신 치료는 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용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생산을 의미한다. 바이오 의료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은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을 구축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술산업의 특성상 단기간 기술확보 및 자립이 용이하지 않으며, 연구개발(R&D)-임상-제품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자본 집약적인 분야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이오 분야는 생물 무기로서의 파괴력과 활용성 등 이중용도위험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악의를 가지고 인공생명체를 사용한다면 생물학적 병기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오안전(biosafety)과 생물학적 봉쇄(biocontainment)에 대한 기술개발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해외의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고, 생명공학 등 주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관련 분야의 미국 경쟁

100/ “中, 바이오의약 기술 수출 제한 추진...美와 패권경쟁,” 『메디팜스투데이』, 2023.2.14., <<http://medi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111>> (검색일: 2023.10.26.).

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었다. 바이오 기술의 제조업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2030년 세계 제조업의 1/3 이상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해외의 취약한 공급망을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101/} 미국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점은 생산 기반이 되는 중국의 바이오파운드리(Biofoundry) 생태계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은 선전, 텐진을 중심으로 대규모 바이오파운드리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 제조업의 최전선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차세대 바이오 패권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를 두고 볼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102/}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우위를 보이는 세부 바이오분야에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 2018년 특정 국가들의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위험에 대한 검토 및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 거래에서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특정국 자본에 대한 거래의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우려국가에 대한 투자와 거래 활동 규제를 골자로한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National

101/ 정일영, “배터리와 바이오제조로 본 핵심 신흥기술의 주요 쟁점,” (INSS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세미나, 2022.6.8.).

102/ 윤정현, “경제안보 측면에서 본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략적 고려사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 브리프 제360호, 2022.5.31.) p. 6,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415> (검색일: 2023. 10. 26.).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1, NCCDA)」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대상 기술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이외에 의약품과 바이오경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미국은 M&A 거래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분야의 중국 자본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8월에는 ‘우려국가 투자제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견제에 대해 중국은 자국 내 바이오경제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정책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서는 유전체학의 확대 적용, 개인맞춤 의학 및 신약의 대규모 개발, 유전자 및 세포은행 설립 등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중국 바이오산업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103/} 특히 “Made in China” 연장선상에서 2025년까지 바이오 의약, 첨단의료 기기, 로봇 등 10대 산업분야에서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신홍기술의 성격이 강한 첨단 바이오 분야는 2023년 미중 간 의도적 공급망 재편 요소가 디지털·반도체·배터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다만, 이는 희소자원이나 부품 등 이른바 ‘초크포인트’가 드러나는 수준으로까지 공급망 관련 섹터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명확한 디커플링의 신호 역시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 경제-안보를 연계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이나 바이오 파운드리에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

103/ 国务院,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2016.3.17., <https://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 (검색일: 2023.10.26.); 国务院, “十三五”國家科技創新規劃的通知, 2016.7.28., <http://big5.www.gov.cn/gate/big5/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103134.htm> (검색일: 2023.10.26.).

적 투자가 증대되면서 첨단 바이오 기술패권을 둘러싼 양국 간의 안보적 고려와 정치적 긴장 역시 점증하는 추세이다.

(7)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공급망 재편 과정은 본 연구의 분석틀이 전제하는 양국의 부정적 안보효과와 경제무역관계의 상호작용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남을 보여준다. 특히, 섹터별 미중 공급망 재편 흐름은 각 기술, 품목별로 다양한 구도가 목도되며, 저위도, 고위도 기술에 따라 대내외적 반발과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재편 메커니즘에서의 디커플링과 디리스팅의 상이한 적용을 낳는데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사적 전유 가능성과 시장 지배력, 진영 내, 국내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 기술의 성숙 수준 등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같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리는 부정적 안보화 및 탈동조화(디커플링)의 정치적 결정이 무역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공급망 재편 범위와 방식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공통적으로 경제적 탈동조화의 공급망 재편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별로 가시적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IC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탈동조화의 정책이행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 반도체 분야는 사실상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위험완화(디리스팅) 방식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터리 분야는 위험완화조차 진영 내, 국내 이해관계의 입장 차 때문에 추진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나. 가치와 규범 이슈: 환경과 인권(이재영)

앞에서 살펴보았던 섹터뿐만 아니라 본 절에서 다루는 가치와 규범 이슈도 미중의 공급망 재편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같이 환경 규범이 작동하면서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무역 효과의 경합이 이루어지지만 안보 효과가 더 큰 영역에서는 강한 디리스크잉의 재편 구도가 펼쳐지고, 풍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섹터 역시 환경 규범이 적용되지만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무역 효과의 경합 속에서 약한 디리스크잉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인권의 가치에 있어 중국 신장위구르의 강제노동 문제와 같이 부정적 안보 효과의 우위와 약한 경제무역 효과가 병존할 경우 약한 디커플링의 공급망 재편 구도가 형성된다.

(1) 환경: 청정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핵심 광물 등 분야에 노동과 환경 규범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31일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30D 잠정 가이드스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국 추가 검토 요건에 노동과 환경 규범 강화가 포함되었다. 유럽은 자체적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규범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서 노동과 환경 조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104/}

2023년 3월 28일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협정’이 체결 및 발효되었고, 이 협정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30D 잠정 가이드스에 등장했던 강력한 노동 및 환경 요건의 보장

^{104/} 이재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 Review 23-6호, 2023.4.5.), p. 6, <https://lby.mofa.go.kr/www/brd/m_25699/view.do?seq=369049&page=1> (검색일: 2023.10.26.).

조건이 포함되었다. 협정에서 다루는 환경법은 오염물의 배출 및 확산 방지, 환경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와 특별구역 관리 등의 내용이었다. 환경 요건의 실제 조항에서 핵심 광물 관련 조치 시행 시 환경영향 평가 진행과 절차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 광물 재활용 관련 국제 표준 개발과 공급망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105/}

특히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센티브 수혜 대상으로 자국산 핵심 광물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106/} 핵심 광물 협정이 IPEF에까지 포함될 경우 이러한 노동 및 환경 요건이 동남아 국가들에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다.

2023년 5월 31일 제4차 미-EU 기술무역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AI,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퀀텀 기술 등 중요한 사안을 다뤘는데, 그 중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대화(Clean Energy Incentive Dialogue)를 창설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사이 조정과 협력을 추동하기 위한 대화체로 녹색 보조금, 수출, 투자, 기술 협력, 중국과 같은 특정국 배제 관련 미국과 EU 사이 합의를 도출했다.^{107/}

105/ 유지영,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내용과 평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 Review 23-6호, 2023.4.5.), p. 9, <https://lby.mofa.go.kr/www/brd/m_25699/view.do?seq=369049&page=1> (검색일: 2023.10.26.).

106/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weekly 2023년 제61호,” 2023.6.8.,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gvcResearch/gvcInsightDetail.do?pageIndex=1&no=2443&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검색일: 2023.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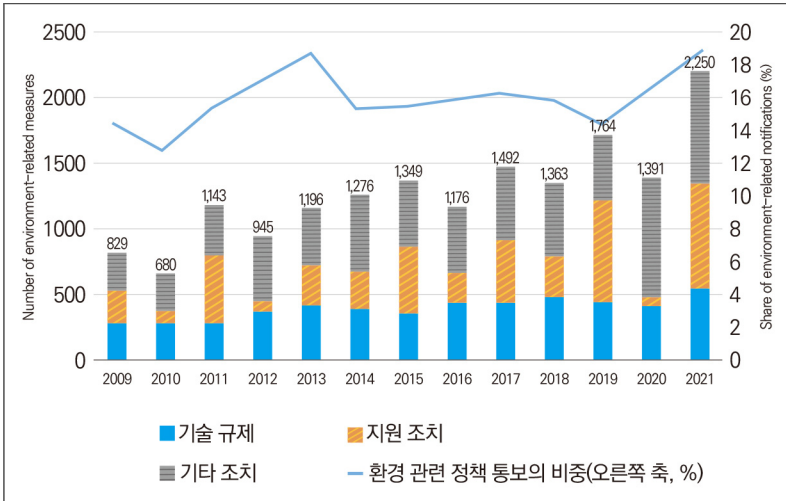
107/ The White House, “U.S. -EU Joint Statement of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2023.3.3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

EU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구체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전기차 배터리 여권 도입, 재활용 의무비율 설정 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차별화된 ESG 환경 기준이 필요하다.^{108/} 특히 EU는 2023년 9월 13일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고,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부터 중국이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천연흑연의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ements-releases/2023/05/31/u-s-eu-joint-statement-of-the-trade-and-technology-council-2/?fbclid=IwAR2iktL192IP8xZMG4GTHgASFkpEeWtbWGX_P0tCTGziqI0dkHLVRFOplzw_aem_th_ARKJwaPNsOyZpLkIshJdZxV2AvXpjE2y9S37OV3_6VCqnxuhN58yLSt9v4VL2yORG3g&mibextid=Zxz2cZ) (검색일: 2023.10.26.).

^{108/}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weekly 2023년 제61호,” p. 12.

그림 11-12 최근 무역 관련 환경 정책의 증가 추세



출처: WTO, "World Trade Report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2023, p. 96,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23_e/wtr23_e.pdf> (검색일: 2023.10.26.).

최근 무역 관련 환경 정책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WTO에 통보한 정책 가운데 WTO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환경 관련 조치의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있고, 무역과 관련된 전체 환경 조치는 2009년 829건에서 2021년 2,25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조치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정책은 탄소 배출이 심한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이고, 그다음이 친환경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기타 조치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재화 수입에 대한 허가제, 이러한 재화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 위생 검역 조치와 무역 촉진 정책 등을 포함한다. 즉 기술 규제와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무역 관련 환경 정책의 종류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이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파편화는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진행된다면 이에 수반되는 생산시설의 이동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국가들 사이 무역의 감소로 긍정적인 기술 낙수효과가 제한되어 청정기술과 지식이 자유롭게 확산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파편화는 규모의 경제를 감소시키고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킨다.^{109/}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공급망 관련 환경 규범과 가치가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경제에서 화석연료 수출 비중이 비교적 큰 러시아는 이러한 환경 규범과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별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 간 환경 규범에 대한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중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면서, 미국과의 기후변화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 주요 수출품이 천연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유사 입장국으로 기후변화 정책에 소극적이다. 북한은 환경 관련 국제 사회의 재정과 기술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환경보호보다 환경을 희생하는 개발을 통한 체제 생존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다.^{110/}

따라서 환경 규범에 있어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무역 효과의 결합으로 약한 디리스팅의 공급망 재편 구도가 형성된다면 중러북 경제-안보 관계는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공급망을 통한 제재 회피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

109/ WTO, "World Trade Report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2023,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23_e/wtr23_e.pdf> (검색일: 2023.10.26.).

110/ 이재영,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북·중·러 경제블록화 및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p. 3.

(2) 인권: 강제 노동 관련 공급망 분쟁

2023년 5월 27일 IPEF 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에서 최초로 공급망 의제 관련 협상을 타결하였다. 회의는 노사정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그 기구의 주요 기능은 숙련 노동자 육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노동환경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111/}

미국과 EU 등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권침해를 이유로 금융 제재, 수출통제, 수입 규제 등의 제재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을 통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품이나 이와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EU도 이중용도 규정을 개정하여 인권 관련 기준을 강화했고, 품목에 기초한 포괄적 제재(catch-all) 방식으로 수출통제를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기업, 단체, 품목, 국가 등 여러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품목을 상무부가 담당하는 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넣거나, 인권침해 혐의가 확정된 기업은 규제 대상(Entity List)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까지 수출 특별 통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인권침해 관련 수출 제재는 2021년 12월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서 수출통제 및 인권 이니셔티브(Export Controls and Human Rights Initiative)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의 감시 기술이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새로운 혁신기술 관련 수출통제 행동 규범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미 산업안보국이 2022년 10월 7일 개정한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고성능 컴퓨팅 능력이 결국 인권침해에 오남

111/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weekly 2023년 제61호,” p. 8.

용된다는 점에서 이와 연관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미국과 EU가 공동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데 악용되는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규제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112/}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CC)가 개최한 4차 장관급 회의의 공동성명도 디지털 지정학의 급변 가운데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 측면 협상 합의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113/}

미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협정은 강력한 노동요건 보장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1998년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선언이 명시한 권리 중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미일 간 이러한 협정의 실제 의무 조항은 핵심광물 공급망 중 노동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정하도록 촉구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 포함 강제노동에 의해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핵심 광물과 연관된 당사국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강제노동 등 행위 교정을 촉구하고, 노동권 실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114/} 만약 이러한 조항을 중국에 요구하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제조된 태양광 발전의 주원료인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수입금지와의 관련이 있고, 행위 교정, 실사, 정보 공유 등은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 사이 체결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협정 중 강화된 환경 및 노동요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보

112/ 안수린, “인권 침해 사유 수출통제 동향,”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 Review 23-5호, 2023. 3. 22.) pp. 13~14, <https://lby.mofa.go.kr/www/brd/m_25699/view.do?seq=369048&page=1> (검색일: 2023.10.26.).

113/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weekly 2023년 제61호,” p. 4.

114/ 유지영,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내용과 평가,” p. 9.

다 완료된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PEF 협상 중 환경과 노동조건을 강화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IPEF에 참여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5/}

미국은 미국무역법 307조를 시행하여 관세국경보호청의 인도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 이하 WRO)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항목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116/} 2016~2021년 1월 WRO가 부과된 횟수에서 중국 기업에 부과된 35건이 가장 빈번했다. 과거 1992년, 2020년 각각 9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1993년의 4건, 1991년, 2016년의 3건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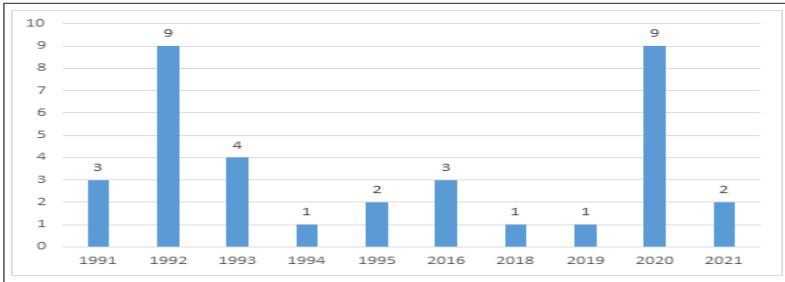
특히 WRO가 가장 많았던 1992년과 2020년을 보면,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건 이후 1992년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것 때문에 미중 정치 관계가 악화된 시기이다. 그리고 2020년은 트럼프 시기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무역 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본격적인 갈등과 전략경쟁에 진입했던 시기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와 무역·경제 관계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15/ 위의 글, p. 11.

116/ 김현아 외, “국제정세 관점에서의 ESG 동향과 대응전략 비교분석 연구,” 『유통물류연구』, 제9권 1호 (2022), p. 54

그림 II-13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현재 시행·부과한 중국기업의 강제노동 관련 인도 보류 명령 연도별 건수 변화

(단위: 회)



출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Withhold Release Orders and Findings List," (<https://www.cbp.gov/trade/forced-labor/withhold-release-orders-and-findings>) (검색일: 2023.6.18), 재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중소연구』, 제47권 제3호 (2023), p. 123.

예를 들어 WRO가 부과된 기업과 제품을 살펴보면, 중국 신장위구르의 강제노동과 연관된 기업과 제품은 2020년 신장 지역 톈푸현(洛浦县) 제4 직업 기술 교육훈련센터(Lop County No. 4 Vocational Skills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에서 나온 모든 제품, 2021년 중국 1위 실리콘 생산기업인 허성(合盛硅业股份有限公司, Hoshine Silicon Industry Co. Ltd)의 태양광 발전 최종 제품과 규토 기반 항목, 2020·2021년 신장위구르 전 지역 및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oration), 신장 정가르 코튼 앤 린넨(Xinjiang Junggar Cotton and Linen Co., Ltd)에서 제조된 면화와 토마토 등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중 무역 전쟁 이전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노동과 연관된 WRO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주로 2018년 이후 관련 WRO가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의 탄산시, 광둥성, 톈진시, 내몽고, 셴양시, 광저우시 등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WRO가 적용

되었다. 그리고 강제노동과 연관된 중국 기업에 적용된 WRO 총 35건 중 약 1/3인 10건이 신장 지역의 기업에 부과되었다.^{117/}

표 II-4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현재 시행·부과한 중국기업의 강제노동 관련 인도 보류 명령 건수 順 제품의 종류

| 부과 연도 | 인도보류 명령 물품 | 건수 |
|------------|--|----|
| 2020/2021년 | 면화, 토마토와 가지사슬 하류 제품 | 3 |
| 2019/2020년 | 의류와 모든 의복 | 3 |
| 2020년 | 모발 제품 | 3 |
| 2018/2020년 | 모든 제품 | 2 |
| 1993년 | 고무제품: 고무가황촉진제(Rubber Vulcanization Accelerators), 고무장갑 등 | 2 |
| 1993년 | 호이스트크레인(Hoist) | 2 |
| 1992/1995년 | 차(Tea) | 2 |
| 2021년 | 규토 기반 제품 | 1 |
| 2020년 | 컴퓨터 부품 | 1 |
| 2016년 | 간미늘 | 1 |
| 2016년 | 스테비아(Stevia)와 제물질 | 1 |
| 2016년 | 소다회, 염화칼슘, 그리고 가성소다 | 1 |
| 1995년 | 가단철제관이음(Malleable Iron Pipe Fittings) | 1 |
| 1994년 | 조화(Artificial Flowers) | 1 |
| 1992년 | 석면(asbestos) | 1 |
| 1992년 | 선풍기와 아연 코팅 전선 | 1 |
| 1992년 | 유황산(Sulfuric Acid) | 1 |
| 1992년 | 굴착 기계 | 1 |
| 1992년 | 자동차부품과 기계장치 | 1 |
| 1992년 | 주철 제품 | 1 |
| 1992년 | 양가죽 | 1 |
| 1992년 | 아연도관 | 1 |
| 1991년 | 공업용 프레스 기계 | 1 |

^{117/}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Withhold Release Orders and Findings List."

| 부과 연도 | 인도보류 명령 물품 | 건수 |
|-------|------------|----|
| 1991년 | 디젤엔진 | 1 |
| 1991년 | 대패 기계 | 1 |

출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Withhold Release Orders and Findings List," 재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p. 124.

〈표 II-4〉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할 점은 강제노동과 연관된 미국의 인도 보류 명령 제품 중 중국의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이나 군민 양용 제품 같은 민감한 제품은 없고, 공급망 재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첨단기술 산업인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도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주원료인 신장의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한 수입 제재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재편 중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공급망 재편에서 중점 분야와는 별개로 강제노동 관련 인도 보류 명령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첨단기술 분야 중국 제품과 기업에서 강제노동의 확실한 증거를 확인할 경우 관련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미국이 신장 지역 강제노동에 대해 부과한 제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미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도 협박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118/} 인권 문제와 공급망을 결부시키는 문제에 있어 러시아와 북한 역시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노동과 인권 관련한 태양광 발전과 섬유 의류 섹터 공급망에 러시아와 북한이 제재 우회와 회피 목적으로 중국과 공급망이 연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118/ "美国的胁迫外交及其危害,"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2023.5.18., <https://www.mfa.gov.cn/wjbxw_new/202305/t20230518_11079585.shtml> (검색일: 2023.6.12.).

Ⅲ. 미중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재편 요인

이재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정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미중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재편 요인

1. 공급망 재편 요인 분석: 무역 기대와 글로벌 가치사슬 (이재영)

가. 미중의 무역 기대 변화

(1) 무역 기대 분석을 위한 GDELT 활용 방법^{119/}

정치적 갈등이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범위 조건은 무역에 관한 기대이다. 즉 정치 갈등과 관련이 있는 미래 추세에 대한 무역 기대가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보는 방식의 조건을 형성한다.^{120/}

미중 양국의 부정적인 무역 기대를 나타낼 수 있는 미중 갈등 데이터를 도출하는데 GDELT를 활용할 수 있다. GDELT 빅데이터는 1979년부터 2023년 기준 현재까지 수집되고 있고, CSV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979년 14.3MB, 2005년 125.9MB 등 수집되는 언론 수, 이벤트 수 등이 급증했고, 2021년 9월 11일 현재 10억 개 이상 이벤트데이터가 축적되었다. GDELT 2.0의 경우 15분마다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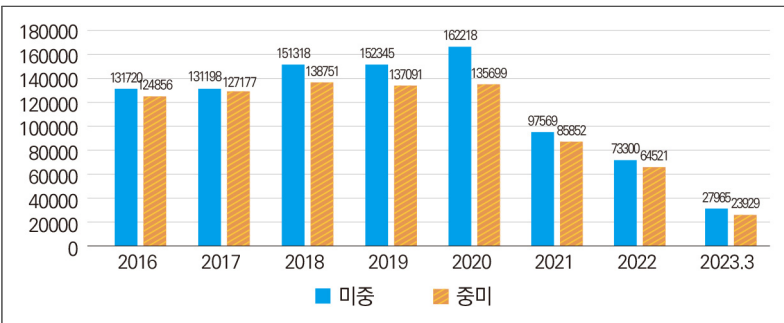
^{119/} 빅데이터 분석은 OPINION LIVE 조인호 대표와 빅데이터센터의 김찬우 센터장으로부터 자문받아 작성. 조인호·김찬우, “미중공급망 경쟁에 관한 양적방법론 탐색,”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3.2.14.).

^{120/} Dale C. Copel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A theory of trade expectations,” pp. 5~41.

시간으로 자료가 수집된다.

본 연구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이벤트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미중 총 927,632개, 중미 837,875개, 미러 1,048,575개, 미한 202,105개, 미북 311,620개, 중러 292,894개, 중한 112,445개, 중북 152,041개, 한중 106,693개, 한미 200,293개, 북중 105,126개, 북미 282,852개, 러중 280,998개, 러미 961,211개이다. 앞에 있는 행위자는 ACTOR1 변수, 뒤에 있는 행위자는 ACTOR2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범위와 시기는 미국의 트럼프 집권 시기(2016~2020년), 바이든 집권 시기(2020년~2023년 현재), 중국의 시진핑 집권(2012년~2023년 현재) 시기가 중복되는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미중 간 갈등 시기 기사 수 변화량과 여러 양자 관계의 감정 지수를 분석한다.

그림 III-1 2016~2023년 3월 미중/중미 관계 전체 데이터양 변화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중 사례를 날짜(Date), 행위자(Actor 1, Actor 2), 지리적 위치, 이벤트 코드, 감정 지수, 뉴스소스 등에 대한 정보로 분류한 후, 미중 양자 관계 틀에서 시계열로 축적된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행위자들 상호 간, 일일, 사건자료이다. 이벤트 코드(Event

code)는 사건 유형 분류, CAMEO(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s)의 사건분류 코드로, 예를 들어 ‘015-책임 인정 또는 주장’, ‘022-외교 협력 호소’ 등이다. 감정 지수(AvgTone)는 보도된 기사의 감정 수준 값을 보통 -10(매우 부정적)에서 +10(극히 긍정적) 사이 값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0일 경우 중립이다. 긍정점수에서 부정 점수를 뺀 값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표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뉴스소스(SourceURL)는 기사가 게시된 인터넷 링크 주소로, 원시 자료는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를 포함한 100개 이상 언어로 된 인쇄물, 방송 매체 및 온라인 보도자료이다.

표 III-1 GDELT 데이터 코드 설명

| | |
|--------------|--|
| 날짜구분 | GLOBALEVENTID, SQLDATE, MonthYear, Year, FractionDate |
| 행위자1 | Actor1Code, Actor1Name, Actor1CountryCode, Actor1KnownGroupCode, Actor1EthnicCode, Actor1Religion1Code, Actor1Religion2Code, Actor1Type1Code, Actor1Type2Code, Actor1Type3Code |
| 행위자2 | Actor2Code, Actor2Name, Actor2CountryCode, Actor2KnownGroupCode, Actor2EthnicCode, Actor2Religion1Code, Actor2Religion2Code, Actor2Type1Code, Actor2Type2Code, Actor2Type3Code |
| 이벤트와 갈등정도 | IsRootEvent, EventCode, EventBaseCode, EventRootCode, QuadClass, GoldsteinScale, NumMentions, NumSources, NumArticles, AvgTone |
| 행위자1 위치정보 | Actor1Geo_Type, Actor1Geo_FullName, Actor1Geo_CountryCode, Actor1Geo_ADMCode, Actor1Geo_Lat, Actor1Geo_Long, Actor1Geo_FeatureID |
| 행위자2 위치정보 | Actor2Geo_Type, Actor2Geo_FullName, Actor2Geo_CountryCode, Actor2Geo_ADMCode, Actor2Geo_Lat, Actor2Geo_Long, Actor2Geo_FeatureID |
| 갈등 위치정보 | ActionGeo_Type, ActionGeo_FullName, ActionGeo_CountryCode, ActionGeo_ADMCode, ActionGeo_Lat, ActionGeo_Long, ActionGeo_FeatureID |
| 출처 | DATEADDED, SOURCEURL |

출처: 조인호·김찬우, “미중공급망 경쟁에 관한 양적방법론 탐색”

(2) 무역 기대와 미중 경쟁·갈등과의 상관관계

무역 기대이론을 3개월 단위로 미국의 대중 수입과 대중 수출에 적용해보면 수입이 수출보다 정치적 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즉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계에 더 해롭지만, 수출이 정치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적 갈등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정치 관계는 미래 무역 환경에 관한 기대에 따라 대체로 결정되므로, 우호적이고 중립적인 정치 관계에서 정치적 관계 개선 효과는 단기간 무역량 증가를 촉진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양국 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정치 갈등의 완화는 수입과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에 더 강한 촉진 효과를 불러온다.^{12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갈등과 충돌이 국가 간 무역과 같은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즉 정치적인 갈등의 기간이나 빈도가 중요할 수 있다.^{122/}

한 연구는 미중과 같은 양자 관계의 긴장이나 갈등에 대한 주요 지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치·경제적 조건의 대리 변수 개발을 위해 언론 기사의 텍스트 검색 방식을 활용했다.^{123/} 이러한 방식에서 미중 간 노골적인 갈등이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측정보다 미중 전략경쟁 관련 확대되는 언론 보도가 양자 관계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더 중요하게 반영되고, 특히 무역 전쟁이 개시된 이후로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124/}

121/ Yu Song, Bo Chen, and Na Hou, "Trade Dependence, Uncertainty Expectations, and Sino-US Political Relations," p. 9.

122/ Christina L. Davis and Sophie Meunier,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s," p. 644.

123/ Ka Zeng et al., "Bilateral Tensions, the Trade War, and US-China Trade Relations," p. 401.

124/ 위의 글, p. 404.

지정학적 긴장, 전쟁 혹은 테러를 다루는 뉴스 기사로부터 지정학 사건에 의한 불안정을 측정한 지정학 리스크 지표(Geopolitical Risk Index)가 있고,^{125/} 중국 뉴스와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 자료에서 양자 정치 관계에 관한 보도를 통해 개발된 정치 관계 지표도 있다.^{126/} 언론 보도 분석과 관련된 언론사의 편견과 편향성 오류 등의 우려가 있지만,^{127/} 이러한 편견은 과장된 것으로 서사를 선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나 뉴스 보도에 대한 양적인 분석 사이 체계적인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128/}

125/ Dario Caldara and Matteo Iacoviello, "Measuring Geopolitical Risk,"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12, no. 4 (2022), pp. 1194~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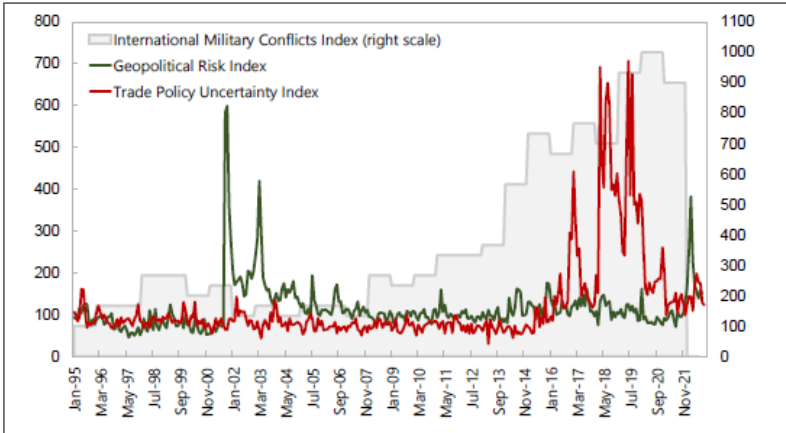
126/ 阎学通 漆海霞, 『中外关系定量预测(Quantitative Forecasts of China's Foreign Relations)』(北京: 世界知识出版社, 2009).

127/ John T. Woolley, "Using media-based data in studies of politic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0), pp. 156~173.

128/ Ceren Budak, Sharad Goel, and Justin M. Rao, "Fair and balanced? Quantifying media bias through crowdsourced content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8, issue S1 (2016), pp. 250~271; Tawnya J. Adkins Covert and Philo C. Wasburn, "Measuring media bias: A content analysis of Time and Newsweek coverage of domestic social issues, 1975-2000,"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8, no. 3 (2007), pp. 690~706.

그림 III-2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 갈등과 무역정책 불확실성

(1995년=100)



출처: Mr Shekhar Aiyar et al.,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 p. 11,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SDN/2023/English/SDNEA2023001.ashx>> (검색일: 2023.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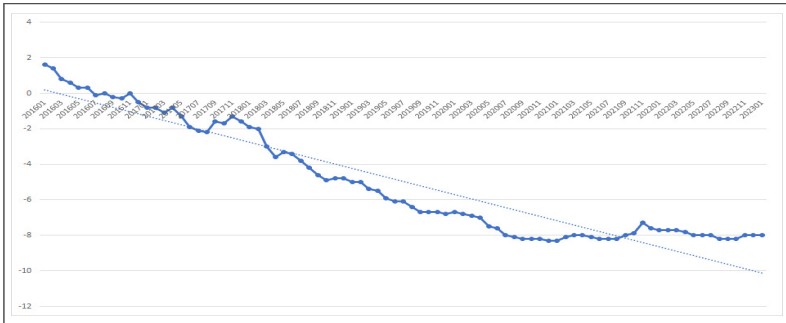
미중 사이 경제적 경쟁보다 정치적 긴장과 경쟁이 무역 전쟁 기간 수입 관세 상승에 더욱 직접적인 요인이었고, 정치·경제적인 긴장은 중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수준이 높은 산업에 대한 관세에 더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129/} 즉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으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다.^{130/} <그림 III-2>에서 국제 군사 분쟁 지수가 많이 증가한 시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도 급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중 정치 관계에서 2018년은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해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시행하고부터 미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하였기 때문이다.^{131/}

^{129/} Ka Zeng et al, “Bilateral Tensions, the Trade War, and US-China Trade Relations,” pp. 415~416.

^{130/} 위의 글, p. 420.

^{131/} Yu Song, Bo Chen, and Na Hou, “Trade Dependence, Uncertainty

그림 Ⅲ-3 미중 정치 관계 추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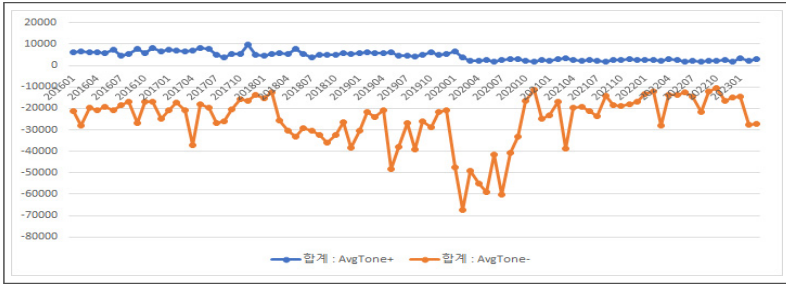


출처: 칭화대학교 국제관계 연구원, “中国与大国关系分値表(중외관계 분석표),” 2023.4.10., <<http://www.tuicr.tsinghua.edu.cn/info/1145/5980.htm>> (검색일: 2023.5.16.).

미중 간 전체 이벤트 톤 변화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급증하는 날짜는 2019년 5월(-48204, 중미: -43974)에서 6월(-37844, 중미: -36528) 사이이다. 이 시기에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국은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언론 내용도 부정적인 톤이 급증한다. 2019년 12월 13일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도달로 긍정적인 여론은 6월 약 4373(중미: 3910)에서 12월 5495(중미: 5128)로 증가하고, 부정적인 여론은 같은 기간 -37844(중미: -36528)에서 -20935(중미: -19518)로 감소한다. 2020년 7월(미중: -60158, 중미: -52462)과 8월(미중: -40730, 중미: -35584)은 양국 모두 영사관을 폐쇄하면서 미중 관계가 최악에 이른다.

Expectations, and Sino-US Political Relations,” p. 9.

그림 III-4 2016~2023년 3월 미중 간 전체 이벤트 톤(ton)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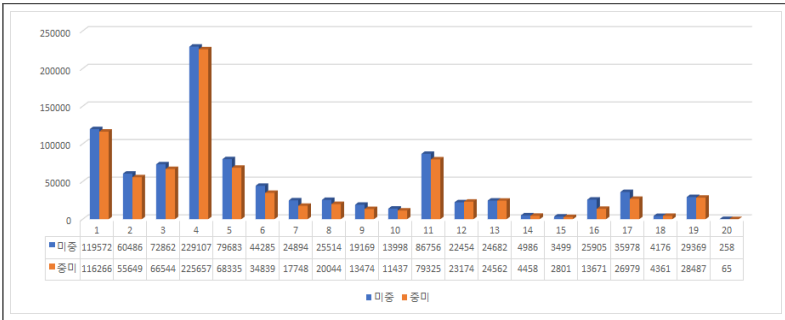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0년 2월(미중: -67450, 중미: -50587)부터 4월(미중: -55170, 중미: -40563)까지 미중 관계가 악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상호 비방과 책임 공방 때문이다. 2022년 8월(미중: -21560, 중미: -22681)은 중국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 2월(미중: -27755, 중미: -22902)과 3월(미중: -27177, 중미: -24225)은 정찰 풍선 사건으로 미 국무부 장관 블링컨(Tony Blinken)의 방중이 취소되고,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이 극에 달해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하던 시기이다. 결국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중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은 공급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019년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외에, 2020년 영사관 폐쇄, 2022년 펠로시의 대만 방문, 2023년 정찰 풍선 사건 등 모두 정치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치 사건은 미중 간 무역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중의 무역과 공급망 갈등 및 경쟁을 더 가속화시킨다.

(3) 미중 관계 이벤트 코드를 통한 미중 경쟁과 갈등 분석

미중관계에서 CAMEO 이벤트 코드의 사건량을 통해 미중 관계를 분석해 보면, 분석 기간 가장 많은 사건량은 미중과 중미 모두 4번(상의하다)과 1번(공언하다)으로 4번은 방문, 조정, 협상 등의 행동과 관련이 있고, 1번은 거절, 비관적 언급, 책임 부인 등의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 언급, 책임 인정, 상징적인 행동, 공감과 동의 등의 긍정적인 의미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중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중은 여전히 기본적인 교류와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Ⅲ-5 2016~2023년 3월 미중/중미 관계 CAMEO 이벤트 전체 코드별 사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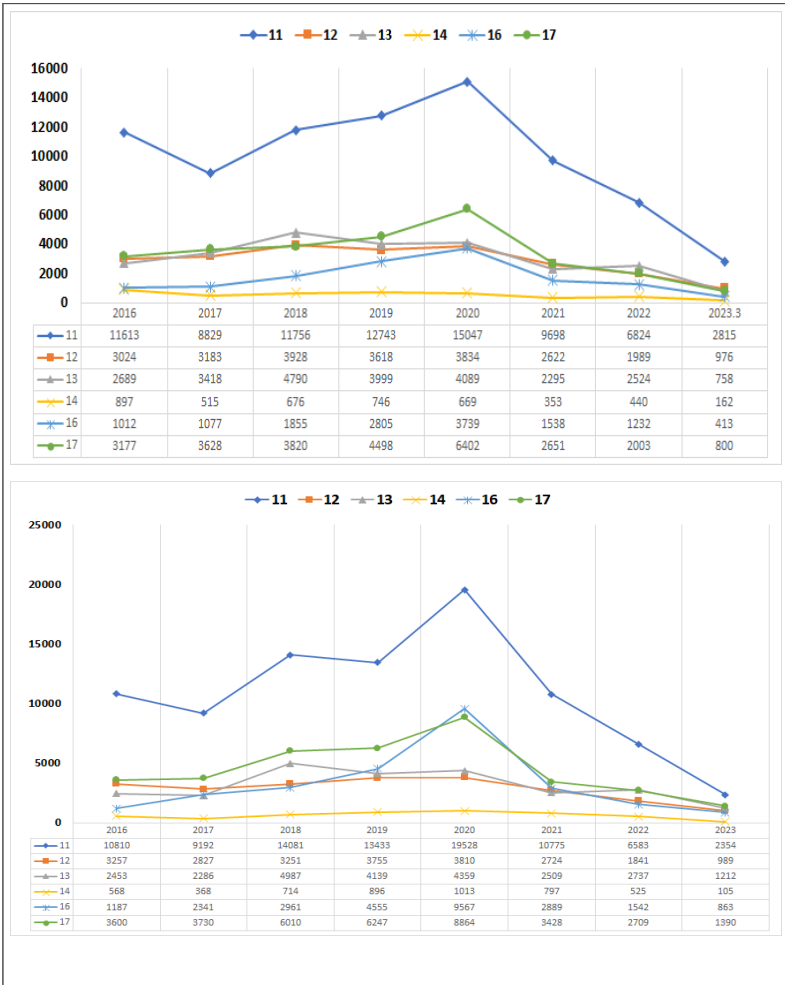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공급망 재편 경쟁은 미중 관계에서 미국의 대중 제재와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협 등에 관한 내용과 미국의 중국 배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중국의 비방과 대응조치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이를 GDELT 자료의 변수 가운데 하나인 QuadClass에 적용해보면, 1번과 2번은 각각 구두 협력과 실질적 협력, 3번과 4번은 구두 위협과 실질적 위협이다. 공급망 재편

경쟁의 부정적인 내용을 이러한 변수로 표현하면 결국 3번의 구두 위협과 4번의 실질적 위협이다.

그림 Ⅲ-6 2016~2023년 3월 미중(상단)/중미(하단) 관계 QuadClass 구두·실질적 위협 CAMEO 이벤트 코드별 사건량 변화



참고: 1) 구두 위협: 11(불만을 갖다), 12(거절하다), 13(위협하다), 14(항의하다)

2) 실질적 위협: 16(관계를 줄이다), 17(강요하다)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대상인 미중 공급망 경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이벤트 코드는 구두 위협 가운데 11번(불만을 갖다)이 가장 많았고, 2020년 이 이벤트는 최고조에 달한다(약 15,000건). 이 시기 11번 외에도 실질적 위협인 17번(강요하다) 역시 급증했고(약 6,400건), 코로나 19 팬데믹과 영사관 폐쇄 등 미중 관계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원래 진행 중이던 미중 무역 전쟁의 배경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표 III-2 2016~2023년 3월 미중 관계 QuadClass 구두·실질적 위협 사건량 순위별 CAMEO 이벤트 코드 종류

| QuadClass | CAMEO 이벤트 코드 | 사건량 |
|------------------|---------------------------------|--------------|
| 구두위협 | 112(고발하다) | 36080 |
| | 111(비평하거나 비난하다) | 22954 |
| | 110(불만을 갖다) | 19792 |
| | 130(위협하다) | 18759 |
| | 120(거절하다) | 17457 |
| | 138(군사적으로 위협하다) | 3669 |
| | 129(거부권) | 1347 |
| | 128(관습이나 법에 저항하다) | 1252 |
| | 125(만나고, 의논하고, 협상하는 제안을 거절하다) | 1036 |
| | 구두위협 합계 | 122346 |
| 실질적 위협 | 173(체포, 구금, 법적 조치를 취하다) | 16341 |
| | 172(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다) | 13609 |
| | 160(관계를 줄이다) | 13234 |
| | 163(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부과하다) | 8409 |
| | 1721(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다) | 2904 |
| | 161(외교적 관계를 줄이거나 깨다) | 2551 |
| | 164(협상을 중지하다) | 1434 |
| | 174(강제 추방하다) | 1112 |
| 실질적 위협 합계 | 59594 | |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에 대한 행위 가운데 구두 위협은 약 12만 건, 실질적 위협은 약 6만 건으로 실질적 위협은 구두 위협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이 주체가 되어 한 미국에 대한 행위 가운데 구두 위협은 약 11만 건, 실질적 위협은 약 4만 건으로 중국 역시 실질적 위협보다 구두 위협이 많았고, 미국에 비해 중국은 실질적 위협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표 III-3 2016~2023년 3월 중미 관계 QuadClass 구두·실질적 위협 사건량 순위별 CAMEO 이벤트 코드 종류

| QuadClass | CAMEO 이벤트 코드 | 사건량 |
|-----------|----------------------------------|--------------|
| 구두 위협 | 112(고발하다) | 31290 |
| | 111(비평하거나 비난하다) | 24171 |
| | 130(위협하다) | 19075 |
| | 110(불만을 갖다) | 17233 |
| | 120(거절하다) | 16994 |
| | 138(군사적으로 위협하다) | 4099 |
| | 129(거부권) | 1469 |
| | 128(관습이나 법에 저항하다) | 1356 |
| | 125(만나고, 의논하고, 협상하는 제안을 거절하다) | 1061 |
| | 구두 위협 합계 | 116748 |
| 실질적 위협 | 173(체포, 구금, 법적 조치를 취하다) | 12514 |
| | 172(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다) | 10294 |
| | 160(관계를 줄이다) | 5851 |
| | 163(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부과하다) | 3709 |
| | 161(외교적 관계를 줄이거나 깨다) | 2092 |
| | 1721(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다) | 1826 |
| | 164(협상을 중지하다) | 1571 |
| | 174(강제 추방하다) | 973 |
| | 실질적 위협 합계 | 38830 |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이 주체가 되어 중국에 대해 했던 구두 위협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량은 112(고발하다)이다. 중국의 대미 이벤트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130(위협하다), 138(군사적으로 위협하다), 129(거부권) 등의 위협보다 수위가 낮은 것이었다. 주체가 다를 때 이벤트의 차이점은 미국이 행위 주체일 때 110(불만을 갖다, 19,792건)이 130(위협하다, 18,759건)보다 약 천 건이 더 많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우 130(19,075건)이 110(17,233건)보다 약 1,800건 더 많았다. 이를 통해 구두 위협에 있어 중국은 미국보다 더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위가 높은 발언들은 양국 기업들의 무역 기대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질적 위협에 있어 173(체포, 구금, 법적 조치를 취하다), 172(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다) 등이 미중 양쪽 모두가 행위 주체가 되었을 때 모두 가장 많았다. 특히 공급망 관련 화웨이의 명완저우(孟晚舟) 부회장을 체포, 구금한 것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고, 행정적 제재의 경우 미 상무부의 중국기업 제재와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강제노동 관련 중국기업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 등이다. 실질적 위협에서 미중과 중미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미국의 경우 관계를 줄이는 이벤트가 13,000건 이상으로 많았지만, 중국은 약 6,000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수조치, 보이콧, 제재 부과도 미국은 8,400건 이상이었지만 중국은 약 3,700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상대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가했고, 이 중 대다수는 공급망 재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실질적 위협으로 미중 기업들의 무역 기대가 악화되고 이는 미중 무역과 공급망 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미중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통해 본 요인 분석

(1) 미중 공급망 연구데이터 추출 방법

다음으로 미중 관계 전체 빅데이터에서 범위를 축소하여 미중 공급망 연구데이터를 추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행위자1과 2에 미국 혹은 중국을 입력한 문서에 대해 GDELT 2.0 Event Database에서 Google BigQuery를 활용해 events를 추출한 후 몇 가지 필터링 작업을 거쳤다. 첫째, 변화의 시점(Change point analysis)을 설정했다. 미중/중미에서 이러한 지점은 2019년 5월, 6월(고위급 무역 협상 타결 결렬), 2020년 2월, 3월, 4월(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7월, 8월(영사관 폐쇄), 2022년 8월(대만해협 긴장 조성), 2023년 2월, 3월(정찰 풍선 사건)로 이는 미중 관계 악화가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둘째, 미중 공급망 경쟁 및 갈등과 관련된 QuadClass(3: 구두위협, 4: 실질적 위협)와 CAMEO 이벤트 코드(11: 불만을 갖다, 12: 거절하다, 13: 위협하다, 14: 항의하다, 16: 관계를 줄이다, 17: 강요하다)이다. 셋째, 언론사의 논조(AvgTone)로 공급망 재편 경쟁과 갈등은 주로 음의 값으로 표현된다. 넷째, 세 차례의 필터링을 거친 후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 관련 석사급 훈련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여 미중 공급망 재편 관련 자료를 직접 추출했다. SOURCEURL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여 공급망 관련 키워드인 ‘international trade’, ‘trade relations’, ‘tariffs’, ‘investments’, ‘exports’, ‘intellectual property’, ‘free trade’, ‘trade deficit’, ‘market access’, ‘trade barrier’, ‘supply chain’, ‘WTO’ 등을 확인해 공급망 자료를 추출했다. 다섯째, 웹페이지 자료 가운데 중복되거나,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구독이 필요하여 자료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했다. 다섯 번의 절차로 추출한 미중 공급망 데이터 총 328개, 중미 공급망 데이터 총 208개를 확정했다.

연구데이터 분석은 2016년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월별 데이터로 통합 후 빈도 분석, 특정 시기 이벤트 변화, 전체 시계열분석, 출처(source)의 고빈도 언론사 리스트 작성을 수행한다. 전체 기간 이벤트의 분석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Change point analysis’를 분석하고, 전체 이벤트별 톤을 긍정과 부정 점수로 수치화하여 전체 이벤트 톤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전체 이벤트를 행위자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시기별로 이벤트 톤에 대한 보도 현황 분석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보도(혹은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보도) 중 긍정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언론사 보도와 부정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언론사 보도를 분류한다. 특정 이벤트 기간(미중 무역 전쟁) 갈등 변화와 특정 이벤트 기간 이벤트 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벤트 시기 데이터를 추출하여 신뢰 상한과 신뢰 하한 폭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데이터의 시각화 절차이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막대그래프, 선 그래프 등을 활용한다. 확정된 미중/중미 공급망 데이터 세트에 대해 높은 빈도수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 의미연결망, 날짜별·주요 언론사별 대응분석, 다차원척도 분석, 회귀모형 분석을 수행한다.

(2) 미중 공급망 연구데이터의 키워드 분석

다음은 미중 공급망 경쟁과 갈등 관련 데이터에서 키워드 분석을 진행했다. 아래 표는 상위 키워드 빈도표이다. 아래 표에서 화웨이와 틱톡 등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되는 기업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했고, 트럼프와 시진핑 등 미중 최고 지도자도 많이 출현했다. 특히 공급망과 무역 데이터에 ‘정치적’이고 ‘안보’, ‘위협’ 등 지정학과 지

경학 관련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5G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표현도 많이 등장했고, 관세와 제재 등 경제 강압 수단도 자주 출현했다. 표에 나와 있는 단어 외에 빈번하게 언급된 미중 공급망 관련 키워드는 ‘다투다(fight, 49회)’, ‘민족(nation, 49회)’, ‘분쟁(dispute, 49회)’, ‘고조되다(escalate, 47회)’, ‘소프트웨어(software, 45회)’, ‘특허(patent, 46회)’,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38회)’, ‘애플(Apple, 37회)’, ‘바이든(Biden, 37회)’, ‘절취(theft, 34회)’, ‘통신(telecommunication, 34회)’, ‘스파이행위(espionage, 33회)’, ‘탈동조화(decoupling, 32회)’, ‘중국신장지역(Xinjiang, 31회)’, ‘대만(Taiwan, 30회)’, ‘패권(hegemony, 29회)’ 등이 있다.

표 III-4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관련 상위 키워드 빈도표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
| 1 | Huawei(화웨이) | 905 | 26 | pandemic(대유행 전염병) | 97 |
| 2 | trade(무역) | 675 | 27 | threaten(위협하다) | 97 |
| 3 | Trump(트럼프) | 644 | 28 | coronavirus(코로나바이러스) | 96 |
| 4 | TikTok(틱톡) | 584 | 29 | negotiation(협상) | 90 |
| 5 | security(안보) | 425 | 30 | tension(긴장) | 81 |
| 6 | ban(금지하다/금지) | 357 | 31 |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 79 |
| 7 | technology(기술) | 344 | 32 | import(수입) | 77 |
| 8 | national(민족 혹은 국가의) | 308 | 33 | Google(구글) | 76 |
| 9 | war(전쟁) | 249 | 34 | export(수출) | 76 |
| 10 | deal(거래 혹은 협상하다) | 229 | 35 | politician(정치인) | 74 |
| 11 | tariff(관세) | 242 | 36 | competition(경쟁) | 66 |
| 12 | supply chain(공급망) | 204 | 37 | semiconductor(반도체) | 65 |
| 13 | political(정치적 혹은 정치) | 175 | 38 | technological(기술적) | 64 |
| 14 | threat(위협) | 168 | 39 | platform(플랫폼) | 63 |
| 15 | 5G | 146 | 40 | agreement(협정) | 61 |
| 16 | Xi Jinping(시진핑) | 142 | 41 | internet(인터넷) | 60 |
| 17 | cooperation(협력) | 138 | 42 | crackdown(단속) | 58 |
| 18 | chip(반도체) | 130 | 43 | investment(투자) | 58 |
| 19 | sanction(제재) | 125 | 44 | western(서방의) | 58 |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
| 20 | Pompeo(폼페오) | 124 | 45 | military(군사적) | 56 |
| 21 | Communist Party(공산당) | 109 | 46 | Facebook(페이스북) | 55 |
| 22 | risk(위험) | 103 | 47 | Russia(러시아) | 54 |
| 23 | WeChat(위챗) | 100 | 48 | conflict(갈등) | 49 |
| 24 | ByteDance(바이트댄스) | 99 | 49 | patent(특허) | 46 |
| 25 | Global(전 세계) | 98 | 50 | spy(첩보활동을 하다) | 45 |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중관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 중에 중미 관계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한 단어는 다음과 같다. 특히 대만(Taiwan)의 경우 미중에서는 30회였지만, 중미에서는 153회나 등장했다. 중미에서 대만 관련 키워드 중 ‘펠로시(Pelosi)’, ‘하나의 중국(One China)’, ‘주권(sovereignty)’도 각각 59회와 31회로 비교적 빈번히 등장했다. 그리고 승리하다(win)와 같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의 의미로 등장한 단어는 미중에서 35회밖에 없었지만, 중미에서는 147회로 더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를 통해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은 대만 이슈와 같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문제와 공급망 경쟁을 연계시키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강한 의지를 빈번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중 관계에서 협력(cooperation, 138회)과 발전(development, 181회)은 자주 등장하고, 중미 관계에서도 협력과 발전 모두 93회나 등장했다. 이는 미국은 공급망에 대해 주로 경쟁과 갈등 측면에서 바라보지만, 양국 모두 여전히 협력과 발전을 중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이슈를 확인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안보 위협이 강조되고 있고, 화웨이, 위챗,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제재 대상 주요 기업, 5G 등 기술 이슈가 확인된다. 다른 한

편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이슈를 확인해보면, 글로벌 무역 전쟁 중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이 상위에 언급된다. 그 외 안보 위협과 기술 갈등이 확인되고 있고, 해당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 밖에도 미중 경쟁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개발 또한 제시되고 있으며, 미중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대만과 신장위구르 이슈가 중국이 중심이 되는 자료에서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 미 상무부 등 대중 제재 법제화와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이 빈번하게 언급된다.

그림 Ⅲ-7 미중(상)/중미(하) 관계 빈도수 높은 단어의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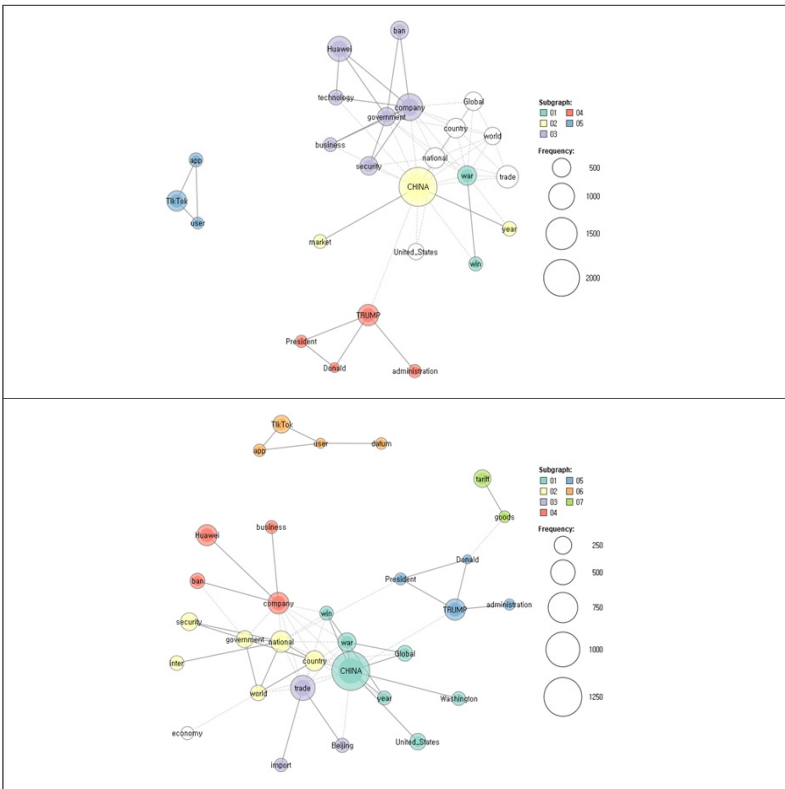
(미중: 54개 단어, 중미: 37개 단어)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중 관계를 의미연결망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해 보안 이슈가 있으며, 중국과 ‘시장’만이 의미로 연결되어 있어 미국은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중미 관계에서 ‘중국’ 단어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글로벌 경쟁과 보안 이슈 등이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부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으며, 틱톡 앱 이슈는 연결망에 없이 따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그림 III-8 미중/중미 관계 빈도수 높은 단어의 의미연결망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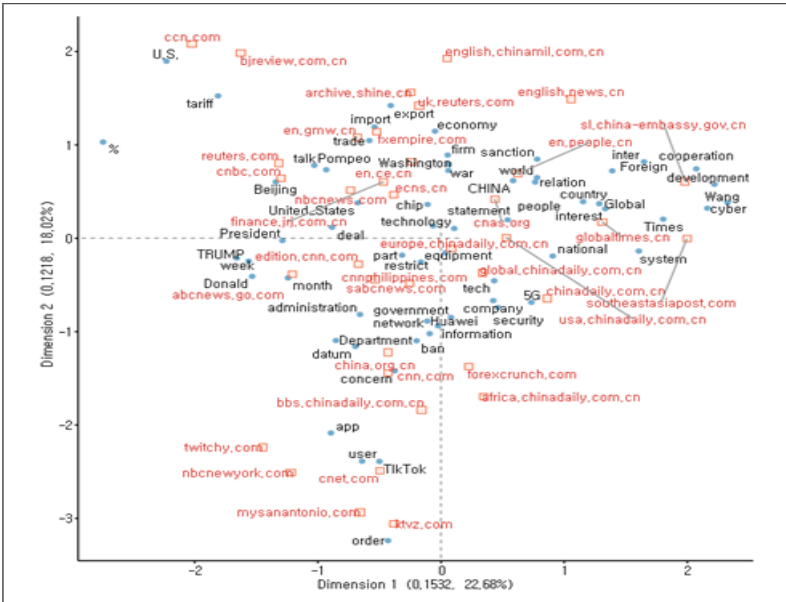
주요 단어와 날짜 월별 간의 관계를 대응분석으로 본 결과, 중심에는 2020년 7월과 중국 정부의 보안 이슈가 있다. 미국은 2020년 7월 22일 휴스턴 소재 주미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은 곧바로 7월 25일 주청두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9년 5~6월에는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 제재 발표(2019년 5월 16일)를 단행하게 된다. 그 외 틱톡이나 네트워크 트래픽, 공급망 등은 특정 기간에 위치하지 않고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월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특정 기간에 가깝게 위치하지 않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과 중미가 다른 점은 특히 7번 일본 전망과 8번의 대만 문제가 중미에서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인데, 중국에서 볼 때 미국의 전략과 연동된 일본의 경제 안보 정책도 중요하고, 대만 문제는 특히 핵심 이익과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이 되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3) 미중 공급망 연구데이터의 언론사별 키워드 분석

주요 단어와 주요 언론사 간의 관계를 대응분석으로 본 결과 중국 입장을 담은 언론사(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환구시보, 신화사, 차이나데일리, 인민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메시지가 공유되고 있다. 미국 언론사(CNET.com, nbcnews.com)의 경우 주요 단어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틱톡 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가깝게 있다. MSN의 미중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량이 많은 것은 2020년 MSN이 제공하는 뉴스 편집 전체를 AI 편집으로 개편했고, 이로 인해 기사 노출 건수가 전체적으로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미중 관계의 부정적인 보도 노출 건수도 다른 언론사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1 미중 관계 빈도수 높은 단어의 주요 언론사별 대응분석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중 관계 관련 부정적인 뉴스 노출은 반종교단체인 파룬궁이 운영하는 언론사인 대기원시보(the epoch times)의 부정적인 뉴스보다 평균 어조와 보도량 측면에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인공지능의 뉴스 편집이 가치중립적이라기보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공지능 설계 의도가 미중 경쟁과 갈등에 편향성을 띄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인 데일리메일 역시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는데, 이는 이 매체의 특징이 영국 내 소식보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커뮤니티 사이트’등 커뮤니티 발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내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원시보와 데일리메일의 미중 관계 보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표 III-5 미중 관계 부정적인 보도량 많은 주요 언론사 순위

| 순위 | 언론사명 | 평균어조 | 보도량 | 순위 | 언론사명 | 평균어조 | 보도량 |
|----|-----------------------|----------|-------|----|------------------------|----------|------|
| 1 | msn.com | -540909 | 22822 | 26 | uk.reuters.com | -580357 | 2732 |
| 2 | theepochtimes.com | -26423 | 10706 | 27 | freerepublic.com | -575057 | 2647 |
| 3 | dailymail.co.uk | -201002 | 7146 | 28 | cnbc.com | -519563 | 2635 |
| 4 | scmp.com | -119776 | 6319 | 29 | china.org.cn | 1647.09 | 2604 |
| 5 | reuters.com | -13319,1 | 6191 | 30 | newsweek.com | -767856 | 2583 |
| 6 | globaltimes.cn | -111718 | 5852 | 31 | voanews.com | -608552 | 2575 |
| 7 | nytimes.com | -131125 | 5406 | 32 | finance.yahoo.com | -324349 | 2457 |
| 8 | sputniknews.com | -133463 | 5352 | 33 | thestar.com.my | -470503 | 2451 |
| 9 | nbcnews.com | -11884 | 4781 | 34 | news.xinhuanet.com | 1462,271 | 2449 |
| 10 | xinhuanet.com | 2630,311 | 4608 | 35 | thediplomat.com | -373436 | 2444 |
| 11 | breitbart.com | -125832 | 4598 | 36 | dw.com | -660837 | 2423 |
| 12 | chinadaily.com.cn | 1631,496 | 4584 | 37 | politico.com | -3997,75 | 2378 |
| 13 | washingtonpost.com | -11640 | 4518 | 38 | channelnewsasia.com | -6266,18 | 2373 |
| 14 | news.yahoo.com | -10939 | 4394 | 39 | theguardian.com | -7055,48 | 2354 |
| 15 | yahoo.com | -8172,6 | 3795 | 40 | zerohedge.com | -7517,28 | 2350 |
| 16 | business-standard.com | -676562 | 3746 | 41 | express.co.uk | -838471 | 2349 |
| 17 | straitstimes.com | -773831 | 3642 | 42 | 4-traders.com | -675,58 | 2326 |
| 18 | foxnews.com | -113207 | 3604 | 43 | washingtonexaminer.com | -632666 | 2323 |
| 19 | usa.chinadaily.com.cn | 1478,375 | 3577 | 44 | english.sina.com | -124668 | 2312 |
| 20 | businessinsider.com | -8103,76 | 3202 | 45 | japantimes.co.jp | -554962 | 2312 |
| 21 | en.people.cn | -1300,14 | 2989 | 46 | forbes.com | -262425 | 2205 |
| 22 | wsws.org | -125186 | 2974 | 47 | sfgate.com | -614235 | 2200 |
| 23 | taipeitimes.com | -5398,22 | 2876 | 48 | ecns.cn | 1540927 | 2173 |
| 24 | globalsecurity.org | -8491,68 | 2792 | 49 | in.reuters.com | -462591 | 2138 |
| 25 | nationalinterest.org | -6697,74 | 2751 | 50 | afr.com | -405861 | 2033 |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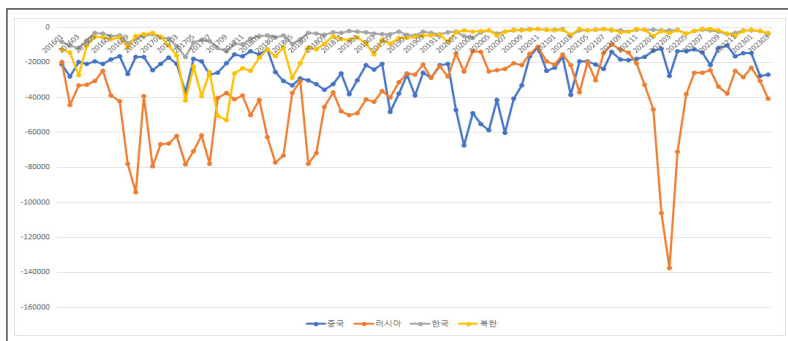
MSN의 인공지능 뉴스 편집은 이러한 편집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편향된 뉴스 노출이 급증할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중국의 바이두가 만든 인공지능(AI) 챗봇 ‘어니봇’의 경우 천안문 사건, 1989년 6월 4일, 대만 등의 민감한 주제를 물을 때 정부 입장을 반복하거나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인 챗 GPT 열풍 속에서 블룸버그와 워싱턴포스트, 영국 더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사도 단신이나 간단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사 등을 인공지능 뉴스로 생산하고 있다. MSN 역시 인공지능 뉴스 생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뉴스 편집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뉴스 생성에도 사용된다면 이러한 편향성 역시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 이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뉴스를 생산·편집할 수 있는 생성형 AI 사용이 정착되면 미중 관계의 부정적인 보도량과 평균 어조도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고, 이는 미중 기업들의 무역 기대에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한반도 주요 행위자와 미·중 간 어조 변화 및 가치사슬 참여·영향력

(1) 미국과 중국의 대한민국·러시아·북한과의 이벤트 톤 변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미중 외에 한국, 러시아, 북한 조합의 양자 관계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보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임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한국과 북한이고, 북한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당시 긍정적인 보도가 급증한 것 외에는 미국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인 보도도 많지만, 부정적인 보도가 더 많았다. 특히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다른 세 국가에 비해 훨씬 많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시기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2 2016~2023년 3월 미국(Actor 1)과 중국/러시아/한국/북한 간 전체 이벤트 톤(ton)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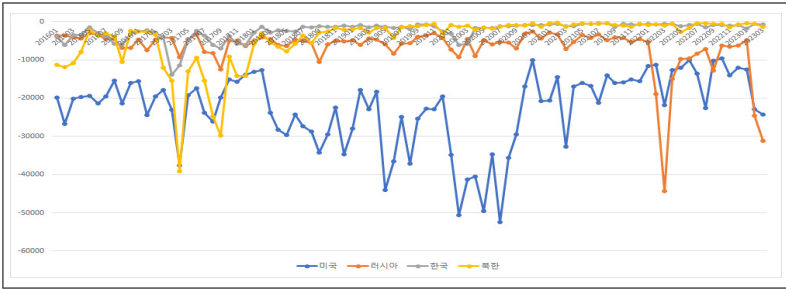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리고 미국의 대중/대러 부정적인 톤의 보도는 동기화된 구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의 대중/대러 이벤트 톤의 부정적인 수치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2017년 5월, 2021년 1~9월, 2022년 4월 부근 이 두 관계의 부정적인 톤 수치는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2017년과 2021년은 미중 무역 갈등,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보도가 급증했다. 당사국 외에도 다른 국가의 부정적인 톤도 함께 증가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연계시켜서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고,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여 미국에 함께 대응하는 동기도 증가시켰다.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긍정 보도가 많은 순서는 미국, 러시아, 한국, 북한 순이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도 많았고, 한국(사드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와 북한(6차 핵실험)은 특정 시기에만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다.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는 가장 적었고, 긍정적인 보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없어 중국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중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긍정/부정적인 이벤트 톤이 압도적이었고,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부각되었을때 한국과 미국,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벤트 톤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톤이 동기화된 것 외에 개별 국가마다 매우 달랐다.

그림 III-13 2016~2023년 3월 중국(Actor 1)과 미국/러시아/한국/북한 간 전체 이벤트 톤(tone) 변화 비교(-)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사드 사태 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벤트 톤이 다소 증가한 것 외에 북한에 대한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드와 같이 중국의 안보 핵심 이익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최근의 미사일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반응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모라토리엄 위반과 미사일 도발 대응에 자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안보 우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지나치게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국은 긍정적인 측면(기회)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중의 긍정적인 어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영향력이 한반도 주요 국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발 메시지(긍정적인 이벤트 톤)에 서는 한국이 중국에, 중국이 러시아에 언급한 긍정 메시지에 영향이 있다. 즉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 톤이 증가할수록 한국이 중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 톤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해석하자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태도나 긍정적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데,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기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무역과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 여지와 공간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톤이 많아지면, 미국의 의혹이나 간섭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러시아에 접근하거나 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톤이 증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III-6 회귀모형 결과 보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 톤

| 모형 요약 | | | | | | |
|--------------------------------|-------|---------------|----------|--------------|--------|-------|
| 모형 | R | R 제곱 | 수정된 R 제곱 | 추정값의 표준오차 | | |
| 1 | .622a | 0,387 | 0,372 | 1508,361 | | |
| a. 예측자: (상수), CHN_RUS, KOR_CHN | | | | | | |
| ANOVAa | | | | | | |
| 모형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유의확률 | |
| 1 | 회귀 | 120506258,293 | 2 | 60253129,147 | 26,483 | .000b |
| | 잔차 | 191112852,697 | 84 | 2275153,008 | | |
| | 전체 | 311619110,990 | 86 | | | |
| a. 종속변수: CHN_USA | | | | | | |
| b. 예측자: (상수), CHN_RUS, KOR_CHN | | | | | | |

| 계수a | | | | | | | | | | |
|-----|---------|----------|---------|-------|-------|------------------|----------|----------|-------|-------|
| 모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 | 공선성 통계량 | | |
| | B | 표준화 오류 | 베타 | | | 하한 | 상한 | 공차 | VIF | |
| 1 | (상수) | 2076.139 | 348.806 | | 5.952 | 0.000 | 1382.500 | 2769.778 | | |
| | KOR_CHN | 2.194 | 0.367 | 0.535 | 5.973 | 0.000 | 1.464 | 2.925 | 0.912 | 1.097 |
| | CHN_RUS | 0.311 | 0.142 | 0.196 | 2.193 | 0.031 | 0.029 | 0.593 | 0.912 | 1.097 |

a. 종속변수: CHN_USA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6〉 회귀모형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어 이를 우회하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한 다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더라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밀착과 관계 강화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근 중러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는 미중 전략경쟁 변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중러만의 협력 의제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러 밀착이 서로의 필요로 지속된다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표 III-7〉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발 긍정적 메시지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톤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 혹은 무역 기대에서 무역과 공급망의 충돌과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증가할 것이기에 한국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톤도 증가하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미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견제나 압박 가능성이 줄어들어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7 회귀모형 결과 보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 톤

| 모형 요약 | | | | |
|-------|-------|-------|----------|-----------|
| 모형 | R | R 제곱 | 수정된 R 제곱 | 추정값의 표준오차 |
| 1 | .758a | 0,574 | 0,564 | 1301.572 |

a. 예측자: (상수), RUS_USA, KOR_USA

| ANOVAa | | | | | | |
|--------|-----|---------------|------|--------------|--------|-------|
| 모형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유의확률 | |
| 1 | 회귀 | 191837080,226 | 2 | 95918540,113 | 56,619 | .000b |
| | 잔차 | 142303619,479 | 84 | 1694090,708 | | |
| | 전체 | 334140699,705 | 86 | | | |

a. 종속변수: USA_CHN

b. 예측자: (상수), RUS_USA, KOR_USA

| 계수a | | | | | | | | |
|-----|---------|---------|---------|--------|-------|-------|---------|-------|
| 모형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공선성 통계량 | |
| | | B | 표준화 오류 | 베타 | | | 공차 | VIF |
| 1 | (상수) | 317,321 | 408,621 | | 0,777 | 0,440 | | |
| | KOR_USA | 1,103 | 0,239 | 0,353 | 4,617 | 0,000 | 0,866 | 1,155 |
| | RUS_USA | 1,151 | 0,159 | 0,553 | 7,232 | 0,000 | 0,866 | 1,155 |

a. 종속변수: USA_CHN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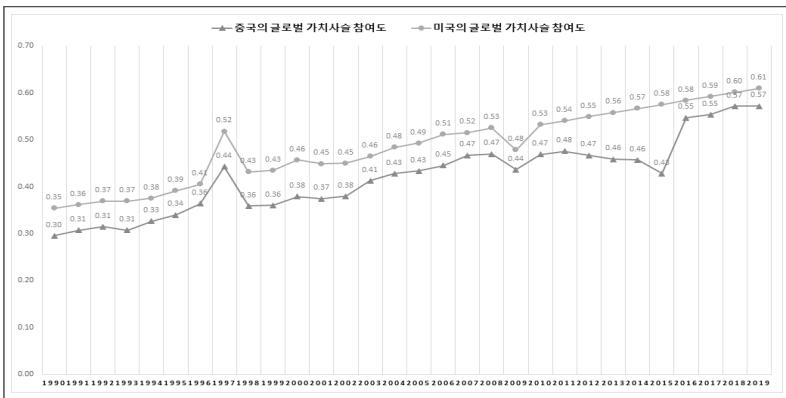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회귀모형에서 다른 관계에서는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함께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미중/중미 관계의 긍정적인 톤이 증가할수록 한미, 러미, 한중, 중러에서 긍정적인 톤도 증가한다. 즉 미중 관계는 무역 기대를 통해 한국의 대중, 대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의 미국 정책과 중국의 러시아 정책에도 파급력이 있다. 회귀모형의 한계는 미중 사이 긍정적인 이벤트 톤에서만 이러한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이고,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부정적인 이벤트 톤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간 긍정적인 톤의 변화 역시 무역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미중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영향력의 한반도 주변국 가치사슬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III-14>에서 <그림 III-17>까지는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미중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영향력, 한국, 러시아, 북한의 가치사슬 참여도와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표를 설명하는 매뉴얼에 따르면 가치사슬 참여도는 가치사슬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직적 분업화와도 관련이 있다. 즉 참여도 지표는 한 국가가 전 세계 가치사슬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분업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향력은 가치사슬에서 순수출에 대한 전방 연계의 부가가치로 측정되는 공급자의 영향력과 순수출에 후방 연계의 부가가치로 측정되는 구매자의 영향력을 합친 것이다.^{132/} 경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가치사슬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차원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가치사슬 참여도와 영향력이 줄어들면 공급망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여도와 영향력이 올라가면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32/ 庞珣·何晴倩, “全球价值链中的结构性权力与国际格局演变,” Peking University Open Research Data Platform, V1, 2022, pp. 4~11, <<https://doi.org/10.18170/DVN/X9NKGR>> (검색일: 2023.10.26.).

아래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중국은 1990년 0.3에서 2019년 0.57로, 미국은 같은 기간 0.35에서 0.61로 증가 추세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미국과 중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급증했고, 그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중 모두 가치사슬 참여도가 급감했다. 중국은 2015년 0.43에서 2016년 0.55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2015년 경기 하락과 2016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림 III-14 미중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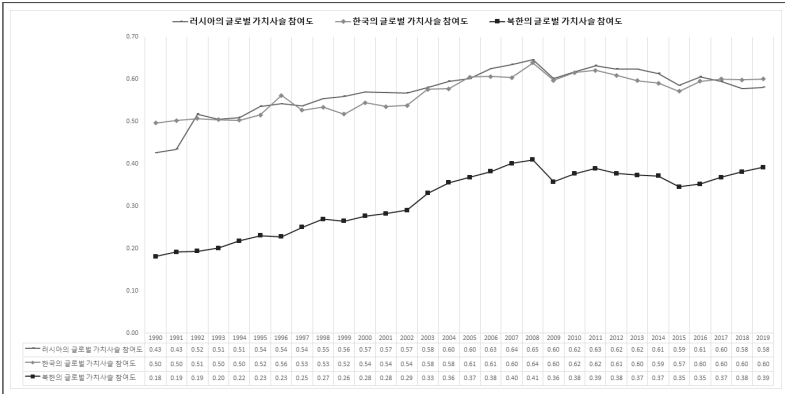


출처: 庞珣·何晴倩, “全球价值链中的结构性权力与国际格局演变.”

한국, 러시아, 북한 모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은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중국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한국, 러시아, 북한의 가치사슬 참여도는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세 국가 모두 상승 추세를 유지했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2009년, 중국 경기 하강의 2015년에는 중국과 함께 가치사슬 참여도도 하락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과 첨단기술 디커플링으로 중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하락하면, 한국, 러시아, 북한의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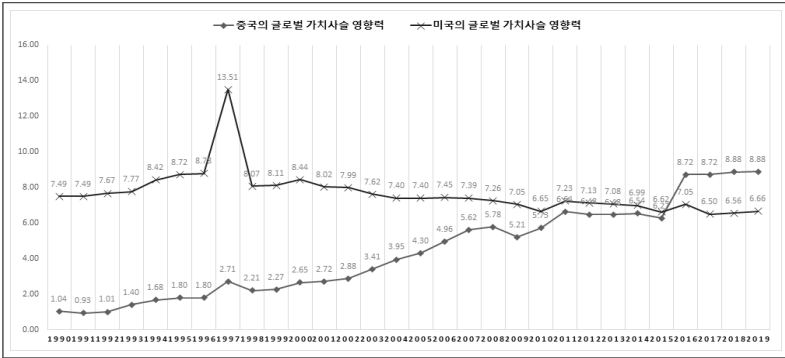
그림 Ⅲ-15 한국, 러시아, 북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출처: 위의 자료.

〈그림 Ⅲ-16〉에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미국은 1990년 7.49에서 2019년 6.66으로 오히려 하락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1.04에서 8.88로 급증했다. 특히 2016년 중국이 미국을 역전한 이래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계속 앞서 나갔다. 미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한 직후 갑자기 급락했고 비슷한 수준을 2019년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속 우상향하는 가운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소폭 하락했으나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2016년 마침내 미국을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크게 앞서나가기 시작한 것만으로 미국은 큰 위협을 느꼈고, 이러한 위협 인식은 이후 트럼프의 무역 전쟁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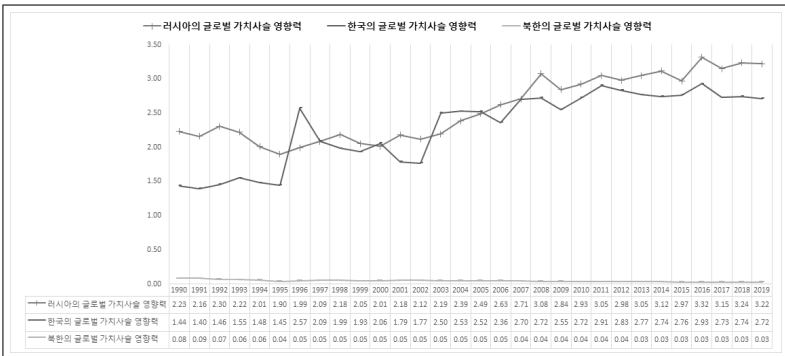
그림 Ⅲ-16 미중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



출처: 위의 자료.

한국과 러시아 역시 중국처럼 상승 추세를 유지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 같이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오히려 영향력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하락했다. 한국과 러시아 모두 중국처럼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바로 그다음 해 반등했고, 역시 중국과 함께 2015년 떨어진 이후 2016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 역시 참여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변화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의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Ⅲ-17 한국, 러시아, 북한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



출처: 위의 자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인 이벤트 톤, 그리고 가치사슬의 참여도와 영향력은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기대와 가치사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보다 중국의 두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러시아는 대중 공급망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대외 요인: 미중 관계 구조와 인식 변화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요인은 미중 관계 구조와 인식 변화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 요인은 중국의 거센 기술 추격과 안보 문제의 대두, 코로나19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론의 급부상, 바이든 행정부의 연대 필요성 인식이다. 반면에 중국 측 요인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의미하는 구조적 권력에 대한 중국의 응전, 중국의 보복 제재와 우회 전략, 하나의 중국과 대만 요인 등 중국의 핵심 이익, 중국의 ESG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다. 미국 측 요인은 주로 특정 섹터와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억제하고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의 안보화 전략 속에서 주도적으로 공급망 재편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연대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국 측 요인은 미국의 권력과 제재에 대한 반응·수동적인 요인이 강조된다. 즉 미국의 제재, 대만 문제 개입, 비관세 장벽으로서 ESG 활용 등 공격적인 정책에 대해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급망 재편에 반응하고 있다.

가. 미국의 대외적 공급망 재편 요인(윤정현)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외적 인식 변수는 경쟁 품목에서의 미중 양국의 관계 구조에 대한 배경과 판단을 이해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각 섹터와 가치, 이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상황적 수단을 정당화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위, 고위기술 간의 공급망 재편 양상은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크잉이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강경한 보호주의나 나아가, 진영 내의 결속, 국제사회의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대변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제도적 공표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을 행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메시지가 작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기업 등 주요 행위자들의 대내외적 상황인식이 바로 핵심 요인이며, 이 부분에 대한 작동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배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고찰이 필요하다.

(1) 중국의 거센 기술 추격과 안보 문제의 대두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해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2017(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미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분위기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133/} 전략서에서 미국은 ‘경제적,

133/ 최강·신법철,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2017』의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이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7-32, 2017.12.), pp. 25~45, <<https://www.asainst.org/contents/%ED%8A%B8%EB%9F%BC%ED%94%84-%ED%96%89%EC%A0%95%EB%B6%80-%E3%80%8E%EA%B5%AD%EA%B0%80%EC%95%88%EB%B3%B4%EC%A0%84%EB%9E%B5-2017%E3%80%8F%EC%9D%98-%EC%8B%9C%EC%82%AC%EC%A0%90%EA%B3%BC-%ED%95%9C%EA%B>>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를 걸고로 내세우면서 미국 우선주의적(America First) 경향을 드러내었으며, 특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지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 국제질서의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명시했다.^{134/}

2018년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SDAA)」에서는 화웨이, 중싱통신을 포함한 5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을 금지하도록 했다.^{135/} 이 조치는 2019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미국 정부는 해당 중국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과도 새로운 계약 체결과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스파이 행위 의심이 고려되었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 장치를 심어 다른 국가의 기밀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전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136/} 2019년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명단(entity list)에 올리고, 자국 공급망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137/} 미국 인텔, 쉘컴,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5%AD/> (검색일: 2023.10.26.).

13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12., <<https://nssarchive.us/wp-content/uploads/2020/04/2017.pdf>> (검색일: 2023.10.26.).

135/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H.R.5515 (2018).

136/ "US Officials Say Huawei Can Covertly Access Telecom Networks," *Wall Street Journal*, 2020.2.12., <<https://www.wsj.com/articles/u-s-officials-say-huawei-can-covertly-access-telecom-networks-11581452256>> (검색일: 2023.5.16.).

137/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3873: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2019.5.1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5/17/2019-10538/securing-the-information-and-communications-technology-and-services-supply-chain>> (검색일: 2023.5.16.).

체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고, 구글은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OS 지원을 중단했다. 화웨이를 표적으로 한 미-중 갈등이 핵심부품 수출 금지, 설계제품에 대한 위탁생산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수면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 시도를 차단하려고 하며, 화웨이 외에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제재^{138/} 등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 코로나19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론의 급부상

코로나19의 확산은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재편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초, 국가들은 마스크, 의약품, 개인보호장치 등 의료제품 및 원료에 대한 공급부족을 경험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의료용품 수출금지·제한을 마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생산과 물류 차질이 기본적인 소비재부터 희토류와 같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의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에서 단일국,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사슬의 취약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행정명령^{139/}을 통

138/ “트럼프 “中 바이트댄스, 틱톡 포함 모든 美 내 자산 매각”, 『머니투데이』, 2020. 8.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514108278075>> (검색일: 2023.5.16.).

139/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 2021. 2. 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2/24/executive-order-on-americas-supply-chains/>> (검색일: 2023.10.26.).

해 100일간 미국의 4대 핵심산업(▲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및 6대 산업(▲방위, ▲보건, ▲에너지, ▲ICT, ▲운송, ▲농업)에 대해 전면적인 공급망 검토를 수행할 것을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 그 결과를 2021년 6월, 『백악관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100-Days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140/}를 통해 공개했는데, 이 검토 보고서에는 미국 내 제조업 역량 부흥, 제조업 공급망 육성,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이 포함되었다. 특히, 당시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입법화되고 있는 여러 법안에 반영되고 있는바^{141/}, 공급망 위협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2월 24일 『공급망 정책추진 1주년 보고서(Executive Order 14017 on America's Supply Chains: A Year of Action and Progress)』^{142/}를 발표했으며, 지난 1년간의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과 성과를

140/ The White house, "100-Days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2021.6.,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6/100-day-supply-chain-review-report.pdf>> (검색일: 2023.10.26.).

141/ 『백악관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구축, ▲해외 파운드리를 미국 내에 유치, ▲동맹,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 ▲수출통제 및 해외투자심사 강화, ▲인력양성 등을 제안했는데, 해당 제안들은 「반도체 및 과학법」, 미 상무부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22.10.7) 등에 반영되었다.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위의 글 pp. 74~80 참고.

142/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017 on America's Supply Chains: A Year of Action and Progress,"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Capstone-Report-Biden.pdf>> (검색일: 2023.10.26.).

평가하고 6개 부문에 대한 공급망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I-8 공급망 정책추진 1주년 보고서(2022.2.) 주요내용

| 6개 주요 부문에서 1년간의 성과 | |
|--------------------|---|
| 물류·운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및 롱비치 항구의 연중무휴 운영으로 물류 적체 해소 기여 - 임시 컨테이너 야드를 만들어 사바나 항의 물류 적체 해소 기여 |
| 음식·농산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공급망 관련 융자 프로그램에 1억 달러 투자 - 육류, 가공품 공급망의 경쟁성 공정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9억 달러 투자 - 미국산 옥수수, 소맥, 돼지고기에 대한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인하 달성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생산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미국 내 제조라인(Fab) 건설·확장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800억 달러 투자 - 반도체 지원법 마련 및 반도체 생산 촉진 위한 상·하원 자금 지원 합의 |
| 의료 공급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접종 지원 - 개인보호장비(PPE) 및 진단키트의 미국 내 생산·배포 확대 - 감염병 발생에 대비, 의료기기 사전 제조를 위한 시설 구축 |
| 주요 광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의 분류·정제 시스템 구축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 공급이 불안정한 광물을 연방 핵심 광물 리스트로 선정하여 업데이트 - 채굴 관련 법안 및 규정 개정 |
| 대용량 배터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원자재 및 소재 가공 프로그램에 30억 달러 투자 - 전기차 충전 기반설비에 75억 달러 투자 |

출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weekly 2022년 제3호,” 2022.3.17.,
 <<https://www.kita.net/cmmrInfo/internationalTradeStudies/gvcResearch/gvcInsightDetail.do?pageIndex=4&no=2277&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검색일: 2023.10.26.).

(3)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과 연대 필요성 인식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으며, 중국 정부의 가시적인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반중 기조를 유지하되,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방국 및 동맹국과의 연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미국의 단독 대응으로는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미국의 가치에 동의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연대하는 민주주의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미국의 무역, 군사, 과학기술 영역과 외교정책의 연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확산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143/}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은 자국 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 산업 부문을 지원하며 제조업을 부흥시킴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와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 부문에서 선두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놓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핵심기술 및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과 같은

143/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사에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도전받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강화하고 권위주의 밀어내기 위해 국내 민주주의에 투자하며 전세계 민주주의 파트너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The Summit For Democracy Opening Session," 2021.12.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12/09/remarks-by-president-biden-at-the-summit-for-democracy-opening-session/>> (검색일: 2023.10.26.).

특정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고, 중국과 정무적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144/} 이는 중국과 완전한 분리 혹은 충돌이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으며, 중국과의 공존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접근이다.^{145/}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을 주제로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연설한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2023.4.27.)^{146/}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연설에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든 공급망을 미국 내에서 구축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며, 무엇보다 공급망의 탄력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자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나아가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과 협력함으로써 공급망의 복원력, 포용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사례로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144/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공통적으로 밝힌 바 있다. The White House, "Readout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Meeting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Politburo Member and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ssion Wang Yi," 2023.5.1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5/11/readout-of-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s-meeting-with-chinese-communist-party-politburo-member-and-director-of-the-office-of-the-foreign-affairs-commission-wang-yi/>> (검색일: 2023.10.26.).

145/ "Campbell and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Foreign Affairs*, 2019.8.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competition-with-china-without-catastrophe>> (검색일: 2023.10.26.).

146/ The White house,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3.4.2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4/27/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renewing-american-economic-leadership-at-the-brookings-institution/>> (검색일: 2023.10.26.).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147/} EU와 일본^{148/}과 체결한 핵심광물협력 등을 들었다. 또한,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IPEF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며 IPEF를 거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발표(2023.4.25.) 이후 전개된 이번 연설에서는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미국의 산업전략을 통해 국내 역량을 확보하고, 협력국들과 함께 회복력있고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인프라-투자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 노력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여, 글로벌 인프라-투자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을 출범했다. 2022년 6월 26일 G7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PGII는 2021년 G7 정상회담에서 출범한 ‘Build Back Better World(B3W)’에서 발전된 것으로, B3W에서 목표로 했던 4대 필러(pillar)(▲기후변화대응, ▲디지털연결성, ▲보건, ▲성평등·평등)의 이행 계획을 구체화했다.^{149/}

147/ EU Commission,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von der Leyen,” 2023.3.1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hu/statement_22_2007> (검색일: 2023.10.26.).

148/ USTR, “United States and Japan Sign Critical Minerals Agreement,” 2023.3.28.,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3/march/united-states-and-japan-sign-critical-minerals-agreement>> (검색일: 2023.10.26.).

149/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G7 Leaders Formally Launch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2022.6.2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26/fact-sheet-president-biden-and-g7-leaders-formally-launch>>

특히, 민주주의, 투명성, 노동, 환경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중국
의 일대일로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상임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우 대중 경제의존
도 심화,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 부채국 함정 등의 리스크가 있음을
지적하며, PGII의 경우 정부 주도로 구성되고 있는 일대일로와 달리
민관 공동재원을 통해 시장 주도로 이뤄지는 지속가능 투자 계획이
라는 점을 차별점으로 들고 있다. PGII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관련된 사례로 미국국제개발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에서 브라질 핵심광물 채굴 기업인
TechMet의 광산 개발에 약 3000만 달러를 투자하고,^{150/} J.P.
Morgan이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을 받아 온두라스에 약
3,1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53.4MW 규모)
지원을 제공하는 등^{151/}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은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역내 경
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를 도
모하고 있다.

unch-the-partnership-for-global-infrastructure-and-investment) (검
색일: 2023.10.26.).

150/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Meeting," 2023.5.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5/20/remarks-by-president-biden-at-the-partnership-for-global-infrastructure-and-investment-meeting/>> (검색일: 2023.10.26.).

151/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s Biden, Widodo, von der Leyen,
and G20 Announce G20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rojects," 2022.11.1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1/15/fact-sheet-presidents-biden-widodo-von-der-leyen-and-g20-announce-g20-partnership-for-global-infrastructure-and-investment-projects/>> (검색일: 2023.10.26.).

나. 중국의 대외적 공급망 재편 요인(이재영)^{152/}

(1) 미국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중국의 도전

미국 패권의 구조적 권력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권력, 안보 제공 능력, 지식과 이념 생산 권력, 금융 권력의 네 가지를 포함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제조능력을 통해 안보 제공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러한 중국 제조의 생산 권력은 공급망에서의 자율성을 통해 구현됐다.^{153/} 특히 중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 제도 속에서 선진 지식재산권을 도입하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상대적인 이득에 도전하게 만든다.^{154/} 이러한 중국의 안보 제공 능력, 공급망 관련 자율성과 제조 권력, 지재권 관련 이득을 획득하는 권력 등은 부상국의 패권국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상했지만, 미국이 예상했던 민주화와 체제 전환이 아닌 권위주의 일당독재를 강화하면서 패권국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시작했고, 미국을 포함한 기존 선진국들이 독점했던 첨단 산업에 진입해 이러한 독점 구조를 약화시켰다. 따라서 미국의 자유주의와 이질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국으로 급속히 부상한 상황은 2020년대 전 세계 안보 질서의 핵심으로 경제안보가 자리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다.^{155/}

152/ 중국의 대외적 공급망 재편 요인은 다음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pp. 115~118.

153/ Anton Malkin, “The made in China challenge to US structural power: industrial policy, intellectual property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pp. 542~543.

154/ Herman Mark Schwartz, “American hegemo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llar centrality, and infrastructural power,”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6, no. 3 (2019), pp. 490~519.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따른 패권에 대한 도전은 수잔 셔크(Susan Shirk)가 주장한 중국의 ‘과도한 팽창(overreach)’과도 관련이 있다. 셔크는 중국이 팽창하기 시작한 시기를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로 보고 있고, 그 분야는 외교 정책, 경제, 사회통제로 설명했다. 우선 경제 분야는 중국 당국이 2006년 대규모 국가 자금을 국유 섹터에 투입하여 중국을 첨단 산업의 강대국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다. 사회통제 영역에서 중국 공산당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 사회, 언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강화를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외교 정책은 이미 후진타오 시기부터 전 세계 주요 문제에 있어 더욱 공세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고 있다.^{156/} 하지만 시진핑은 후진타오와는 달리 권력을 과도하게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고위 당정 관료들이 시진핑에 집중된 권력에 편승하면서 시진핑 집권 3기에 대외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팽창이 더욱 강화되었다.^{157/} 시진핑 집권기 더욱 확대된 중국의 과도한 팽창은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경제 분야 대중 견제 및 봉쇄 정책에 직면하면서 경제 무역정책의 대표 사례인 공급망의 재편 경쟁으로 구현된 것이다.

(2) 중국의 보복 제재와 우회 전략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관공실은 미국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의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최초로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중국의 주요 인프라 관련 공급망에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한 구매 중단을 선언했다. 2023년

155/ 백우열,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 2020년대 안보 맥락에서,” pp. 342~343.

156/ Susan L. Shirk, *Overreach: How China derailed its peaceful ri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4.

157/ 위의 책, p. 290.

5월 22일 진행된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 중 한국 언론 측 주요 질문이 바로 한국 등 다른 국가의 업체들에 대한 인터넷 네트워크 안보 심사에 이번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중국측 대변인의 대답은 원론적인 것이었다. 즉 중국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사, 합법적 기업 운영, 중국 법률 준수 전제의 중국 시장진입,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시장 지향적·합법적이고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형성 등을 강조했다. 중국은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로 인한 중국 시장의 전체적인 안보 위험과 해외투자 유치 위축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 지향적이고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58/}

또한 중국 당국은 「미국의 강압 외교와 그 위해(美國의脅迫外交及其危害)」의 문건에서 미국의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의 대중국 강압 외교는 중국 첨단기술 기업 탄압, 기술 봉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지로 중국 연구소 지목, 대만·홍콩·신장위구르 문제의 이슈화, 징벌적 관세 등으로, 미국은 아무 근거 없이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한다고 비난했다.^{159/}

한편 러시아 관련 중국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해 중국은 이러한 압박이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고, 유엔안보리 승인 없이 제재를 일방적으로 역외 적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중국은 중러 협력이 제삼국을 겨냥하지 않고, 제삼국의 간섭과 위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정당하고 합법적

158/ 이재영,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오피니언 2023.6.28.),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700&mid=a2020000000https://csf.kiep.go.kr/&board_id=4&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4&pageCnt=10> (검색일: 2023.10.26.).

15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美国的胁迫外交及其危害,” 2023.5.18., <https://www.mfa.gov.cn/wjbxw_new/202305/t20230518_11079585.shtml> (검색일: 2023.6.12.).

인 중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160/}

표 III-9 중국의 수출통제 보복 제재 사례와 제재 가능 품목

| 대상 품목 설명 | 대상 국가와 기업 | 시행(가능)날짜 | 제재 요인과 정당성 |
|---|---|--------------------------------|---|
| 반도체 생산 재료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광물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 갈륨 94%, 게르마늄 83%,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OLED, 전기차에 사용,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반도체 공정용 가스 소재 활용 | 중국에 유사한 제재를 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 국가의 기업 | 2023년 8월 1일 |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미국과 유럽 등 국가들처럼 중국도 자국 이익에 따라 제재 사용권리가 있음. |
| 드론 수출통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 50% 이상 중국 DJI회사 제품 |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농업용, 보안용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상업용 드론 등 | 2023년 9월 1일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분 |
| 티타늄, 텅스텐 등 군수용 광물, 텅스텐, 바나듐, 희토류 등 8개 점유율 50% 이상 | 미국 등 중국에 유사한 제재를 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 국가의 기업 | 미국의 제재 강화와 대만과 남중국해 개입이 확대될 경우 | 미국이 중국 첨단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 분야 등 민간양용에 대한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을 확대할 경우 군사안보 이유로 미국 군수용 광물에 대한 맞대응 제재 정당화 |

출처: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내달부터는 드론도 제한한다,” 『조선일보』, 2023.8.2., A6면 등 국내외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재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pp. 127~128.

16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年5月23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5.23.,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305/t20230523_11082154.shtml> (검색일: 2023.6.12.).

첨단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전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갈륨과 게르마늄과 같은 반도체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2023년 8월부터 추진했고, 특히 이러한 원자재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활용되어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맞대응하려는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드론 수출통제가 2023년 9월 이후 시행된 것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용될 드론을 중국이 공급한다는 서방과 미국의 비판과 의혹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희토류와 군수용 광물인 티타늄 등 전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주요 광물을 무기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 압박에 맞대응하고, 미국도 희토류의 주요 제조국인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수입선 다변화로 탈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정면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제재 우회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 밀수 같은 불법적인 방식에 의존하지만,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첨단 컴퓨팅 설비에 요구되는 반도체의 대규모 수요를 밀수의 불안정한 방법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그리고 첨단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수는 아주 적고 이들 기업에 주문한 적이 있는 기업 수 역시 제한적이어서 첨단반도체 분야는 규제 회피가 매우 어려운 시장 구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에서 허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최대 서버 기업인 인스퍼(Inspur) 그룹이 2023년 3월 미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 기업의 여러 계열사 가운데 하나는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이러한 자회사에 미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161/}

161/ “An Act of War’: Inside America’s Silicon Blockade Against China,” *The New York Times*, 2023.7.12., <<https://www.nytimes.com/2023/07/12/magazine/semiconductor-chips-us-china.html>> (검색일: 2023.10.26.).

(3) 하나의 중국과 대만 요인 등 중국의 핵심 이익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21세기 미국-대만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 협정 체결 협상이 2023년 5월 18일 완성되면서, 이러한 무역 협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판했다. 이 이니셔티브가 체결된 배경은 미국 주도의 IPEF에 대만 가입이 배제되면서 2022년 6월 미국-대만 간 협정을 발표했고, 이후 8월 17일 협정 체결 관련 협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했다. 관세를 다루지 않는다는 면에서 정식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없지만, 미국과 대만 간 전면적이고 가장 규모가 큰 무역 협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2차 협상은 2023년 1월 14일 진행되었고 협상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대만 간의 공식 무역 협정 체결이 미중 3대 공동성명 규정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주권적 의미를 포함한 공식적 성격의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무역이라는 명목을 통해 대만의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위협했다.^{162/}

특히 이러한 협정 체결에 대해,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지만, 미 당국이 관료를 협정 체결식에 파견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163/} 그리고 중국 국무원의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은 동 협정을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폄하하는 동시

162/ 이재영,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전략.”

163/ “美台签署“21世纪贸易倡议”第一部分协议 商务部回应,” 『商务部网站』, 2023.6.2., <<https://taiwan.huanqiu.com/article/4D98UIHiEW1>> (검색일: 2023.6.12.).

에 “경제무역의 탈을 쓴 정치거래”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동 협정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교묘한 착취 방식이자, 대만의 민진당 정부가 대만을 미국에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164/}

또한 중국은 2021년부터 시행된 「반 외국제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인 노스롭그루먼사와 록히드마틴사에 대해 제재를 시행했다. 미국과 대만 간 반관반민 회의체인 국방공업회의가 미국에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사흘간 진행되어 무기 판매와 군사 대화에 관한 협상을 했다. 이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대만해협분쟁 중 사이버전과 정보전 등을 포함하여 드론·정밀·이동성·인공지능·장거리·무인화 무기 장비 등을 활용한 비대칭 핵심 전력을 신속히 증강하는 것이었다.^{165/} 글로벌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의 절반가량을 대만에서 맡고 있는 가운데 첨단 무기에 탑재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발전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기술 이전, 직접 투자, 인재 이동 방면에서 큰 공헌을 했고, 중국의 상업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군수용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도 간접적인 공헌을 했다.^{166/}

그러므로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대만 관련 요인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발전 핵심이익’과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된 주권이 교차하는 매우 중심적인 변수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

164/ “美台将就所谓“21世纪贸易倡议”签署首批协议，国台办：坚决反对！”『环球网』, 2023.5.31., <<https://m.huanqiu.com/article/4D7CSizQh4M>> (검색일: 2023.6.12.).

165/ “대만 국방차관 방미...미국-대만 국방공업회의 개최,” 『연합뉴스』, 2023.10.1.,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1021600009>> (검색일: 2023.10.26.).

166/ 이재영 외,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p. 189~194.

기를 지원하고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대만이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와 함께 첨단 무기와 반도체 생산 강화 차단을 위해 중국은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 및 차세대 반도체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준비하고 있다.

(4) 중국의 ESG에 대한 인식과 대응: 미국의 비관세 장벽 수단

ESG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업 경영을 평가하는 도구로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범주화된 변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ESG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투자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과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ESG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공급망에서 각국 기업들은 ESG 공시 규정과 분류 체계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는 유엔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로 2000년에 발족하여 유엔 목표 달성과 환경, 사회 이슈에 있어 기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2006년 ESG 투자를 위한 6가지 책임투자원칙 이행에 블랙록 등 5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ESG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167/}

최근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ESG가 적용된 경우는 미국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높은 ESG 기준 도입이 필요해졌다. ESG는 환경과 인권침해를 포함하는 공급망 위험요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이다.^{168/} 구체적으

^{167/} 유연철, “기후변화와 ESG: 동향과 전망,” (Tech & Trade 조찬 포럼 발표자료, 2023.9.26.).

로 광물에서의 ESG는 E가 광산 폐기물, 대기, 에너지, 유해 물질, 생물다양성 등 환경 문제이고, S가 인권과 노동, 안전 등이 포함되며, G는 투명성과 부패 방지 및 윤리 등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과 핵심 광물 금속 회수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고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169/}

2022년 2월 23일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초안을 발표했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EU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관련 실사를 의무화했다. 공급망 실사에 핵심인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자발적 참여와는 다르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지표를 고려할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이다.^{170/}

특히 2010년 미국의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Rule)」은 콩고 지역의 분쟁 광물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원 개발과 분쟁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와 연관이 있음을 고려하여 콩고산 광물의 출처와 공급선 파악을 위한 실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미국에서 공급망 관련 기업에 대한 첫 실사였다. 2012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입안한 공급망 투명성 법률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여부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 경영

168/ 임산호, “탈탄소 에너지전환에서 핵심광물의 역할 및 전망,”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센터 경제안보 Review vol.1, 2023.1.18.), p. 2, <https://lby.mofa.go.kr/www/brd/m_25699/view.do?seq=369025&page=4> (검색일: 2023.10.26.).

169/ 위의 자료, p. 9.

170/ 남승현, “해외 인권과 환경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39, 2022.12.15.), p. 2,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sessionId=cdFX6SrbOhDstovOnRMTzDoh.public12?stor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22352565427230638&fileSn=1>> (검색일: 2023.5.24.).

실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발표하고 업데이트했다.^{171/}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2021년 ‘공중 보건과 환경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의 회복(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국정운영의 중심에 ESG 활동을 두었다. 이 행정명령에 환경 관련 기후변화 규제 강화와 기후 위기를 고려한 환경 규제 시행 및 투자 포트폴리오 등이 포함되었다.^{172/}

한편 미중 관계에서 ESG가 적용된 사례는, 2020년 7월 미국의 국무부가 다른 유관 부처와 함께 중국 신장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업 리스크를 알리기 위해 신장 지역 공급망 사업 정보를 발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 당국은 신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들과 거래하는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인권침해와 연관된 중국기업들을 미 상무부의 기업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173/}

미국의 ESG 실사는 유엔의 인권 국제 기준과 민주주의 가치 부합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 기업들이 모범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실사 지침을 강제성 의무로 부여하기보다 실사 여부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기업들에 대해서만 신장 지역 공급망 관련 실사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174/} 이는 미국이 ESG 실사를 자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에 근거하여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기 위한

171/ 위의 자료, pp. 9~11.

172/ 김기환, “글로벌공급망에서 수출기업의 ESG경영 도입요인과 지원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3권 3호 (2022), p. 168.

173/ 남승현, “해외 인권과 환경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p. 11.

174/ 위의 자료, pp. 12~13.

국가 책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ESG 실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다양한 산업에서 너무 복잡한 공급망 구조 속에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과 추궁이 어려우며, 실사 관련 법원의 관할권 문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175/} 그리고 ESG 실사를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보고 비판하기도 했다. 즉 공급망 실사 제도(Due Diligence)의 입법화가 기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이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같은 무역장벽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ESG 실사 제정의 흐름 속에서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과 OECD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기업 실사 범위와 기업들의 법적 책임 관련 규범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국가와 함께 기업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인식이 확대될 것이다.^{177/}

하지만 이러한 ESG는 중국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서방이 저렴한 노동력과 인건비 등 중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악용되는 측면도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범과 가치 측면의 논의들은 미국과 서방의 중국과의 탈동조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ESG의 한계는 위장 환경주의(green washing) 등의 과장된 ESG 공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가치투자과 ESG 투자를

175/ 위의 자료, p. 22.

176/ 김기환, “글로벌공급망에서 수출기업의 ESG경영 도입요인과 지원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 p. 167.

177/ 남승현, “해외 인권과 환경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p. 23.

균형 있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한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기 ESG보다 재무 이익을 최우선하여 ESG가 위축되었지만, 바이든이 ESG 원칙을 회복한 것처럼 정권에 따라 ESG 정책의 부침이 심하다는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전쟁, 미중 갈등, 원자재 가격 급등 등 ESG 경영 환경의 악화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시 표준 혼재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 등 외부적 요인, 그리고 ESG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여와 조직 문화 부족 등 내부적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178/}

따라서 미중 간 공급망 재편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ESG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서구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역사와 이력이 충분치 않은 대다수 중국기업은 환경경영, 노동, 지배구조 투명성 등 ESG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글로벌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ESG투자와 경영에 앞서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을 경쟁에서 따돌리려는 의도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ESG가 결국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의 기능을 하면서 무역 및 거래에서 중국 기업이 배제되는 것이다.^{179/}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ESG에 대응해 한편으로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외국제재법을 통해 강제노동과 환경 문제 등을 빌미로 중국기업, 기관, 지역,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는 경우 반격을 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180/}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과 핵 보유, 제재 등 이유로 기업들이 ESG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178/ 유연철, “기후변화와 ESG: 동향과 전망,” pp. 41~42.

179/ 문정빈, “서구 기업의 중국 견제? 자본주의 한계 수습? ESG 효과와 필요성 다시 보기,” (동아비즈니스리뷰 321호 Issue 2, 2021.5.), pp. 102~110,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051> (검색일: 2023.12.26.); 김현아 외, “국제정세 관점에서의 ESG 동향과 대응전략 비교분석 연구,” p. 54; 조인호, “기업책임경영(RBC)과 ESG 관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클레임 대응: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89권 (2021), pp. 261~283.

180/ 김현아 외, “국제정세 관점에서의 ESG 동향과 대응전략 비교분석 연구,” p. 61.

서, 실사로 인한 체제의 약점 노출 위험과 비용 상승을 감수하면서 까지 ESG를 도입하기보다 이러한 규범에 비판적인 입장인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편입되고자 하는 동기가 증가할 것이다.

3. 대내 요인: 국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념, 이익, 제도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적 요인은 국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념, 이익,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 요인은 경제 부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인프라 재편 요구, 안보적 관점에서의 핵심 기술 제조역량 및 격차 유지 필요성 인식, 적극적인 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 요소, 의회 변수, 기업 행위자이다. 반면에 중국 측 요인은 중국 최고 지도자의 공급망 관련 이념, 무역과 공급망에서 기업과 산업협회의 이익, 무역과 공급망 관련 제도이다. 미국 측 요인은 정부, 재계, 의회, 시민사회 등 중국보다 훨씬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들 사이에 상이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 측 요인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총서기의 인식과 판단이 국내 제도, 기업과 산업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호를 주로 결정한다. 즉 미중의 대내 요인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은 공급망 정책을 행정부가 주도하더라도 기업과 의회 등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공급망 재편 정책이 형성되는 반면, 중국은 시진핑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이 이러한 정책 작성과 집행을 결정한다.

가. 미국의 대내적 공급망 재편 요인(윤정현)

(1) 경제 부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인프라 재편 요구

(가) 더 나은재건 법안(BBB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IRA)

BBB(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주장해왔던 정책 기조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경제의 재건, ▲의료서비스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인프라와 일자리 확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했다. BBB 계획은 3개의 하부 계획으로 구성되는데,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ARP),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 AJP),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AFP)이 이에 해당된다.

코로나19 구호를 목표로 하는 미국구조계획(ARP)은 2021년 3월 초당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American Rescue Plan Act, ARP Act)되었다. 노후화된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일자리계획은 「초당적인프라법」^{181/}으로 2021년 11월 입법화되었다. 당초 미국일자리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 내용이 미국가족계획으로 이전·통합되어 「BBB Act(Build Back Better Act, BBB 법안)」로 추진되었다.

BBB 법안은 민주당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의 반대에 따라 예산이 계속 줄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어 2021년 11월 19일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다.^{182/} 상원 투표

^{181/} 정식명칭은 Bipart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182/} “인플레이션 감축법 美 의회 통과·타임라인 총정리,” 『Greenium』, 2022.8.16., <<https://greenium.kr/%ea%b8%b0%ed%9b%84-%ec%a0%95%ec%b1%85-%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ea%b0%90%ec%b6%95%eb%b2%95-bbb-%ed%83%80%ec%9e%84%eb%9d%bc%ec%9d%b8-%>>

를 앞두고 맨친 의원의 반대^{183/}로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리에 난항을 겪던 와중에, 척 슈머 원내대표의 중재를 통해 2022년 7월 BBB 법안의 주요 내용을 승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맨친 의원이 합의하면서 비로소 통과^{184/}되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BBB 법안과는 별개의 법안이지만, ▲전기차 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보조금 확대 등의 기후변화 대응, ▲국세청의 세금징수 강화, 자사주 매입세 부과 등 세제 개편,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등 보건의료 강화와 같이 BBB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에 대해 규정지역 내 조달비율을 제시하고,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해 미국 중심의 제조업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한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에도 태양에너지 설비 확대 및 투자 세액공제 기간 연장, 풍력에너지 부지 선정 지원 및 투자·생산 세액공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개발 지원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지원 및 저소득층, 농촌·산림·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이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 내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청정에너지 부문의 선두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초당적인프라법」과 더불어 미국 내 투자 유치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

ec%a0%95%eb%a6%ac/> (검색일: 2023.6.14.).

183/ 조 맨친 의원은 석탄산업이 발달한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으로, BBB 법안에 기후대응 예산 및 부유층 증세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100석의 상원 의석에서 당시 민주당-공화당 의석이 50:50으로 나뉘는 데 따라 맨친 의원의 반대가 상원 통과 여부를 좌우하는 결과가 나옴.

184/ 2022년 7월 27일 투표에서 상원 100석 중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 대 50으로 나뉘었으며, 의장을 맡은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최종 51:50으로 통과되었다.

단된다. 한편, 2023년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청정에너지 투자가 이탈하거나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EU, 캐나다 등 국가들은 이에 상응하는 청정에너지 투자 유치 정책을 준비·발표하고 있다.^{185/}

(나) 초당적인프라법^{186/}

2021년 11월 6일 「초당적인프라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법은 공공운송부터 시작해 수자원, 전력망, 브로드밴드, 항구·수로부터 전기차 충전소까지 수백 개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제공한다.

특히 초당적 인프라법에는 기존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요건’을 재정비한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법(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이하 BABA법)」이 포함되어있다. BABA 법에서는 주정부·지방정부 등에 제공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출에 있어서 철강제품, 제조품, 건설자재에서 국내산 부품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BABA 법은 2022년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ITA) 등 관련 부처들이 전환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연두교서(2023.2.7.)에서 연방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

^{185/} “faces up to US green deal subsidies with industrial overhaul,” *Politico*, 2023.2.1., <<https://www.politico.eu/article/eu-faces-up-to-us-green-subsidies-with-industrial-overhaul/>> (검색일: 2023.3.29.); “Canada’s C\$80 response to U.S. clean energy push: ‘We will not be left behind,’” *Politico*, 2023.2.1., <<https://www.politico.com/news/2023/03/29/canada-u-s-clean-energy-ira-00089284>> (검색일: 2023.3.29.).

^{186/} 정식명칭은 Bipart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는 미국산 구매강화 의지를 표명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 2021년 인프라법의 제정 이후, 제조업 기반을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바이아메리카 기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산 우대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바 해당 조치가 한국 기업의 진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바이 아메리카 요건’과 별개로 연방정부의 직접 조달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 법령(관련법령 Buy American Act of 1933)’이 존재한다. 미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 법령’의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E.O. 14005)’을 지시하고(2021.1.25.) 국내산 부품사용요건의 강화, 국내산 구매의무 면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2년 3월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개정해 미국산 제조품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 미국산 제품의 가격 우대 등을 추진했다.

(2) 안보적 관점에서의 핵심기술 제조 역량 및 격차 유지 필요성 인식

(가) 반도체 및 과학법(C&SA)^{187/} 추진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미 상원에서 통과된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2021)」,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에서 반도체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통합해 축소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양원의 조정을 거쳐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2022년 7월), 대통령 서명(2022년 8월)을 거쳐

^{187/} 공식명칭은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Act of 2022.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 법은 3개 부(division)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Division A, CHIPS Act of 2022’에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제조 인센티브 혜택, 투자 세액 공제 혜택(반도체촉진법, FABS Act), 가드레일 조항에 따른 해외 투자 금지 조항이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혜택은, 미국 국내에서의 반도체 제조와 조립, 검사, 첨단 패키징 기반을 건설, 확장하며 현대화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신용공여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2022년부터 5년 동안 총 527억 달러(약 69조 원)의 규모로 진행된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장비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반도체촉진법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188/}

가드레일 조항은 동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은 수혜기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장 또는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및 미 국무부가 지정한 국가로, 첨단반도체 관련 시설 증설 및 추가 투자에 적용된다.

반도체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첨단반도체 패권을 다시 장악하고, 미국 내에 기술개발부터 제조, 첨단 패키징까지 반도체 전 과정에서의 생태계를 미국 내에 구축하고자 한다. 동시에,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對중국 신규 투자를 제약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첨단반도체 발전을 견제하려는 공급망 재편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과이익 공유제, 자사주 매입 제한, 보육 시설 확충 등 상당한 부담과 조건을 기업에

^{188/}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Act of 2022, PUBLIC LAW 117-167—AUG. 9, 2022. 원문 및 번역본은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에서 확인 가능함.

부과하는 등 부수적인 정책목표들로 인해 정책 본질적인 목표의 성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89/}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배터리 광물 이니셔티브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전기차 배터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 배터리광물이니셔티브(American Battery Materials Initiative)^{190/}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및 광물 가공을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리튬, 흑연, 니켈 등)에 대한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자 했다. 배터리 핵심광물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광물 공급의 특성상 단기간 내 다각화가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확대를 공급망 강화의 핵심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 상무부는 2022년 9월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보고서^{191/}를 발표하는 계기로,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했다. 희토류는 핵심광물 중 중국

189/ "The US Chips Act becomes a Christmas Tress," *Financial Times*, 2023.3.5., <<https://www.ft.com/content/15f23ffd-e83a-4c24-b770-91719308957c>> (검색일: 2023.5.17.).

190/ The White house, "Biden-Harris Administration Driving U.S. Battery Manufacturing and Good-Paying Jobs," 2022.10.1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19/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driving-u-s-battery-manufacturing-and-good-paying-jobs/>> (검색일: 2023.10.26.).

191/ U.S. Department of Commerc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Further Actions to Secure Rare Earth Element Supply Chain," 2022.9.,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section-232-investigations/3142-2022-09-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actions-to-secure-rare-earth-element/file>> (검색일: 2023.10.26.).

의존도가 특히 높은 광물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희토류의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의 국방물자생산법(DPA) Title III 프로그램을 통해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제조를 지원하는 한편, 영구자석과 그 재료의 추가 구매 및 비축을 지원하고, 관련 제조업체의 네오디뮴 영구자석 생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네오디뮴 영구자석 가치사슬의 미국 내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무부 및 국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희토류 관련 R&D 협력 및 정제역량 개발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다자간 참여도 지속하고 있다.

(3) 적극적인 對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 요소

미국은 2022년 9월 특정 핵심기술에서 수출통제를 통해 경쟁국에 가능한 최대한의 우위를 확보^{192/}하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22년 10월 7일 강화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첨단기술 경쟁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고사양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제품을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제약하고 기술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접근은 2023년 1월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에 반도체 수출통제에의 동참을 요구함에 따라 다국간 공조로 확대되었다.

일본, 네덜란드는 첨단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국가들로, 두 국가의 공조가 없으면 대중 수출통제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에 따른 것이다. 이에 10월 7일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비하면

192/ The White house,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Jake Sullivan at the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 Global Emerging Technologies Summit," 2022.9.1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9/16/remarks-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at-the-special-competitive-studies-project-global-emerging-technologies-summit/>> (검색일: 2023.10.26.).

통제 대상과 범위가 좁지만 일본, 네덜란드가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Applied Materials(미), ASML(네), Tokyo Electron(일), Lam Research(미), KLA(미)가 모두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이 향후 이러한 제재 동참 국가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193/} 이러한 중국의 보복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G7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194/}됨에 따라, 수출통제 등 국가 간 공조의 파급이 역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對중국 견제 vs 지역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 변수

의회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외교정책이 자칫 대통령과 관료 조직에 의해 지나치게 독주되는 상황을 견제하고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의회가 건전한 비판 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이 외국 수반들과 조약 체결 시 의회는 마찬가지로 관련 조언을 수행하도록 역할이 규정돼 있다.^{195/} 특히, 의회는 외교정책의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선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핵심역량수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193/ "Beijing envoy warns Dutch of retaliation for chip curbs,"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3.22., <<https://www.scmp.com/news/china/article/3214361/china-wont-just-swallow-beijing-envoy-warns-dutch-retaliation-chip-curbs>> (검색일: 2023.5.18.).

194/ "With China in mind, economic security a G7 priority amid coercion worries," *Japan Times*, 2023.5.17.,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05/17/business/economy-business/g7-china-economic-coercion-security-worries/>> (검색일: 2023.5.18.).

195/ 가상준·정연정,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 연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2017.12.), p. 11.

Act, NCCDA)」 그리고, 지난 2023년 8월의 우려국가에 대한 ‘투자 제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05)’ 등, 대중국 견제와 각국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전략들은 사실상 의회에서 고안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정책들은 미중 전략경쟁 이후, 미 의회가 우려국가들의 해외투자로 유발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경고하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사들을 보다 까다롭게 할 것을 촉구한 시점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지역정치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대중국 견제기조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 시도와 이를 허용한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었다. 당초 우려국가로 지목된 중국의 소재·부품 사용을 배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요건에 따르면, 배터리 분야의 대표 중국기업인 CATL은 향후 미국시장의 진출 전망이 어두웠으나, 예상과 달리 포드와의 합작 형태로 미시간에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형식상 미국 기업인 포드가 지분 100%를 소유하나, CATL은 설계와 기술을 담당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규정한 우려국 소재·부품 제한 조항을 피해 세액공제 혜택을 노릴 수 있게된 것이다.^{196/} CATL의 시도는 의회의 또 다른 견제집단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정보위원회 소속의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공화당 의원이 “우려국가 기업이 운영하거나, 우려국가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기술 도입 기업도 보조금 자격이 박탈함”을 명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차단법」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197/}

^{196/} “Ford will build a US Battery Factory with Technology from China,” *The New York Times*, 2023.2.13., <<https://www.nytimes.com/2023/02/13/business/energy-environment/ford-catl-electric-vehicle-battery.html>> (검색일: 2023.10.26.).

(5) 디커플링 및 디리스팅에 소극적인 기업 행위자

최근 미 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견제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민간 기업이다. 이들은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익집단으로서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요 관료 조직에 대한 로비활동을 통해 외교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이다. 또한 여론을 움직여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정책 결정기구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198/}

중국에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강경기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공장’이자, ‘부상하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서 중국의 위상 때문이다. 중국과 달리 미국의 민간 기업은 정부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오히려 주요 선거국면에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로비역량 등 정치적 영향력 또한 높은 행위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목소리는 미 정부의 대중 전략을 디커플링에서 보다 현실적인 디리스팅으로 공식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표적으로 2023년 5월 30일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는 친강(秦剛)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자리에서 “미·중의 이익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삼 쌍둥이처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회장 역시 5월 31일 첸지닝(陈吉宁) 상하이시위원회 당서기와의 회동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수는 있으나 디커플링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애플, GM, JP모건 등 빅테크, 제조, 투자 부문을 대표하는

197/ “Rubio takes aim at planned Ford US battery plant using Chinese technology,” *Reuters*, 2023, 3, 10.,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senator-rubio-seeks-block-credits-ev-batteries-using-chinese-technology-2023-03-09/>> (검색일: 2023.10.26.).

198/ 가상준·정연정,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 연구,” p. 12.

미국 기업 CEO들 역시 미 정부의 탈중국 기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199/} 심지어 미 국내에서조차 포드가 중국 배터리기업 CATL과 손잡고 미시건에 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발표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인텔·퀄컴·엔비디아·마이크론·아이비엠(IBM) 등 주요 미국 기업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국제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역시 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있는 핵심 이해관계자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7월 17일, 반도체 및 과학법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 계속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일방적 제한은 공급망 교란과 중국의 보복을 촉발함으로써 오히려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펼친 바 있다.^{200/} 나아가, 대중국 수출통제와 규제가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됐는지, 동맹들과의 조율을 거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엄격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민간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소통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 제한을 삼갈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업에서 표명하는 일련의 현실적 접근 필요성은 트럼프-바이든 정부 초기까지 강경했던 미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에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 정부 또한 ‘디커플링’이라는 접근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게 이르렀다. G7 정상회담에 이어 각 기업들의 5월 하순 방중 직후인 6월 4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99/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팅으로...중국에 먼저 손 내민 미국?” 『한경비즈니스』, 2023.6.11.,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6075345b>> (검색일: 2023.7.3.).

200/ “미 반도체산업협회 “추가 중국 수출통제 말라”...이례적 불만 표출,” 『한겨레』, 2023.7.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00631.html>> (검색일: 2023.7.18.).

“미국은 핵심 부문에서의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중국과 경제와 무역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201/}

나. 중국의 대내적 공급망 재편 요인(이재영)^{202/}

(1) 중국 최고 지도자의 공급망 관련 이념과 인식: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시진핑 주석은 2023년 5월 말 중국 전역에 과학 자립 자강에 관한 어록을 발간했다. 이 어록은 양자컴퓨팅,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기보다 기술 자립, 자주 혁신, 과학발전 주도권으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203/}

그리고 20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 주석은 국가 안보 문제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증가한 현 상황에 직면하여 신안보 구도를 세우고 신발전구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안보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신안보구도이고, 이를 통해 발전과 안보를 융합하고 개방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데이터와 인공지능 거버넌스 안보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204/}

신발전구도와 신안보구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첨단과학기술과

201/ “Interview With National Security Adviser Jake Sullivan,” *CNN*, 2023.6.4., <<https://transcripts.cnn.com/show/fzgps/date/2023-06-04/segment/01>> (검색일: 2023.6.12.).

202/ 중국의 대내적 공급망 재편 요인은 다음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pp. 119~120, pp. 125~137.

203/ 이재영,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전략.”

204/ “加快推进国家安全体系和能力现代化以新安全格局保障新发展格局,” 『人民日报』, 2023.5.31., <<http://politics.people.com.cn/n1/2023/0531/c1024-40002528.html>> (검색일: 2023.6.12.).

그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는 공급망의 안정성이다. 특히 중국의 대전략으로써 ‘세기의 대변화’의 핵심에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첨단기술의 혁신 경쟁이 있고, 이렇게 치열한 전략경쟁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발전핵심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 핵심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기술동맹을 통한 세력 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므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은 첨단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보기보다, 전 세계 강군 건설과 민군융합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데 필수적인 국력의 중심요소로 인식했다.^{205/}

첨단 산업 기술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초기에 쌍순환 전략에서 자력 자강의 홍색 공급망 구축과 내수 위주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압박에 정면 대응하고 대중국 봉쇄를 상쇄하며 우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 브릭스(BRICS),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중국이 주도하는 느슨한 연대와 연결망을 통해 중국의 첨단 산업 기술 가치사슬 구축에 도움이 되는 지역 및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반도체 섹터에서 미국이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제재 망을 쉽게 뚫기 힘들지만, 최근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에 중국산 7나노 칩이 탑재된 사실에서 보듯이, 중국은 정부 보조금 300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첨단반도체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 반도체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206/}

205/ 이재영 외,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변영』, pp. 182~184.

206/ “Huawei’s Mystery Phone Shows Wireless Speeds as Fast as Apple,” *Bloombers*, 2023.9.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9-01/huawei-s-mystery-phone-shows-wireless-speeds-as-fast-as-apple#xj4y>>

(2) 무역과 공급망에서 기업과 산업협회의 이익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현지 업체들의 발전과 급성장은 점유율 상승이 그 증거이고, 반대로 과거 중국시장에서 점유율 상위권을 독차지했던 다국적 외국기업들은 중국 현지 업체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탈중국이 가속화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 비보, 샤오미, 오포의 현지 4총사 업체는 중국 내수 시장의 혜택을 입고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놓고 삼성 및 애플과 경쟁하는 지위로 발전했다.

중국 당국은 각종 세제 혜택, 산업 정책, 중국 업체에 제공하는 차별적 보조금 등을 통해 중국의 대표 기업을 육성했지만, 최근에는 티벳, 신장위구르, 홍콩 등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로 촉발된 ‘바이콧’과 ‘소비 보이콧’을 통해 다국적 해외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중국 현지 업체의 점유율 상승이 이루어졌다. 스웨덴 국립중국센터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기업 불매운동 건수는 2016년 단 4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6~2021년 불매운동 대상기업 국적 가운데 미국이 27건으로 최다였으며, 프랑스 11건, 일본 11건, 독일의 8건, 한국의 6건, 이탈리아의 4건, 대만의 4건을 포함했다.^{207/} 미국 국적 기업 대상 불매운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소비자들은 국산 제품을 갈수록 선호하고, 중국 규제 당국은 대체로 중국 대표 기업에 유리하게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해외 다국적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경쟁한다.^{208/} 중국의 대

7vzkg> (검색일: 2023.10.26.).

^{207/} Viking Bohman and Hillevi Pårup, “Purchasing with the Party: Chinese consumer boycotts of foreign companies, 2008–2021,” the Swedish National China Centre Report, 2022.7.11., <<https://kinacentrum.se/en/publications/chinese-consumer-boycotts-of-foreign-companies/>> (검색일: 2023.6.2.).

표 기업인 화웨이가 미 당국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여 스마트폰을 비롯한 화웨이 제품의 점유율과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중국 정부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의 힘이였다.

중국은 이러한 귀차오(国潮, 소비애국주의) 운동을 통해 현지의 중국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하고,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외된 해외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탈중국으로 선회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은 다시금 전 세계 시장을 두고 경쟁한다. 또한 중국의 소비애국주의 운동은 신장의 강제노동 문제에서 드러난 노동, 인권, 환경 같은 가치와 이념 차원의 논란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인 아디다스는 2021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사용금지를 선포했고, 이 때문에 중화권 전체 매출이 16%나 하락했다.^{209/}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산업협회도 미국 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특히 이 협회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저하, 전 세계 소비자 이익 훼손, 전 세계 공급망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 분업과 주요 국가 산업 주체 간 협력 덕분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이 실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반도체

208/ Jami Miscik, Peter Orszag, and Theodore Bunzel, "The U.S.-Chinese Economic Relationship Is Changing—But Not Vanishing How “De-Risking” Can Preserve Healthy Integration," *Foreign Affairs*, 2023.3.24., <<https://www.foreignaffairs.com/ united-states/us-chinese-economic-relationship-changing-not-vanishing>> (검색일: 2023.6.2.).

209/ "위구르 생산 면화 사용 중단한 아디다스, 판매량 감소... 불매운동 영향 가시화," 『아시아타임즈』, 2021.8.11.,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81500114#_enliple#_mobwcvr> (검색일: 2023.7.20.).

산업협회가 표명한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은 이와 유사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의 공식성명이 나온 직후 발표된 것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이 공식성명을 통해 중국과 같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동맹국과 완전한 조정이 가능한지, 좁은 분야에 명확하게 규정되는지 등의 미 당국의 제재에 대한 문제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제기했다.^{210/}

이와 같이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반도체산업협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자, 중국 당국은 우선 보조금 확대 방안으로 응답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고급 인재 양성 및 반도체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부문 연 매출 기준 전 세계 4위 중국 업체인 TFME, 3위 JCET 등 후공정 분야를 지속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 YTMC(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rp)의 첨단기술인 200단 이상 3차원 낸드플래시의 제조 등 방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211/}

중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와 기업들은 미국의 첨단반도체 제재 강화에 맞서 중국 정부를 향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미 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미중 전략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이 반도체이고, 중국의 강대국화와

210/ “美반도체협회에 호응한 中협회 “수출제한 조치, 세계산업 파괴(중합).” 『연합뉴스』, 2023.7.19.,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9159351083?section=international/china>> (검색일: 2023.7.20.).

211/ “[고영화의 중국반도체] <11> 2023년 중국 반도체 5대 관전 포인트 <上>.” 『뉴스핌』, 2023.3.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02001118>> (검색일: 2023.7.20.).

경제발전에도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 첨단반도체의 국산화이기 때문에 중국 협회, 기업, 정부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의 핵심은 국가 반도체 펀드이다. 2014년 펀드의 1기가 1387억 위안 규모로 집행되었고, 그중 67%는 반도체 제조 투자 분야에서 화홍그룹(Huahong), 창장메모리(YMTC), 중신국제(SMIC)를 양성하는 것이고, 17%는 즈광잔튀(UniSOC)의 팹리스에 투자하였으며, 10%는 중국 3대 OSAT의 후공정 기업에 대한 투자였다. 나머지 6%가 장비 소재 투자로 중웨이반도체(AMEC)와 베이팡화창(NAURA)과 같은 중국 2대 반도체 장비 기업을 육성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2019년 2기 국가 반도체 펀드도 2041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의 집행 기준, 75%는 중신국제(SMIC)와 창신메모리(CXMT)의 확장 등 총 10건의 반도체 제조 투자 사업으로 집행했고, 11%는 중웨이반도체(AMEC)와 베이팡화창(NAURA)의 반도체 장비 분야를 포함한 12건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0%는 거커마이크로(GalaxyCore) 등 팹리스 분야에 12건 투자를 집행했다.^{212/}

하지만 중국의 국가 반도체 펀드와 같은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부작용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 담보의 어려움과 정경유착으로인해 만연한 부패 문제이다. 중국 당국은 1기 국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역할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사’에 맡기고, 실제 투자 업무는 ‘화신투자관리’에 맡겨 부패를 방지하려고 업무 이원화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칭화유니그룹의 창업자와 화신투자관리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 6명이 중국 감독 당국의 부패와 기율 조사를 받게 되어 정부의 반도체 정책의 한계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부패사건 이후 보조금

212/ “고비 맞은 중국 반도체 굴기, 미 제재에 내수 침체 겹쳐 대규모 적자,” 『중앙일보』, 2023.7.29.~30., 11면.

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2023년에도 약 410억 달러의 신규 3기 국가 반도체 투자 펀드가 출범되었다.

(3) 무역과 공급망 관련 제도

〈표 III-10〉은 중국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수단의 법제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전략 기술경쟁과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8월 시행된 ‘중국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의 개정 작업에서부터 2021년 11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총 7건의 정책과 법률을 발표했다. 2023년에만 반간첩법 개정, 대외관계법 제정 등 관련 정책과 법률 조치가 총 4건이었다. 이는 트럼프 시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 이전과 비교한다면 중국의 관련 법제화가 훨씬 강화된 것이다. 특히 정책의 상위에 있는 신규법률 제정만 보면 2020~2021년 2년간 총 5건이나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법률 제정·시행 전 오랜 기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차례의 초안이 발표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법률을 공포하기까지 3년에서 5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년 동안 특정 분야와 연관된 법률이 모두 5건이나 시행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법률 제정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의미이다.^{213/}

^{213/} 예를 들어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의 경우 중국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2015년 6월 1차로 심의하고, 2016년 6월 2차 심의를 진행했으며, 2016년 11월 3차 심의 후 마침내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최종 시행되었다. 1차 심의 이전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법률 제정 과정은 적어도 3년 이상이 필요하다.

표 III-10 최근 중국의 무역 투자 공급망 관련 법률 및 규정 발표 내용

| 시행 날짜 | 법률 혹은 정책 목록과 핵심 내용 |
|-----------|---|
| 2017년 6월 | 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 | 국가안보, 민생, 공공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요 정보 인 프라에 대해 사이버 안전 등급 보호제도의 기초 위에 중점 보호 시행 (본 법률에 근거하여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
| 2020년 8월 | 중국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의 개정판 |
| | 13년 만에 처음 있는 실질적인 개정. 디지털, 인공지능, 우주 기술 등 새로운 영역이 제한 목록에 포함 |
| 2020년 9월 | 신뢰할 수 없는 실제 명단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
| | 중국의 주권, 안보 국익을 해치는 외국 실체에 대한 제재, 중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제재, 미국 제재에 따라 중국과 무역을 중단한 실체에 대한 제재 |
| 2020년 12월 |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제정 |
| | 중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통제 항목에 대해 인허가 요건 확립. 상품, 기술,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국 국내기업과 제삼자 거래에서 통제 항목을 재수출하는 외국 기업에 적용 |
| 2021년 1월 | 외국법률의 부당한 역외적용방지법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
| | 외국법률이 요구한 보고나 준수 요건에서 나온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때문에 다른 상대방부터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때 중국 기업과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는 것 |
| 2021년 1월 |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
| | 외국인 투자건이 중국 국가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투자허가, 조건부허가, 반려 결정 |
| 2021년 6월 | 반외국 제재법(反外国制裁法) 제정 |
| | 중국 시민들을 차별 혹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외국인과 조직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 2021년 9월 | 데이터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제정 |
| | 중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 통제 기술과 중요한 과학기술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의 해외 이전에 대한 검토 승인을 요구하는 것 |
| 2021년 11월 |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제정 |
| | EU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수집, 처리, 데이터의 저장과 거의 일치하고, 개인 데이터의 해외 이전에 개인의 동의와 중국 당국의 보안 평가를 요구 |

| 시행 날짜 | 법률 혹은 정책 목록과 핵심 내용 |
|----------|---|
| 2023년 7월 | 반간첩법(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개정 시행 |
| | 간첩행위 범주 확대, 국가안보 기관 권한 확대, 사이버안보 강화, 행정처벌 수위 강화(베이징 소재 미국 컨설팅 회사 민츠 그룹의 중국인 직원 5명 간첩 혐의 구금과 사업장 폐쇄,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 압수 수색) |
| 2023년 7월 | 대외관계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 제정 |
| 2023년 7월 | 대외업무 추진에서 중국공산당의 권한 집중화,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반제 조치 시행 |
| 2023년 7월 |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물질 수출 통제 공고 |
| 2023년 7월 |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를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관련 물질 수출 통제 |
| | 특정 무인기(드론)의 임시 수출 제한 조치 (对特定无人驾驶航空飞行器实施临时出口管制) |
| 2023년 7월 | 일정 수준에서 군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드론과 같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은 국제적 관례, 이번 제한조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님. 중국산 드론 우크라이나 수출 모용 탈피 |
| 2024년 1월 | 외국국가면책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 | 제7조, 외국국가와 중국 포함 기타 국가 조직 혹은 개인의 중국 역내 상업활동 혹은 중국 역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역외 상업활동 관련 소송에 대해 그 외국국가의 중국 법원에서 관할 면책 향유 불가 |

출처: Tsugami Toshiya, "Three Things to Know About China's "Economic Security", *Nippon*, 2022.3.7., <<https://www.nippon.com/en/in-depth/a07902/>> (검색일: 2022.9.20.); 민지윤, "중국, '반(反)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No. 7, 2021.6.11.), p. 2,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FileDown.do?nindex=2&nPostidx=2211>> (검색일: 2023.6.19.); 최원석·문지영·김영선,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6, no. 28, 2021.6.11.),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FileDown.do?nindex=2&nPostidx=2211>> (검색일: 2023.8.10.); "中国商务部: 无人机出口管制是国际惯例不针对特定国家," 『联合早报』, 2023.8.1.,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30801-1419409>> (검색일: 2023.9.1.)의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추가 보완, 재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pp. 129~131.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과 법률의 주요 특징은 조항 내용이 모호하여 생기는 회색지대가 많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이 "중국의 주권, 안보 국익을 해치는 외국 실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다루면서^{214/} 중국의 안보 국익에 대한 정의

와 국익을 훼손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2023년 7월 발효된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 침해 행위에 대응하는 반제 조치 시행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외국국가면책법」은 2023년 9월에 통과된 후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 개인 및 국가 조직의 중국 국내에서의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면책 허용이 성립하지 않는 조항으로, 특히 중국 법원이 ‘상업활동’을 규정할 때 그러한 행위의 목적과 성질을 종합해서 판별한다는 분명하지 않은 기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14/}

특히 중국에서 이러한 「외국국가면책법」이 제정된 배경은 코로나 19의 팬데믹 시기,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서방 국가의 외국 법원이 자국의 외국주권면책법을 이용해 중국 정부(부처)를 향해 고소를 빈번하게 제기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 국가 면책만으로 이러한 서방 국가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겠다는 중국 최고지도부 사이 합의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일부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시행하는 이 법은 미국이 자국법을 국외까지 확대 적용하는 ‘확대 관할법(long-arm jurisdiction)’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등 원칙과 국가 주권 수호에 근거한 중국의 현실적 필요와 국정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중국의 「외국국가면책법」이 발효되면 미국과 유럽 등 국외 정부 부처의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중국 국내 상업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 법원의 기소를 허용함으로써, 외국 정부(부처)의 면책 특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214/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令2020年第4号 不可靠实体清单规定,” 2020.9.19., <<http://www.mofcom.gov.cn/article/b/fwzl/202009/20200903002593.shtml>> (검색일: 2023.9.4.).

215/ 中国人民大会,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2023.9.1., <<http://www.npc.gov.cn/npc/c30834/202309/f4b3f3d2ac9e4483ab2362ba03e555bb.shtml>> (검색일: 2023.9.4.).

IV. 중러북 경제 관계 변화와 한반도

이용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승호(인천대 교수)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중러북 경제 관계 변화와 한반도

1. 중러 경제 관계 밀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용재)

미·중 전략경쟁이 첨단기술·핵심 산업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반도체, 배터리, AI, 차세대 이동통신 등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전방위적 제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중·러는 서로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강화되고 있는 중러 간 경제협력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필요한 첨단·핵심 산업에서의 협력이 아닌 에너지(석유, 천연가스)와 제조품(자동차, 전자제품) 교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미중 경쟁과 중러 경제협력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중러 간 경제 블록화보다는 제한된 분야에서 느슨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미중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다면, 양국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가. 미국과 서방의 대중·러 경제적 국가책략과 중러의 위험완화 전략

본 절에서는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견제 전략(경제적 국가 책략)과 서방(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부과하는 제재에 관하여 소개하고, 양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위험 완화 전략을 고찰한다.

(1)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

‘경제적 국가책략(economic statecraft)’이란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전략적, 안보적 이익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216/} 이는 국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국에 가하는 유인 및 강압을 지칭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무역, 첨단기술, 금융, 행정 등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7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2020년까지 총 4차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무역 제재를 가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었다.^{217/} 또한 AI, 5G, 슈퍼컴퓨터, 로봇 등 첨단기술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과 2021년에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였다.^{218/} 반도체와 이

216/ David Baldwin,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재인용: 윤대엽,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전략적 결속,” 『아태연구』, 제26권 3호 (2019), p. 170.

217/ 사실 2015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中国制造 2025)’를 발표하면서 첨단기술의 국산화를 천명하였고, 이후 미국은 중국을 진정한 패권 경쟁자로 인식해 왔다. Liang Guo, Sizhu Wang, and Nicole Z. Xu, “U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a loss-loss confrontation,”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vol. 11, no. 1 (2023), p. 18.

218/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첨단기술 관련 장비와 물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차전지로 대표되는 전략물자 측면에서 기존 중국에 집중되었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독자적인 제재보다 동맹국과 우방국을 이용한 대중국 제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인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등 동맹국과 우방국을 주도하여 공급망 개편을 진행해 오고 있고, Chip4 동맹과 IPEF는 미국의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의 상징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에너지, 무역, 기업, 개인에 전방위적인 경제 및 행정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미국과 EU로 인해 러시아가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에서 퇴출되면서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 대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국들은 국내 러시아 주요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였고, 유럽 내 러시아 기업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금지했다. 그 외에도 유력 러시아 정치인, 관료, 기업인 1,000여 명에 대한 해외 자산동결과 압류 및 비자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였다.^{219/}

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우방,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과 중국을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제정하였다. Haiyong Sun, "US-China tech war: Impacts and prospects,"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5, no. 2 (2019), p. 202; Sophia Hilsman, "Inflation Reduction Act's Reception by Global Trading Partners," *CICLR Online*, vol. 53 (2022), pp. 1~2.

^{219/} 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uncil, "EU sanctions against Russia explained," 2023, 4, 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sanctions-against-russia-explained/>> (검색일: 2023. 4. 20.); "What are the sanctions on Russia and are they hurting its economy?" *BBC News*, 2022, 11. 30.,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0125659>> (검색일: 2023. 5. 16.).

또한, EU는 러시아에 무역 제재를 부과하였다. <표 IV-1>과 <표 IV-2>에서 보여주듯 첨단기술, 기계, 정유 장비, 민간·군사 이중용도 물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반대로 러시아로부터 원유(석유제품), 고체 연료(석탄), 목재, 시멘트, 철강, 해산물, 담배 등이 수입 금지되었다.

표 IV-1 EU 대러시아 수출금지 상품

| 대러시아 수출금지 분야 | 구체적인 상품 |
|---------------------|---------------------------------|
| 첨단기술 | 양자컴퓨터, 고사양 반도체,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
| 기계 & 운송 장비 | |
| 정유 기술 & 장비 | |
| 에너지 산업 장비, 기술, 서비스 | |
| 우주 & 항공 장비 & 기술 | 비행기, 비행기 엔진, 비행기나 헬리콥터 부품, 제트연료 |
| 해양 항행 물품 및 무선 통신 기술 | |
| 이중용도 물품(민간 & 군사) | 드론, 드론 및 암호화 장치용 소프트웨어 |
| 사치품 | 고급자동차, 시계, 보석 |
| 민간 총기류 및 기타 군수품 | |

출처: 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Council, "EU sanctions against Russia explained," 2023.4.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sanctions-against-russia-explained/#sanctions>> (검색일: 2023.4.29.)를 참고하여 정리함.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EU는 러시아에 439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912억 유로 상당의 러시아 상품 수입이 금지되어 2021년 대비 대러시아 수출은 49%, 수입은 58% 감소하였다.^{220/}

^{220/} 위의 자료.

표 IV-2 EU 대러시아 수입금지 상품

| 대러시아 수입금지 분야 | 구체적인 상품 |
|--------------|------------------------------|
| 원유, 석유제품 | |
| 석탄과 고체 연료 | |
| 철강, 철강 제품 | |
| 금 & 귀금속 | |
| 각종 원료 |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 제지 합성고무, 플라스틱 |
| 해산물 & 주류 | 캐비아, 보드카 |
| 담배 & 화장품 | |

출처: 위의 자료.

2022년 3월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액화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하였고,^{221/} 영국은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 수입, 제3국으로의 운송 및 운송에 관한 부과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금지하였다.^{222/} 미국과 유럽의 중·러에 대한 제재는 중·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위협 완화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음 절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한 위협 완화 전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21/ The White House, "FACT SHEET: United States Bans Imports of Russian Oil, Liquefied Natural Gas, and Coal," 2022.3.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08/fact-sheet-united-states-bans-imports-of-russian-oil-liquefied-natural-gas-and-coal/>> (검색일: 2023.6.2.).

222/ Government of UK, "UK ban on Russian oil and oil products," 2023.4.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ban-on-russian-oil-and-oil-products/uk-ban-on-russian-oil-and-oil-products>> (검색일: 2023.6.2.).

(2) 중·러의 위험완화 전략

미국 주도의 공급망 압박과 서방의 무역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거대 자유무역협정’, ‘쌍순환’, ‘중계무역’을 통해 위험 완화 시도를 해 왔다. 중국은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국제경제 질서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과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인 ‘RCEP’을 주도하여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을 강화하고 있고, 2021년 9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형성을 위하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을 신청하였다.^{223/}

중국은 2020년부터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주도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대외적인 공급망 확대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쌍순환’ 전략을 선택하였다.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확대하여 국내기업 및 산업의 첨단기술과 핵심 원자재 생산 육성을 통한 기술 및 핵심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였다.^{224/} 미국의 공급망 견제에 대한 중국의 위험 완화 전략은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첨단기술 국산화 돌파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공급망과 경제의 체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다. 첨단기술의 국산화와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벗어난 중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은 미중 경쟁에 직면한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223/ “최근 중국 공급망 이슈의 영향 및 전망.” (KOTRA Global Market Report 22-018, 2022.7.), p. 14,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376&HotClipTyName=DEEP#;> (검색일: 2023.5.8.).

224/ 刘鹤, “加快构建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 『中国政府网』, 2020.11.25., <https://www.gov.cn/guowuyuan/2020-11/25/content_5563986.htm> (검색일: 2023.6.2.).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를 통한 중계무역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이 금지된 첨단기술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첨단기술 제품(반도체와 컴퓨터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기업과 소비자들은 중국, 튀르키예와 홍콩 등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수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을 통하여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225/} 하지만 첨단기술 제품 관련 공급망의 자체적인 구축이 어려운 러시아로서는 제재와 가치 규범과 같은 진입 장벽이 낮은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중·러가 서방의 견제 및 제재를 타개하기 위하여 산업별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을 소개한다. 러시아의 중계무역을 통한 위험 완화는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향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중계무역을 추진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는 재화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산업별 비교우위와 중러 경제협력

중러가 산업별 비교우위에 따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품과 첨단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러시아는 에너지와 군수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최근 양국이 추진하는 산업별 협력을 소개한다.

225/ 2022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약 26억 달러의 컴퓨터 및 전자제품 부품이 러시아로 수출되었고, 그중 약 30%는 Intel, AMD (Advanced Micro Devices Inc), Texas Instruments Inc, Analog Devices Inc., Infineon AG 등 미국과 서방 국가기업 제품들이다. Brian (Chun Hey) Kot, "Hong Kong's Technology Lifeline to Russ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3. 5. 17., <<https://carnegieendowment.org/2023/05/17/hong-kong-s-technology-lifeline-to-russia-pub-89775>> (검색일: 2023. 6. 2.).

(1) 중국의 비교우위산업과 중·러 경제협력

중국은 첨단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AI, 5G, 로봇, 컴퓨터)과 제조업에서 러시아보다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226/} 중국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2021년), 리튬-이온 배터리(2022년), 최첨단 슈퍼컴퓨터 생산국이며,^{227/} AI 분야의 투자, 혁신, 활용도를 측정한 ‘글로벌 AI 지수(The Global AI Index)’에서 미국 다음인 세계 2위였고,^{228/} Analytics Insight에 따르면 2023년 세계 5위 로봇 기술국이다.^{229/} 그뿐만 아니라 2022년 글로벌 5G 네트워크 특허 출원 수의 40%를 중국이 차지하였으며 화웨이, ZTE, 오포(OPPO), 비보(Vivo) 4개 중국기업이 10위 안에 자리매김하였다.^{230/}

226/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하면서 첨단산업 발전과 첨단 기술 자립을 천명하였고, 산업과 학계의 융합연구와 과학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 중요, 공통 기술을 발전시켜 중국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장에 요인을 제거하여 중국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创建“中国制造2025”国家级示范区的通知》,” 『中国政府网』, 2017. 11. 23., <https://www.gov.cn/xinwen/2017-11/23/content_5241764.htm> (검색일: 2023. 6. 7.).

227/ Minsoo Kang, “China Accounted for 67% of Global Handset Production in 2021,” 2022.12.13., Counterpoint,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ko/global-handset-production-2021/>> (검색일: 2023. 6. 12.); Veronika Henze, “China’s Battery Supply Chain Tops BNEF Ranking for Third Consecutive Time, with Canada a Close Second,” *BloombergNEF*, 2022. 1. 12., <<https://about.bnef.com/blog/chinas-battery-supply-chain-tops-bnef-ranking-for-third-consecutive-time-with-canada-a-close-second/>> (검색일: 2023. 6. 12.); Thomas Alsop, “Number of top 500 supercomputers worldwide 2019–2022, by country,” Statista, 2022. 7. 2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4445/number-of-supercomputers-worldwide-by-country/>> (검색일: 2023. 6. 12.).

228/ Tortoise, “The Global AI Index,” <<https://www.tortoisemedia.com/intelligence/global-ai/>> (검색일: 2023. 6. 12.).

229/ S Akash, “Top 10 Most Advanced Countries in Robotics in 2023,” Analytics Insight, 2023. 5. 17., <<https://www.analyticsinsight.net/top-10-most-advanced-countries-in-robotics-in-2023/>> (검색일: 2023. 6. 12.).

230/ Zhu Shenshen, “China tops global rankings with most declared 5G patents: report,” *Shine*, 2022. 7. 10., <<https://www.shine.cn/biz/tech/2206106648/>>

2023년 3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신시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联合声明)」에 따르면 첨단기술 산업을 포함한 8개 분야에서 2030년까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언하였다.^{231/} 중국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화웨이는 미국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투자와 반도체 같은 부품 및 중간재 수급에서 제한을 받았지만, 러시아 진출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9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 중 중국과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화웨이와 MTS는 러시아 5G 네트워크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기업은 러시아에서 “5G 시티 (5G CITY)”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232/} 러시아에서 화웨이는 노키아, 에릭슨과 함께 주요 5G 네트워크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22

(검색일: 2023.6.12.)

231/ 정상회담 후 양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 무역(여행, 스포츠, 운수, 의료), 극동 및 북극 개발, 해상법 등 14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합의, 공동 성명,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习近平同俄罗斯总统普京举行会谈,” 『中国政府网』, 2023.3.22., <https://www.gov.cn/xinwen/2023-03/22/content_5747723.htm> (검색일: 2023.6.2.); 中国海警局, “中国海警局和俄罗斯联邦安全总局签署海上执法合作文件,” 2023.4.27., <https://www.ccg.gov.cn/2023/gjhz_0427/2252.html> (검색일: 2023.6.5.);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中俄签署消费者权益保护双边合作文件,” 2023.5.23., <https://www.samr.gov.cn/cms_files/filemanager/samr/www/samrnew/xw/zj/202303/t20230323_354064.html> (검색일: 2023.6.5.);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2023年5月25日),” 2023.5.25., <<http://www.mofcom.gov.cn/xwfbh/20230525.shtml>> (검색일: 2023.6.25.); 卢森通, “对中俄远东能源合作的观察与分析,” Tianda Institute, 2023.5.24., <<http://tiandainstitute.org/2023/05/24/4659-saeco/j/>> (검색일: 2023.6.5.).

232/ “China’s Huawei signs deal to develop 5G network in Russia,” *The Guardian*, 2019.6.6.,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9/jun/06/china-as-huawei-signs-deal-to-develop-5g-network-in-russia>> (검색일: 2023.7.7.); HUAWEI, “MTS and Huawei Launch Commercial 5G Experience in Moscow,” 2021.4.15., <<https://www.huawei.com/en/news/2021/4/mts-launch-5g-commercial-2021>> (검색일: 2023.7.11.).

년 말 노키아와 에릭슨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 내 화웨이 5G 네트워크 시장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33/}

표 IV-3 러시아의 중국상품 수입량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 2021년 12월 (침공 전) | 2022년 3월 (침공 직후) | 2022년 8월 (침공 후) | 2022년 12월 (침공 후) |
|--------------------|------------------------|------------------------|-----------------------|------------------------|
| 사무 및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 0.271 | 0.173 | 0.226 | 0.277 |
| 통신 및 녹음 장비 | 0.299 | 0.095 | 0.214 | 0.237 |
| 전기 기계 및 부품(반도체 포함) | 0.602 | 0.277 | 0.499 | 0.569 |
| 운송 장비(일반 차량 제외) | 0.037 | 0.008 | 0.036 | 0.161 |

출처: Zsolt Darvas et al., "Russian foreign trade tracker," Bruegel, 2023.5.17., <<https://www.bruegel.org/dataset/russian-foreign-trade-tracker>> (검색일: 2023.6.20).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제재로 첨단기술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은 대미 수출과 투자가 경제제재로 제한되면서 러시아의 첨단기술 제품, 장비, 부품의 대중 의존이 급증하였다.^{234/} 예를 들어,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러시아가 수입한 88%의 직접 회로는 중국과 홍콩에서 수출되었고,^{235/} 러시아

233/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 시장에서 노키아와 에릭슨의 이동통신 장비 점유율은 40~60%를 차지했었다. Vivienne Walt, "Chinese tech giant banned by the U.S. has been an early winner from Russia's war on Ukraine," *Fortune*, 2022.4.1., <<https://fortune.com/2022/04/01/huawei-early-winner-russia-war-ukraine-ericsson-nokia/>> (검색일: 2023.7.12.).

234/ "러시아는 상품시장의 공백을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통해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유지하며 중국은 서구 기업의 러시아 탈출로 인한 공백을 중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병행수입 합법화, 서방 국가의 러시아 내 특허권 무효화 등의 조치 시행과 더불어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시장을 안정화하고 있다." 박지원,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자문회의의 발표자료, 2023.9.21.).

235/ 중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09% 증가하였다. François Chimits and Antonia Hmaid, "China moves to fill the void left

가 수입한 75%의 기타 반도체 장치, 97%의 스마트카드, 96%의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52%의 반도체 제조 기기가 같은 기간 중국에서 수출되었다.^{236/} 또한 2022년 중국은 2300만 달러 규모의 드론, 3300만 달러 규모의 비행기와 우주선 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였다.^{237/} <표 IV-3>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기·전자기기, 장비, 부품과 기계 장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일시적으로 대폭 감소한 후 2022년 12월에는 침공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운송 장비는 오히려 침공 전보다 수입이 증가하였다.

표 IV-4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

| | 2022년 2월 (침공 전) | 2022년 12월 (침공 후) | 증감률 |
|----------|--------------------|---------------------|------|
| 삼성 (한국) | 42% | 2% | -40% |
| 애플 (미국) | 15% | 1% | -14% |
| 샤오미 (중국) | 21% | 53% | +32% |
| 리얼미 (중국) | 6% | 27% | +21% |

출처: "Chinese brands have replaced iPhones and Hyundai in Russia's war economy," *CNN*, 2023.2.25., <<https://edition.cnn.com/2023/02/25/business/russia-chinese-brands-sales-surge-ukraine-war-intl-hnk/index.html>> (검색일: 2023.6.8.)를 참고하여 정리함.

<표 IV-4>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 스마트폰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by Russian sanctions - on its own terms," *MERICs*, 2022.8.26., <<https://merics.org/en/comment/china-moves-fill-void-left-russian-sanctions-its-own-terms>> (검색일: 2023.8.23.).

^{236/} "Russia Semiconductor Imports Dashboard: Pre- and Post-Invasion Trends,"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2023.4.27., <<https://silverado.org/news/russia-semiconductor-imports-dashboard-pre-and-post-invasion-trends/>> (검색일: 2023.6.23.).

^{237/} Ana Swanson, "China's Economic Support for Russia Could Elicit More Sanctions," *The New York Times*, 2023.3.22., <<https://www.nytimes.com/2023/02/22/us/politics/china-russia-sanctions.html>> (검색일: 2023.5.4.).

공 직후 삼성과 애플이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57%를 점유하였고, 샤오미와 리얼미 제품 점유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2022년 12월 두 개의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이 80%로 급상승하였다.

표 IV-5 러시아 가전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화

| |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
|-----|-----|--------------------|-----------|----------|
| 냉장고 | LG | 16.1%(1위) | 10.1%(2위) | -6% |
| | 하이얼 | 13.8%(3위) | 23.5%(1위) | +9.7% |
| 세탁기 | LG | 26.3%(1위) | 11.8%(2위) | -14.5% |
| | 하이얼 | 9.8%(4위) | 24.9%(1위) | +15.1% |
| 오븐 | LG | 26.3%(1위) | 11.8%(4위) | -14.5% |
| | 하이얼 | 6.6% 이하 (5위권 밖) | 15.1%(1위) | +8.5% 이상 |

출처: Tadviser, “Household appliances and electronics (Russian market),” *CNN*, 2023.4.10., <<https://edition.cnn.com/2023/02/25/business/russia-chinese-brands-sales-surge-ukraine-war-intl-hnk/index.html>> (검색일: 2023.6.23.)를 참고하여 정리함.

2022년 러시아 가전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 중국 세탁기와 냉장고의 대러시아 수출은 각각 35.5%와 6.4% 증가하였다.^{238/} <표 IV-5>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중국 가전기업인 하이얼(Haier)은 2021년 시장점유율 1위였던 LG를 누르고 냉장고, 세탁기, 오븐에서 러시아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38/} Vita Spivak, “How Sanctions Have Changed the Face of Chinese Companies in Russ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3.5.18., <<https://carnegieendowment.org/politika/89785>> (검색일: 2023.6.27.).

표 IV-6 러시아 자동차 시장점유율 변화

|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
|--------------|-------|-------|-----|
| 기아 (한국) | 13% | 10% | -3% |
| 현대 (한국) | 10% | 9% | -1% |
| 로노 (프랑스) | 9% | 7% | -2% |
| 체리 (중국) | 3% | 6% | +3% |
| 창청 (중국) | 3% | 6% | +3% |
| 지리 (중국) | 1% | 3% | +2% |
| 지라-엠그란드 (중국) | 1% | 1% | 0% |
| 폭스바겐 (독일) | 6% | 3% | -3% |
| 벤츠 (독일) | 3% | 2% | -1% |
| BMW (독일) | 3% | 2% | -1% |
| 토요타 (일본) | 6% | 5% | -1% |

출처: Michelle Toh, "Chinese brands have replaced iPhones and Hyundai in Russia's war economy," *CWJ* 을 참고하여 정리함.

러시아 자동차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여주는 <표 IV-6>에 따르면 2022년 체리, 창청, 지리 등 중국 자동차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기아, 현대), 독일(폭스바겐, 벤츠, BMW), 일본(토요타) 자동차 기업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에 반하여 중국 자동차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8%에서 16%로 상승하였다. 중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 전체 점유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점유율이 일 년 사이 2~3배 증가한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239/}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 확대는 공급망 압박을 받는 중국에게 긍정적이긴 하나, 러시아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라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수입 제재

^{239/} "중국산 제품은 수년간 러시아 시장에서 낮은 품질과 저가 이미지로 인해 중고가의 소비재 부문에서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자의 대안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활용하여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박지원,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를 받고 있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중국상품의 수입이 물가와 공급망 안정에 긍정적이기에 중국상품의 러시아 시장점유율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러시아의 비교우위산업과 중·러 경제협력

러시아는 에너지(광물)와 방위산업에서 중국보다 비교우위를 보인다. <표 IV-7>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군수품 수출국이다.^{240/}

표 IV-7 세계 주요국의 군수품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15~2022년 |
|------|-------|-------|-------|-------|-------|-------|-------|-------|------------|
| 미국 | 9918 | 9769 | 11732 | 9674 | 10888 | 9426 | 10994 | 14515 | 86916 |
| 러시아 | 5927 | 6811 | 6199 | 7173 | 5627 | 3904 | 2857 | 2820 | 41318 |
| 프랑스 | 2263 | 2155 | 2355 | 1998 | 3612 | 2378 | 3853 | 3021 | 21635 |
| 중국 | 1800 | 2449 | 1617 | 1372 | 1585 | 704 | 1462 | 2017 | 13005 |
| 독일 | 1820 | 2529 | 1866 | 1106 | 1020 | 1172 | 938 | 1510 | 11961 |
| 영국 | 1177 | 1339 | 1117 | 683 | 910 | 625 | 656 | 1504 | 8010 |
| 이탈리아 | 687 | 621 | 717 | 539 | 384 | 848 | 1673 | 1825 | 7295 |

출처: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23.6.12.)를 참고하여 정리함.

<표 IV-8>은 러시아 군수품 주요 수입국의 수입량을 나타낸다. 중국은 인도 다음으로 러시아 군수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중국의 러시아 군수품 수입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40/} 2021년 수출량이 프랑스에 역전당하여 세계 3위였지만, 최근 10년간 누적 수출량은 프랑스의 2배 이상 많다.

표 IV-8 러시아 군수품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 2015~2022년 수입액 |
|-------|----------------|
| 인도 | 12397 |
| 중국 | 7625 |
| 알제리 | 4969 |
| 이집트 | 3378 |
| 베트남 | 2519 |
| 카자흐스탄 | 1639 |
| 이라크 | 1550 |

출처: 위의 자료.

러시아는 방위산업에서 전통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해왔지만, 중국의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우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예전처럼 중국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향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자체 생산이 어려운 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 - 전투기(Su-27, Su-35), 엔진, 방공 시스템(S-300, S-400) - 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고,^{241/}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도 중국에 서방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해군용 디젤 엔진, 군사 헬리콥터 부품 및 전자부품을 공급받는 실정이다.^{242/} 그

241/ "How Deep Are China-Russia Military Ties?" China Power, 2022.8.4., <<https://chinapower.csis.org/china-russia-military-cooperation-arms-sales-exercises/>> (검색일: 2023.4.27.); Andrea Kendall-Taylor and Nicholas Lokker, "Russia-China Defense Cooperatio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23.4.27.,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russia-china-relations>> (검색일: 2023.8.14.).

242/ Dmitry Gorenburg,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Trends in Russia-China Military Cooperation," Security Insights, no. 54 (2020), <<https://www.marshallcenter.org/en/publications/security-insights/emerging-strategic-partnership-trends-russia-china-military-cooperation-0>> (검색일: 2023.5.1.).

러나 중국의 러시아 군사 기술 무단 도용은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러시아는 최첨단 군사 장비와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려왔으나, 최근 중국은 노골적으로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이전받길 원하고 있어, 중러 간의 적극적인 군사 기술 협력은 미지수이다.^{243/}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가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이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산유국이자,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이다.^{244/}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0년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으며,^{245/}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에 원유를 집중적으로 수출하였다.^{246/}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2년 1월과 2월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일일 평균 수입은 170만 배럴이었고, 1년 뒤인 2023년 1월에는 230만 배럴로 증가하였다.^{247/}

243/ 위의 글.

244/ Worldometer, “Oil Production by Country,” <<https://www.worldometers.info/oil/oil-production-by-country/>> (검색일: 2023.6.9.); Jessica Aizarani, “Leading countries based on natural gas production in 2020,” Statista, 2023.5.15.,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4771/top-countries-based-on-natural-gas-production/>> (검색일: 2023.6.9.).

245/ Martin Armstrong, “Russia’s Most Important Oil Export Partners,” Statista, 2022.5.31., <<https://www.statista.com/chart/26999/russia-biggest-oil-export-partners/>> (검색일: 2023.6.12.).

246/ “러시아는 EU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중국으로 전환하면서 대체 수출처를 확보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은 에너지를 저가로 구매하거나 이를 다시 유럽, 한국, 일본, 태국 등에 재판매하면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박지원,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247/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ussian total oil exports, January 2022 – January 2023,” 2023.2.22.,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russian-total-oil-exports-january-2022-january-2023>> (검색일: 2023.6.12.).

그림 IV-1 중러 간 ‘시베리아 파워2’ 송유관



출처: “Mongolian Transit Of Power of Siberia 2 Pipeline Construction to Begin In 2024,” *Russia Briefing*, 2022.7.18.,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mongolian-transit-of-power-of-siberia-2-pipeline-construction-to-begin-in-2024.html/>> (검색일: 2023.5.24.).

〈그림 IV-1〉과 같이 오래전부터 중러 간 협의해오던 몽골을 거쳐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파워2(Power of Siberia 2 (PoS2))’ 송유관건설 계획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2024년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송유관이 건설되면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수출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드 스트림1 (NordStream1) 송유관으로 유럽에 전달되는 가스양(550억 입방미터/년)과 맞먹을 것으로 예상된다.^{248/}

에너지 산업에서 중러는 서로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커, 향후 양국의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48/} Szymczak Pat, “Russia Nears Pipeline Deal as Gas Exports to China Hit New Records,” *The Journal of Petroleum Technology*, 2023.4.3., <<https://jpt.spe.org/russia-nears-pipeline-deal-as-gas-exports-to-china-hit-new-records>> (검색일: 2023.5.2.); 张旺·柳玉鹏, “俄副总理: 通往中国的“西伯利亚力量-2”可取代“北溪-2,” 『环球时报』, 2022.12.17., <<https://world.huanqiu.com/article/49gUUD0pcjm>> (검색일: 2023.6.7.).

그러나 군수산업은 중국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양국 간 불신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가 아니라 협력의 강화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자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은 미국과의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은 산업별 비교우위 기반의 경제협력 외에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및 거버넌스), 군민양용 기술,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와 규범에서의 협력을 분석한다.

다. 그 외 협력 분야

중러는 산업별 비교우위 기반의 협력 외에도 사이버안보(및 거버넌스), 군민양용 기술,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와 규범에서도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상황과 특징을 고찰한다.

(1)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기술적인 협력보다 입장 공유와 상호 입장 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이버안보에서 비슷한 견해를 가지는 중·러는 ‘사이버 주권(Cyber Sovereignty)’을 주장하며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네트워크 발전과 관리는 타국의 간섭이나 방해로 일체 배제하며, 자주적인 관리 방식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이전과 서버와 저장장치

의 위치를 제한하며, 중국 내 수집, 생산 및 가공된 데이터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내에서 저장되어야 한다는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과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서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향후 미국의 공격적인 인터넷 차단을 대비하여 2019년 5월 「인터넷 주권법 (The Sovereign Internet Law)」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0년 확대되어 인터넷 인프라, 온라인 콘텐츠, 통신비밀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49/} 러시아는 2014년 7월 「비밀, 정보기술, 정보보안에 관한 법(Laws on Privacy,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을 개정하여 외국기업은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러시아 영토 내에 저장할 것을 규정하였다.^{250/}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지지해왔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예를 들어 중러는 2015년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관련 국제법 제정, 안보 인프라 건설, 합동 연구 및 훈련 등 15개 분야에서 국제정보보안 보장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고,^{251/} 2016년 모스크바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안보 포럼’을 개최하여 인터넷 규제와 사이버안보를 논의하였다.^{252/} 2018년 화웨이는 러시아 의회의 안보 위원회 위원과 중국 사

^{249/} Human Rights Watch, “Russia: Growing Internet Isolation, Control, Censorship,” 2020.6.18., <<https://www.hrw.org/news/2020/06/18/russia-growing-internet-isolation-control-censorship>> (검색일: 2023.6.18.).

^{250/} Justin Sherman, “Russia is weaponizing its data laws against foreign organizations,”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2.12.27., <<https://www.brookings.edu/articles/russia-is-weaponizing-its-data-laws-against-foreign-organizations/>> (검색일: 2023.7.18.).

^{251/}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operation in ensur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2015.4.30., <https://cyber-peace.org/wp-content/uploads/2013/05/RUS-CHN_CyberSecurityAgreement201504_InofficialTranslation.pdf> (검색일: 2023.7.18.).

이러한 부문 간부들 간의 교류를 주선하여 중러 간 서버 보안, 인터넷 주권 법, 정보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253/} 2022년 2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데이터보안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보호를 위한 통합된 글로벌 법적 수단 및 규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다.^{254/} 양국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2019년 11월, 유엔은 글로벌 사이버 범죄 조사를 위한 실무그룹 설립을 위해 ‘사이버 범죄 방지 협정’을 채택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로 이 협정은 채택되었다.^{255/} 중러 사이버 거버넌스와 규범에서의 협력은 향후 양국이 주도하는 반서방 사이버 생태계 형성에 핵심 규범을 제공할 것이고, 향후 글로벌 사우스의 사이버 거버넌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사이버안보 외에도 드론, AI, 차세대 이동통신, 로봇 등 군민양용 기술에서 중러의 협력을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252/ Yuxi Wei, “China-Russia Cybersecurity Cooperation: Working Towards Cyber-Sovereignty,” Henry M.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2016.6.21., <<https://jsis.washington.edu/people/yuxi-wei/>> (검색일: 2023.7.19.).

25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art Three: Huawei’s Role in the China-Russia Technological Partnership,” 2020.12.16., <<https://www.cfr.org/blog/part-three-huawei-role-china-russia-technological-partnership>> (검색일: 2023.7.19.).

254/ Russian 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2022.2.4.,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검색일: 2023.7.18.).

255/ 투표 결과 찬성 88표, 반대 54표, 기권 34표로 채택됨. Shannon Vavra, “The U.N. passed a resolution that gives Russia greater influence over internet norms,” *Cyberscoop*, 2019.11.18., <<https://cyberscoop.com/un-resolution-internet-cybercrime-global-norms/>> (검색일: 2023.7.20.).

(2) 군민양용 기술

중국과 러시아는 드론, AI, 차세대 이동통신, 로봇 등 군민양용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 방산기업인 Tecmash는 중국과 공동으로 정찰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였고,^{256/}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로 페도로브(Mykhailo Fedorov)는 2022년 3월 중국의 민간 드론업체인 DJI 제품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257/}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70개의 중국 수출기업이 1200만 달러에 달하는 드론 26종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258/} 그동안 의혹이 컸던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드론 협력의 가능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전장에서 무인 군사시설이 중요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표적인 군민 양용 기술인 AI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AI 선진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예측했을 정도로 러시아는 AI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가 제재로 관련 기술 및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259/} 2019년

256/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Chinese-Russian Military Cooperation Is Booming: Here’s What They Are Making,” 2020.4.4.,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chinese-russian-military-cooperation-booming-heres-what-they-are-making-140892>> (검색일: 2023.7.20.).

257/ Vita Spivak, “How Sanctions Have Changed the Face of Chinese Companies in Russ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3.5.18., <<https://carnegieendowment.org/politika/89785>> (검색일: 2023.7.13.).

258/ Paul Mozur, Aaron Krolik, and Keith Bradsher, “As War in Ukraine Grinds On, China Helps Refill Russian Drone Supplies,” *The New York Times*, 2023.3.21., <<https://www.nytimes.com/2023/03/21/business/russia-china-drones-ukraine-war.html>> (검색일: 2023.7.17.); Ashish Dangwal, “China Is ‘Officially’ Sending Drones To Russia; Getting Help ‘Unofficially’ From Kazakhstan, Pakistan & Belarus: NYT,” *The Eurasian Times*, 2023.3.22., <<https://www.eurasiantimes.com/china-supplied-drones-worth-millions-to-russia-since-it-invaded/>> (검색일: 2023.7.20.).

9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6차 연례 혁신 투자 포럼에서 중·러 벤처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AI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장에서 아군 간 소통은 전투 승패에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중요한 군민 양용 기술 중 하나이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화웨이는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이동통신 협력을 추진해 왔다. 화웨이는 2018년부터 러시아 주요 도시(모스크바, 세인트피터즈버그, 카잔, 노보시비르스크, 니즈니노브고로드)에 연구 센터를 설립하였고, 2019년 5월에 화웨이 혁신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019년 8월부터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업 빈플콤(Vimplecom)과 공동으로 러시아에서 5G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260/}

중러는 로봇 기술에서도 협력을 도모해왔다. 2017년 8월, 러시아 로봇 협회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 및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의

259/ 예를 들어 2019년 5월, 러시아 선도 AI, 안면 인식 기업 ‘엔텍랩(NtechLab)’과 중국 비디오 보안 솔루션 제조업체 ‘다화 테크놀로지(Dahua Technology)’는 안면 인식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카메라를 출시하였다. 화웨이는 러시아 신생 기업인 보코드(Vocord)사의 안면 인식, 비디오 감시 기술 특허를 획득하였고, 2020년 러시아 AI 인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10개 러시아 대학에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등 AI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Radina Gigova, “Who Vladimir Putin thinks will rule the world,” *CNN*, 2017.9.2., <<https://edition.cnn.com/2017/09/01/world/putin-artificial-intelligence-will-rule-world/index.html>> (검색일: 2023.7.13.); Samuel Bendett and Elsa Kania, “A new Sino-Russian high-tech partnership: Authoritarian innovation in an era of great-power rivalry,”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2019.10.29., <https://www.aspi.org.au/report/new-sino-russian-high-tech-partnership?__cf_chl_tk=nlsLFUvDAMil_avxYNlx_c6K7WLCbA3ki_t1JMIujos-1689836581-0-gaNycGzNCqU> (검색일: 2023.7.17.); Nivedita Kapoor, “Tech-tonic shift in Sino-Russian cooperation,”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1.5.12.,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tech-tonic-shift-in-sino-russian-cooperation/>> (검색일: 2023.7.14.); “Huawei, MIPT Establish Lab to Develop AI Tech,” *HPC Wire*, 2020.3.11., <<https://www.hpcwire.com/off-the-wire/huawei-mipt-establish-lab-to-develop-ai-tech/>> (검색일: 2023.7.13.).

260/ Samuel Bendett and Elsa Kania, “A new Sino-Russian high-tech partnership.”

지원을 받아 중국 로봇 산업 연맹 및 중국 전자학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0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하얼빈 공과대학과 러시아 연방 공과대학이 체결한 양자 협약에 참여하여 로봇 공학과 지능형 제조에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다. 러시아는 2018년 4월 최초로 산업 로봇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 참가한 중국 로봇 기술 기업과 협력을 논의하였다.^{261/}

군민양용 기술은 미중 전략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과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를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러의 군민양용 기술 협력 강화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양국 간 기술 격차로 인하여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기술, 러시아는 원자재와 시장을 제공한다면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3) 가치와 규범: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크다. 하지만 양국은 기후협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262/}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은 최

^{261/} 위의 글.

^{26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에 불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Thomas Colson, "Xi and Putin are snubbing the COP26 climate summit, even though China and Russia produce some 32% of global CO2 emissions," *Business Insider*, 2021.10.15., <<https://www.businessinsider.com/china-xi-and-russia-putin-snubbing-cop26-2021-10>> (검색일: 2023.7.31.); "COP26: Biden attacks China and Russia leaders for missing summit," *BBC*, 2021.11.2., <<https://www.bbc.com/news/world-59138578>> (검색일: 2023.7.26.).

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방 국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탄소피크’를 달성하고, 2060년에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263/} 2021년 10월 중국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국무원은 탄소중립에 관한 여러 행동 강령을 발표하였다.^{264/} 개혁개방 이래 중국에서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은 2019년 기준 127억 톤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26%이다.^{265/} 그러나 <표 IV-9>에 따르면 중국의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가 2005년에 비하여 2019년 258.51% 감소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266/}

263/ 国家节能中心, “努力推动实现碳达峰碳中和目标,” 2021.11.11., <https://www.ndrc.gov.cn/wsdwhfz/202111/t20211111_1303691_ext.html> (검색일: 2023.7.27.).

264/ 세부 목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의 65% 수준으로 감축, 1,200기가와트(GW) 전기 생산이 가능한 풍력, 태양열 발전 설비 건설,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사용 비율 25%까지 향상, 60억 세계공미터(m³) 삼림 조성이다. Gregor Erbach and Ulrich Jochheim, “China’s climate change policies State of play ahead of COP27,” European Parliament, 2022.10., p. 4,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8186/EPRS_BRI\(2022\)73818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8186/EPRS_BRI(2022)738186_EN.pdf)> (검색일: 2023.7.27.).

265/ 27개국으로 구성된 EU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인 것에 비하여 아주 많은 양이다. 중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이 2005년에 비하여 75%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배출량이 같은 기간 24% 증가하였고, EU의 배출량은 20% 감소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감축 성적이다. Gregor Erbach and Ulrich Jochheim, “China’s climate change policies State of play ahead of COP27,” European Parliament, 2022.10., p. 2,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8186/EPRS_BRI\(2022\)73818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8186/EPRS_BRI(2022)738186_EN.pdf)> (검색일: 2023.7.27.).

266/ 탄소집약도는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며, 중국의 탄소집약도 감소율은 같은 기간 글로벌 전체 (21.47%)와 EU(63.59%)의 감소량 약 4~12배이다. 위의 글.

표 IV-9 주요국의 탄소집약도 변화

| | 2005년 | 2019년 | 감소율 |
|-----|-------|-------|---------|
| 세계 | 690 | 568 | 21.47% |
| EU | 337 | 206 | 63.59% |
| 중국 | 3033 | 846 | 258.51% |
| 러시아 | 1966 | 1116 | 76.16% |

출처: Climate Watch, "National Context," <<https://www.climatewatchdata.org/>> (검색일: 2023. 8.1.); Gregor Erbach and Ulrich Jochheim, "China's climate change policies State of play ahead of COP27," European Parliament, 2022.10., p. 2,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8186/EPRS_BRI\(2022\)73818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8186/EPRS_BRI(2022)738186_EN.pdf)> (검색일: 2023.8.1.)를 참고하여 정리함.

러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67/} 러시아는 2019년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하였고,^{268/} 여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행정명령을 발효하였다. 2020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보다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본 법령은 온실가스 측정 방법과 제한 원칙에만 초점을 맞추고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모호하게 남겨두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269/} 2021년 8월에는 2030년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의 최소 10%를 전기차에 할당하겠다는 ‘전기차 생산 개발 개념’을 승인하였고, 9월에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목표로 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11월에 발표된 ‘2030년 운송전략’은 2030년까지 2017년 총

267/ <표 IV-9>를 보면 러시아의 탄소집약도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보다도 약 32% 높고, EU보다는 5배 이상 높다.

268/ "Russia formally joins Paris climate agreement," *Climate Home News*, 2019.9.23.,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19/09/23/russia-formally-joins-paris-climate-agreement/>> (검색일: 2023.7.28.).

269/ 민지영,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1-13, 2021.11.12.), p. 5, p. 11,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40000&bid=0005&list_no=9816&act=view> (검색일: 2023.7.27.).

배출량 대비 1.2%까지 운송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전기차, 저탄소 인프라 및 대체 연료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270/} 그러나 러시아의 주요 산업과 수출품이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인 만큼 기후변화 조치에 적극적인 참여나 큰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71/}

중국과 러시아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서 제한적인 협력을 해왔다. 2022년 9월 러시아 최초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기술과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술은 러시아에서 각광받고 있다. 러시아 자동차 기업 모스크비치(Moskvich)는 중국 전기차 기업과 기술 제휴를 추진하고 있고,^{272/}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중러는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국경 지역 환경보호에 협력해왔다. 양국은 국경 지역의 산, 습지, 강, 저수지의 동식물 공동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싱카이 호수, 썬장, 바구아 섬, 흥허의 4개 자연 보호구를 설치하였으며, 중국 동북 지역의 멸종위기 동물인 호랑이 보호에 합의하였다.^{273/} 2023년 3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발표한 「신시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

270/ "Russian Federation," The Climate Action Tracker, 2022.9.,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russian-federation/policies-action/>> (검색일: 2023.7.31.).

271/ "2019년 기준 석유·가스 부문은 러시아 GDP의 12.9%, 수출의 62.1%, 재정수입의 39.3%를 차지함." 위의 글, p. 7.

272/ Hongjian Yu, Xinxin Xiao, and Yahong Xie, "China, Russia continue expanding cooperation in green development," *People's Daily*, 2023.3.22., <<http://en.people.cn/n3/2023/0322/c90000-10225763.html>> (검색일: 2023.7.26.).

273/ Qiujiu Chen, "Sino-Rus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R-Economy*, vol. 5, no. 2 (2019), p. 65.

응을 위한 저탄소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후 프로젝트 시행에 협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목표, 원칙 및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274/} 중국과 러시아는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강한 협력 의지 속에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기후변화를 구실로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에 함께 반대하는데 연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정책, 전략을 공유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2022년 2월 4일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성명에 양측이 공유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정책, 전략이 잘 나타나 있다. 중·러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부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의 정부 참여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기능은 모든 국민의 이익, 의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275/}

양국은 민주주의 수립에 있어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는 각국의 사회·정치 체제, 역사, 전통, 문화에 기초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하며, 한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오직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타국에 자신만의 민주주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내정 간섭을 시도하거나, 혹은 그 기준에 따라 배타적인 동맹

274/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무역장벽 설치와 기후 의제의 정치화를 반대하고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23.3.22., <https://www.fmprc.gov.cn/zyxw/202303/t20230322_11046188.shtml> (검색일: 2023.8.2.).

275/ President of Russia,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2022.2.4.,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검색일: 2023.8.10.).

을 구축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76/}

중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매우 유사하고 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이 예상된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 기반의 전략을 펴고 있어, 중·러 간 가치 공유는 향후 ‘서방 대 중·러(혹은 글로벌 사우스)’로 진영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경쟁이 ‘신냉전’으로 발전할 경우 이러한 가치 공유는 중러 협력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다음은 중러의 경제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중러 경제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을 나누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러 경제협력은 한국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중 관계는 미중 공급망 경쟁과 연계되어 있어, 미국으로부터 공급망 압박을 받는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면서 이를 무기화할 수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과 같은 첨단기술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수출시장을 확보한 상황이다.^{277/}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최대 수출시장을 무기화하여

^{276/} 위의 글.

^{277/} 한국 10대 대중국 수출품 (2021년): 반도체, 합성수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광학기기, 화장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전보희·조익운,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1년 38호, 2021.12.8.), p. 8,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classification=1&no=2251>> (검색일: 2023.6.27.).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2023년 5월 28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 장관회의에서 중국 상무부 부장 왕 윈타오(王文濤)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논의하였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278/} 그러나 만약 중러 경제 협력이 배타적으로 추진되고,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중러 경제협력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중 관계는 2017년 ‘사드’ 배치 후 경색되었고, 미국이 대중국 공급망 견제를 강화할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한중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교역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양국 간의 정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상품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한국 상품 의존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그 자리를 중국상품들이 대체하고 있다. 향후 중러북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면 중러 간 호혜무역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중국상품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상품 점유율은 지속 감소할 것이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에너지 공급에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의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1년간 전 세계 3위로 많은 석탄과 7위로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였다.^{279/} 중러 경제협력을 통한 중러 간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

278/ 손일선·김정환, “언제는 경고만 날리더니…한국에 매달리는 중국, 왜?” 『매일경제』, 2023.5.28., <<https://www.mk.co.kr/news/economy/10747072>> (검색일: 2023.6.27.).

라인이 안정화된다면 한국은 중국을 통하여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를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국도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를 구입한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 차익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1990년대부터 ‘러시아-북한-한국’으로 이어지는 석유·천연가스관 건설 사업구상은 중러북 경제블록이 형성되더라도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있고,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280/}

중러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한은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러 경제협력 강화가 북한과의 경제협력까지 이어진다면, 중러와 같은 안정적 교역·투자 파트너를 획득하여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여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됨에 따라 북한이 국경봉쇄를 풀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이 재개되고 있다. 북한은 중·러와의 교역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제조업 상품을 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 식품 가공품(밀가루)과 에너지(휘발유, 디젤유, LPG(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고, 러시아는 전쟁 중 필요한 무기 등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281/} 한편 3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어도 북한은 중러에게 매력 있는 무역 상대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어, 북한은 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지를 통하여 경제적 보상을

279/ Sameer Khan, “List of countries that depend on Russian oil,” *Siasat Daily*, 2022.3.12., <<https://www.siasat.com/list-of-countries-that-depends-on-russian-oil-2289244/>> (검색일: 2023.3.7.); “한국, 러시아산 화석연료 ‘7조원대’ 수입…‘사실상 전쟁자금 지원,’” 『한겨레』, 2023.2.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1391.html>> (검색일: 2023.5.6.).

280/ 이기현·김장호·제성훈,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3.

281/ 장슬기, “북한, 러시아 내 무역 사무소 설립 준비 중·북·러 ‘밀착’ 확대,” 『Daily NK』, 2022.10.21., <<https://www.dailynk.com/20221021-6/>> (검색일: 2023.6.27.).

받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러로부터 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중러북 경제협력 심화는 그동안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을 촉진할 전망이다. 대략 5만~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했지만, 2017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유엔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 입국과 장기 거주가 제한되었다.^{282/} 2019년 러시아는 체류 기간이 지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강화하였다.^{283/} 유럽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비록 중러북 간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동시장 (common market)’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촉진되면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거주 제한이 완화되고 북한 노동자들은 좀 더 자유롭게 중국과 러시아에서 노동과 외화벌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중러북 경제긴밀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정승호)

이 절의 중러북 경제긴밀화와 북한경제에 대한 논의는 미중 공급망 재편 이슈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의 경로를 통해 중러북 삼자 간 또는

282/ 2017년 9월 11일 결의 제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하였고, 2017년 12월 22일 결의 제2397호는 북한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북한해외노동자,” 북한인권포털, <<https://unikorea.go.kr/nkhr/current/matters/worker/current/>> (검색일 2023.6.30.).

283/ “러, 불법 체류 北노동자 추방 강화... 안보리 결의 이행,” 『연합뉴스』, 2019. 12. 13., <https://www.ytn.co.kr/_ln/0104_201912131821324627> (검색일 2023.6.30.).

중/북, 러/북 양자 간의 경제관계가 강화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공급망 재편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고위기술 분야에 집중된 반면, 중러북 간의 경제긴밀화와 이에 대응한 북한경제의 참여는 주로 저위산업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절의 분석이 앞장의 분석 틀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경제는 2017년 이후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위기는 경제성장률과 무역액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2017년 이후 성장률은 2019년을 제외하고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무역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의 수출은 8,200만 달러, 수입은 6.3억 달러로, 경제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수출, 수입액 대비 각각 2.9%와 17%에 불과한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표 IV-10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액 추이

|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성장률 (%) | 3.9 | -3.5 | -4.1 | 0.4 | -4.5 | -0.1 |
| 수출액 (백만 달러) | 2,821 | 1,772 | 243 | 278 | 89 | 82 |
| 수입액 (백만 달러) | 3,710 | 3,778 | 2,601 | 2,967 | 774 | 631 |

출처: 한국은행,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2022.7.27.,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Id=10071883&menuNo=200690>> (검색일: 2023.10.25.); KOTRA, “2021년 북한대외무역동향,” 2022.7.3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530&CONTENTS_NO=1&bbsGbn=249&bbsSn=249&pNttSn=195519&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sSearchVal=> (검색일: 2023.10.25.).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 북한경제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러 간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존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

고 있다.^{284/}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통해 식량과 에너지의 지원을 확보하고, 양국으로부터 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틈타 다시 무역과 노동자 파견 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러시아와는 전쟁 물자 및 전후 복구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석유, 기계/설비, 과학기술 등을 제공받아 생산설비 보수 및 재건, 산업생산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85/}

북한의 공식 입장에서도 최근 미중 전략 경쟁구도를 ‘신냉전’ 구도로 인식하며, 이러한 정세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일례로,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식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의 주요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날 것”^{286/}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2023년 1월의 6차 확대전원회의 보고에서도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었다.”^{287/}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현 국제정세를 ‘한미일 대 중러북’ 냉전적 갈등구조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 안에서 중북, 러북관계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284/ 윤인주·채수란,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방안』 (부산: 해양수산개발원, 2022), pp. 91~96.

285/ 이영훈·최장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북한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북한학연구』, 제18권 2호 (2022), pp. 5~54.

28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1.9.30.

28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1.1.

을 시사한다.^{288/} 그러나, 중러 경제블럭화가 심화되고 여기에 북한 경제가 적극적으로 편입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은 단절되고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중러 경제블록 참여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은 중북, 러북 양자 경제관계의 최근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가능한 경제협력을 전망하여, 이러한 변화가 북한경제 및 남북통합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무역데이터와 언론기사를 기반한 GDELT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중북, 러북 간 양자관계의 최근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무역, 인력수출, 투자 등 경제협력분야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가능한 양자 또는 중러북 삼자 간의 경제협력의 전개 양상을 전망한다.

가. 최근 중북, 러북관계의 변화 분석

(1)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기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상대국이었다. 이것은 북한의 무역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의 상대국가별 수출입 장기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러시아(구소련)가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89/}

^{288/} 신중호, “2023년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대외환경,”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평화나눔센터 토론회 ‘2023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발표문, 2023.1.2.), p. 20, <<https://ksm.or.kr/?charity-project=download&uid=1954&mod=document&pageid=1>> (검색일: 2023.10.25.).

^{289/} 김민정·김다울, “북한 장기 수출입 데이터 재구축 및 분석 : 1962~2018년,”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제2023-9호, 2023.5.), pp. 42~44, <<https://www.>

표 IV-11 북한 대외무역에서 주요국의 비중 추이(1962~2018년)

(단위: %)

| 구분 | 시기 | 구소련 | 동유럽 | 중국 | 일본 | 한국 |
|----|----------|------|------|------|------|------|
| 수출 | 1962~69년 | 45.7 | 10.0 | 34.8 | 8.4 | - |
| | 1970~79년 | 39.0 | 13.1 | 29.1 | 12.0 | - |
| | 1980~89년 | 45.7 | 10.5 | 20.1 | 14.1 | 0.1 |
| | 1990~99년 | 10.2 | 5.1 | 13.8 | 34.6 | 18.7 |
| | 2000~09년 | 0.5 | 0.4 | 36.1 | 15.8 | 36.1 |
| | 2010~18년 | 0.2 | 0.1 | 74.7 | - | 20.6 |
| 수입 | 1962~69년 | 45.5 | 12.0 | 37.4 | 4.6 | - |
| | 1970~79년 | 40.1 | 12.4 | 26.8 | 16.4 | - |
| | 1980~89년 | 48.6 | 8.1 | 19.4 | 18.7 | 0.0 |
| | 1990~99년 | 14.9 | 3.8 | 43.3 | 18.7 | 4.8 |
| | 2000~09년 | 1.5 | 0.1 | 54.3 | 7.7 | 17.4 |
| | 2010~18년 | 0.8 | 0.0 | 80.9 | - | 14.8 |

참고: 구소련은 러시아 및 과거 소련 소속이었던 독립국가와의 교역 비중을 합산한 것임. 동유럽은 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 중 소련 소속이 아니었던 국가와의 교역 비중을 합산한 것임. 한국은 남북교역 중 상업적 거래(일반교역, 위탁가공무역, 상업적 경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교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출처: 김민정·김다을, “북한 장기 수출입 데이터 재구축 및 분석 : 1962~2018년.”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제2023-9호, 2023.5.), p. 42.

〈표 IV-11〉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상대 국가별 무역 비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인접한 국가 중 주요 무역 상대국이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 시기에는 무역의 대부분을 사회주의 진영 내 거래에 의존하였다. 1960년대 구소련, 동유럽, 중국이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합하면 90%를 상회하였고, 이 비중은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80년대까지도 70% 이상을 기록하였다. 특

bok.or.kr/portal/bbs/P0002454/view.do?nttId=10077401&menuNo=200431&pageIndex=1) (검색일: 2023.10.25.).

히 구소련 국가와의 교역은 같은 기간 수출입 모두 4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남북 및 북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한과 일본이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사회주의 진영 내의 무역, 특히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무역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일북 간의 남북자 문제 협상 결렬,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일본의 대북제재가 시작되면서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한국 및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6년 4차 핵실험 등의 여파로 남북교역 역시 단계적으로 중단되면서,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중국 일변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0년대 들어서는 수출입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무역 이외의 경로로 러북 간의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중반 추진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관련 대북 투자나, 최근까지도 북한의 중요한 외화수입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지역 파견 근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최근 시기의 중북, 러북 간의 무역 동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외부 충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표 IV-12>는 2016~2017년 채택된 5차례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무역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존의 대북제재와는 달리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대외무역에 포괄적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

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제2321호에서 민생 목적 거래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석탄, 철광석, 섬유제품, 수산물에 대한 대북 수입 금지 조치와 산업용 기계, 전기제품 수출 금지 등이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표 IV-12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무역 분야 주요 내용

| 유엔 안보리 결의안 | 배경 (채택일) | 주요 내용 |
|------------|----------------------------|---|
| 제2270호 | 4차 핵실험 (2016.3.7.) | - 석탄, 철(광석), 금, 희토류 수입 금지 (민생용 예외 조항) |
| 제2321호 | 5차 핵실험 (2016.11.30.) | - 석탄 수입 상한선 설정 (4억 달러, 750만 톤 중 적은 쪽) - 은, 동, 니켈 수입 금지 |
| 제2371호 | 화성-14형 발사 (2017.8.5.) | - 석탄, 철(광석), 납(광석), 수산물 수입 금지 |
| 제2375호 | 6차 핵실험 (2017.9.12.) | - 섬유 제품 수입 금지 - 원유 수출량 동결, 정유 제품 수출량 상한선 (200만 배럴) 설정 |
| 제2397호 | 화성-15형 발사 (2017.12.23.) | - 수입 금지: 식용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 정유제품 상한 축소(200만→50만 배럴) - 수출 금지: 산업용 기계, 전자제품, 운송 차량, 철강 제품 등 |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16-131호),” 2016.3.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16-859호),” 2016.11.3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17-442호),” 2017.8.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17-537호),” 2017.9.1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17-882),” 2017.12.23., <<https://www.mofa.go.kr>> (검색일: 2023.9.25.).

〈표 IV-13〉은 2016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16년 58.3억 달러(수출 26.3억, 수입 31.9억 달러)에 달하였던 대중국 무역 규모는 대북제재 강화 이후 3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절반 수준인 28.0억 달러(수출 2.1억, 수입 25.9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이 시작된 후 북한은 국경 통행을 차단하고 대부분의 인적/물적 대외교류를 중단하였으며, 그 여파로 북한의 대중무역은 재차 큰 폭 감소하여 2021년에는 2019년의 11%에 불과한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이렇듯 강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19는 중북무역에 누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그 양상은 수출과 수입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2017~2019년 중 강화된 대북제재는 수입보다는 수출에 집중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6년 대비 1/10 미만으로 축소된 반면 수입은 80% 이상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였다. 이는 광물, 의류, 수산물 등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이 유엔 대북제재의 거래 금지 항목에 포함된 반면, 수입의 경우 기계류, 전자제품, 운송 차량, 철강제품 등 중공업 제품에 한정하여 거래가 금지되었고, 식량, 생필품, 경공업 제품 등은 대북제재의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표 IV-13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2016~2023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²⁾ | |
|------------------|---------------|--------|---------|---------|--------|---------|---------|--------------------|--------|
| 수출입 | 금액(백만달러) | 5,826 | 4,979 | 2,412 | 2,797 | 538 | 319 | 1,030 | 1,060 |
| | 증가율(%) | (7.3) | (-14.5) | (-51.6) | (16.0) | (-80.8) | (-40.7) | (223) | (210) |
| | 지수(2019년=100) | [208] | [178] | [86.2] | [100] | [19.2] | [11.4] | [36.8] | [84.8] |
| 수출 | 금액(백만달러) | 2,634 | 1,651 | 195 | 209 | 47.9 | 57.9 | 134 | 135 |
| | 증가율(%) | (6.1) | (-37.3) | (-88.2) | (7.2) | (-77) | (20.7) | (132) | (275) |
| | 지수(2019년=100) | [1263] | [792] | [93.3] | [100] | [23.0] | [27.8] | [64.5] | [129] |
| 수입 ¹⁾ | 금액(백만달러) | 3,192 | 3,328 | 2,217 | 2,589 | 490 | 261 | 895 | 925 |
| | 증가율(%) | (8.3) | (4.3) | (-33.4) | (16.8) | (-81.1) | (-46.7) | (243) | (203) |
| | 지수(2019년=100) | [123] | [129] | [85.6] | [100] | [18.9] | [10.1] | [34.6] | [80.8] |

참고: 1) 2014년 이후 북한의 대중 원유수입은 거래 규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외함.

2) 2023년은 상반기 값이며, 증가율 및 지수도 각 해의 상반기 대비 계산한 것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검색일: 2023.9.1.).

2022년 들어서는 코로나19의 북한 내 대규모 확산과 퇴조를 거치면서 북한의 비상방역조치도 하향 조정되었다.^{290/} 이에 따라 대중 무역도 회복의 조짐을 보여 수출(1.34억 달러)과 수입(8.95억 달러) 모두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2023년 상반기에도 회복세가 이어져 북한의 대중 수입은 9.25억 달러, 수출은 1.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03%, 275%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 동기 수준을 넘어선 것이며 수입은 2019년 동기대비 80%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다. 다만, 이는 대북제재 강화 이전인 2016년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이며, 특히 수출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회복세만으로 북한경제 전체에 유의

^{290/} 2022년 8월 10일 개최된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신종 악성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전에서 승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2.8.11.

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IV-14〉와 〈표 IV-15〉는 최근 북한의 대중 수출입에서 주로 거래되는 품목의 변화와 집중도를 보여준다. 〈표 IV-14〉에 나타난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까지는 무연탄, 철광 등 광물과 남녀 의류, 수산물을 주로 수출하다가 제재 이후 이러한 품목들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다른 품목들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시계 무브먼트, 가발 등 경공업 제품과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등 비(非) 제재 대상 광물제품, 접경지역 송전시설을 통해 수출하는 전기에너지 등이 대표적인 품목들이며, 2023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품목들이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14〉에 나타난 대중 수출의 특징은 소수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대북제재 이전에도 이미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이 80% 수준에 달하였는데,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면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 수가 크게 축소되면서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의 회복 국면에서도 거래 품목 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도 95~96%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즉, 최근의 수출 회복은 코로나19 이전 거래되던 품목 중에서도 매우 소수의 품목에 한정되며 상당수의 품목은 여전히 거래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표 IV-14 최근 북한의 10대 수출 품목 변화

(분류 기준: HS4)

| | 2016년 | 2019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상) |
|-----------|-------|---------|--------|---------|-----------|
| 1 | 석탄 | 시계 무브먼트 | 합금철 | 텅스텐광 | 가발, 가수염 |
| 2 | 남성 슈트 | 합금철 | 전기에너지 | 합금철 | 합금철 |
| 3 | 남성 코트 | 가발, 가수염 | 시계 | 전기에너지 | 텅스텐광 |
| 4 | 오징어 | 전시용모형 | 견 생사 | 몰리브덴광 | 전기에너지 |
| 5 | 여성 코트 | 텅스텐광 | 감자분말 | 가발, 가수염 | 유리(무가공) |
| 6 | 여성 슈트 | 전기에너지 | 칼륨 비료 | 견 생사 | 탄화물 |
| 7 | 철광 | 몰리브덴광 | 탄화물 | 유리(무가공) | 몰리브덴광 |
| 8 | 납광 | 신발 깔창 | 견 웨이스트 | 탄화물 | 견 생사 |
| 9 | 아연광 | 운동 용품 | 텅스텐광 | 견 웨이스트 | 잉곳(ingot) |
| 10 | 건과류 | 유리(무가공) | 관악기 | 시계 무브먼트 | 시계 무브먼트 |
| 총 품목 수 | 287 | 119 | 37 | 49 | 52 |
| 상위 10개 비중 | 79.5% | 87.9% | 98.9% | 96.2% | 95.1% |

출처: 위의 자료.

한편 수입의 경우 대북제재 이전까지 대규모로 수입되던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제품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수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시계 부품 등 경공업 중간재와 식용유, 밀가루 등 생필품이 주를 이루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의약품)과 농업생산 관련 품목(비료) 등이 주 수입품으로 부상하였다.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시기 주요 수입품목이었던 생필품과 경공업 중간재 수입이 회복세를 주도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2023년 상반기 최대 수출품인 가발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인모가 같은 시기 역시 최대 수입품으로 자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 이전 섬유 의류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임가공 무역이 최근 인모,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입에서도 역시 코로나19 이후 거

래 품목 수 감소와 집중도 상승 현상이 관찰되는데, 상위 10개 품목 비중이 40% 내외로 수출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낮다.

표 IV-15 최근 북한의 10대 수입 품목 변화(2016~2022년)

(분류 기준: HS4)

| | 2016년 | 2019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상) |
|--------------|-----------------|-----------------|-------------------|-----------------|-----------------|
| 1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 의약품 | 콩기름 | 인모 |
| 2 | 화물차 | 콩기름 | 제조담배 | 고무타이어 | 광물성 비료 |
| 3 | 정제유 | 쌀 | 고무타이어 | 의약품 | 쌀 |
| 4 | 콩기름 | 시계 부품 | 광물성 비료 | 쌀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
| 5 | 사과, 배 | 밀가루 | 질소비료 |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
| 6 | 전화기 |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 천연고무 | 플라스틱 판, 시트 | 콩기름 |
| 7 | 모니터 | 의약품 | 에틸렌 중합체 (1차산품)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 의약품 |
| 8 | 컴퓨터 | 도자기타일 | 플라스틱 판, 시트 | 설탕 (그래뉴당) | 설탕 (그래뉴당) |
| 9 | 고무타이어 | 기타 가구 | 탄산염 | 제조담배 | 고무타이어 |
| 10 |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 고무타이어 | 콩기름 | 플라스틱 바닥재 | 제조담배 |
| 총 품목 수 | 914 | 762 | 257 | 504 | 557 |
| 상위 10개 비중 | 29.1% | 28.6% | 45.2% | 37.6% | 42.3% |

참고: 거래 규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원유 수입은 제외한 순위.

출처: 위의 자료.

북한의 대중수입 구조변화를 좀 더 체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표 IV-16>에서는 대중 수입액을 가공단계별로 합산하여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 보았다. 분류 기준으로는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을 활용하였다. 2018~2019년 가공단계

별 수입액의 변화 양상을 보면 대북제재의 영향이 주로 자본재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북한의 대중 자본재 수입액은 2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94.5%나 급락한데 이어 2019년에도 재차 11.2% 감소하였다. 반면, 자본재를 제외한 대중 수입은 2018년 중 소폭 감소한 뒤 2019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2021년 중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여파로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 역시 큰 영향을 받았고 소비재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간재의 경우 주택 바닥재, 비료 등 국가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재화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후 회복 국면에서는 모든 분류의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 확대로 주민생활과 경공업 생산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규모가 워낙 미미했던 자본재 수입은 아직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IV-16 가공단계별 분류(BEC)에 따른 북한의 대중 수입(2016~2022년)

(단위: 백만 달러, %)

| 분류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원자재 | 44 (-2.8) | 64 (44.2) | 52 (-18.2) | 73 (40.9) | 15 (-80.3) | 24 (66.7) | 26 (7.9) |
| 중간재 | 1,623 (7.5) | 1,718 (5.8) | 1,269 (-26.1) | 1,476 (16.3) | 269 (-81.8) | 168 (-37.7) | 544 (224) |
| 자본재 | 596 (5.2) | 501 (-16.0) | 27 (-94.5) | 24 (-11.2) | 5.4 (-77.1) | 0.5 (-91.4) | 6.2 (1,215) |
| 소비재 | 903 (14.0) | 1,028 (13.8) | 866 (-15.7) | 1,011 (16.7) | 201 (-80.1) | 69 (-65.6) | 315 (356) |

참고: ()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변화율을 나타냄.

출처: 위의 자료.

다음으로 <표 IV-17>은 2016년 이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을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대러시아 무역은 대중국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워낙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그나마도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19 여파로 급감한 형국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산한 대러시아 무역총액은 2016년 72백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2/3 수준인 49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직전 해와 비슷한 무역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2021년에는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표 IV-17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2016~2021년)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수출입 | | | | | | |
| 금액(백만달러) | 72.1 | 78.1 | 34.2 | 49.4 | 43.2 | 0.0 |
| 증가율(%) | (-8.5) | (8.3) | (-56.3) | (44.7) | (-12.6) | (-99.9) |
| 지수(2019년=100) | [146] | [158.1] | [69.1] | [100] | [87.4] | [0.1] |
| 수출 | | | | | | |
| 금액(백만달러) | 4.2 | 3.9 | 2.0 | 3.0 | 0.7 | 0.0 |
| 증가율(%) | (640.4) | (-6.8) | (-49.3) | (51.3) | (-76.5) | (-94.2) |
| 지수(2019년=100) | [139.7] | [130.3] | [66.1] | [100] | [23.5] | [1.4] |
| 수입 | | | | | | |
| 금액(백만달러) | 67.9 | 74.2 | 32.2 | 46.4 | 42.5 | - |
| 증가율(%) | (-13.3) | (9.3) | (-56.7) | (44.3) | (-8.4) | (-100) |
| 지수(2019년=100) | [146.4] | [160.0] | [69.3] | [100] | [91.6]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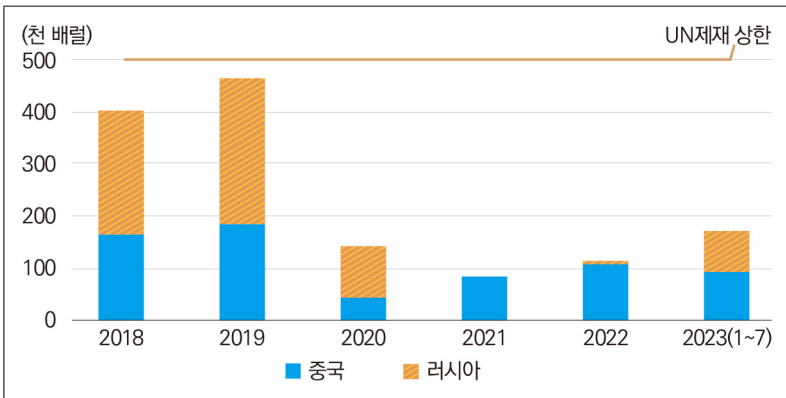
참고: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무역자료는 입수되지 않고 있어 2021년까지의 자료만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러시아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ruts/RutstempImpExpList.screen>> (검색일: 2023.6.11.).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말부터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북-러 간 무역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UN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12월 대북 정제유 공급을 재개하여 2023년 7월까지 총 8.3만 배럴(1.0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291/} <그림 IV-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북 정제유 수출 상한선(50만 배럴)이 도입된 이후 러시아는 2018년과 2019년 중 각각 24.1만 배럴, 27.7만 배럴을 수출하여 상한의 절반가량을 감당한 바 있다. 만약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수출량이 더욱 증가한다면 2023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정제유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IV-2 최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2018~2023년)

(단위: 천 배럴)



출처: UN Security Council Security, “Supply, sale or transfer of all refined petroleum products to the DPRK,”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검색일: 2023.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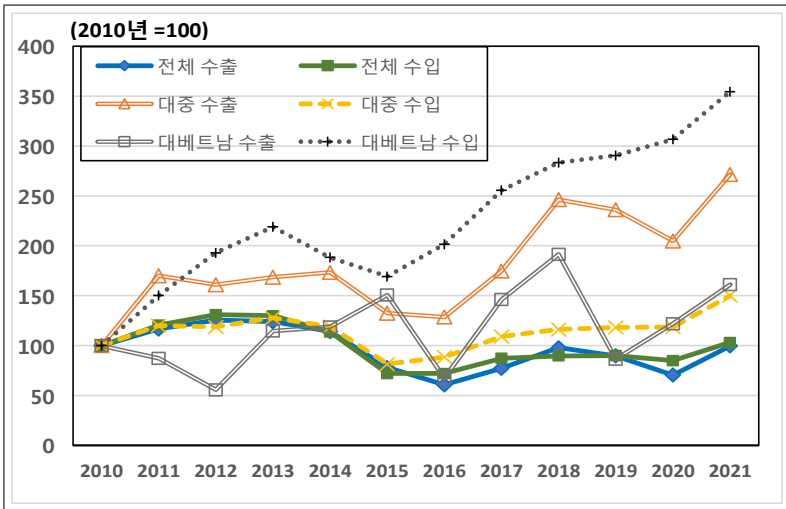
향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교류 확장 잠재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무역 동향, 특히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무역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V-3>은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전체 수출입 및 대중국, 대베트남

^{291/} UN Security Council Security, “Supply, sale or transfer of all refined petroleum products to the DPRK,”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검색일: 2023.9.14.).

수출입 규모 변화를 보여준다. 실질 기준으로 볼 때, 2010년대 러시아의 전체 수출입 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친러 우크라이나 반군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발효되면서 2015년 이래로는 수출입이 모두 2010년 수준을 밑돌았으며, 2021년에서야 비로소 2010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중국, 대베트남 무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 기준 대중 수출이 2010년의 2.7배, 대베트남 수입이 2010년의 3.5배로 성장하며 같은 기간 서방세계와의 교역량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 러시아의 실질 수출입 규모 추이(2010~2021년)

(단위: 2010년=100)



참고 : 미국의 CPI(기준연도 1982~84년) 연도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실질화한 뒤, 2010년 값을 기준(100)으로 지수화하였음.

출처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무역통계”;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 “CPI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1982=84=100 (Unadjusted),” <<https://data.bls.gov/cgi-bin/survey/most?bls>> (검색일: 2023.9.24).

〈표 IV-18〉는 2021년 기준 러시아의 주요 무역 거래 품목을 제시한다. 주지하듯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광물자원과 금, 알루미늄, 철강 등 금속 제품 등이다. 식량이나 목재 등의 수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보다는 천연자원 기반의 원자재 수출이 주를 이룬다. 이는 대중국, 대베트남 수출에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며, 대베트남 수출에서는 육류와 비료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수입에서는 전화기, 컴퓨터, 차량 관련 제품 등 전자제품과 기계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에서도 이러한 전자, 기계류 수입이 주를 이루며, 대베트남 수입에서는 전자제품과 함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러시아의 2021년 주요 수출입 품목

(분류 기준: HS4)

| | 수출 | | | 수입 | | |
|---|--------|---------------|------------------------------------|-------|-------------|---------------|
| | 전체 | 대중국 | 대베트남 | 전체 | 대중국 | 대베트남 |
| 1 | 원유 | 원유 | 철강 평판 압연제품 | 전화기 | 전화기 | 전화기 |
| 2 | 정제유 | 정제유 | 철광 | 차량부속품 | 컴퓨터 | 라디오/TV 부분품 |
| 3 | 석탄 | 석탄 | 돼지고기 | 의약품 | 차량부속품 | 전자집적 회로 |
| 4 | 금 | 제재목 | 다공성 철제품 (철광석 환원 제조 제품) | 승용차 | 가열 기기 | 섬유 신발 |
| 5 | 알루미늄 과 | 터보제트, 프로펠러 | 칼륨 비료 | 컴퓨터 | 전기가열식 기기 | 커피 |

| | 수출 | | | 수입 | | |
|----|--------|-------------|--------------|-------------------|-------------------|-----------------------|
| | 전체 | 대중국 | 대베트남 | 전체 | 대중국 | 대베트남 |
| 6 | 철강 반제품 | 석유 가스 | 광물성 비료, 화학비료 | 수송용 선박 | 완구류 (자전거, 자동차류) | 프린터/복사기 |
| 7 | 석유 가스 | 정제 구리, 구리합금 | 터보제트, 프로펠러 | 가열 기기 | 라디오/TV 부분품 | 마이크, 스피커(헤드폰, 이어폰 포함) |
| 8 | 백금 | 철광 | 식용 설육 | 면역혈청 (백신 등) | 자주식 토목 장비 (불도저 등) | 가족 신발 |
| 9 | 밀 | 구리광 | 조제 식료품 | 자주식 토목 장비 (불도저 등) | TV 수신기 | 진공청소기 |
| 10 | 제재목 | 화학목재 펄프 | 알루미늄 고 | 탭, 코크, 밸브 | 수지식 공구 | 컴퓨터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무역통계.”

이를 북한과의 교역 관계에 적용하자면, 향후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은 석유제품, 식량 등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와 식량은 북한의 경제적 내구력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여겨진다. 해당 부문에서 대규모 수출이 가능한 러시아의 존재는 향후 북한의 ‘버티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진영 간 경쟁 구도가 지속될 경우 최근까지 주로 서해상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 간 진행되어 온 해상환적 등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의 거래가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타 소비재, 중간재 등 제조업 품목들은 러시아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운송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러북 간 거래가 발생할 유인이 크지 않다. 한편,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은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에 의해 제한되는 측

면이 크다. 게다가 중북무역과 달리 러북무역에서는 러시아의 수요에 맞는 북한의 수출 가능 품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부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직접 무역보다는 오히려 중국과의 임가공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확대는 매우 불균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북한은 러시아의 수요가 큰 품목에 대해 수출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상품 수출 외에는 인력 파견, 비공식 무기 수출 등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수요가 발생한 것이어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 GDELT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이 소절에서는 GDELT데이터에 나타난 중북, 러북관계의 최근 변화를 분석한다.^{292/} GDELT의 이벤트데이터는 언론기사에 등장하는 이벤트를 행위자(Actor1)와 대상자(Actor2)로 구분하여, 그 이벤트의 성격 및 두 행위자 관계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GDELT 데이터 중 주로 CAMEO(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s) 사건분류, Goldstein Scale, 어조지수(Average Tone) 등을 이용하여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CAMEO 분류체계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분류하는

^{292/} 본 연구에서는 GDELT Event Database 버전 1.0과 2.0(Global Knowledge Graph: GKG) 중 최신버전인 2.0버전을 사용하였다. 참고 버전 1.0은 데이터 빈도가 매일 업데이트되는 데 비해, 버전 2.0은 1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된다.

체계로서, 현재 GDELT에서 사용하는 것은 슈로트(Philip Schrodtt)가 고안한 버전이다.^{293/} CAMEO 체계에서는 사건을 2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290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또한 GDELT의 QuadClass 변수는 이를 단순화하여 구두 협력(verbal cooperation),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구두 위협(verbal threat), 실제적 위협(material conflict)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인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QuadClass 변수를 기초로 이벤트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세부적인 CAMEO 이벤트코드에 따른 분석도 병행한다.

개별 이벤트의 긍정과 부정의 정도는 Goldstein Scale, 어조지수(Average Tone)로 측정할 수 있다. Goldstein Scale은 CAMEO 개별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10에서 10사이의 값을 부여한다. 0은 중립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부정적인(위협적) 사건을 반대의 경우는 긍정적(협력적)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대량살상 무기의 사용(CAMEO Event Code: 204)’은 -10의 값을 갖지만, ‘경제원조의 제공(CAMEO Event Code: 071)’은 7.4의 값이 부여된다. 어조지수 역시 Goldstein Scale와 유사하게 보통 -10에서 10의 값을 갖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기사에 포함된 긍정단어의 비중에서 부정단어의 비중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두 수치가 항상 일치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어조지수는 그 이벤트에 대한 언론사의 시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이벤트가 CAMEO 사건분류에서 협력적인 사건으로 분류되면 Goldstein Scale은 양의 값을 갖게 되지만, 언론사에서 이 이벤트를

^{293/} Philip A Schrodtt, "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 (CAMEO) Event and Actor Codeboo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12, <<http://data.gdeltproject.org/documentation/CAMEO.Manual.1.1b3.pdf>> (검색일: 2023.10.25.).

기사로 다룰 때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포함하게 되면 어조지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294/} 따라서 본 절에서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된 어조지수보다 그 사건을 객관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Goldstein Scale을 분석에 사용하도록 한다.

〈표 IV-19〉는 2016년 1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중북, 러북관계 GDELT 데이터의 요약통계량을 보여준다. 중북관계의 이벤트 개수가 러북관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북관계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이 러북관계에 비해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벤트의 숫자는 GDELT 데이터의 원자료가 영문기사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미권 언론의 반영 비중이 아시아권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분석기간의 Goldstein Scale 평균은 모든 조합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즉, 중북, 러북관계에서 협력적인 이벤트가 위협적 이벤트에 비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북한→러시아’ 지수가 1.3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IV-19 중북, 러북관계 GDELT 데이터 요약통계량

| | 행위자→대상자 | 이벤트 개수 | Goldstein Scale 평균 |
|------|---------|---------|--------------------|
| 중북관계 | 중국→북한 | 152,938 | 0.75 |
| | 북한→중국 | 105,787 | 1.08 |
| 러북관계 | 러시아→북한 | 60,153 | 0.93 |
| | 북한→러시아 | 43,498 | 1.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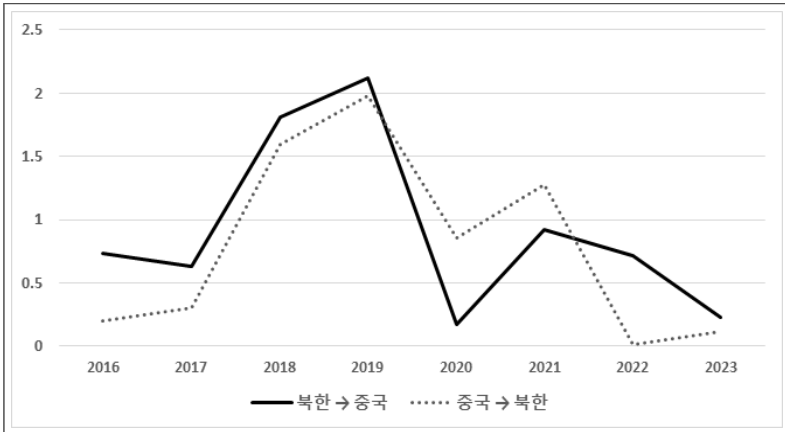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94/} 박성준,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 Foresight 6호, 2021.11.25.), p. 8, <<https://nafi.re.kr/english/report.do?mode=download&articleNo=3334&attachNo=4045>> (검색일: 2023.10.25.).

(가) 중북관계

〈그림 IV-4〉은 Goldstein Sacle로 추정된 중북관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선은 행위국을 북한으로 대상국을 중국으로 설정하였을 때 추이를 보여주고, 점선은 그 반대 방향을 나타낸다. 두 방향의 지수 모두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지만, ‘북한→중국’ 지수의 등락폭이 다소 크게 나타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이 집중되었던 2016~2017년 중에는 양방향 지수가 모두 낮게 나왔는데, 특히, ‘중국→북한’ 지수가 더 낮은 추세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차례의 중북정상회담으로 중북 간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던 2018~2019년 사이에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북 국경이 봉쇄되면서 지수는 양방향 모두에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특히 ‘북한→중국’ 지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의 양방향 지수의 일시적인 상승이 관찰되는데, 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과 같은 국가기념일을 전후하여 중국 주도로 협력적 이벤트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양방향 지수가 중립인 ‘0’으로 수렴하며 낮은 추세를 이어갔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실험이 이어지면서, 협력적 이벤트 추진을 제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IV-4 중북 간 Goldstein Scale 연도별 평균 추이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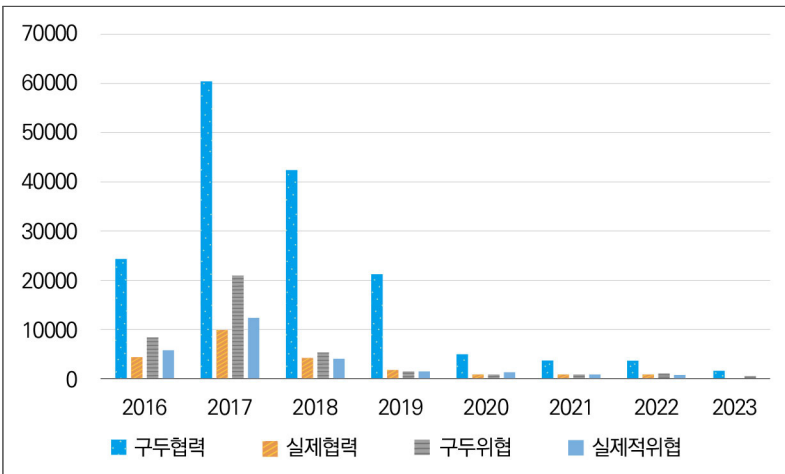
〈그림 IV-5〉는 이벤트 유형의 QuadClass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이벤트 개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유형별 이벤트의 추이는 행위자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방향 모두에서 비슷한 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이로 인한 유엔 경제제재 결의 채택이 반복되었던 2016~2017년 기간에는 ‘구두협력’, ‘구두위협’ 이벤트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양국 간 정상회담 등 고위급 인적교류가 활발히되었던 2018~2019년 기간에는 주로 ‘구두협력’이 전체 이벤트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020년 국경이 봉쇄 이후로는 전체 이벤트 개수가 10,000개 이하로 축소된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22년 8발의 ICBM을 발사하는 등 북한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았음에도 ‘구두위협’ 등 경제제재와 관련된 이벤트는 2016~2017년에 비해 매우 낮은 빈도로만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에는 북한이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

추가 제재하도록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이 있다.^{295/} 그러나 2022년 5월에 연속적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중·러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다. <그림 IV-5>의 2022년 이후 이벤트 추이는 미중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5 이벤트 유형별 중복 간 개수의 변화 추이(QuadClass 기준)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0>은 대부분류인 Quad Class의 개별 카테고리별 세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류별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3가지 이벤트의 CAMEO 코드와 그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비중

^{295/} 가장 최근인 2017년에 채택된 유엔대북제재결의(Resolution 2397)의 2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the DPRK conducts a further nuclear test or a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system capable of reaching intercontinental ranges or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ballistic missile system capable of such ranges, then the Security Council will take action to restrict further the export to the DPRK of petroleum.” UN Security Council, S/R ES/2397 (2017).

을 차지하는 구두협력은 앞서 설명하였던 것 같이, 주요 고위급 방문과 관련된 ‘042 상의하다’, ‘042 방문하다’, ‘043 방문을 주최하다’ 등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실질적 협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061 경제적으로 협력하다’였다. ‘080 양보하다’는 주로 핵위기가 고조되었던 2017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구두 위협 및 실제적 위협과 관련된 이벤트는 2016~2017년에 집중되었는데, 주로 유엔 제재결의 채택과 관련된 ‘130 위협하다’, ‘163, 172 제재를 가하다’ 등의 이벤트가 포함되었다.

표 IV-20 중복 간 사건유형별 주요 CAMEO 이벤트 코드와 개수

| QuadClass 분류 | CAMEO 이벤트 코드 | 개수 |
|--------------|---|--------------|
| 구두 협력 | 040 상의하다(consult) | 22,538 |
| | 042 방문하다(make a visit) | 21,095 |
| | 043 방문을 주최하다(host a visit) | 17,982 |
| 실제적 협력 | 061 경제적으로 협력하다(Cooperate economically) | 8,645 |
| | 080 양보하다(Yield) | 3,989 |
| | 060 실질적으로 협력하다 (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 2,544 |
| 구두 위협 | 130 위협하다(Threaten) | 6,936 |
| | 100 요구하다(Demand) | 6,253 |
| | 111 비난하다(Criticize or denounce) | 6,118 |
| 실제적 위협 | 163 금수조치, 제재를 가하다 (Impose embargo, boycott, or sanctions_) | 6,902 |
| | 172 행정적 제재를 가하다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 3,278 |
| | 190 전통적 군사력을 사용하다 (Us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 3,2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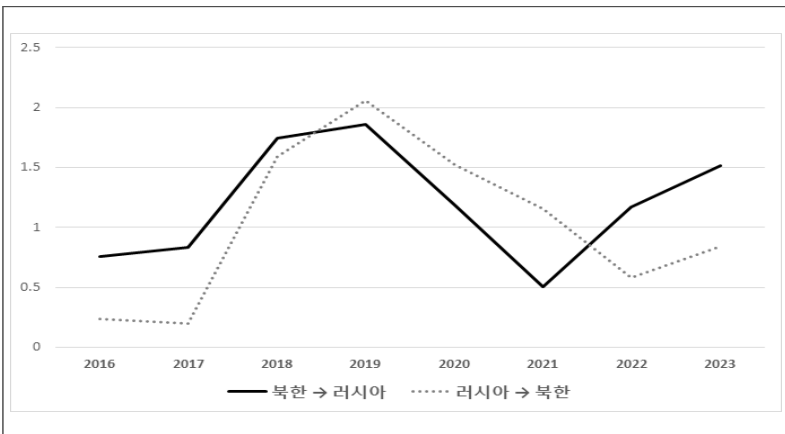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러북관계

〈그림 IV-6〉은 Goldstein Scale로 추정한 러북관계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인 추이는 앞서 살펴본 중북관계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많았던 2016~2017년 기간에는 낮은 지수에 머물러 있다가, ‘2019년 북러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정점을 찍고, 2020년 국경봉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러북관계와 중북관계 간 가장 큰 차이는 2022년 이후 시점이다. 중북관계는 양방향 모두에서 하락했지만, 러북관계 지수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점이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관계를 협력적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러시아’방향의 지수 상승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북한 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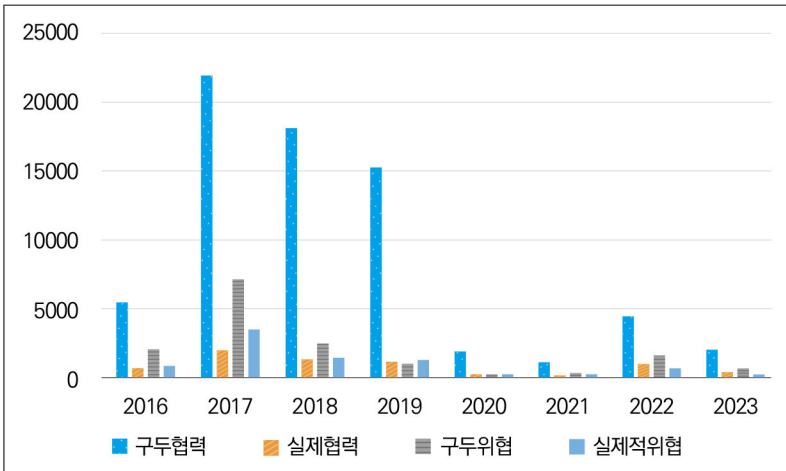
그림 IV-6 러북 간 Goldstein Scale 연도별 평균 추이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2년 이후 러북 간 협력적 관계의 회복은 <그림 IV-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러북관계 역시 중북관계와 유사하게 2020년 국경 봉쇄 이후 이벤트 개수가 급감한다. 그러나 앞서 Goldstein Sacle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 이후에는 구두 협력 이벤트의 뚜렷한 회복세가 관찰된다. 2023년 데이터에는 6월까지 발생한 이벤트만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의 회복세는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7 러북 간 유형별 이벤트 개수의 변화 추이(QuadClass)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러북 간의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의 세부적 내역은 대부분 중북 이벤트와 유사하다. 다만, 특정한 것은 구두 협력 범주에서 ‘046 협상하다’가 포함된 것이다. 중북협력이 방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러북협력은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상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의 고위

급 협의체인 ‘북러 통상경제, 과학기술 협력위원회’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로는 2018년 3월에 제8차 회의가, 2019년 3월 제 9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들 회의에서는 러북 간 경제, 무역, 과학기술 협력방안, 러시아 루블화 결제 시스템 구축,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들이 논의된 바 있다.^{296/}

특히 최근 러북 간에는 경제협력과 함께 군사협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존에도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2023년 9월 북러정상회담 및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그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우주기지, 전투기 공장, 군사기지 등을 방문하였으나, 경협 관련 일정은 방러 마지막 날 식품 공장 방문이 유일하였다.^{297/} 이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탄약 및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은 우주항공 및 군사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 양국의 주요 관심사안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해졌다. 다만, 기존에도 고위급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북 간 경협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정도 규모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6/ 최장호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pp. 152~153.

297/ “김정은, 방러 6일간 푸틴과 회담·전략무기 시찰…다시 北으로(종합2보),” 『연합뉴스』, 2023.9.17.,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7041054096>> (검색일: 2023.9.28.).

표 IV-21 러북 간 유형별 주요 CAMEO 이벤트 코드와 개수

| QuadClass | 이벤트 코드 | 이벤트 개수 |
|-----------|---|--------------|
| 구두 협력 | 040 상의하다(consult) | 10,973 |
| | 046 협상하다(engage in negotiation) | 7,949 |
| | 043 방문을 주최하다(host a visit) | 6,817 |
| 실제적 협력 | 061 경제적으로 협력하다(Cooperate economically) | 1,300 |
| | 080 양보하다(Yield) | 929 |
| | 060 실질적으로 협력하다 (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 829 |
| 구두 위협 | 111 비난하다(Criticize or denounce) | 3,360 |
| | 130 위협하다(Threaten) | 3,011 |
| | 120 거부하다(Reject) | 2,195 |
| 실제적 위협 | 163 금수조치, 제재를 가하다 (Impose embargo, boycott, or sanctions_) | 2,503 |
| | 190 전통적 군사력을 사용하다 (Us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 1,237 |
| | 173 체포, 구금, 기소하다 (Arrest, detain, or charge with legal action) | 1,016 |

출처: GDELT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북, 러북 무역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전 시기인 2010년대 중반에 비해 매우 크게 감소한 상황이며, 2022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확장 가능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중북 간 협력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대북제재 이전 수준에 근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수출의 경우 최근 텅스텐, 몰리브덴 등 비제재

대상 광물과 가발, 시계 등 경공업 임가공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 수요를 고려할 때 큰 폭으로 규모가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연탄, 의류 임가공 등 제재 품목에 대한 비공식 거래가 일부 증가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도 명시적인 제재 완화 이전까지는 규모를 크게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제재 품목을 대규모 수입함으로써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입지 약화 등 손실이 더 크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GDELT 데이터 분석에서도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모습이 관찰된다. 2022년 이후 러북관계는 협력적 이벤트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북관계는 Goldstein Sacle 지수와 이벤트 개수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반복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가 중국의 대북 협력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2023년 2월에 발표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이하 ‘GSI’) 개념 문건’에서는 GSI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수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의 배경에는 유엔체제를 통해 미국과 서방의 규칙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영향력을 상쇄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영향을 확대하려는 주요한 의도가 있다.^{298/} 그러나 중국 당국이 유엔체제와 국제법 존중을 자신의 외교전략의 기본 원칙으로 삼은 만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상황이 지속될 경우 러북 간의 협력

^{298/} 이재영, “중국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 세계전략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07, 2023.2.24.), p. 2,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428&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10.25.).

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전쟁으로 인해 자원 소모가 심한 러시아에 대해 재래식 무기, 광물자원, 노동력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 정제유 등 에너지 자원과 일부 식량 자원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두 국가 모두 서방 진영의 강력한 제재 하에 놓여있어, 중북 간 협력에 비해 제재를 우회하거나 무시할 유인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 정권 입장에서 현재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러시아와의 경협을 통해 완화하고자 할 수 있다. 러시아 부총리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재건작업에 북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례나, 최근 북한의 러시아산 정제유 수입이 무기 수출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보도된 사례, 최근 북러정상회담 등에서 이미 이러한 경협 확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299/} GDELT 데이터 분석에서도 러북 간 경협의 확장 가능성이 확인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시점을 기준으로 양국 간의 협력적 이벤트의 숫자가 늘어나고, 특히 북한 주도의 협력적 이벤트가 증가하는 것도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다만, 무역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의 무역액 규모 자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러북 경제교류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북한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 복구 인력 파견 등은 현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므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299/} “러시아 “북 건설 노동자 최대 5만 명 유치”, 『자유아시아방송』, 2022.9.1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russiannk-workers-09152022154418.html> (검색일: 2023.6.12.); “러, 대북 정제유 수출 재개...우크라이나 무기 제공받은 대가 가능성”, 『자유아시아방송』, 2023.6.1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russia-06122023145517.html> (검색일: 2023.6.13.).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현시점에서 북한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국의 미온적인 협력 태도 등으로 향후 경제협력의 확장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현재 무역 등에서 보이는 경제협력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재나 전쟁으로 인한 양국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크고, 협력의 의사도 충분히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경협 확장의 가능성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중러북 블록화 논의에서는 대부분 북한경제가 중국에 포섭되는 위협만을 주로 언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러북 간의 경제적 긴밀화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3. 중러북 경제협력 전개 양상 전망(정승호)

가. 시나리오 설정

향후 중북, 러북, 중러북 간의 경제협력의 전개 분야는 상품, 인력 이동, 투자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의 주요 상품 거래와 대부분의 대북투자 행위가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협은 이들 국가가 대북 경제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할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북제재 이행수준을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 수준의 제재 이행을 지속하거나 현재보다 다소 느슨하게 제재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상품무역과 인력이동 부문에서 경협의 확대가 예상된다. 상품무역 중에서는 일반적인 품

목의 교역량 증가와 함께 대북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의 거래도 일부 재개될 수 있다. 중국은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매년 해상 선박 환적을 통해 금지 품목인 석탄 수입과 설정된 상한선 이상의 정제유 공급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300/} 향후 중국이 대북제재를 다소 느슨하게 집행한다면 이와 같은 금지 품목 밀거래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임가공 인력수출의 암묵적 확대가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변, 단둥 등 국경도시의 중국 경공업 기업들에는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들은 일반 취업비자가 아닌 임시적인 국경 통행증(도강증, 渡江證)을 발급받아 대북제재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301/}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3년 이상 유지해온 국경봉쇄를 해제하고 인적 통행을 허용하면 이러한 국경 지역의 우회 취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러북 간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군수물자 수출과 에너지 자원 및 식량 수입, 그리고 파견 노동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로의 인력 파견 규모는 중국에 비해 작았지만 1인당 수익이 몇 배 높은데다 ‘국가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내는 상납금의 비율도 더 높아 북한의 외화 유입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302/} 러시아 파견 북한노동자들은 대북제재 강화 이후 2019년 말까지 대부분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크라이나전쟁이 종료되면 전후복구 사업을 명분으로 인력파견의 암묵적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30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2019/171; S/2020/151; S/2021/211; S/2022/132; S/2023/171.

301/ “중국에 北 노동자 10만명... 실습생·도강증으로 송환 회피,” 『연합뉴스』, 2019.12.22.,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26100073>> (검색일: 2023.10.5.).

302/ 이에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통일연구원, 2015), pp. 63~70.

둘째는 국제제재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투자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광업, 임가공업 등 양국 간 과거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산업들에 대해 대북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 즉, 대북제재 이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광물 채굴 설비, 화물운송 차량 등 고정자산을 투자하고 채굴된 광물자원을 반출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중국 임가공 업체가 현지에 진출하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원자재를 중국에서 반입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방식 등의 사업이 가능하다. 나진-하산-방천으로 이어지는 중러북 접경지역에는 도로, 항만 등 물류 유통 관련 인프라 투자가 재개될 수 있다. 상품무역과 인력이동 측면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수산물 조업권 판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 밀거래를 통해 진행하던 광물 수출을 대북제재 이전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제재 이후 전무하였던 차량, 건축자재, 기계 설비 등 자본재 수입도 재개되어 북한의 산업 생산 역량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중러북 간 가능한 경협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표 IV-22>와 같다.

표 IV-22 중러북 간 가능한 경험 시나리오

| | | 현재 수준의 제재이행 지속 또는 제재이행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경우 | | 국제제재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무시 |
|----------|----|---------------------------------------|---|--|
| | | 상품무역의 증가 (Trade) | 인력이동의 증가 (Labor) | 투자의 증가 (Capital) |
| 양자 관계 | 중북 | 제재 금지 품목의 밀수 확대 | 임가공 인력수출 암묵적 확대 | 광업, 임가공업에 대한 대북 투자 확대 (중국 중심 공급망의 참여) 접경지역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 | 러북 | 군수물자의 수출, 에너지와 식량 밀수의 증가 | 전후 복구 건설사업 북한 인력참여, 과학 기술 부문, 군사부문의 인적교류 확대 | |
| 중러북 | | | | 중러북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 재개 |

출처: 저자 작성.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중북, 러북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입지 약화가 우려되며 아직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2차제재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경기 침체와 장기 성장률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도 표면적으로나마 유엔의 모든 결의와 국제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준수하되 암묵적으로는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는 정도로 북한과의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제재이행을 보다 느슨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재를 무시할만한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서

방세계 주도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위반하더라도 추가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악화 우려가 적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면, 러북 간 경제협력 역시 일정 규모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협력 확대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양국의 필요가 일치한 데 따른 것이므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물류 여건을 고려하면 중북무역에 비해 러북무역은 운송 비용이 훨씬 클 것이며, 전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물류 여건을 개선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막대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감당하는 선택은 쉽지 않다.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할 의도는 있을 것이나,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상품군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중국과의 거래 시 보세무역 등 제3국과의 수출입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를 통해서서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는 군사용 물자 수출입, 석유 수입 등 일부 부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북한경제 전반에 돌파구를 제공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포탄 등 일부 재래식 무기의 비공식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 이후 언급된 것과 같은 군사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이 실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선진 군사기술이나 전략무기개발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제공한다고 할 때, 북한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 시사는 우

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 등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핵심적인 군사 기술이나 자원이 북한에 제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중러북 경협이 북한경제에 가지는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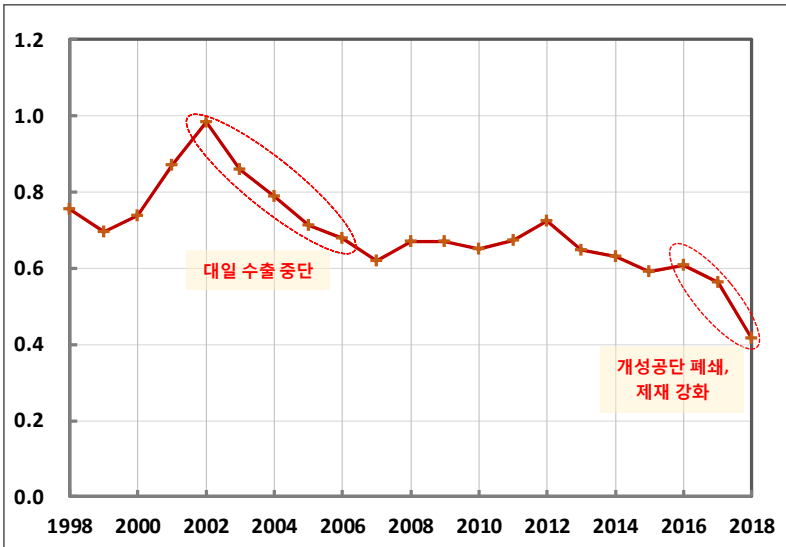
북한은 러북, 중북, 중러북 경협확대를 통하여 현재의 경제위기에 서 어느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러북 경협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중러북 경협은 사실상 중국이 주도권을 갖는 경협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의 수요에 따라가는 수동적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규모나 제조업 생산 기반 측면에서 중국은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압도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생산 사슬 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의 역할은 각자 특화된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제제재하에 있는 러시아와 북한은 가격 등에 있어 낮은 협상력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자원 수출은 국제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은 이 중 일부를 서방세계 국가들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303/} 중북 무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그림 IV-8>은 북한의 대중 수출 시 거래 가격을 중국의 타국 대상 동종제품 수입 가격 대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것이며, 1998~2018년 중 연도별 평균값의 추이

303/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뉴스, “중국, 러시아산 LNG 사서 유럽에 재판매,” 2022. 9.21.,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iteid=1&nIndex=%2070623>> (검색일: 2023. 9.26).

를 제시한 것이다. 2003년~2006년 중 북한의 대일 수출이 점진적으로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 가격은 중국의 타국 대상 수입 대비 평균 70%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60~70% 수준을 오가며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보다 유리한 가격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304/}

그림 IV-8 북한의 대중수출 상대 가격지수 추이



참고: 세로축은 중국의 대북 수입 가격을 타국 대상 동종 제품 수입 가격대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것이며, HS 8자리로 분류된 품목들의 평균값임. 해당 값이 1보다 크면, 북한의 대중 수입이 타국대상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출처: 이종민, “북중무역의 분해와 이를 통한 제재효과의 재평가,” pp. 65~87.

304/ 이종민, “북중무역의 분해와 이를 통한 제재효과의 재평가,”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2월호, 2020.2.), pp. 65~87, <https://www.kdi.re.kr/file/download?atch_no=hv9BgfaLN0jLBkxVOhjPEg%3D%3D> (검색일: 2023.10.25.).

둘째, 현재의 진영 간 대결 구도는 과거 냉전 시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중러북 협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냉전 구도는 이념적 대결이었으며, 사회주의 진영 내의 경제협력 역시 이념적 공유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반면 현재의 중러북 간에는 이러한 이념적 동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진영 간의 경제적 교류가 매우 적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가 긴밀하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가 되었다. 특히, 현재 중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서방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러시아나 북한과의 협력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천연자원 수출이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었다. 또한 당연하게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중요한 잠재적 파트너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은 러시아의 5번째로 큰 수입 대상국이며,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주요 수출처 중 하나이다. 반면 북한은 일부 군수물자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경상교역 측면에서는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신냉전’적 국제질서가 정치 군사적 측면을 넘어 경제부문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통해 서방세계와 분리된 중러북 간의 공급망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이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하더라도 저위산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V-9>는 2010년대 북한의 대중국 및 대한민국 가공무역 고도화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수출 고도화지수는 각국의 소득 수준과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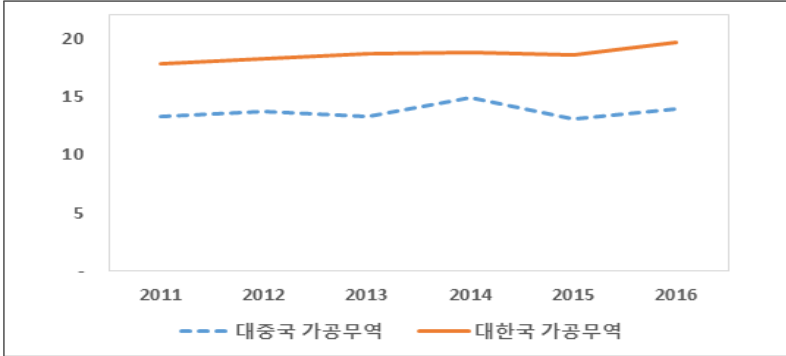
구성을 이용하여 북한의 수출품 구성에서 유도되는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역산한 것으로, 고소득 국가의 주된 수출품을 많이 수출할수록 큰 값을 갖게 된다.^{305/} 2011~2016년 중 북한의 대한민국 가공무역에 비해 대중국 가공무역은 고도화 정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남한과의 가공무역이 섬유 경공업 제품뿐 아니라 전자부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방면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중국과의 가공무역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섬유류 제품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306/} 최근 재개되고 있는 임가공 무역 역시 가발, 속눈썹 등 일부 저위기술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향후 중북 간 무역에서 기술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 또는 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이나, 중국은 투자를 통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과거 대북투자 시 북한의 일방적인 사업 변경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험 등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305/ Ricardo Hausmann, Jason Hwang, and Dani Rodrik, "What You Export Matter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12, no. 1 (2007), pp. 1~25.

306/ 정승호·김바우, "북한 가공무역의 기술수준 분석: 중국과의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2021), pp. 167~189.

그림 IV-9 북한의 대중·대한국 가공무역 수출고도화지수 추세

(단위: 천 달러)



출처: 정승호·김바우, “북한 가공무역의 기술수준 분석: 중국과의 비교,” p. 184.

4. 중러북 경제변화와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이용재)

미중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러북 경제 블록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러북 경제블록 형성을 비관적으로 예상한다. 중러북 간 산업구조의 불균형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AI, 이동통신, 인터넷), 장비(반도체 제조기기), 중간재(반도체)를 러북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고, 중러북 관계에서 중러 양자 간 정치적 관계가 돈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 냉전과 비교하였을 때, 오늘날 중·러는 세계 경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어 중러북이 고립적인 경제블록을 형성할 유인이 약하여, 느슨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북과 달리, 중국은 러·북을 미중 공급망 경쟁의 대안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형성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생태계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협력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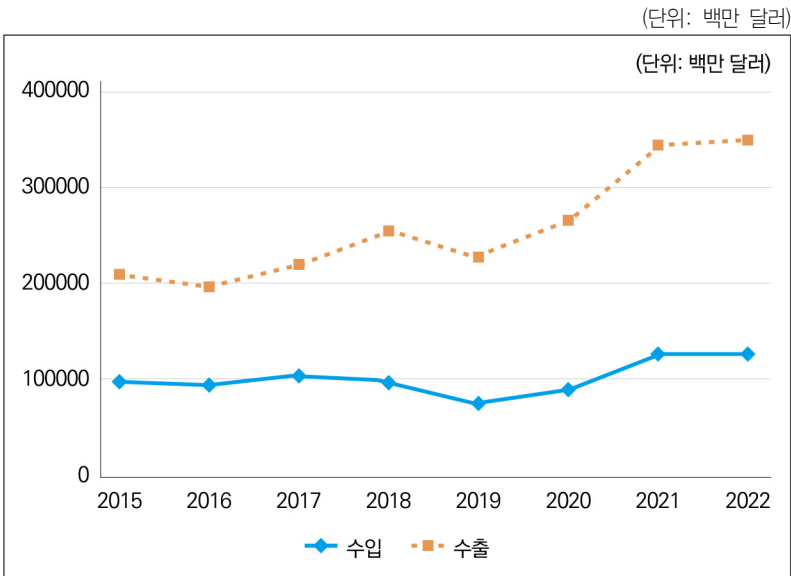
가. 중러북 경제 블록화와 미중 공급망 재편과의 관계

본 절에서는 미중 공급망 재편과 중러북 경제 블록화의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중러북 경제 블록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1) 미중 공급망 재편과의 관계

미중 공급망 경쟁하에 미국 주도의 동맹국과 우방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어, 북중러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3국의 경제블록은 중국에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림 IV-10 중국의 대미국 무역 변화



출처: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海关统计数据在线查询平台,” (<http://stats.customs.gov.cn/>) (검색일: 2023.7.3.)를 참고하여 정리함.

〈그림 IV-10〉에 따르면 미중 간 무역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입이 예외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중국의 대미 무역이 회복하였고, 2022년 중국의 대미 수출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미국이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반도체에서도 중국의 대미국 전자 집적회로 수출이 2022년 상반기 9억 6100만 달러에서 11억 2500만 달러로 2023년 상반기에 오히려 14.55% 증가하였다.^{307/} 미국은 반도체, 이동통신,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려 유일한 패권 도전국인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당분간 미중 경제관계의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중국은 중러북 경제블록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값싼 석유와 가스를 송유관이나 가스관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북한과 러시아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설비, 중간재, 원료에 집중되어 있어 중러북 경제블록 형성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충분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 공급 제한을 받는 반도체와 제조 장비와 같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상품을 러·북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중국은 러·북 외에 다른 국가로부터 첨단기술 관련 상품과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중국은 중러북 경제블록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 혹은 미국 주도 공급망에 참여하는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과 공급망 안정 및 회복 탄력성 관련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에서

307/ 이용재, “디커플링: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담론에 불과한 것인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21, 2023.8.11.), p. 4,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366&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8.30.).

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반영하는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 법률과 행정명령은 자국민과 기업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미국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우방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이런 점을 잘 이용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상을 통하여 미국 공급망 재편에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중국 투자 및 무역 혜택을 제공하여 공급망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필요한 첨단기술의 제품과 중간재를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어렵지만, 중국이 자체로 구축한 공급망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 안보적인 이슈에 있어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되어 중국을 지지하도록 만들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제재 불참 국가를 통해 우회하여 필요한 첨단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제재 불참국에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어 중러북 경제블록을 통하여 중국과 북한에 에너지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제조품과 첨단기술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러 무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증가하였다.^{308/} 단일국가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공급망 허브이지만, 미국과 서유럽이 여전히 세계 공급망 중심이기 때문에 향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공급망 개선이 필요하다.^{309/}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 공급망

308/ 한국무역협회, “2022년 중-러 교역 규모, 1,903억 달러 기록(전년 대비 29.3% ↑),” 2023.1.25.,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D68BF166B2B3FC604DEE9E7C15FD9F48,Hyper?pageIndex=1&nIndex=1830402&type=0> (검색일: 2023.5.12.).

309/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 시장을 포기하면 에너지 판매 감소를 피할 수 없고, 북중러 경제블록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도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경쟁의 반사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미중 경쟁이 격화될수록 중러북 경제 블록화 형성이 가속화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러로부터 필요한 에너지, 식료품 및 공산품을 수입하고, 제재를 피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을 수출할 수 있다.^{310/}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를 통해 양국의 지원과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중러북의 경제블록화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중러북 경제 블록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2)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중러북 경제 블록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와 북한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경제적으로 중러북의 경제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즉 중러북 경제협력이 한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한중 간 교역 및 투자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이 러·북과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여도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첫째, 중국이 러·북에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매우 제한적이라 러·북이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 중국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수입의 70%)를 수입하고,^{311/} 북한으로부터 금속 광물(텅스텐, 합금철, 몰리브덴광)과 경공업 제품(가발, 신발 깔창, 견 생사)을 수입한다.^{312/}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이 필

310/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수품을 받았고, 그 대가로 북한은 곡물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조상진, “백악관 “북한-러시아 무기거래 협상 활발히 진행 중…계속 식별·폭로할 것,” 『Voice of America』, 2023.8.30., <<https://www.voakorea.com/a/7247717.html>> (검색일: 2023.8.31.).

311/ “2022年中俄贸易额1.28万亿, 我国从俄罗斯进口了什么商品?” Eurasian Rail Alliance Index, 2023.3.2., <<https://index1520.com/cn/news/torgovye-partnery-kitaya-statistika-po-importu-i-eksportu/>> (검색일: 2023.8.28.).

요한 첨단기술 상품에 대한 수요를 러·북이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중러북 경제협력 강화가 한국과의 무역을 감소시킬 요인은 적다. 오히려 미국의 공급망 제재로 인한 반도체 등 상품 수급에 지장을 받고 있어 한국산 첨단기술 상품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국은 러·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수출지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 미중 경쟁으로 인한 대중국 공급망 압박으로 중국은 러·북과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313/} 한국은 중국의 더 중요한 수출지(배터리, 산화 리튬, 핵심 광물(희토류))이기 때문에 러·북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314/}

셋째, 남북 및 한러 간 무역은 한국 전체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남북한 교역과 투자는 중단되어 중러북 경제 블록화로 남북한 경제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고, 러시아도 에너지를 제외하면 한국의 비중 있는 무역 상대국이 아니다.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대러시아 수출은 0.8%(25위 수출 파트너)를 차지하며, 대러시아 수입 비율은 1.7%(13위 수입 파트너)에 불과하다.^{315/}

312/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3.6.11.).

313/ 코로나19로 인한 중·북 국경봉쇄가 해제되면서 무역이 재개되었고,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확대하면서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314/ 2023년 상반기 대한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러시아의 3%보다 높은 5%이며, 이는 단일 국가 및 지역으로는 미국, 홍콩, 일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KOTRA, “한국무역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CN/ALL/2023/7/imp>> (검색일: 2023.8.29.); Joe Cash and Ellen Zhang, “China’s exports fall most in three years as global economy falters,” *Reuters*, 2023.7.13.,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june-exports-fall-124-imports-drop-68-2023-07-13/>> (검색일: 2023.8.29.).

315/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에너지 수출 제재를 받고 있어서 한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통제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통제할 유인이 매우 작다고 본다. KOTRA, “한국무역현황.”

그러나 중러북 경제 블록화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적 제재로 고립된 북한은 중러북 경제협력을 통하여 생존을 보장받고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미중 경쟁과 서방의 제재로 중·러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제품과 기술, 자원, 곡물을 제공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 국력 신장과 생존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한 만큼,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설비, 원료 등을 제공받아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하고 동북아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중·러가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싸거나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316/} 이러한 현상은 중러북 경제 블록화가 공고해질수록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중·러의 외교·경제적 대북 지원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것이다. 그리고 중·러의 대북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미북 관계 정상화의 동기는 감소하여, 남북 간 교류는 더욱 요원해지고 북한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316/ “북한: 한미-북중러, 한미-북중러, 유엔서 '대북제재' 놓고 팽팽한 신경전,” 『BBC 코리아』, 2022.6.9., <<https://www.bbc.com/korean/news-61658036>> (검색일: 2023.8.30.).

나. 경제 블록화 측면에서 냉전과 신냉전의 유사점과 차이점

중국, 러시아, 북한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협력의 움직임을 보인다. 3국의 경제적 협력은 미국과 동맹국을 한 축, 중러북이 한 축을 형성하여 대립하는 ‘신냉전 (new cold war)’이 도래했다는 평가를 야기하고 있다.^{317/} 여기서는 냉전과 신냉전 시기 경제 블록화 현상이 가지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표 IV-23 신냉전과 냉전의 유사점과 차이점

| | | 냉전 | 신냉전 |
|-----|--------|--|--|
| 유사점 | 정치 요소 | - 패권경쟁: 미국 VS. 소련 - 이념 경쟁: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 - 패권 경쟁: 미국 VS. 중국 - 가치 진영: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
| | 경제 보완성 | - 중국: 노동집약산업 (농업, 경공업) - 소련: 자본집약산업 (중공업, 첨단기술산업) | - 중국: 첨단기술산업, 제조업 - 러시아: 군수산업, 에너지 산업 |
| 차이점 | 글로벌 교류 | - 동서 경제교류 단절: 진영 내 활발한 경제교류 (‘경제상호원조회의’, 중소협력) | - 경제 세계화: 활발한 무역, 국제투자 - 중러를 고립시킬 수 없음. |
| | 지도력 | - 소련의 강력한 패권 지도력: 강력한 군사력, 선진 경제, 국제 사회주의 혁명 지도국 | - 다극 체제: 단극체제 반대 - 중러: 상대를 지도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출처: 저자 작성.

^{317/} “Some politicians seem comfortable with the idea of a new cold war. They shouldn’t,” *the Guardian*, 2023.2.27., <<https://www.theguardian.com/us-news/commentisfree/2023/feb/27/new-cold-war-russia-ukraine-biden-republicans-china>> (검색일: 2023.6.3.).

(1) 유사점

냉전 시기와 현재 중러북 블록화의 유사점은 정치적 요소가 경제 협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과 경제 상호보완성이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견제받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 강압은 세력 전이의 관점에서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래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 경제성장을 지속하였고, 2015년 ‘중국 제조 2025’ 선언을 통해 첨단기술과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천명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자신의 패권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도전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318/}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와 2014년과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안정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로 이어졌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에서 ‘IPEF’, ‘CHIP4’, ‘D10’과 같이 대부분의 회원국이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기구를 형성하여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 미소 경쟁으로 인한 동서 진영 간의 제재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국 초기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의 적국이 되었고,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이 기댈 수 있는 국가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형제 국가인 소련뿐이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초강대국인 소련은 신생국인 중국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1950년 2월 14일 중

^{318/}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도 패권 도전국인 중국 견제 목적이 농후하다.

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은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국가 재건을 위한 경제원조를 받았다.^{319/}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는 중국의 대소련 의존을 가중하여 중소 간 무역은 1950년부터 1956년까지 6년간 6.5배 증가하였고, 당시 60% 이상의 중국 상품 무역은 소련과 이루어졌다.^{320/}

1950년대 말 발생한 중소 이념 및 정책 분쟁은 양국의 경제 관계 단절로 이어졌다.^{321/} 중국에 파견되었던 1,400여 명의 소련 전문가들은 1960년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소련은 중국과 체결한 600여 개의 경제개발 계약을 폐기하였으며, 900여 명의 전문가가 추가파견을 취소하였고, 장비 제공을 거부하였다.^{322/}

산업별 비교우위에 따른 높은 상호보완성 또한 유사점이다. 냉전 시기 소련은 첨단기술과 자본집약산업에서 비교우위에 있었고, 중국은 농업과 경공업(면직물)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우위를 보였다. 소련은 주로 기계, 장비, 석유제품을 수출하였고, 중국은 농산물, 철, 면직물을 수출하였다.^{323/} 현재 양국은 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319/ 중국의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소련은 제철, 광업, 석유, 기계, 자동차, 농기계, 전기 및 국방 등 14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3천여 명의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하였다. Lorenz Lüthi, *The Sino-Soviet Spli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 37~38.

320/ Andrew Batson, "Reviving and reversing the Sino-Soviet trade bloc," *The Tangled Woof*, 2022.3.3., <<https://andrewbatson.com/2022/03/03/reviving-and-reversing-the-sino-soviet-trade-bloc/>> (검색일: 2023.5.2.); Lorenz Lüthi, *The Sino-Soviet Split*, p. 37.

321/ 1953년 스탈린(Joseph Stalin) 사망 후 집권한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가 스탈린의 강압 정치와 동서 대결적 외교를 비판하자 평소 스탈린을 동경해온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중공지도부가 주권 침해라고 분노한 소련의 중소 연합 잠수함 편대 형성 요구와 마오쩌둥(毛澤東)의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을 부정하는 흐루쇼프의 동서 '평화공존 원칙' 등 소련의 대중국 강압적 태도와 서방에 대한 노선의 차이는 1958년부터 중소관계를 본격적으로 악화시켰다.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 482~483.

322/ Lorenz Lüthi, *The Sino-Soviet Split*, p. 174, p. 176.

323/ Andrew Batson, "Reviving and reversing the Sino-Soviet trade bloc."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모바일 네트워크, 휴대전화, 이차전지, 전자부품, 자동차 등 첨단기술과 제조업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324/} 러시아는 군수산업과 에너지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프랑스에 추월당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군수품 수출국이었다.^{325/} 러시아는 세계 2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326/} 다음은 냉전과 신냉전 시기 경제 블록화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2) 차이점

냉전 시대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경쟁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 현상과의 차이점은 글로벌 경제교류 확대와 지도력의 부재이다. 냉전 시기에는 동서 진영의 대립으로 동서 간 경제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서로를 경제 영역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전후 서유럽 국가 간의 경제협력과 공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와 ‘마샬플랜(Marshall Plan)’에 대항하기 위하여 1949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협력기구인 ‘경제상호원조회(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가 설립되었다. ‘경제상호원조회의’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간의 생산 전문화를 이용하여 동구권 자급 자족적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327/} 중국은 1950년대 후반까지

^{324/}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325/} 중국은 인도 다음으로 많은 군수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23.6.12.).

^{32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ussian total oil exports, January 2022 – January 2023.”

소련과 교역하였지만, 중소 관계 악화 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주요 원자재와 원료를 자급자족하였다.^{328/}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는 경제 주체 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중·러에 대한 경제 압박으로 이들 국가를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시키기는 어렵다. 냉전 시기처럼 동서 간 배타적인 경제블록이 형성되지 않았고, 상호 경제교류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첨단기술, 제조업,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높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들과 전면적으로 경제교류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1950년대 중소관계와 다르게 현재 중러 간의 산업별 비교우위에 따른 활발한 무역과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329/}

현재 중러북 경제협력에서 냉전 시기의 소련만큼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의 부재도 차이점이다. 초강대국이자 최고경제 선진국인 소련이 냉전 시기 동유럽 및 중국에 여러 가지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지만,^{330/} 현재 중러북 경제협력에는 강력한 리더가 부재하다.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냉전 시기의 소련처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327/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산업국은 기계나 소비재 상품을 공급하였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농업국들은 농산물을 생산 및 제공하였다. André Steiner, "The Council of Mutual Economic Assistance—An Example of Failed Economic Integr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39, no. 2 (2013) p. 241; Ústav pamäti národa and European Network Remembrance and Solidarity,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1949 - 1991)," <https://www.upn.gov.sk/data/files/upn_letak_os_RVHP_EN_v erzia.pdf> (검색일: 2023.5.4.).

328/ Liang-Shing Fan, "The economy and foreign trade of China," *Law & Contemp. Probs*, no. 38 (1973), pp. 249~250.

329/ 중국은 러시아 원유와 군수품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이고, 러시아는 첨단기술 제품과 일반 제조업 상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330/ 소련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경제상호원조회의'가 회원국 간 노동 분업을 통한 자급 자족적 계획경제 블록을 형성하였다.

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경제력이 빈약하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과 소련은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 리더 자리를 두고 경쟁하였고, 냉전이 종식된 후 중·러는 단극체제를 반대하고 다극 체제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러북 경제블록에서 중국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냉전과 신냉전의 경제블록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중러북 경제 블록화 가능성을 고찰할 것이다.

다. 중러북 경제 블록화 가능성 평가와 전망

현재 중러북 관계는 I장에서 제시된 4가지 미중관계 경제-안보 전략인 ‘긍정적인 동조화 (positive coupling)’, ‘경제적 탈동조화 (economic decoupling)’, ‘안보 탈동조화 (security decoupling)’, ‘부정적인 동조화 (negative coupling)’ 중 ‘긍정적인 동조화’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동조화가 중러북 경제블록 형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단기간 내 중러북 경제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은 비관적이다. 중러북 간 정치적 관계와 세계 경제와의 결합도 및 최근 3국 간 경제협력을 분석하여 중러북 경제 블록화 가능성을 전망해보도록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소 우호 동맹 상호원조 조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1980년 이래로 동맹 조약을 맺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동맹국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체제 수준에서 보면 냉전 후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중러 간 협력 유인이 크지만, 중소분쟁의 역사적 기억은 양국 정치적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331/} 긍정적인 시각에

331/ Alexander Korolev and Vladimir Portyakov, "Reluctant allies: System-unit dynamics and China-Russia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3,

서 중러는 상대적으로 확고한 관계로, 서로 의지할만하여 미국의 세력균형을 형성할 수 있는 반패권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러와 미국과의 관계가 퇴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후 가장 처음 방문한 국가는 러시아였고, 양국 지도자는 서로를 믿을만한 동반자 또는 동맹국으로 지칭하였다.^{332/} 2000년대 중반부터 양국은 빈번하게 양자 그리고 ‘SCO’의 ‘Peace Mission’과 같은 다자 육해공군 합동 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양국은 상호 군사 운영 능력, 신뢰, 자신감, 군수산업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정식 동맹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중러 군사 관계 제도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333/}

러시아의 조지아(2008년)와 우크라이나(2014, 2022년) 침공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중러 관계가 향후 공고한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는 서방의 입장에 동참하지 않았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견해를 표하는 것을 극도로 삼갔다.^{334/} 또한 중국은 자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 정부와 기업에 호의적으로 대응하였고,^{335/} 러시아도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다.^{336/}

no. 1 (2019), p. 41.

332/ 위의 글, p. 43.

333/ Richard Weitz, “Assessing Chinese–Russian Military Exercises: Past Progress and Future Trend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1.7.9., <<https://www.csis.org/analysis/assessing-chinese-russian-military-exercises-past-progress-and-future-trends>> (검색일: 2023.6.9.).

334/ 2008년 ‘합동성명’에서 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는 서로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335/ Alexander Korolev and Vladimir Portyakov, “Reluctant allies: System-unit dynamics and China–Russia relations,” pp. 44~45.

336/ 2016년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는 러시아는

반면, 중러 정치 관계에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중러 관계와 중소 관계는 분쟁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역사는 현재 중러 관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337/} 19세기 50~60년대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 간의 여러 불평등 조약으로 청나라는 동북 지역의 150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였고, 중국에 불리한 국경 획정은 중국 사회의 민족주의와 반러 정서를 촉발하였다.^{338/} 1950년대 후반 이데올로기 충돌로 시작된 중소분쟁은 1980년대 초까지 약 20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대중국 고립전략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현재 중러 관계의 신뢰 기반은 매우 약하다고 평가된다. 양국 간 이러한 역사적 관계가 누적되어 심각한 불신이 생겨나면서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러시아를 ‘믿을만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양국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339/}

중북 관계는 냉전 종식 이래로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중북 관계가 냉전 시기와 같은 ‘혈맹(血盟)’관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안정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전략적 가치(완충지대)를 포기할 수 없어 지속해서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340/} 그러나 2012년 시진핑과 같

남중국해 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Alexander Korolev, “Russia in the South China Sea: balancing and hedging,”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5, no. 2 (2019), p. 265.

337/ Alexander Korolev and Vladimir Portyakov, “Reluctant allies: System-unit dynamics and China–Russia relations,” pp. 44~45.

338/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동북 지역의 여러 이권을 소련에 양보하였고, 몽골 독립 강요로 중국은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였다. 위의 글, pp. 56~57.

339/ 위의 글, p. 57.

340/ 2010년 천안함 사건 후에도 중국은 북한을 지지했었고, 2009년 북한의 2차 핵 실험 후에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설득하였고, 북한의 핵 문제와 별개

은 해에 집권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중국은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중국은 집권 초기 미사일과 핵실험을 남발하던 김정은의 방중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절하면서 중북 정상회담은 2018년 3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 중단되었다.^{341/} 2018년과 2019년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얼어붙은 중북 관계도 풀리기 시작하였다. 2018년과 2019년 김정은이 4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양국 국경이 봉쇄되어 중단되었던 경제교류가 재개되었다. 한 연구는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북 관계가 외형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42/}

로 경제적 협력을 지속할 것을 선언하였다. Emma Chanlett-Avery and Mi Ae Taylor,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11.10., p. 9; Dong-ryul Lee,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 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2 (2010), p. 166; Yinhong Shi, "New Games in Tightly Fixed Structures: North Korea's Volatile Desperation and China's Cornered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3, no. 3 (2011), p. 354; Scott Snyder, "Will China Change Its North Korea Poli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6.3.31., <<https://www.cfr.org/expert-brief/will-china-change-its-north-korea-policy>> (검색일: 2023.6.12.); Hyun-Joon Chon, "Prospects for North Korea's Internal Policy Following the North Korea-China Summi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Co 10-11, 2010.5.18.),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631/1/0001447337.pdf>> (검색일: 2020.3.1.).

341/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대통령 박근혜와는 7번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Hong Nack Kim, "China-North Korea relations after Kim Jong-Il,"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7, no. 1 (2013), p. 31; Leif-Eric Easley and In Young Park, "China's norms in its near abroad: Understanding Beijing's North Korea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5, no. 101 (2016), p. 665.

342/ 2022년 9월과 2023년 2월 신의주-단동 화물열차 운행과 나선-훈춘 간 트럭 통행이 재개되었고, 북한은 양안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동률,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셈법," (동아시아 연구원 북한 신냉전 토론

그러나 중북 관계가 돈독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증거도 있다. 북한이 2020년부터 여러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회담도 2019년 이후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현재 중북 관계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북한의 후견국이었던 소련이 붕괴한 후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과 관심이 감소하며 러북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부터 러북 정상회담이 간헐적(2001, 2002, 2011, 2019년)으로 진행되었고 회담의 주요 내용도 가스관과 철도 건설, 무역 확대, 채무조정 등 경제개발 및 협력에만 집중되었다.^{343/} 2019년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2차 미북회담 실패 후 러시아의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컸지만, 유의미한 합의 도출은 하지 못하였다.^{344/} 우크라이나 전쟁 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6월 12일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고, 축전에서 러북 간 우호 협력관계 발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다.^{345/}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Amur Oblast) 보스토치니 우주기지(Космодром Восто

시리즈②, 2023.2.28.),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713&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검색일: 2023.6.15.).

343/ 박정민, "남·북·러 경제협력 분석: 진단·예측·정책 제언," 『북한학연구』, 제16권 2호 (2020), p. 117.

344/ 회담 후 푸틴은 북한의 체제 보장과 다자 핵 협상 재개를 주장하였지만, 회담을 통하여 러북 관계를 회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단지 러북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의 글, p. 118; "Putin offers to help break nuclear deadlock at Kim Jong-un summit," *The Guardian*, 2019.4.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25/kim-jong-un-meets-vladimir-putin-for-first-time-at-vladivostok-summit>> (검색일: 2020.12.10.).

345/ Justin McCurry, "Kim Jong-un 'holds hands' with Vladimir Putin as Russia-North Korea ties deepen," *The Guardian*, 2023.6.1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jun/12/kim-jong-un-holds-hands-with-vladimir-putin-as-russia-north-korea-ties-deepen>> (검색일: 2023.6.15.).

чный, Vostochny Cosmodrome)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346/}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John Kirby)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러시아의 식량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347/}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일시적인 협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장기적인 경제통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중·러·북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와 제재를 받으면서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3국의 정치적 관계가 공고하지 않고 상호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협력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이러한 정치적 관계가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현재 3국 간 경제협력 및 3국의 세계 경제와의 통합도를 분석하여 중러북 경제 블록화를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348/} 3국 간 경제교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 등 장기적인 경제통합 혹은 블록화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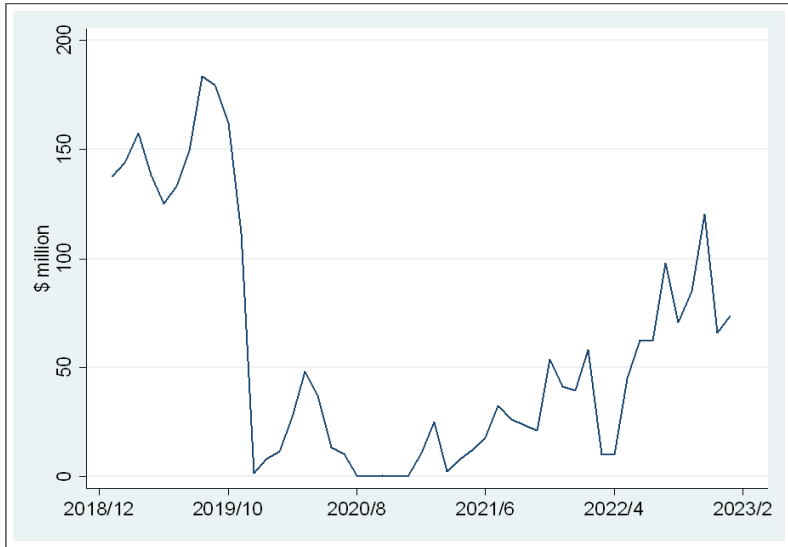
346/ Victor Cha and Ellen Kim, "Summit between Kim Jong-un and Vladimir Putin," CSIS, 2023.12.13., <<https://www.csis.org/analysis/summit-between-kim-jong-un-and-vladimir-putin>> (검색일: 2023.12.28.).

347/ Antoinette Radford, "Russia to offer food for North Korean weapons - US," *BBC*, 2023.3.30.,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5131117>> (검색일: 2023.6.15.).

348/ 경제 블록화는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지역별 협력기구를 만들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지역주의화 현상"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지역경제 블록화,"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idx=156>> (검색일: 2023.5.10.).

349/ 경제 블록화의 종류에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이 있다.

그림 IV-11 북중 무역 변화



출처: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海关统计数据在线查询平台”를 참고하여 정리함.

북한은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림 IV-11>에서 보여주듯이 2019년 12월부터 중북 무역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20년 국경이 봉쇄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2022년 초, 중북 육로 무역이 재개되면서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될 것이다.^{350/}

2015년과 2017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특히 2017년 핵실험 후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였고, 양국

^{350/} 중국으로부터의 산업생산 설비(밸브, 터빈, 자동처리 장치), 산업 및 농업 원부자재(피치, 코크스, 모니터, 배터리, 전동기, 변압기, 패널, 건축용 플라스틱) 수입이 감소하면서 산업생산의 부진을 겪었다. 최창호·최유정, “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2-5, 2022.3.16.), p. 3, p. 6,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9986> (검색일: 2023.10.26.).

간 경제협력은 더욱 줄어들었다. 2018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러북 경제협력도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9년 말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351/}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러북 무역이 재개되고 있다.^{352/} 중국에 비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매력적인 무역 상대는 아니지만 북한 내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석유제품과 식료품을 싸게 수입할 수 있는 유인이 크다.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만한 물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군수물자와 자금 부족에 직면해있고, 국제사회에서 지지해줄 우방국이 필요하므로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할 유인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353/} 중러북 간 무역을 확대할 유인이 크다고 해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블록 형성에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러가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고, 무역 증가가 러시아와 북한의 대중국에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러북 경제 블록화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하여 3국의 경제 블록화 행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양자 투자협정과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중국은 100여 개 국가와 양자 투자 협정을 맺었고,^{354/} 17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

351/ 2018, 2019년 양국 정부 간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북한 노동자, 복합물류사업, 루블화 결제, 인프라 건설 등 여러 가지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였다. 박정민, “남·북·러 경제협력 분석: 진단·예측·정책 제언,” pp. 117~118.

352/ 미국의 위성 사인에 의하면 러시아 운송 열차가 북한에 도착하여 화석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무역 사업소 설치를 논의하는 등 무역거래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353/ “북한, 러시아 내 무역 사무소 설립 준비 중...북·러 ‘밀착’ 확대: 정유·식료품 수입 경로 다각화 움직임...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북제재 돌파 시도,” 『Daily NK』, 2022.10.21., <<https://www.dailynk.com/20221021-6/>> (검색일: 2023.5.6.).

354/ 협정은 물론, 중재, 최혜국 대우, 투자금의 본국 송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n U.S.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Agreements,” 2023.4.7., <<https://www.trade.gov/country-comm>>

나^{355/}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다자 자유무역협정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중국은 오직 ASEAN과만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2021년 1월 동남아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RCEP’을 비준하였다. 특히 RCEP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이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로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356/} 중국은 2004년부터 5개 중동국가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고, 상품 무역에 관한 협의는 마무리되었으며, 서비스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357/}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특혜무역협정으로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이 있다.^{358/}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며, 경제통합의 대상이 주로 소련연방 국가들로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러시아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없으며, 2011년 8개 소련국가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들과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2015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기존의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custom union)’에서 발전된 ‘유라시아 경제 연합(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을 결성하였다.^{359/}

ercial-guides/china-trade-agreements) (검색일: 2023.5.8.).

355/ 추가 8개 자유무역협정 협상하거나 이행 중이다. 위의 글.

356/ Ministry of Commer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ttp://fta.mofcom.gov.cn/topic/enperu_recip.shtml> (검색일: 2023.5.4.).

357/ Ministry of Commer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GCC FTA," <<http://fta.mofcom.gov.cn/topic/engcc.shtml>> (검색일: 2023.5.4.).

358/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가 참여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성공적으로 합의하였다. Ministry of Commer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http://fta.mofcom.gov.cn/topic/enpacific.shtml>> (검색일: 2023.5.4.).

중국에 비해 러시아와 북한은 세계 경제와의 통합도 높지 않다. 북한은 1990년대 핵 개발을 시작한 후 지속해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왔고,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에서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그 외 산업과 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교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몇 년 내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와 같은 지역 기반 경제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와 관련이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측면에서 중러북의 경제블록화 가능성은 낮지만, 중러북의 경제-안보 연계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공급망을 확대하고 자국의 공급망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의 의존성을 높여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이슈에서 영향력을 높이기를 원한다. 러시아와 북한 역시 제재와 환경, 인권 등의 가치와 규범에 있어 무역장벽이 높은 미국과 서방의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 이러한 분야에서 무역장벽이 낮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359/ EAEU는 2016년 베트남, 이란, 인도, 이집트,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TA) of U.S. Department of Commerce, "Russia - Trade Agreements," 2019.8.14., <<https://www.stopfakes.gov/article?id=Russia-Trade-Agreements>> (검색일: 2023.5.9.).

V.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안보 외교

이용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정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승호(인천대 교수)

이재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안보 외교

1. 중러 경제 관계 밀착 관련 한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이용재)

앞부분에 이미 서술했듯이 미중 공급망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중러 간 산업구조 불균형, 낮은 정치적 신뢰, 러시아의 경제 블록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세계 경제와의 깊은 연관성으로 인하여 중러 경제협력의 경제 블록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더 강화되고,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 진영화가 형성된다면 중러의 연대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공급망 경쟁과 진영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형성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 한국의 대응 전략

(1)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배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공급망 압박과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360/} 미국의 대중·대러 배제 전략은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의 80%는 완제품 생산에 쓰이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디리스팅’ 전략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국의 생산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361/} 이에 따라 자연히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것이다.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주력상품인 기계 전자, 전자 설비, 석유화학,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대중국 수출 상위 5개 품목인 직접회로, 통신기기와 부품, LCD 패널, 환식 탄화수소, 반도체 제조기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감소추세이다.^{362/}

한국은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오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로 인한 대미 수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기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2015년에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를 바탕으로 중국 산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생산 중심이 중저가 제품군에서 중고가 제품군으로 이동하여 중국 내 중저가 제품 생산의

360/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된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G7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호주, 인도가 포함된 D10(Democracy 10)이 단순히 안보 협의체의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 무역, 기술, 공급망, 표준 문제 해결에서 협력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다분하며, 13개국이 참여한 IPEF를 출범시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he D10 is dead, long live the ... Network of Liberty?” *The Interpreter*, 2022, 1, 24.,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d10-dead-long-live-network-liberty>> (검색일: 2023.5.22.); “Quad leaders to call for securing chip supply chain,” *Nikkei Asia*, 2021, 12, 18.,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Pacific/Quad-leaders-to-call-for-securing-chip-supply-chain>> (검색일: 2023.5.22.).

361/ 윤보라·김성애·윤기섭, “최근 중국 공급망 이슈의 영향 및 전망,” (KOTRA Global Market Report 22-018, 2022.7.), p. 18, <[http://www.tradenavi.or.kr/CmsWeb/resource/attach/report/\[885\]22%EC%B5%9C%EA%B7%BC%EC%A4%91%EA%B5%AD%EA%B3%B5%EA%B8%89%EB%A7%9D%EC%9D%B4%EC%8A%88%EC%9D%98%EC%98%81%ED%96%A5%EB%B0%8F%EC%A0%84%EB%A7%9D.pdf](http://www.tradenavi.or.kr/CmsWeb/resource/attach/report/[885]22%EC%B5%9C%EA%B7%BC%EC%A4%91%EA%B5%AD%EA%B3%B5%EA%B8%89%EB%A7%9D%EC%9D%B4%EC%8A%88%EC%9D%98%EC%98%81%ED%96%A5%EB%B0%8F%EC%A0%84%EB%A7%9D.pdf)> (검색일: 2023.5.22.).

362/ 위의 글, p 19, p. 21.

장점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동남아, 남미 혹은 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가고 있다.^{363/} 한국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이미 시행해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만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핵심 원자재와 중간재의 경우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광물과 부품의 원산지를 미국, 북미,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과 부품 50% 이상)을 조달해야 세액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려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생산한 핵심광물을 사용하면 2025년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국의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가 불가피하다. <표 V-1>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기업(LG엔솔, 삼성SDI, SK온)은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기존의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독일, 아프리카로 전환하고 있다.^{364/}

363/ 위의 글, pp. 21~22.

364/ 권현정, “‘탈 중국’ 나선 K-배터리…공급망 다변화 성공할까?” 『시사오늘. 시사ON』, 2023. 4. 6.,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90>> (검색일: 2023. 5. 23.).

표 V-1 한국 배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변화

| 기업 | 공급망 다변화 |
|-------|---|
| SK온 | 1. 호주 레이크리소스: 리튬 23만 톤 공급 계약(2024~2033년) 2. 칠레 SQM: 수산화리튬 5만 7000톤 공급 계약(2023~2027년) |
| 삼성SDI | 1. 강서강봉이업(중국 리튬 제련 업체): 50% 이상 지분 매각 2. 호주 QPM: 3~5년간 니켈 공급 계약 |
| LG엔솔 | 1. 호주 라이온타운: 5년간 리튬 70만 톤 공급 계약 2. 칠레 SQM: 9년간 리튬 5만 5000톤 공급 계약 3. 독일 벌칸 에너지: 5년간 4만 5000톤 공급 계약 |

출처: 권현정, “‘탈중국’ 나선 K-배터리…공급망 다변화 성공할까?”를 참고하여 정리함.

중·러 외 지역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외에도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국내 생산 확충이 중요한 대응 방안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은 보조금^{365/}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국 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물자 생산시설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366/} 한국 정부는 반도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만 제공하고 있어, 외국 반도체기업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367/}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LCD,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전략 산업에서 풍부한 인재,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의 투자나 해외투자 중인 국내기업의 회기를 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적극 이용하여 보조금을 제공하고 국내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

365/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이 제공하기로 결정한 반도체 산업 보조금은 우리 돈으로 385조 원을 초과하였다. 임경업, “반도체 패권 탈환”…美·日·EU, 보조금 동맹 맺었다,” 『조선일보』, 2023.7.14.,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7/14/56TVOTFYSPF2FIA2CPDYRM6LSQ/> (검색일: 2023.9.1.).

366/ 박성준,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71호, 2023.6.26.), p. 15,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download&articleNo=5268&attachNo=5731>> (검색일: 2023.9.1.).

367/ 송의달, “美 정부 직접 보조금 51조원인데 韓은 0원…메모리반도체도 위태롭다,” 『조선일보』, 2022.12.22., <<https://www.chosun.com/economy/2022/12/15/YC4WCVR2WZH53BRHJZJ76KAUREY/>> (검색일: 2023.9.1.).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전략산업에서 공급망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적(양자, 다자) 협력(동맹)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동맹 참여에 비교적 소극적이지만,^{368/}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공급망 동맹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이미 EU와 일명 ‘대서양 협력(trans-Atlantic cooperation)’이라는 반도체 공급망 정책, 연구, 개발, 생산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369/} 인도를 신흥 반도체 공급처로 발전시키기 위한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였다.^{370/}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기업인 대만 TSMC^{371/}는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등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약 120억 달러 투자를 계획 중이며, 세계 2위 규모의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인 대만의 미디어텍(MediaTek)은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와 2022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차세대 컴퓨터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반도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였다.^{372/} 일본은 EU, 대만과 반도체

368/ 일본과 대만이 2022년 7월에 이미 한·미·일·대 반도체 협의체인 ‘Chip4’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반하여 대중국 반도체 공급망 의존이 높은 한국은 참여 의사를 늦게 표명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369/ Jennifer Meng,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SIA) -- Semiconductor Priorities for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Europa Kommissionen, 2021.10.26., <<https://futurium.ec.europa.eu/da/EU-US-TTC/wg10/documents/semiconductor-industry-association-sia-semiconductor-priorities-us-eu-trade-and-technology-council?language=da>> (검색일: 2023.12.3.).

370/ Shaumik Ghosh, “India-US Semiconductor Cooperation: Can India insert itself into the pantheon of global chipmakers with a little help from Washington?” *The Diplomat*, 2022.12.12., <<https://thediplomat.com/2022/12/india-us-semiconductor-cooperation/>> (검색일: 2023.9.3.).

371/ TSMC는 이미 워싱턴,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공장과 디자인 센터를 운영 중이다. Kristy Tsun Tzu Hsu, “Taiwan as a Partner in the U.S. Semiconductor Supply Chain,” Wilson Center, 2022.9., p. 9,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media/uploads/documents/2022-09_Taiwan_SemiconductorSupplyChain_Hsu.pdf> (검색일: 2023.9.3.).

372/ 위의 글, pp. 9~10.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7월 3일 제1차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반도체 개발, 연구, 인재 양성, 생산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373/}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의 12nm, 16nm, 22nm, 28nm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하면서 대만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374/}

양자 동맹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CPTPP, IPEF, DEPA(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미·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과 같은 다자기구를 통한 다자동맹도 강화해야 한다.^{375/} 또한 공급망 동맹국과 핵심 원료, 중간재 공급망 교란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376/} 한미일은 2023년 8월 우선순위 제품을 식별하고 정보·기술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377/}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 형성을 EU, 인도, 동남아,

373/ European Commission, “EU and Japan boost strategic cooperation on digital and on critical raw materials supply chains,” 2023.7.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831> (검색일: 2023.9.3.); Sam Nussey, “EU, Japan to deepen chip cooperation, Breton says,” *Reuters*, 2023.7.3., <<https://www.reuters.com/technology/eu-japan-deepen-chip-cooperation-breton-2023-07-03/>> (검색일: 2023.9.3.).

374/ “TSMC to continue investing in Japan: company chairman,” *TAIPEI TIMES*, 2023.5.19., <<https://www.taipetimes.com/News/biz/archives/2023/05/19/2003800089>> (검색일: 2023.9.3.).

375/ 중국 생산 네트워크 불안정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대비하여 첨단기술·전략산업 핵심 상품과 원자재의 대중국 의존을 분산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 인재, 상품, 원료 공급망을 다자기구를 통하여 다변화해야 한다. 이승신 외,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2-02, 2022.12.30.), pp. 57~58,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40000&bid=0001&list_no=10714&act=view> (검색일: 2023.9.8.).

376/ 차정미,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3.9.21.).

377/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 정보 공유 확대,” 『KTV 국민방송』, 2023.8.21., <https://m.ktv.go.kr/news/sphere/T0000019/view?content_id=683>

대만으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중립 공급망 배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흐름을 주도하고, 이러한 공급망 협력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 다음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중립 경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유연화 전략을 제시한다.

(2) 경제·안보의 유연한 접근

탈냉전 시대 세계 경제는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여 다루는 워싱턴 컨센서스 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동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안보 우려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진행하는 공급망 재편도 경제와 안보 결합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6년 사드 사태 후 중국의 경제제재를 당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은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의존, 경제는 중국에 의존)’ 전략에 의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대중국 투자, 무역의 과도한 의존은 한국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제-안보 연계’에 따라 중·러를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면 미중 간 대항하는 진영 체제가 공고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는 미국에 최대한 협조하고, 대중·러 경제와 안보에 유연성을 두는 정책에는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18nm(나노미터) 이하 D램, 128

772> (검색일: 2023.9.26.).

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 칩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378/}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조항적용을 무기한 유예 받았지만,^{379/}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발전 견제 전략에는 변함이 없어, 향후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10월 13일 미국은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VEU)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정하면서 두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별도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허가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중 공급망 협력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미 당국이 허용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미국의 공급망 재편 관련 법률과 행정명령은 자국민과 기업 이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외국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과도하게 편입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Inc.)의 제품을 중국 내 인프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반도체, 충전기, 태양광 패널, 무선통신기기 제조의 핵심 물

378/ “美, 中 제재 강화…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로 불뚱 튕겨,” 『뉴시스』, 2023.3.4., <https://mobile.news1.com/view.html?ar_id=NISX20230303_0002213275#_PA> (검색일: 2023.5.23.).

379/ John Liu, “South Korean Chip Makers Get U.S. Waivers From China Export Rules,” *The New York Times*, 2023.10.9., <<https://www.nytimes.com/2023/10/09/business/samsung-sk-hynix-us-chip-export-controls.html>> (검색일: 2023.10.18.).

질인 갈륨과 게르마늄(총 30여 개 품목) 수출을 통제하였다.^{380/}

미중 공급망 재편에 대해 한국은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중의 공급망 연계를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미중의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의 블록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안보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경제와 안보를 완전히 연계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지양하고, 사안과 이슈, 섹터와 가치·규범에 따라 서로 다른 맞춤형 경제-안보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나. 협력분야: 한중/한러 공급망 협력

본 절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급망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하겠다. 한중은 좁혀진 기술격차로 첨단기술 및 제조업에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에서는 공동 개발의 여지가 크다. 한러는 한중 협력에 비하면 협력의 영역이 에너지·광물에 제한되며, 에너지 공동 개발도 제재와 정치적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압박과 봉쇄가 더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경우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 유인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1) 한중 공급망 협력

한국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기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첨단

380/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 海關總署公告2023年第23號 關於對鎳、鎳相關物項實施出口管制的公告,” 2023.7.3., <<http://big5.mofcom.gov.cn/gate/big5/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307/20230703419666.shtml>> (검색일: 2023.7.18.).

· 전략산업에서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381/} <표 V-2>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 전자기기와 부품, 기계, 플라스틱 제품,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메모리, 전지, 전자 직접회로, 희토류, 전자기기 및 부품, 철강 제품, 각종 화학 제품을 수입하기에 양국은 첨단·전략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표 V-2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대중국 무역 (2022년) | |
|--------------------|--|
| 수출 | 반도체, 전자기기와 부품, 기계, 플라스틱 제품, 철강 제품 |
| 수입 | 메모리, 전지, 전자 직접 회로, 희토류, 전자 기기 및 부품, 철강 제품, 각종 화학제품 |

출처: KOTRA “한국 무역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CN/ALL/2022/Y/imp>> (검색일: 2023.8.23.)을 참고하여 정리함.

그렇지만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은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분야이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방지법」은 첨단·전략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한다.^{382/}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반도체 외에 다른 제품에서도 대중국 교역 및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유사 입장

^{381/} 반도체, 이차전지, 이동통신, 양자컴퓨터, 바이오메디컬, 핵심 광물(희토류)

^{382/}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에 제한되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 가공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첨단·전략산업에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EU, 일본, 대만)와 다자 협력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조항 개정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와 협상하여 미국의 주요 협력 분야와 대중 제재 영역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 대중 투자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중국 정부로부터 얻어낼 필요도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견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에 투자 및 교역을 해왔던 국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유인이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얻어내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 공급망 확보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르는 기업 활동에 맡기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다. 한국 정부에 있어 한국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논리에 따라 생산기지를 선택하는데 간섭하지 않고 방임하는 전략도 미중 갈등과 공급망 경쟁 압박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다.^{383/}

(2) 한-러 공급망 협력

지난 30년 동안 한-러 교역 및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공급망 협력 분야는 많지 않다. <표 V-3>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은 러시아산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고, 대러시아 교역에서 에너지 집중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384/} 중러북 경제협력 이 강화되더라도 전방위적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예

383/ 김선재,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3.9.21.).

384/ 이상준, “한-러 경제협력 30년의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콜세미나, 2020.10.7.), p. 3, <https://www.kiep.go.kr/boardDownload.es?bid=0033&list_no=13413&seq=2> (검색일: 2023.9.7.).

너지 수출통제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기존의 에너지 교역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한리 협력방안이다.

표 V-3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 (2022년) | |
|---------------------|---------------------------------------|
| 수출 |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석유제품, 화장품, 합성수지 |
| 수입 | 석탄, 원유, 천연가스, 수산물(대게, 명태, 대구) |

출처: KOTRA “한국 무역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RU/ALL/2022/7/exp>> (검색일: 2023.9.7.)을 참고하여 정리함.

2022년 한국의 전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각각 20.1%(석탄), 2.2%(석유), 3.0%(천연가스)로 나타났는데,^{385/}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는 낮지만, 이는 과도한 중동 의존도(석유, 67.4%)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석탄 수입이 증가하여,^{386/}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안전을 위해 러시아와 지속 협력해야 하며, 서방의 장기적·포괄적인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결정은 삼가야 한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387/} 사할린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고, 지역경제의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385/} 도원빈·허슬비,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3-11, 2023.6.27.) p. 1,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454&logGb=A9400_20230628> (검색일: 2023.9.9.),

^{386/} “러-우 전쟁 이전과 비교해도 EU,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은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2021년 평균 수준 대비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었다.” 도원빈·허슬비,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p. 1.

^{387/}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의 에너지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므로 공동 개발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다.^{38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사할린 1(Sakhalin 1)’ 유전 개발에 참여하던 엑손 네프테가스(Exxon Neftegas) 같은 서방 기업들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석유개발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2023년 초 사할린 1 유전 개발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개발사업 지분을 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으므로,^{389/} 한국 기업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개발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390/}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사할린 석유·가스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석유 회사의 지분을 국유화하고 있고,^{391/} 한국 기업에 지분을 매각한 적이 없어 한국 기업의 개발 참여를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정유회사의 석유·가스 채굴 기술력이 낮은 것도 협력의 저해요인이므로 사할린 석유, 가스 공동 개발에서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392/}

석유, 천연가스 외에도 한국은 핵심산업에 사용되는 일부 중요 광

388/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7-002, 2017.4.), p. 31,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014-018a-e053-b46464899664>> (검색일: 2023.9.1.).

389/ Vladimir Afanasiev, “Russian hopes raised for revival of Sakhalin 1 development,” *Upstream*, 2023.1.11., <<https://www.upstreamonline.com/production/russian-hopes-raised-for-revival-of-sakhalin-1-development/2-1-1385636>> (검색일: 2023.9.8.).

390/ 그러나 한국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 후 역대 정부가 지속해서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서캄차카 광구) 참여를 시도하였지만, 러시아 정부의 개발계획 변경, 대러 제재, 남북관계 악화로 개발이 지연 및 취소되어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상준, “한-러 경제협력 30년의 평가와 과제,” pp. 11~13.

391/ “Russia Moves to Nationalize Sakhalin-2 Offshore Oil and Gas Project,” *The Maritime Executive*, 2022.7.3.,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russia-moves-to-nationalize-sakhalin-2-offshore-oil-and-gas-project>> (검색일: 2023.9.8.).

392/ 박지원,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물과 원료를 러시아에 상당 비율 의존하고 있다.^{393/} 이러한 핵심산업 원료를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지만, 러시아산 원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다. 한국은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의 광물 개발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2030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금속·광물 산업 발전전략」을 채택하였고, 2030년까지 금속·광물 산업에 12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은 러시아 리튬, 니켈, 알루미늄 등 광산 개발 및 가공에 투자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다.^{394/}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대러 제재 전부터 양국은 러시아 동부지역의 수소에너지 공동 개발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으므로,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수소에너지 개발 사업 관련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395/} 한러 간 이러한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협력 사업에서 교훈을 얻어 성공 모델이 될만한 대표적인 사업을 한두 개 발굴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한러의 공급망 협력도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393/ 33.2%의 팔라듐(반도체 소재),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원료) 23.4%, 페로실리콘 34.6%와 페로실리코크로뮴(철강제조 원료) 92.9%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러시아 의존도 20% 이상 수입품목 118개…국내 주력산업 원자재도 포함 ‘비상’,” 『이투데이』, 2022.3.1.,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0103>> (검색일: 2023.9.8.).

394/ 박지원,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KOTRA, “2021 러시아 광산업 정보,” 2022.1.1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1814> (검색일: 2023.9.26.).

395/ 위의 글.

2.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윤정현)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주도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 나타난 부정적 안보효과와 경제무역 관계의 변화는 중국에게 있어 대안적 공급망 형성 및 회피의 필요성에 대한 유인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들이 곧바로 중러북 안보결속이나 경제관계 긴밀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고위-저위 기술별 파급효과, 국제사회의 제재 유지 측면, 나아가 미중 양국의 관계구조, 인식의 대내외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르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중러북 경제관계가 주로 상황변수에 의해 안보적 연대에 기반한 느슨한 형태로 지속되느냐, 혹은 더욱 긴밀한 블록화로 나아가느냐는 단기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요소들의 종합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미치게 될 안보적, 나아가 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그 현실화 가능성의 크기와는 별도로, 중러북 관계 진화의 도전은 무엇인지, 어떠한 접근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동시에 중러북 결속이라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도전 분야별로 구체적인 위험성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러북의 결속 도전을 이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대응전략 구상이 그 실천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가. 중러북 관계 진화의 도전에 대한 접근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중러북 경제적·안보적 관계의 심화와 진영 간 경색 국면은 한반도의 지정학 구도에도 매우

큰 불확실성과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핵 문제로 이미 고강도 제재에 놓여있던 북한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화의 균열과 신냉전 구도는 고립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러의 국제사회 내 고립상황은 2019년 하노이의 미북 핵담판 결렬 직후와 달리 북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 입장에서의 대외환경 측면 뿐만아니라 제재와 공급망 배제라는 도전에 놓여있는 중러의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변함 없는 지지를 보이는 병영화된 우호국으로서 군사물자 상당수를 비축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0년 7월 평양에서의 중북 정상회담에 이어 2023년 9월 보스토치니에서의 러북 정상회담을 가지며, 관계결속에 실천적인 행보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저렴한 에너지와 식량의 수입, 비공식적 인력의 러시아 파견, 도네츠크 등 신생 러시아 위성국들과의 경제관계 확대 등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안 부족한 군수물자를 지원받기 위한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 역시 이 같은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밀월관계가 단순히 경제·통상 이슈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2023년 9월의 러북 정상회담이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로켓·위성기술의 근거지인 러시아 신설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북한의 한반도 '신냉전 구도'의 악용 가능성 모니터링

현재 미중의 정치경제적 대립의 지속과 고착화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북중 우의담 내부를 개

작하고 중국인민지원군 묘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회주의 이념의 강화에 기반한 연대와 반미 기조에 힘을 실어 왔다.^{396/} 동시에 러시아와는 ‘전승절’ 당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의 증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397/} 지난 9월金正은의 방러로 인한 러북 군사안보적 밀착은 한반도의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견제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또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레짐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그동안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350명 가량, 블라디보스토크에 100명 이하의 노동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북한 당국은 주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에 노동 인력을 파견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파견 노동력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는 중국에 서보다 높은 수당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98/}

여기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러 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결속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제재망의 균열과 필요물자의 확보라는

396/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수행에서 맺어진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의 과시; 우의탑의 내부개작공사가 완공된 것과 관련한 행사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6.29.

397/ 최용환·이기동,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23.9.), p. 4, <<https://www.inss.re.kr/common/download.do?atchFileId=F20230926171414879&fileSn=0>> (검색일: 2023.10.26.).

398/ “北, 러시아에 신규 노동 인력 파견…대북제재 구멍 커지나,” 『Daily NK』, 2023.4.28., <<https://www.dailynk.com/20230428-1/>> (검색일: 2023.10.2.).

실리적 효과 역시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러북 3국이 서로간의 연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중러북 관계 발전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작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제재구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로 고립의 가속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제재에 따라 2022년도의 수입량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유럽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었다. 대신, 이를 별충해준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이 부상하였다.^{399/}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수입량을 증대한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세계 경제규모 2위인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량 증가는 러시아의 대규모 외화 획득을 위한 물꼬를 터주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러 양국은 지속적으로 밀월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협력을 넘어 국제지역 현안 및 다자 외교 무대와 정보 공유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3월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무제한의 우호 관계(no-limits friendship)’임을 외교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400/}

(2) 중러북 긴밀화에 대응한 한미일 연대의 공통 메시지 발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만의 역량으로는 북한과 중러의 새로운 밀월관계가 제기하는 불확실성과 도전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 같은 지

399/ 현승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분쟁,” 전재성 외,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2023), p. 36.

400/ 김경숙,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430호, 2023.4.28.), p. 1,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304/F20230428135230197.pdf>> (검색일: 2023.10.2.).

정확적 격변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효적인 한미일 3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기초하여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 상황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미일 대 중러북의 진영 간 대결구도 고착화로 나아가고자 함이 아니며, 국제적 합의와 규칙을 위반한 이들 고립 국가들이 더욱 밀착함으로써 한반도에 위협상황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차원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의지를 한·미·일 3국이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북한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이 지속가능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제 평화를 훼손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공급망 배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EU 및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는 공급망 우회 전략의 하나로 중러 간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은 단절되고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중러 경제블록 참여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한미일과 중러북의 진영 간 대결 구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행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은 중러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안보적 자율성을 훼손하고 또다른 불안요소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401/} 마찬가지로

^{401/} China Power, “What Are the Weaknesses of the China–Russia Relationship?” 2022.6.29., <<https://chinapower.csis.org/china-russia-relationship-weaknesses-mistrust/>> (검색일: 2023.10.26.); Ian Johnson, “Has China Lost Europe? How Beijing’s Economic Missteps and Support for Russia Soured European Leaders,” *Foreign Affairs*, 2022.6.1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2-06-10/has-china-lost-europe>> (검색일:

중러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발 지정학 위기 고조로 인한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즉, 일시적으로는 국제제재의 빈틈을 활용함으로써 대북 에너지, 비료, 식량 등의 지원 등 고립상황을 타개하는데 일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함을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중러에 있어 일시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비핵화 공감대, 한국과의 관계, 북한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른 전략적 부담 등은 중러북 3자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활용해야 한다.^{402/} 한미일 3국의 공통된 위협인식에 기반한 일관된 경고 메시지 발신은 중러북으로 하여금 정치적, 가치적 연대를 넘어 첨단기술과 군사 협력에까지 밀착하거나 경제적으로도 긴밀해지고, 상호 간의 대안적 공급망을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는 첫 번째 실천안이 될 것이다.

(3) 북한발 사이버 범죄 비호 등 우려 행위 차단을 위한 공조

현재 한미일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발 경제적 위협 중 하나는 대규모 사이버 해킹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가상 자산 탈취 문제는 대표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미국 ब्ल록체인 분석기업 Chainalysis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은 2018년 이후 매년 2억 달러어치를 상회하는 암호화폐를 해킹을 기반으로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03/} 해당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2023.10.26.).

^{402/} Sungmin Cho and Oriana Skylar Mastro, "North Korea Is Becoming an Asset for China," *Foreign Affairs*, 2022.2.3.,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22-02-03/north-korea-becoming-asset-china>> (검색일: 2023.10.26.).

^{403/} "北, 작년 암호화폐 4억 달러 해킹...이더리움이 58%," 『한국경제』, 2022.1.16.,

및 투자 회사들에서 피싱이나 악성코드를 통해 코인을 탈취한 뒤,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이관하는 작업들을 주로 활용해왔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다양한 코인들을 동시에 여러 차례 세탁하는 수법 또한 고도화돼 있으며, 이때 사용하는 디파이(DeFi)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므로 법, 규제 집행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자산 동결 위험 또한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무역협회는 북한이 2022년 사이버 해킹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수출로 약 23억 달러(한화 3조 원대) 규모의 외화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하였다.^{404/} 이중, 사이버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가 가장 큰 부분으로, 2022년 기준, 북한 해커조직은 총 16억 5천만 달러(약 2조 67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했고 이 액수는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총 탈취 액수 중 43.4%, 다시말해 총 38억 달러를 차지하며 세계 1위의 규모로 추정된다.^{405/} 특히, 북한의 국방성이나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에서 해외의 IT 인력 송출 및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을 통해 고수익의 외화벌이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IT 분야 인력 양성을 통한 해킹활동은 결과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경제가 전 세계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국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1617971>〉 (검색일: 2023. 8. 18.).

404/ 한국무역협회, “북, 작년 해킹·불법수출로 23억달러 외화수입…2018년 이후 최대,” 2023. 3. 13.,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22C08691EEC6CCDAE3F73060CAC6ACFF.Hyper?pageIndex=1&nIndex=73754&sSiteid=2〉 (검색일: 2023. 10. 26.).

405/ “북한 연계 조직, 작년에 가상화폐 2조원 이상 훔쳐(종합),” 『연합뉴스』, 2023. 2. 3.,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057551009>〉 (검색일: 2023. 10. 26.).

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도 북한 IT 업체·책임자들을 제재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24일 기준으로 44개 기관, 43명이 독자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406/}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2021년 투자회사 및 암호화폐거래소를 노린 7건의 사이버공격 시도로 4억 달러 가량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북한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이들 암호화폐를 농축우라늄생산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핵·미사일 개발에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영변의 핵실험 경수로의 공사 중이었던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의 개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407/} 이처럼 암호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따른 불법적 암호화폐 획득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핵심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408/}

문제는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행위가 북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근거지를 둔 해외 IT 인력들로부터 수행된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노동자들을 해외 파견한 바 있으나 팬데믹 국면에서 이들 해외파견노동자 상당수는 조속히 귀국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는 IT 인력도 있으며, 해외에 근거지를 통해 해킹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수행하는 대규모 가상자

406/ “한미, ‘북 IT 자금줄 차단’ 대북 제재…해커 교육기관 포함도,” 『한겨레』, 2023. 5.2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3029.html> (검색일: 2023.8.18.).

407/ “UN “북 해커조직 김수기, IAEA·KAI 해킹”, 『아시아경제』, 2022.2.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0810211910643>> (검색일: 2023.8.18.).

408/ “유엔, 北, 작년 사이버공격서 번 돈으로 미사일 기술 증강,” 『중앙일보』, 2022.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877>> (검색일: 2023.8.18.).

산 탈취 및 이로인한 사이버 위협은 중리의 소극적인 감시 및 관리 소홀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리는 대표적인 사이버 해킹 위협을 제기하는 우려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 기소와 제재, 대항 공격 역량 등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를 비호하는 중리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제재와 준수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미일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나. 중러북 결속 이완을 위한 대응 전략

(1) 중러북 이해관계의 틈새 확장 전략

중러북 관계의 긴밀화에 대응하여 단순히 이들을 제재하는 방안으로는 세계 경제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상호의존적 상황으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를 획득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이들에 대한 밀착을 예방하기 위한 유인을 탐색하고, 3국의 이해관계 차이의 틈새를 적극 파고드는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그 결합의 정도를 이완시키는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3각 연대를 구성하는 각 양자관계가 가진 이해관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 이완시키는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최근의 러북 밀착과 달리 여기에 명시적인 힘을 싣고 있지 않은 중국의 행보는 공략이 필요한 주요한 틈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중북 관계의 측면을 보면, 중국은 식량과 중유 등 각종 필수 재를 북한에 공급하며 이른바 북한의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에 북한의 2차,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제재에 찬성한 바도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 악화보다 관계 유지가

국익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전략도발이 한미 일 안보협력 강화, 서태평양에서 미군 증원과 전략자산 전진 배치로 이어지는 한편, 불필요한 연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급속한 대북 밀착을 저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 지지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러북 간 협력을 강화할수록 보다 적대적인 한미일 연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의 안보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러북 관계의 급속한 밀착이 그간 중국이 주도해왔던 대북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뚜렷이 여기에 힘을 싣기보다는 관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409/}

이 같은 상황에서 2023년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한덕수 총리와 만난 시진핑 주석이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할 언급이라 할 수 있다.^{410/} 그간 한미일 3각 연대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쳤던 중국과의 부정적인 기류를 전환하고, 나아가 중러북의 틈새를 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모두 정치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그간 정권 정체성 유지

409/ 홍현익,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정세와 정책』, 2023년 9월 호 (2023), p. 5.

410/ “시진핑 주석, 한덕수 총리에 “방한 진지하게 검토,” 『한겨레』, 2023.9.23.,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vws_-1o2DAXW7bfUHHe65ATIqFnoECA0QAQ&url=https%3A%2F%2Fwww.hani.co.kr%2Farti%2Fpolitics%2Fdiplomacy%2F1109785.html&usg=AOvVaw32TdwDyjtF7oKmYIT_wSiO&opi=89978449> (검색일: 2023.9.27.).

를 위한 원칙으로 강조해왔지만, 대중 경제 의존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더 실질적인 지원 역시 희망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대러 관계 강화는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보다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측면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은 현재의 공급망 배제 구도에서 유의미한 대안을 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중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경제회복과 반도체 등 필수 불가결한 주요 산업기술의 공급을 위한 파트너는 여전히 한국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우려국가 투자제한 행정명령 등, 중국으로의 주요기술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에대한 유예요청 및 예외 품목 확대를 미국 측에 일관되게 요청해왔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이 같은 한국의 역할은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인식시킴으로써, 선부른 러북과의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규범의 실효화 전략

그간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한미일 차원의 반도체 첨단분야 협력,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일, 한미동맹을 가치 규범으로 격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는 가치 규범의 외부에 위치하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러와 엄연히 현실적인 경제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제재와 디커플링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안보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산업, 기술 품목의 협력보다는 범용반도체, 광물, 요소수,

소비재 등의 영역을 위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중국 측이 관심 갖고 있는 첨단반도체,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이나 러시아의 가스개발 협력 등에 대해서는 국제제재 상황과 규범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인 2023년 6월 6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411/}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불법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활동을 적극 주도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바 북한이 해외파견 노동자를 가장하여 용병을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으로 파견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도 경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의 취약성을 틈타 러시아의 비호 아래 상당한 경제적·군사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412/} 따라서, 향후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활동과 송환 및 파견에 대해 관련국들이 유엔에 해당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이나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중러북의 탈법적 혹은 악의적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사이버와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규범이 작동하도록 중러북의 유엔 제재위반, 우려적 활동에 대한 환기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개발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411/ “尹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 『아주경제』, 2023.6.8., <<https://www.ajunews.com/view/20230607160208438>> (검색일: 2023.8.18.).

412/ 이애리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외화벌이에 미친 영향 : 러시아 해외 파견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북한 경제의 대응: 제4차 북한경제연구포럼자료집, 2023.7.19.).

나, 랜섬웨어, IT기술자 파견 등 국제제재를 무시한 사이버 위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한 사이버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41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규범의 힘 전략에 기초하여 한미 간 공조 강화를 통한 북한 해커 조직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북한 해커에 대한 탐지와 조사, 수사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 경쟁은, 미중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인 동시에 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 간 경쟁’으로 인식되고 있다.^{414/} 따라서 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었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교환, 수집, 공유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원료가 될 것이므로 신기술 패권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EU, 미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집행위에 등록된 휴대용 IT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백악관도 2월 27일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틱톡 사용금지 지침을 내리면서, 30일 안에 틱톡을 삭제하도록 하였다.^{415/}

틱톡 규제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분할은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

413/ 조은정 외, “2023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과제: 핵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431호, 2023. 4. 28.), pp. 4~5, <<https://www.inss.re.kr/common/viewer.do?atchFileId=F20230428152944256&fileSn=0>> (검색일: 2023. 9. 2.).

414/ 이애리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외화벌이에 미친 영향 : 러시아 해의 파견 노동자를 중심으로.”

415/ “‘틱톡 삭제하라’ 미국·EU·캐나다 동시 규제,” 『KBS 뉴스』, 2023. 2. 2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5550>> (검색일: 2023. 9. 2.).

할 수 있다. 인도 정부가 2021년 중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틱톡, 위챗 등 중국 앱 서비스 59개 앱에 대한 사용을 영구 중단시켰는데 인도에서 일자리 2,000개가 사라져 실직 대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416/} 한국도 미국과 서방의 조치에 따라 틱톡 등 중국 디지털 플랫폼을 차단 또는 금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과 사이버공간 간의 진영화 그리고 인터넷 분할에 기초한 비서방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서방의 규제는 서방의 플랫폼 사용 확대나 활용에 대한 묵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에 대한 규범화를 주도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2023년 5월 4일 발표한 「핵심·신흥기술(CET) 표준 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정부의 관여를 확대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기술 가운데 일부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러북 기술 발전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표준이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컴퓨터와 메모리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에너지 및 양자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등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다자 참여 확대를 통한 진영 내부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전략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재편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과 중러북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러북의 협력이 강화되는 경우 한국은 고립화 전략, 틸

^{416/} “사용금지 위기에 빠진 틱톡...미국 중국 싸움에 터질 판국,” 『매일경제』, 2023.2.4.,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30389>> (검색일: 2023.9.2.).

새 확장 전략, 규범의 힘 전략 등을 사용하여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추거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립화 전략, 틈새 확장 전략, 규범의 힘 전략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영 내부의 협력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영 내부에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호주는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국과 완전히 결별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러 북 경제 협력이 고착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한국과 호주의 협력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417/} 한국과 호주는 자유민주진영에 위치해 있으나 미국, 일본, EU와 달리 주요 산업 부문들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민감 품목의 경우, 호주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과 위협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한국과 BBC 관련 첨단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악성 소프트웨어와 백도어 등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을 통한 사이버위협과 사이버공간을 통한 기술탈취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호주는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쿼드나 오커스(AUKUS)에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418/} 나아가 한국의 북한의 사이버안보

417/ 조은정·오일석, “한-호주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기술력과 자원력의 결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437호, 2023.6.2),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6900&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 (검색일: 2023.10.26.).

위협 정보를 호주를 통해 파이프아이즈(FiveEyes) 국가들과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전 세계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공격을 통해 획득한 자금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회피하고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주력 수출 기여 품목은 주로 해외의 광물자원들의 안정적 수급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419/} 현재 미중 경쟁이 신기술 분야에서 자원의 무기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핵심·광물자원들의 안정적 수급에 사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중국이 겔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이번 수출제한을 넘어 리튬이나 희토류와 같은 분야로의 수출제한을 확대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즉, 광물자원 수입처의 다변화 모색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해외 자원개발 및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러북 결속과 배제할 수 없는 경제관계 긴밀화의 가능성에 맞서 한국은 아세안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정교한 자원 외교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18/ 오일석, “동북아 경제안보의 우선순위,” (아산정책연구원 한-호주, 한-뉴질랜드 정책대화, 2023.5.).

419/ 오일석, “광물자원 수출제한과 무기화 대응 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453호, 2023.8.4.), p. 5,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6931> (검색일: 2023.10.26.).

3. 미중공급망 재편과 남북경협 방향(정승호)

현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와 북한 공급망 참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은 향후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제재 무시·회피의 방식으로 확대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추고, 남북 경제관계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앞서 4장 3절과 4절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북한의 공급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경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절의 논의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제재로 인한 경제협력의 제약요인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을 가정하였다. 만일 현 제재 체제가 지속된다면, 북한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소절에서는 공급망과 관련하여 북한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1) 중국 중심의 공급망 참여와 2) 중국을 포함한 중국 외 공급망에 함께 참여하는 두 가지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북한의 참여 여건과 제약요인들을 살펴본다. 특히 두 번째 대안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택일 보다는 양자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큰 수혜를 입는 국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이 북한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절은 북한을 국제경제에 편입시켜 다양한 공급망에 참여시키는 방식(베트남 모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북경협 정책을 제시한다.

가. 공급망 재편과 북한참여 여건

(1) 중국 중심의 공급망 참여

(가) 참여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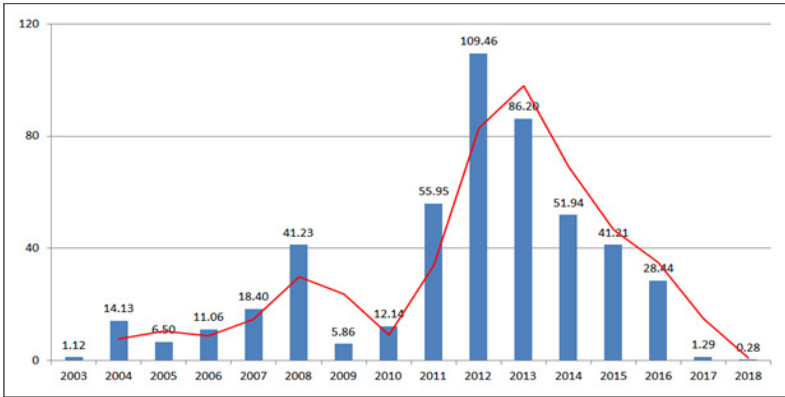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른 저개발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의 저임금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과 가장 긴밀한 경제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중국과 분업구조를 형성하기 유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제1 교역국이자, 제1 투자국이다. 북한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저장(stock) 기준으로 57%(4억 8521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중북 간에는 투자 금액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비공식 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 때까지 감안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수 있다.^{420/} 미국의 Open Source Center에 따르면, 1985~2011년 기준으로 대북 투자 기업 전체 351개의 58%인 205개가 중국기업이다. 중국기업의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경공업, 중공업/건설, 식품/농업, 화물, 화학 분야 등이고, 특히 광업분야의 투자 비중이 전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421/}

^{420/} 이종규,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p. 21.

^{421/} Open Source Center, "North Korea - 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 with Foreign Partner, 2004-2011," OSC reporter, 2012.3.1., <<https://info.publicintelligence.net/OSC-NorthKorea-ForeignJointVentures.pdf>> (검색일: 2023.10.25.).

그림 V-1 중국의 대북투자: 2013~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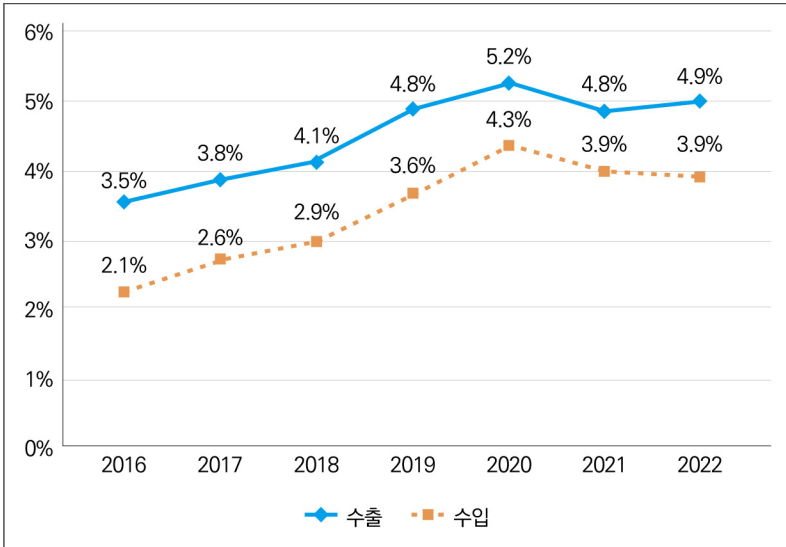


출처: CEIC, (<https://www.ceicdata.com/ko>), 재인용: 이종규,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p. 22.

중국의 내부적인 산업정책도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산업규모가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 조달하는 것보다 주변 개도국으로 조달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비중을 늘리고 있다.^{422/} 일례로 중국의 최근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하 CLMV)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림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전체 수출, 수입에서 CLMV 국가의 비중은 2016년 수출의 3.5%, 수입의 2%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수출입 각각 5%와 4%대까지 성장하였다. 중국 주도의 공급망이 강화되면서, CLMV 국가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22/} 김계환 외,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 (세종: 산업연구원, 2022), p. 189.

그림 V-2 중국의 전체 수출, 수입 중 CLMV국가의 비중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의 중국기업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전년대비 18% 증가한 95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투자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집중되었다.^{423/} 향후 경제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북한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확대로 발생하는 무역과 투자의 기회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42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2021年1-6月我对“一带一路”沿线国家投资合作情况,” 2021.7.29., 재인용: 유현정, 『동남아시아에서 미중 간 지정학적 경합: 현황과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 40.

(나) 제약요인

그러나 북한이 중국 중심 공급망에 참여할 경우 경제발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약요인들도 존재한다. 우선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 시장에서 위안화가 유통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24/}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7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자본주의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문화적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425/}을 언급한 것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참여한다면 북한경제의 중국 일변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북한의 산업구조가 저위산업에 고착화 될 위험성이 있다. CLMV국가의 사례를 북한에게 적용해 보면, 중국은 북한을 첨단산업 제품의 생산기술분야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CLMV국가와 중국의 주요 교역품을 살펴보면, 전자기기와 그 부품(HS 85부), 기계류(HS 84부), 편물(HS 60부) 등 임가공 관련 품목들이 주를 이룬다. 즉 CLMV 국가들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저위품목들의 생산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426/}

424/ 이종규는 북한이탈주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시장에서 거래한 주요 화폐는 위안화(52.5%)로 원화(43.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규,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6), p. 67.

425/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426/ 김계환 외,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에 대한 시사점』, p. 189.

마지막으로 부채함정(debt trap)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상당수 중국의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일례로 2017년 스리랑카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운영권이 99년간 중국 측에 양도되면서 ‘부채위기론’이 확산된 바가 있다.^{427/}

(2) 중국 외 공급망에 동시 참여 : 베트남 사례

핵으로 인한 제약만 해소된다면, 북한에게 중국 주도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미일 기업의 공급망에도 동시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 사실 미국 주도의 탈중국화 흐름과 중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진행되는 현시점은 북한과 같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제적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급망 재편과정 중 해외투자자와 무역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한미일 글로벌 기업들도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표 V-4〉 참조). JP모건이 탈중국기업 유치로 적당한 국가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중국에서 공장이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700억 엔을 지원 받을 87개 기업목록을 공개하였는데, 그중 15개 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428/}

^{427/} “Sri Lanka signs deal on Hambantota port with China,” *BBC*, 2017.7.29.,
재인용: 유현정, 『동남아시아에서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 현황과 전망』, p. 56.

표 V-4 한미일 주요기업의 탈중국-베트남 이전 사례

| 국가 | 기업명 | 생산업종/이전분야 | 이전국가 |
|----|------------|---------------------------|---|
| 한국 | 삼성 | 노트북, PC/스마트폰 | 선전, 덴진, 광둥, 펄샤 중국현대 공장규모 축소, 베트남 생산확대 |
| | 현대 자동차 | 자동차, 차량부품 | |
| | LG전자 | 차량용 오디오 | LG쿤산 청산, 베트남 하이퐁 이전 |
| 미국 | 아마존 | 전자책 단말기, AI 스피커 | 중국→베트남(계획) |
| | 델 | 컴퓨터, 모니터 | 중국→베트남(생산) |
| | 휴렛팩커 | 노트북 | 중국→베트남(계획) |
| | 구글 | 스마트폰 부품, AI 스피커 | 중국→베트남(계획) |
| | 마이크로소프트 | 노트북, 태블릿 PC | 중국→베트남(생산) |
| | 나이키 | 신발 | 중국→베트남(생산) |
| | 인텔 | 반도체 | 중국→베트남(생산) |
| 일본 | 샤프 | 차량용 LCD, 복합기 | 중국→베트남(생산) |
| | 닌텐도 | 가정용 게임기 | 중국→베트남(계획) |
| | 아카바 다이 캐스팅 | 알루미늄·아연 합금, 금형 | 중국→베트남(계획) |
| | 이노우에 | 스테인레스 가공 | 중국→베트남(확장계획) |
| | 쇼와 | 살균, 소독장치 | 중국→베트남(계획) |
| | 후시모토 | 부직포, 흡착포, 필터 | 중국→베트남(확장계획) |
| | 테크노글로벌 |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금형 | 중국→베트남(확장계획) |
| | 후지키 | 밸브, 피팅, 바디가공, 연마 | 중국→베트남(확장계획) |
| | 플러스 | 문구제품, 필름, 의료용품 | 중국→베트남(확장계획) |
| | 프로닉스 | 금형, 성형제품 | 중국→베트남(확장계획) |
| | 코세라 | 복합기, 복합기 제조 | 중국→베트남(생산) |
| | 호야 | 광학렌즈, 반도체 장비, LCD 패널 | 중국→베트남(이전계획) |
| | 메이코 | 휴대폰 장비 및 부품 | 중국→베트남(이전계획) |
| | 요코오 | 자동차 부품 및 차량 안테나 | 중국→베트남(이전계획) |
| | 마츠오카 | 의료제조, 마스크 보호복 | 중국→베트남(생산) |
| | 신에츠 화학 | 희토류 자석,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부속 | 중국→베트남(이전계획) |
| | 닛키 소 에이코 | 범용 소형 펌프 및 정수기 | 중국→베트남(이전계획) |
| | 아시스 | 스포츠화 | 중국→베트남(생산) |
| | 유니클로 | 의류 | 중국→베트남(생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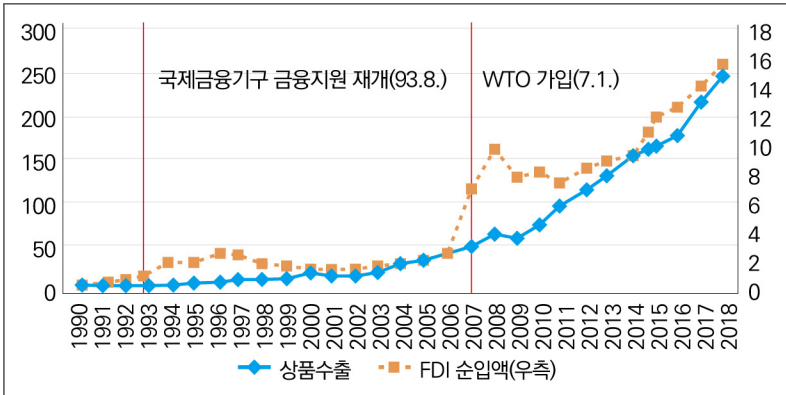
출처: 이주미,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022, 2020); 기타 언론보도 종합 정리, 재인용: 정혜영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탈중국 현상과 베트남의 공급망 역할(1): GVC의 탈(脫)중국 기업과 베트남 정부의 공급망 강화 노력.”

428/ 정혜영,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탈중국 현상과 베트남의 공급망 역할(1): GVC의 탈(脫)중국 기업과 베트남 정부의 공급망 강화 노력,” (CSF중국전문가포럼, 2021.4.19.),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1930&mid=a&board_id=4&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EC%A0%95%ED%98%9C%EC%98%81&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검색일: 2023.10.25.).

이처럼 베트남이 중국 다음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있고, 실리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429/} 베트남은 대중관계에 있어 중국 공산당과는 당차원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경제체제에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해외자금 유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의 제재 해제 및 국교정상화 논의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전면 철수하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의 철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인 1992년에 경제제재 해제를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도 허용하였다. 이후 2007년 WTO 가입이 승인되면서, 투자제도가 개선되어 FDI 유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V-3 베트남의 상품수출액과 FDI 순유입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출처: World Bank Data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재인용: 정승호, “10장 북한경제 정상화와 남북경협 미래,” 이호준 외, 『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KDI 개원 50주년기념 연구서』 (파주: 나남, 2021), p. 287.

^{429/} 정혜영,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탈세계화’ 시대, ‘세계화’로 전진하는 베트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IF전문가포럼, 2023.5.2.),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46370&mid=a30200000000&systemcode=03>> (검색일: 2023.10.25.).

둘째는 다양한 경제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을 통한 투자와 교역을 증대시킨 것이다.^{430/}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최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전 세계 50개국을 포괄하는 15개의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표 V-5〉 참조). 특히 미중 진영과 관계없이 CPTPP, RCEP에 동시 가입하였다. 관세상의 혜택과 투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표 V-5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현황

| | 구분 | 체약국 | 참여 국가 |
|----|-------|----------|---|
| 1 | ASEAN | AEC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
| 2 | | 호주, 뉴질랜드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호주, 라오스 |
| 3 | | 홍콩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홍콩 |
| 4 | | 인도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
| 5 | | 일본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
| 6 | | 한국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한국 |
| 7 | | 중국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
| 8 | CPTPP | |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
| 9 | 베트남 | 칠레 | 베트남, 칠레 |
| 10 | 베트남 | EU | 베트남, EU 가입국(*2021.1.1. 영국 제외) |

430/ 정혜영,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탈세계화’ 시대, ‘세계화’로 전진하는 베트남.”

| | 구분 | 체약국 | 참여 국가 |
|----|-----|-----------|--|
| 11 | 베트남 | 유라시아경제 연합 | 베트남,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 12 | 베트남 | 일본 | 베트남, 일본 |
| 13 | 베트남 | 한국 | 베트남, 한국 |
| 14 | 베트남 | 영국 | 베트남, 영국 |
| 15 | | RCEP |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출처: 조수현, “글로벌 생산기지 베트남 이전 가속화, 구인난 지속,”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9.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r=243&bbsSn=243&pNttSn=196328> (검색일: 2023.10.25.).

물론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 스스로의 국가 전략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FDI 유치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개선, WTO 가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저에는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수반되었다. 주요하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헌법개정과 투자자산 보호 및 기업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되었다.

한편 북한 당국의 노력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모델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간의 문제가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채택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베트남의 사례를 기초해 보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1995년에 이루어진 이후 WTO 가입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앞서 <그림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외자유입의 효과가 있었지만,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WTO 가입이 필수적이다. <표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WTO 가입 절차는 당사국의 가입신청에서 시작하여, 작업반 설치, 양해각서 제출, 작업반 회의, 다자·양자 협상, 가입승인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높은 가입 장벽으로 인해 베트남은 WTO 가입 신청 후 완료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표 V-6 베트남의 WTO가입과정

| | 날짜 | 기간/횟수 |
|---------|------------|----------|
| 가입신청 | 1995.4.1. | - |
| 작업반 설치 | 1995.1.31. | - |
| 양해각서 제출 | 1996.9.24. | - |
| 작업반 회의 | 1998~2006 | 14회 |
| 다자협상 | 1998~2006 | 6년 |
| 양자협상 | 2002~2006 | 5년, 26개국 |
| 가입승인 | 2007.1.11. | 총 12년 |

출처: 최장호·최유정,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남북경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 41.

나. 공급망 개편에 따른 남북경협 의 새로운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핵문제로 인한 제약조건이 완화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은 기존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관성에 따라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의 방향은 북한을 국제경제에 편입시켜 베트남과 같이 중국 이외의 대안을 가지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일 중심의 공급망 참여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확실한 경제적, 정치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급망 참여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고부가가치 분야 참여를 통한 경제적 이익, 국제금융기구/WTO 가입을 통한 글로벌 정상국가로의 입지 구축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절에서는 이와 관련한 남북경협 정책의 방향을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WTO 가입 지원, 2) 한국 글로벌 대기업의 남북경

협 참여 유도, 3) 북한의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장기적 투자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1) 국제금융기구/WTO 가입지원

북한의 국제경제로의 편입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IMF, WB(World Bank,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서 시작된다. IMF/WB에 가입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IIB 등의 다른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WTO 가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금융기구/WTO 가입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과정을 한국이 지원함으로써 준비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현재 모든 국제금융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로서, 북한 가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경제 통계 접근과 검증이 전제조건이 되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 지역의 정확한 경제통계 작성과 공개를 위해 인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이전단계에서도,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기구의 대북 개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431/} 세계은행은 1993년 최초로 ‘세계은행 비회원이자 유엔 비회원국’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신탁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한 이후, 동티모르, 코소보 등에 대해서도 특별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한 바 있다.

^{431/} 이종운,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유라시아연구』, 제11권 제4호 (2014), p. 43.

표 V-7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 세계은행의 다자간 신탁기금 활용사례

| 기 금 | 내 용 |
|------------------|---|
| 팔레스타인 신탁기금 | 개발복구 명목으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4.1억 달러 지원 |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신탁기금 | 1996년 세계은행이 1.5억 달러의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개발복구 지원 |
| 동티모르 신탁기금 | WB, ADB, EU 등 국제기구와 26개국 이상 참여 1999년에서 2003년까지 8억 달러 지원 |
| 코소보 특별신탁기금 | 1999년 2500만 달러의 이익잉여금으로 조성 |

출처: 김영근,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 공적 개발원조 ODA 지원 규모추정,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2008), p. 8.

(2) 한국 대기업의 참여 유도

기존의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참여 주체가 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공급망 참여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위 산업의 공급망을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국 중심의 공급망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글로벌 대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필요하다. 탈중국화로 인해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주요 기업이 바로 이들 글로벌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에서도 한국 대기업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진출기업 4개(삼성, LG, 효성, POSCO)가 베트남의 전체 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2/} 남북경협도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단순 임가공무역에서 고부가가치 가공무역으로 경협구조

^{432/} 정승호, “10장 북한경제 정상화와 남북경협의 미래,” p. 293.

가 발전할 때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개성공단과 같이 정부가 담보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 경제관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민족적 특수관계’에 기반한 배타적 남북경협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은 국가,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가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협에 적용되는 규범 또한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기보다는 국제적 시장 규범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433/}

(3) 북한 산업인력 양성지원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한국기업 주도의 고부가가치 분야 공급망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산업인력 부족 문제일 수 있다. 북한의 현재 인력 수준은 남한의 대규모 투자가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다. 일례로 북한의 2008년 인구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노동자는 288만 명인데, 좁은 의미로 ICT 제조업이라 볼 수 있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업 종사자’는 4만 명이고, ‘전기 제조업’ 종사자까지 포함해도 10만 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434/}

김수정·박성근·김영민은 북한의 성장 시나리오별 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추정한 바 있다.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는 한국, 중국 형태의 성장경로를 따르는 것을 가정하고, 저성장 시나리오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성장경로를 따르는 것을 가정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현재부터 25년 이후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는데, 저성장 경로를 따를 경우에도 경공업에서 334만 명, 중화

433/ 정승호, “10장 북한경제 정상화와 남북경협의 미래.”

434/ 이석기,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2019), p. 105.

학공업에서 211만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제조업 노동자 숫자와 비교할 때 거의 250만 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다.^{435/}

표 V-8 북한의 장기(T+25)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구분 | 저성장 시 인력수요 (천명) | 고성장 시 인력수요 (천명) |
|------------------|--------------------|--------------------|
| 농림어업 | 4,020 | 2,260 |
| 광업 | 313 | 421 |
| 제조업 | | |
| (경공업) | 3,340 | 5,492 |
| 음식료품 및 담배업 | 641 | 1,604 |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 2,055 | 2,681 |
|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 312 | 408 |
|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 133 | 243 |
| 기타 제조업 | 199 | 556 |
| (중화학공업) | 2,110 | 3,861 |
| 화학제품 제조업 | 107 | 223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05 | 199 |
| 1차 금속제품 제조업 | 41 | 55 |
| 금속제품 제조업 | 61 | 112 |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18 | 983 |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670 | 1,164 |
| 정밀기기 제조업 | 291 | 530 |
| 운송장비 제조업 | 318 | 595 |
| 전기가스수도업 | 557 | 1,395 |
| 건설업 | 592 | 1,396 |
| 서비스업 | 1,536 | 2,931 |
| 합계 | 12,469 | 17,757 |

출처: 김수정·박성근·김영민, “북한의 산업 및 인력수요 전망,” p. 22.

따라서 북한이 한국 주도 공급망에 참여할 것으로 가정하고, 향후

^{435/} 김수정·박성근·김영민, “북한의 산업 및 인력수요 전망,” (한국경제연구학회 발표자료, 2021), p. 22, <<http://www.akes.or.kr/conf/papers/2021/4B3F.pdf>> (검색일: 2023.10.25.).

인력 수요가 늘어날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제도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유엔 기구를 플랫폼으로 하여 공동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의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이재영)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에서 우선 경제안보는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통상, 정치, 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436/}

따라서 경제안보 외교는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필수 품목, 서비스, 기술의 원활한 유입과 부적절한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외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고, 원활한 유입을 위해서는 수입 취약성 해소를 위해 수입 다각화를 통한 필수 품목의 국가 비축 확대, 그리고 민간의 해외 장기공급계약,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수출통제와 기술 이전 통제 등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속에서 능동적인 경제 안보 외

^{436/} 류성걸 의원 등 10인 의원발의 수정가결, 2023.8.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2023.9.11., 현재 체계지구 심사 중, 의안정보시스템, p. 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P2M1W0E1B3W1B814Y4E2V6G8N3E8> (검색일: 2023.10.26.).

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교는 미국, 일본, EU, 호주 등 전략적 파트너들과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소통과 정보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IPEF, G20, APEC, OECD, WTO 등 경제협력체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또한 범부처 태스크포스 출범을 통해 해외 충격에 대한 공급망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기술 표준 협력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437/}

한편 류성걸 의원 등이 발의한 기본법안 중 경제안보외교와 관련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과 경제안보 품목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438/} 이는 구체적으로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대비·대응과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 능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말한다.

가. 가치와 원칙

국가안보전략에 기반한 한국의 경제 안보 외교의 가치는 역내 자유무역 증진 규칙 기반 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고, 원칙은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포용, 신뢰, 호혜로 경제 안보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것이다.

^{437/}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2023.6.7., <<https://www.president.go.kr/download/648037bd2efd2>> (검색일: 2023.10.26.).

^{438/} 류성걸 의원 등 10인 의원발의 수정가결. 2023.8.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2023.9.11., 현재 체계지구 심사 중, 의안정보시스템, p. 9.

(1) 기본 입장과 가치: 역내 자유무역 증진 규칙 기반 경제 질서 강화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기본 입장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회복력 제고를 위한 역내 경제 안보 네트워크 확대, 경제 관계 다변화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양자 및 소다자 간 소통과 협력 증대이다. 특히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핵심 섹터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태양광 패널, 특정 화학품을 포함한 영역에서 중국의 공급망으로부터 다각화하려는 노력 실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대체하려는 다른 국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한 다른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중국의 공급망이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 미국이 대체재를 제공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국가안보 위협이 가장 큰 영역을 발견하고 미국과 파트너국가들과 이러한 영역에서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439/}

따라서 한국은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탈중국만 강조하거나,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한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산업 섹터, 분야, 제품, 공급망 등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한국의 기본 입장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요인으로 국가 간 교역의 축소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경제안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과 글로벌 식량 위기 심화를 초래했다. 공급망의 불안정과 충격에 처한 국가들의 대응 전략은 주로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자립이었고, 구체적으로 생산 시설의 국내 이전인 리쇼어링과 동맹

^{439/} Richard Fontaine, "The Myth of Neutrality: Countries Will Have to Choose Between America and China," *Foreign Affairs*, 2023, 7, 12.,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myth-of-neutrality-choose-between-america-china>> (검색일: 2023.10.26.).

국 이전인 프렌드 쇼어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 주의 정책은 기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440/}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대신 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TIPF는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인 관세 양허를 제외한 포괄적인 업무협약(MOU)을 말한다. 시장 개방강도가 약한 EPA는 관세보다 자원과 에너지와 같이 최근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체결된 협정이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개방을 핵심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었으나 지정학적 요인과 팬데믹 등의 요인으로 WTO체제와 자유무역이 쇠퇴하면서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EPA와 TIPF를 통해 협상 과정이 길고 국회 비준도 거쳐야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을 보완해 공급망 등 시급한 통상 이슈를 시의성 있게 다루도록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자유무역협정 22건, 59국, TIPF는 8건, EPA 2건을 체결했고, 2023년 연말까지 TIPF 16건, 30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441/}

(2) 원착: 경제 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와 포용·신뢰·호혜의 협력

신안보 이슈 가운데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에서는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인 확보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체계 구축, 글로벌리더 국가들과 국제규범 형성 주도 협력, 국제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의

440/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441/ “자유무역 흔들리니…K통상, 이제 FTA대신 TIPF로,” 『조선경제』, 2023.10.4., B1, B2면.

제 선점과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것이다.^{442/}

특히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은 정부가 기업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기업이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는데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 국가들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 협력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규범의 내용과 추세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의제 선점과 문제해결을 주도하려면 다자협력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협력 의제를 선점하고, 다자협력체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포용, 신뢰, 호혜를 협력원칙으로 하여 9대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을 다섯 번째로 제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하여 아세안을 주요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 삼고, 인도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호주와 미래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캐나다와 핵심 광물 확보와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핵심 원자재와 반도체 관련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EU와의 능동적인 경제 안보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 밖에도 중남미와 전략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교역 확대 등 다변화가 필요하다.^{443/}

이러한 포용, 신뢰, 호혜의 협력원칙을 지키면서 국가 간 이해충돌과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442/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443/ 위의 글.

미국, 일본과는 잘 호응될 수 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원칙을 유지하면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경제 안보 외교 전략

한국 정부는 2022년부터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공급망 3법을 준비하고, IPEF, MSP, Fab4에도 적극 가담했다.^{444/} 따라서 산업기술폰화 정책과 국내외 협력 강화에 우선적인 외교 전략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 한국에게 가장 시급한 경제 안보 외교의 과제는 핵심광물 수입 같은 수입 취약성 해소와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중러북 블록화 대응이다. 이러한 과제의 추진 역량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안보의 다양한 영역을 관장하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부, 경제안보비서관 사이에 조율과 통일성을 강화해야 한다.

(1) 수입 취약성 해소: 핵심광물 수입원 다변화

한국의 경제 안보 외교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 속 중점 추진과제인 ‘경제 안보 네트워크 확충’이다. 이를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수입 취약성 해소와 중러북 블록화 대응이다.

2023년 5월 26일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원에서 발표한 경제안보지수에서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 개념을 제시했는데, 수출 권력은 주요 수출기업이나 수출제품을 보유한 국가의 경제 강압 수단을 의미하고, 수입 취약성은 공급망 교란 시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로 인한 피해에 취약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은 수

^{444/} 연원호, “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방향,” (2023 NEAR WATCH FORUM 외교안보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 자료집, 2023.9.19.), p. 22.

출 권력은 11위였지만, 공급망 교란에 가장 취약한 수입 취약성 1위 국가였다. 수입 취약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45/}

특히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중 수입의 급증으로 2023년 들어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양극재와 양극 활물질은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하지만, 전구체와 음극재 재료인 흑연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원료 중 수산화 리튬과 코발트, 망간 등도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배터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아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공급 기지 역할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배터리 공급망은 광산, 소재, 부품 생산 등 다양한 지역에 분산 구축될 수밖에 없어 한국은 고부가가치 영역 발굴을 통해 수입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446/}

수입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서 제시한 핵심광물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기후변화와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핵심광물의 수요 급증, 특정국에 매장량과 생산이 집중되고 자원 무기화가 확산되면서 공급 불확실성 확대,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확보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 공급국은 자원국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원수요국은 특정국

445/ “수입 취약성 1위’ 한국, 극복 방안은?” 『SBS 뉴스』, 2023.9.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3936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검색일: 2023.10.26.).

446/ 조철, “배터리 공급망 현황과 위험 분산 전략: 과연 중국 없이 배터리 만들 수 있나?” (한국무역협회-테크엔트레이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23.8.29.), p. 45~49.

의존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장기공급계약, 해외자원개발, 국내생산, 재자원화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핵심 광물의 원료 처리(정제련) 기반 시설이 없어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447/}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는 2030년까지 중국 등 특정국으로부터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를 80%에서 50%로 낮추고,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기존 2%에서 20%대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IEA 회원국 연계, 한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연대, 개별 자원 부국과의 프렌드 쇼어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448/}

예를 들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강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가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급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공급망 다변화 다자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중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449/} 이는 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의 과도한 대중국 광물 의존 상황을 단기간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과 IPEF에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로 안정적 광물 수급을 확보할

447/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2023.2.,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862&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1&dept_v=&search_val_v=> (검색일: 2023.10.26.).

448/ 박한진,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과 중국 의존도: 중국 의존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한국무역협회-테크엔트레이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23.8.29.), p. 62.

449/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p. 87.

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의 채굴과 제련 공정에서 ESG 표준 확립을 공동으로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450/}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가의 광물 비축 의무를 담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기틀을 구축해야 한다.^{451/} 이와 더불어 과거 자원 외교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높은 표준, 더 큰 투명성, 환경 규범 준수, 현지 지역에 낙수 효과 혜택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자원 외교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광물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분간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의 핵심 광물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핵심 광물 전망을 하고 미래에 찾아올 위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핵심 광물의 정제와 제련에는 강하지만 원석 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기때문에, 만약 중국이 원석 광물 수입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는 한국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원석 광물 수입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탈중국 전략으로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알타시아(Altasia)’가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해 제기되었는데,^{452/} 알타시아가 한국 경제안보 전략에 적용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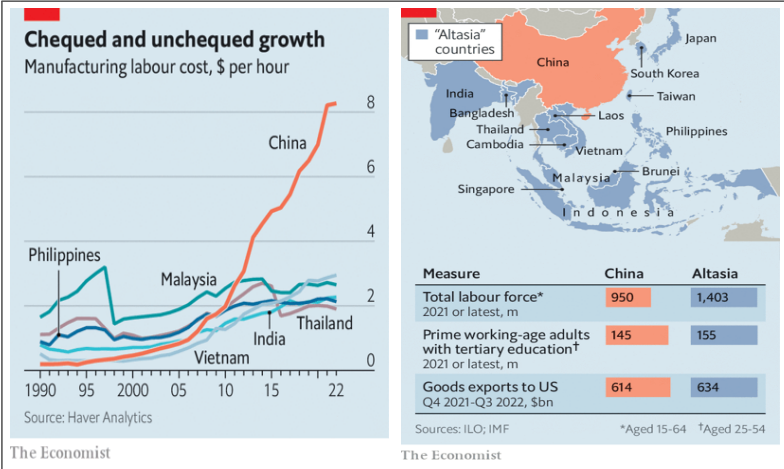
450/ 조철, “배터리 공급망 현황과 위험 분산 전략: 과연 중국 없이 배터리 만들 수 있나?” p. 56.

451/ 황운하 의원 등 14인 의원발의, 2022.8.26.,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2023.9.11., 현재 위원회 심사 중,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0210L8P2M4X1R4Z5Z2W1K2X0B8A9> (검색일: 2023.10.26.).

452/ “Global firms are eyeing Asian alternatives to Chinese manufacturing Can “Altasia” steal China’s thunder?” *The Economist*, 2023.2.20.,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23/02/20/global-firms-are-eyeing-asian-alternatives-to-chinese-manufacturing>> (검색일: 2023.10.26.). 알타시아 외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공급망 교란 위협에 대한 위험 회피 차원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대체 공급망을 개발하는

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그림 V-4 '알타시아(Altasia)'의 제조업 노동 비용(시간당 달러), 전체 노동력 수, 고등 교육을 받은 핵심 취업 연령 성인 수, 대미 재화 수출(십억 달러)



출처: “Global firms are eyeing Asian alternatives to Chinese manufacturing Can “Altasia” steal China’s thunder?” *The Economist*.

(2) 중러북 블록화 대응: 반도체 공급망 블록화 대응

중러북 간 블록화는 제재 무력화와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러 간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호소하고, 이러한 협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대책 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멕시코와 베트남)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 Jami Miscik, Peter Orszag, and Theodore Bunzel, “The U.S.–Chinese Economic Relationship Is Changing—But Not Vanishing How “De-Risking” Can Preserve Healthy Integration,” *Foreign Affairs*, 2023, 5.24.,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us-chinese-economic-relationship-changing-not-vanishing>> (검색일: 2023.10.26.).

립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중국의 화웨이는 7나노미터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를 출시했다. 7나노미터 공정으로 양산된 스마트폰용 AP인 기린 9000s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의해 양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53/}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상쇄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도 필요하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서방 기업들이 많이 철수한 공백을 중국 기업과 제품이 메꾸고 있다.

중국 반도체산업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지역이라는 이점 외에 광반도체와 웨이퍼 분야 경쟁력이 있지만, 숙련된 전문가의 부족, 반도체 제조 장비 부족, AI와 머신러닝에 필요한 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첨단 반도체산업 육성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제재와 동맹국의 공조로 반도체 산업 자금률 제고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 제재로 인한 손실, 미국의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반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중국 반도체산업 혁신 촉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 반도체산업의 완전한 자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범용 반도체 공급망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454/}

이렇게 되면 중국 중심의 범용반도체 공급망이 러시아와 북한에

453/ “미국 뺨 때렸다” 화웨이 7나노, 누구나 낸, 『매일경제』, 2023.9.5., <<https://www.mk.co.kr/news/it/10822938>> (검색일: 2023.10.26.).

454/ 정형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전망,” (한국무역협회-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23.8.29.), pp. 15~18.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대북 제재와 대러 제재가 느슨해지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의 기업 간 거래를 방조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화시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산업에서 중러북의 블록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한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불법 유출되거나 기술 전문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미국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협력은 광범위한 보호무역 조치보다는 안보 목적의 제한된 수출통제로 반도체 기술 수출과 기술 이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455/}

중러 간 협력 외에도 러북 간 경제, 군사협력이 더 강화된다면 이러한 중러북 경제블록화에 대응을 해야 한다. 한국은 우선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중러 주도의 대북 제재 무력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제재 위반이 적발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미일 삼국 주도로 공조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 공급망 협력에 이러한 공조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금융 질서 분야에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456/}

455/ 위의 자료, p. 19.

456/ 이재영,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북·중·러 경제블록화 및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p. 4.

다. 협력 분야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에서 시급한 다자 협력 분야는 조기경보 시스템과 광물과 같은 핵심산업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국제협력은 한국의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중점 산업에서 ESG 표준 제고와 관련된 것이다.

(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글로벌 핵심광물 R&D센터 설립

2023년 7월에 열린 IPEF 4차 공식 협상에서 한국의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개도국 중심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제안했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경제발전 전략,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인 디지털과 콘텐츠 산업 교류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 전수와 같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457/}

수정가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에서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458/} 기본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IPEF, 한미, 한미일에서 합의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

보통 핵심광물을 발굴하고 생산하는데 대략 1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따라서 핵심 광물 관련 신기술, 대체기술, 기후전환

457/ “IPEF 내 선도적 역할로 공급망 위기 대응해야,” 『조선일보』, 2023.8.2., A33면.

458/ 류성걸 의원 등 10인 의원발의 수정가결, 2023.8.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2023.9.11., 현재 체계자구 심사 중, 의안정보시스템.

청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R&D 센터를 설립한다. 이러한 센터를 IPEF와 연계하고, Global South의 참여를 독려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센터는 자원 빈국인 한국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우수한 인프라와 인재를 갖추고 있고, 물가와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에 이러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IPEF 멤버 국가들이 참여하여 R&D센터 설립을 주도하고, 한국은 개도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국은 자원 부국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호주 총영사를 설치하는 등 더 많은 공관을 개설해야 한다. 이러한 공관 설치를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공관은 핵심 광물 관련 고위급 인사 접촉과 교류를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R&D센터는 핵심 인재 육성 정책과 유인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표준 제고

ESG 표준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EU를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재무적 요소인 ESG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고,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에서 ESG 표준 제고가 핵심 협력 분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ESG 위험관리 강화와 국가별 공급망 실사 제도 확대 대응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 코트라 등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중소기업부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를 설립했다.^{459/}

459/ 임소영·양주영·강지현, “글로벌 공급망의 ESG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9, 2022.10.31.), p. 22, <https://www.kiet.re.kr/research/reportView?report_no=1071> (검색일: 2023.9.11.).

표 V-9 국가별 공급망 실사법 현황

| | 법인(시행 연도) |
|------|--|
| | 적용 대상기업, 실사 범위, 제재 |
| EU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2024년 예정) |
| | 역외기업 순 매출과 고위험 분야 기준 적용, 인권 및 환경 실사, 벌금, 행정제재, 민사책임 |
| 영국 | 현대노예제방지법(UK Modern Slavery Act) (2015년) |
| | 영국에서 사업 영위 기업 중 전 세계 매출 기준, 인권 실사, 제재 조항 없음 |
| 미국 | 노예제 근절기업인증법(Slave-Free Business Certification Act) (2020년 발의, 2022년 재발의) |
| | 광업 및 제조 기업 연 매출 기준, 인권 실사 |
| 독일 |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2023년 시행 예정) |
| | 고용 인원 기준, 인권 및 환경 실사, 벌금과 공공조달 퇴출 |
| 프랑스 | 실사의무법(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2017년) |
| | 고용 기준 프랑스 기업, 인권 및 환경 실사, 벌금, 민사책임 |
| 네덜란드 | 아동노동실사법(Child Labor Due Diligence) (2023년 시행 예정) |
| | 서비스 및 상품 판매 공급기업, 인권 실사, 벌금, 징역 |

출처: 임소영·양주영·강지현, “글로벌 공급망의 ESG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KIET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9, 2022.10.31.), p. 53, p. 70.

하지만 공급망에서 ESG 표준 확산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국은 특히 인권과 신장위구르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와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업실사업체인 민츠가 2023년 3월 중국 당국에 의해 압수 수색을 당했고, 이는 이러한 컨설팅업체가 중국 기업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실사를 주로 맡았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중국은 홍콩국가보안법과 대륙에서는 반간첩법을 통해 미국의 기업실사업체가 중국 기업의 ESG 관련 실사를 하지 못하도록 국내법을 통해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중국 국내에서 외국 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을 막기 위해, ESG 표준에 대한 중국 당국

의 이해를 제고하고,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ESG 표준을 선도하는 EU,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추세가 ESG 표준 강화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신장위구르 지역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외국 실사 기업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은 강제노동과 같은 이슈에서 중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거나 실사를 통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EU의 압박이 있으면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EU, 미국 등 전 세계 공급망에서 주요 국가들 간 ESG와 강제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립하여 중국 대 서방의 구도로 ESG 규범 강화가 진영화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에서 ESG 가운데 환경 이슈가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이는 한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미국과 유럽 등 환경을 중시하는 선진국들과의 관계에서 낮은 ESG 평가를 받고있는 중국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 기지로서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460/} 한국 기업과 정부는 높은 ESG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중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 기지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자원부국인 호주의 경우 핵심 광물 중 코발트, 리튬, 망간, 흑연 등이 풍부하고 ESG 평가 등급이 우수하다. 그리고 채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만 중국 시장에 의존적이고 중류와 하류 공급망 미비

460/ 조철, “배터리 공급망 현황과 위험 분산 전략: 과연 중국 없이 배터리 만들 수 있나?” p. 52.

로 규모의 경제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46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호주와 협력한다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핵심 광물 수입처를 확보하고, 핵심 광물의 ESG 표준 제정에 있어서도 미국과 함께 호주와의 공조로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기업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s) - 전자산업, RBA 산하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Drive Sustainability - 자동차산업 등 주요 ESG 파트너십에서 한국 기업들이 ESG 표준 제고를 주도하고 한국의 입장과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환공급망 구축,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급망 추적 정보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등 정책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점 산업인 이차전지에서 업스트림 단계의 ESG 증진과 반도체산업에서 전 주기 관점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462/}

라. 양자 및 다자 협력

양자 및 다자협력에서 산업별로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협력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양자 및 다자협력에서 쟁점은 충돌하는 가치와 진영 사이에서 한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한미, 한미일, Chip4의 공급망 협력은 중국과의 공급망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여 한중과 한일중 공급망 협력에 방해가 될

461/ 박한진,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과 중국 의존도: 중국 의존도 어떻게 낮출 것인가,” p. 63.

462/ 임소영·양주영·강지현, “글로벌 공급망의 ESG 강화 방안,” pp. 192~200.

수 있다. 반면 한중과 한일중 공급망 협력도 한국에게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국제협력이다. 따라서 한국의 우선순위인 한미, 한미일, Chip4의 양자 및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이 한중과 한일중 협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와 후자가 다루는 이슈와 분야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전자는 한국의 핵심 경제안보 협력 분야인 반도체, 핵심광물 등 산업에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ESG 표준 제고에 집중하고, 후자는 요소수 등 범용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교역 안정화 등 이슈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분야와 섹터는 서로 충돌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다음은 한국의 우선순위 별로 시급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제시할 것이다.

(1) 한미 경제안보 협력과 한미일 공급망 협력

한미와 한미일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은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핵심 품목의 연구개발, 부품 조달, 생산과 제조, 교역 유통에 있어 통제와 우위 선점을 목표로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미 간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한미정상회담(2023.4.23.)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등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한미 양국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을 통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463/} 한미 간 새로운 기술 동맹 협의체 도입은 기술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보고, 국가안보를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서 양국 정상의 직

접 관할 아래 둔다는 의의가 있다.^{464/} 한미 기술 동맹 협의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핵심기술 영역에서 표준 설정과 기술 우위 선점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관련 경험을 축적하여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의회가 주목하는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항공우주, 보건 등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미의회 외교를 통해 공급망 관련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납득시키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창설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의 법제화 관련 한미 의원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에서 한미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모든 분야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만약 미국이 리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반도체 제조의 중심이 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기술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보력과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465/}

한미일은 2022년 11월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 안정화와

463/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p. 30.

464/ 이재민, “신흥 기술 분야 미중 경쟁- 그 배경과 함의,” (2023 NEAR WATCH FORUM 외교안보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 자료집, 2023.9.19.), p. 12.

465/ 배영자, “미중 기술 전쟁과 한국의 대응,” (2023 NEAR WATCH FORUM 외교안보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 자료집, 2023.9.19.), p. 27.

첨단기술 및 에너지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2023년 2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국가안보실 간 제1회 경제안보대화에서 신홍·핵심 기술 분야(양자·바이오·우주 등)의 협력과 관련 전문인력 교류 확대, 주요 산업(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술 보호 및 데이터 이동과 보호, 특정 국가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 대응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466/} 한미일이 2023년 7월 19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는 ▲ 경제, 기술, 에너지 안보 협력, ▲ 양자, 우주 기술 등 핵심신홍기술 협력, ▲ 디지털 인프라 및 표준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 ▲ 민감 기술 보호 방안, ▲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운용 방안, ▲ 경제적 강압 대응을 논의했다.^{467/}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한미일은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 산업에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하고, 청정에너지 공급망 내 개도국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Partnership: RISE)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이 개발한 첨단 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혹은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보호 조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범정부 기술 탈취 합동 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 DTSE) 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 및 일본의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공조와 이중용도 기술에 한미일의 기술이 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이

466/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가동...공급망 안정화 등 논의,” 『연합뉴스』, 2023.2.28.,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135300001>> (검색일: 2023.10.26.).

467/ 대통령실, “제2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개최,” 2023.7.19., <<https://www.president.go.kr/download/64b77d8b18793>> (검색일: 2023.10.26.).

리한 기술보호 조치 외에 협력 방안으로 한미일 국립연구소 간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 개방형 무선접속망(RAN) 관련 3국 간 협력 확대, 우주 안보 협력 대화 증진,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 지원 노력 협력에 합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IPEF 협상,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자금을 조달한다.^{468/}

특히 한미일은 AI, 양자컴퓨팅,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을 미래 사회 주도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공동 연구개발사업과 국제표준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AI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469/}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도 한미일은 기술 협력을 위해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이전 지도 관련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 추진을 모색할 것으로 밝혔다.^{470/}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의 향후 과제는 경쟁과 협력의 동시 관리,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기술개발 핵심인 창의성 확보를 위해 정부 개입 수준 설정, 핵심 기술 선정과 집중 등에서 양국 혹은 삼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471/} 마지막으로 한미일의 공급망 협력 강화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첨단기술 부분의 다자 외교 강화가 필요하다.^{472/}

468/ 대한민국 대통령실,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2023.8.18.,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yeE9qWIT>> (검색일: 2023.10.26.).

469/ 이재민, “신흥 기술 분야 미중 경쟁- 그 배경과 함의,” p. 13.

470/ 대한민국 대통령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및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2023.8.18.,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NtwVwRME>> (검색일: 2023.10.26.).

471/ 이재민, “신흥 기술 분야 미중 경쟁- 그 배경과 함의,” p. 14.

472/ 배영자, “미중 기술 전쟁과 한국의 대응,” p. 28.

(2) 한일중 공급망 협력과 한중 공급망 협력

국가안보전략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포함한 당국 간 협의체를 가동하여 환경,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 외에 한일중 공급망 관련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다.^{473/} 한일중 공급망 협력은 한미일의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제외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앞서있는 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인공 지능과 같이 중국이 앞서있는 분야는 한국이 이를 추월할 수 있도록 한일중 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한일중 경제적 유대 강화로 미국을 포함한 한일의 공급망 재편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474/} 이에 대응하여 한일은 한일중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이 러시아 혹은 북한과 멀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러북의 경제블록화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도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한일과 한일중 협력을 통해 중러북의 진영화를 막아야 한다. 한일중을 통해 중러북 경제블록의 핵심인 중국이 소극적이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도 이러한 블록에 가담할 동기가 줄어들다.^{475/}

또한 한일중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관련 한일과 공급망 소통 및 조율이

473/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p. 45.

474/ “社評: 朝鮮半島惡性循環東北亞局勢趨複雜,” 『明報』, 2023.6.3., <<https://news.mingpao.com/pns/%E7%A4%BE%E8%A9%95/article/20230603/s00003/1685731454451/%E7%A4%BE%E8%A9%95-%E6%9C%9D%E9%AE%AE%E5%8D%8A%E5%B3%B6%E6%83%A1%E6%80%A7%E5%BE%AA%E7%92%B0-%E6%9D%B1%E5%8C%97%E4%BA%9E%E5%B1%80%E5%8B%A2%E8%B6%A8%E8%A4%87%E9%9B%9C>> (검색일: 2023.6.12.).

475/ 이재영,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북·중·러 경제블록화 및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중요하고, 한일은 2차전지 핵심 광물 혹은 요소수처럼 범용재에 있어 중국의 공급망 협조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하여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간다”를 한중관계의 외교 전략 요지로 제시했다. 그중에서 국민 체감형 실질 협력 가운데 공급망 관리가 포함되었다.^{476/}

APEC 무역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분야 수장이 만나 공급망 안정, 양자, 지역, 다자협력 강화 관련 의견 교환을 했다. 특히 중국 상무부 측에서 양측의 반도체 공급망 분야 대화 및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재와 부품 등 광범위한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는 등 한중 양측의 발표 내용 강조점이 달랐다.^{477/}

그리고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를 활용하여 한일중 무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관련 대중 정책은 핵심 기술을 제외한 범용/상용 기술 영역에서 중국과의 안정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한미일이 핵심 기술의 범위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중국과의 더 많은 협력 분야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시설의 유지와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시설확장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대중 공급망 협력의 방식으로 기술 분야 협력 가능 영역을 확인하고, 정부는 일반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협력 위주로 진행하며,

476/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p. 38.

477/ “中韩拟加强半导体领域对话与合作#专家：研发方面有合作空间,” 『微博视频号』, 2023. 5. 29., <<https://weibo.com/6221932120/N2PA65TTA>> (검색일: 2023. 6. 12.).

투자 제한 조치 속에서 대중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기존 중국 생산 시설의 한도 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478/}

반도체 분야에서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은 기술은 한미 협력 위주로 하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소비 시장인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범용반도체의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에 모두 수요가 있는 한중의 공급망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물류 운송 부문에서 모니터링, 식량 안보 부문에서 기술과 생산 협력, 수소 환경 부문에서 기술과 생산 협력, 자원 광물 부문에서 기술과 금융협력으로 제3국 투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금융 부문에서 시장개방의 노하우와 공동 금융상품 개발 부문에서 한중 협력이 가능하다.^{479/} 그리고 제품·산업별 차별화된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범용 기술 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기술 무역 거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중국이 수소차 등 분야에서 한국을 통한 일본과의 협력이 아닌 일본과의 직접적인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80/} 이는 동아시아 전통적인 가치사슬 협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간재 생산을 맡아 중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를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공급망 전략 가운데 비대칭적 디커플링

478/ 이재민, “신흥 기술 분야 미중 경쟁- 그 배경과 함의,” (2023 NEAR WATCH FORUM 외교안보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 자료집, 2023.9.19.), p. 15.

479/ 전병서, “동반자에서 ”경쟁자로 전환기“의 한중경제협력,” (미중 전략기술경쟁 속 한중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한중금융산업 포럼 자료집, 2023.8.21.).

480/ 박승찬, “미중 전략기술경쟁과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4가지 제언,” (미중 전략기술경쟁 속 한중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한중금융산업 포럼 자료집, 2023.8.21.).

(asymmetric decoupling)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세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세계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481/}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맞서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일 때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즉 중국이 자립자강으로 반도체의 자기 완결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등 제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여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고사양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미국과의 협력과 협의를 바탕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 혹은 생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Chip4 동맹 협력과 기타 다자 협력

특히 한국 공급망 가운데 핵심 섹터인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 Chip4에 속한 일본과 세계 최강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뿐만 아니라 EU와도 사실상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 반도체 수급 정보와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을 도모했다. 일본 정부 지원으로 일본판 TSMC인 라피더스가 설립됐고, TSMC의 구마모토현 신규 공장 건설 투자비의 4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은 미국 주도의 Chip4 동맹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지정학적 호재, 일본의 비교우위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그리고 기록적인 엔화 약세와 같은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482/}

481/ 김홍중, “미중 갈등과 블록화 속에서 각국의 산업정책동향과 대응방향,” (제13차 NEAR 답론: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자료집, 2023.7.21.), p. 23.

482/ “기본 강한 일본, 칩4동맹·슈퍼 엔저로 반도체 왕국 부활 꿈,” 『중앙일보』, 2023.7.29.~30., 10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일본 및 대만과 주요 경쟁국이기는 하지만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이 서로 달라 협력의 여지와 효과가 크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과 Chip4 동맹,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결합해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역시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대만과는 반도체 산업에서 시스템 반도체 부문, 후공정과 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기술은 3차원 패키징 부문 기술과 고대역 메모리(HBM), 차량용 로직 반도체 기술과 AP 첨단 미세공정 기술 등이다. 협력 방식은 한국 정부가 반도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 후 한국, 일본, 대만 등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세제 혜택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으로, 한국이 이미 가입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에서 싱가포르, EU 등 주요 국가들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아세안+3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함께 경제, 금융, 식량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APEC과 동아시아지역 금융 안정망 강화 등 분야에서 다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다자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한국 핵심 제품의 공급망에 취약성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공급망 대안을 확보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계환·이석기·김수정·강유덕.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세종: 산업연구원, 2022.
- 박민숙.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윤인주·채수란.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방안』. 부산: 해양수산개발원, 2022.
- 이기현·김장호·제성훈.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이석기.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2019.
-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이재영·황태연·반길주·지은주.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이종규.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6.
- _____.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 이호준 외. 『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KDI 개원 50주년기념 연구서』. 파주: 나남, 2021.
- 전재성 외.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2023.

- 최장호·김다을·이정균·최유정.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최장호·최유정.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경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Aiyar, Shekhar et al.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
- Blackwill, Robert D. and Jennifer M. Harris.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 Copeland, Dale C.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Fravel, M. Taylor. *Active defense: China's military strategy since 194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 Gent, Stephen E. and Mark JC Crescenzi. *Market Power Politics: War, Institutions, and Strategic Delay in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Goldstein, Avery Edward Mansfield. *The Nexus of Economics,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 Gowa, Joanne. *Allies, adversaries, and international tra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Lüthi, Lorenz. *The Sino-Soviet Spli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Mansfield, Edward D. *Power, trade, an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Monteiro, Nuno P. *Theory of unipolar politic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Sheffi, Yossi. *The new (ab)normal: reshaping business and supply chain strategy beyond covid-19*. Cambridge: MIT CTL Media, 2020.
- Shirk, Susan L. *Overreach: How China derailed its peaceful ris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 Skålnes, Lars S. *Politics, markets, and grand strategy: foreign economic policies as strategic instrument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Solingen, Etel. *Regional orders at century's dawn: global and domestic influences on grand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Tucker, Paul. *Global Discord: Values and Power in a Fractured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 阎学通 漆海霞. 『中外关系定量预测(Quantitative Forecasts of China's Foreign Relations)』.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2009.
- “Sri Lanka signs deal on Hambantota port with China.” *BBC*, 2017. 재인용: 유현정. 『동남아시아에서 미중 간 지경학적 결합: 현황과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 CEIC. <<https://www.ceicdata.com/ko>>. 재인용: 이종규. 『북한 외 국민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 World Bank Data Bank. <www.databank.worldbank.org>. 재인용: 이호준 외. 『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KDI 개원 50주년 기념 연구서』. 파주: 나남, 2021.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2021年1-6月我对“一

帶一路”沿线国家投资合作情况.” 재인용: 유현정. 『동남아시아에서 미중 간 지경학적 경합: 현황과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2. 논문

- 김기환. “글로벌공급망에서 수출기업의 ESG경영 도입요인과 지원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3권 3호, 2022.
- 김상배. “신홍안보와 메타거버넌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2016.
- 김석우. “무역전쟁의 운명: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55권 5호, 2021.
- 김영근.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 공적 개발원조 ODA 지원 규모추정.”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2008.
- 김현아·정강옥·서진형·조춘한. “국제정세 관점에서의 ESG 동향과 대응전략 비교분석 연구.” 『유통물류연구』. 제9권 1호, 2022.
- 박정민. “남·북·러 경제협력 분석: 진단·예측·정책 제언.” 『북한학연구』. 제16권 2호, 2020.
- 백우열.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 2020년대 안보 맥락에서.” 『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 2022.
- 손호현·김동희·김소정.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 연구: SBOM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2호, 2020.
- 유현정. “미중간 공급망 경쟁과 시사점.” 『국가와 정치』. 28권 1호, 2022.
- 윤정현. “반도체 공급망 안보의 국제정치: 미국의 ‘Fab4(Chip4)’ 제안의 시사점.” 『국가전략』. 29권 1호, 2023.
- 이승주.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정치·정보연구』. 24권 3호, 2021.
- 이영훈·최장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북한 경제 내구력

- 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북한학연구』, 제18권 2호, 2022.
-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중소연구. 제47권 제3호, 2023.
- 이종운.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유라시아연구』, 제11권 제4호, 2014.
- 정승호·김바우. “북한 가공무역의 기술수준 분석: 중국과의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2021.
- 조인호. “기업책임경영(RBC)과 ESG 관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클레임 대응: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89권, 2021.
- 홍현익.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정세와 정책』, 9월호, 2023.
- Budak, Ceren, Sharad Goel, and Justin M. Rao. “Fair and balanced? Quantifying media bias through crowdsourced content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80, S1, 2016.
- Caldara, Dario and Matteo Iacoviello. “Measuring Geopolitical Risk.”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12, no. 4, 2022.
- Chen, Frederick R. “Extended dependence: trade, alliances, and peac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83, no. 1, 2021.
- Chen, Qiuji. “Sino–Rus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R–Economy*, vol. 5, no. 2, 2019.
- Chen, Xianwen and Roberto Javier Garcia. “Economic sanctions and trade diplomacy: Sanction–busting strategies, market distortion and efficacy of China’s restrictions on Norwegian salmon imports.” *China Information*, vol. 30, no. 1, 2016.

- Copeland, Dale C.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A theory of trade expect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1996.
- Covert, Tawnya J. Adkins and Philo C. Wasburn. "Measuring media bias: A content analysis of Time and Newsweek coverage of domestic social issues, 1975-2000."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8, no. 3, 2007.
- Davis, Christina L. and Sophie Meunier.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5, no. 3, 2011.
- Du, Yingxin, Jiandong Ju, Carlos D. Ramirez, and Xi Yao. "Bilateral trade and shocks in political relations: Evidence from China and some of its major trading partners, 1990-201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8, 2017.
- Easley, Leif-Eric and In Young Park. "China's norms in its near abroad: Understanding Beijing's North Korea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5, no. 101, 2016.
- Fan, Liang-Shing. "The economy and foreign trade of China." *Law & Contemp. Probs*, no. 38, 1973.
-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1, 2019.
- Gartzke, Erik, Quan Li, and Charles Boehmer.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2001.
- Gowa, Joanne and Edward D. Mansfield. "Power politics and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2, 1993.

- Guiso, Luigi, Paola Sapienza, and Luigi Zingales. “Cultural biases in economic exchang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4, no. 3, 2009.
- Guo, Liang, Sizhu Wang and Nicole Z. Xu. “U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a loss–loss confrontation.”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vol. 11, no. 1, 2023.
- Hausmann, Ricardo, Jason Hwang, and Dani Rodrik. “What You Export Matter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12, no. 1, 2007.
- Hilsman, Sophia. “Inflation Reduction Act’s Reception by Global Trading Partners.” *CICLR Online*, vol. 53, 2022.
- Johnson, Ian. “Has China Lost Europe? How Beijing’s Economic Missteps and Support for Russia Soured European Leaders.” *Foreign Affairs*, June 10, 2022.
- Kastner, Scott L. “When do conflicting political relations affect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4, 2007.
- Kennedy, Andrew B. and Darren J. Lim. “The innovation imperative: technology and US-China rival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3, 2018.
- Keshk, Omar MG, Brian M. Pollins, and Rafael Reuveny. “Trade still follows the flag: The primacy of politics in a simultaneous model of interdependence and armed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6, no. 4, 2004.
- Kim, Hong Nack. “China–North Korea relations after Kim Jong–Il.”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7, no. 1, 2013.

- Korolev, Alexander and Vladimir Portyakov. "Reluctant allies: System-unit dynamics and China-Russia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3, no. 1, 2019.
- Korolev, Alexander. "Russia in the South China Sea: balancing and hedging."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5, no. 2, 2019.
- Lee, Dong-ryul.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 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2, 2010.
- Liu, Feng and Ruonan Liu. "China, the United States, and order transition in East Asia: An economy-security Nexus approach." *The Pacific Review*, vol. 32, no. 6, 2019.
- Long, Andrew G. "Bilateral trade in the shado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no. 1, 2008.
- Malkin, Anton. "The made in China challenge to US structural power: industrial policy, intellectual property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9, no. 2, 2022.
- Mansfield, Edward D. and Rachel Bronson. "Alliance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1, 1997.
- Mastanduno, Michael. "Economics and security in statecraft and scholarship."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 Morrow, James D., Randolph M. Siverson, and Tressa E. Tabares.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ade: the major powers, 1907-199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3, 1998.

- Nye, Joseph S. "Collective economic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4-)*. vol. 50, no. 4, 1974.
- Oneal, John R., Bruce Russett, and Michael L. Berbaum. "Causes of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885-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no. 3, 2003.
- Peterson, Timothy M. "Reconsidering economic leverage and vulnerability: Trade ties, sanction threats, and the success of economic coerc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7, no. 4, 2012.
- _____. "Dyadic trade, exit cost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4, 2014.
- Polachek, Solomon and Jun Xiang. "How opportunity costs decrease the probability of war in an incomplete information gam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4, no. 1, 2010.
- Schwartz, Herman Mark. "American hegemo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llar centrality, and infrastructural power."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6, no. 3, 2019.
- Shi, Yinhong. "New Games in Tightly Fixed Structures: North Korea's Volatile Desperation and China's Cornered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3, no. 3, 2011.
- Shih, Chih-yu and Chiung-chiu Huang. "Competing for a Better Role Rel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Sino-US Rivalry and Game of Weiqi."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25, 2020.

- Song, Yu, Bo Chen and Na Hou. "Trade Dependence, Uncertainty Expectations, and Sino-US Political Relation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022.
- Steiner, André. "The Council of Mutual Economic Assistance—An Example of Failed Economic Integr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39, no. 2, 2013.
- Sun, Haiyong. "US—China tech war: Impacts and prospects."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5, no. 2, 2019.
- Woolley, John T. "Using media-based data in studies of politic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0.
- Yakovlev, Pavel and Brandon Spleen. "Make concentrated trade not war?"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26, no. 2, 2022.
- Zeng, Ka, Rob Wells, Jingping Gu, and Austin Wilkins. "Bilateral Tensions, the Trade War, and US-China Trade Relations." *Business and Politics*, vol. 24, no. 4, 2022.
- Zeng, Yuleng. "Microchips and sneakers: Bilateral trade, shifting power, and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2023.
-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내달부터는 드론도 제한한다.” 『조선일보』. 2023.8.2., A6면. 재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중소연구』. 제47권 제3호, 2023.
- Baldwin, David.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재인용: 윤대엽.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전략적 결속.” 『아태연구』.

제26권 3호, 2019.

Toshiya, Tsugami. “Three Things to Know About China’s “Economic Security”.” *Nippon*, 2022; 민지윤. “중국, ‘반(反)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 이슈브리프 No. 7, 2021; 최원석·문지영·김영선.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6, no. 28, 2021; “中国商务部：无人机出口管制是国际惯例不针对特定国家.” 『联合早报』, 2023. 재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 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중소연구』. 제47권 제3호, 2023.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Withhold Release Orders and Findings List.” 재인용: 이재영.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중국 요인과 대응전략: 중국의 대내외 공급망 재편 요인과 중국 정부·기업 차원 대응전략.” 『중소연구』. 제47권 제3호, 2023.

3. UN 자료

- UN Security Council, S/2019/171 (2019).
- UN Security Council, S/2020/151 (2020).
- UN Security Council, S/2021/211 (2021).
- UN Security Council, S/2022/132 (2022).
- UN Security Council, S/2023/171 (2023).
- UN Security Council, S/RES/2397 (2017).

4. 기타

『뉴스핌』, 『뉴시스』, 『동아비즈니스리뷰』, 『디지털비즈온』,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메디팜스투데이』, 『보안뉴스』, 『서울신문』, 『시사오늘』, 『시사ON』, 『아시아경제』, 『아시아타임즈』, 『아주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 『자유아시아방송』, 『조선경제』, 『조선비즈』,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경 비즈니스』, 『한국경제』, 『BBC 코리아』, 『Daily NK』, 『Greenium』, 『KBS 뉴스』, 『KTV 국민방송』, 『SBS 뉴스』, 『Voice of America』.

BBC News, BloombergNEF, Bloombergs, Business Insider, Climate Home News, CNN, Cyberscoop, Financial Times, Foreign Affairs, Fortune, Japan Times, Nikkei Asia, Nippon, People's Daily, Politico, Reuters, Russia Briefing, Shine, South China Morning Post, TAIPEI TIMES, The Diplomat, The Economist, The EurAsian Times, The Guardian, The Interpreter, The Maritime Executive, The New York Times, Upstream, Wall Street Journal.

『联合早报』, 『明報』, 『微博视频号』, 『环球网』, 『环球时报』, 『商务部网站』, 『人民日报』, 『中国人大网』, 『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www.ifans.go.kr>.

국회미래연구원 <www.nafi.re.kr>.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대한민국 대통령실 <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대한민국 외교부 <www.mofa.go.kr>.
 동아시아 연구원 <www.eai.or.kr>.
 북한인권포털 <www.unikorea.go.kr/nkhr>.
 산업연구원 <www.kiet.re.kr>.
 세계법제정보센터 <www.world.moleg.go.kr>.
 아산정책연구원 <www.asaninst.org>.
 외교안보연구소 <www.ifans.go.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www.ksm.or.kr>.
 의안정보시스템 <www.likms.assembly.go.kr>.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경제연구학회 <www.akes.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K-stat <www.stat.kita.net>.
 한국은행 <www.bok.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www.nia.or.kr>.
 C&STORY <www.lyrchoi.tistory.com>.
 CSF 중국전문가포럼 <www.csf.kiep.go.kr>.
 KOTRA <www.kotra.or.kr>.
 KOTRA 해외경제정보Dream <www.dream.kotra.or.kr>.

 Analytics Insight <www.analyticsinsight.net>.
 Andrewbatson.com <www.andrewbatson.com>.
 Bennet Institute for Public Policy <www.bennettinstitute.cam.ac.uk>.

- Bruegal <www.bruegel.org>.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ww.carnegieendowment.org>.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www.cnas.org>.
-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www.cset.georgetown.edu>.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ww.csis.org>.
-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www.nationalinterest.org>.
- China Power <www.chinapower.csis.org>.
- CIC Energy Gune <www.cicenergigune.com>.
- Climate Action Tracker: Home <www.climateactiontracker.org>.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ww.cfr.org>.
- Counterpoint <www.counterpointresearch.com>.
- Cyber Security&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www.cisa.gov>.
- Cyber-peace.org <www.cyber-peace.org>.
- Eurasian Rail Allience Index <www.index1520.com>.
- European Commission <www.commission.europa.eu>.
- European Council <www.consilium.europa.eu>.
- European Parliament <www.europarl.europa.eu>.
-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www.eeas.europa.eu>.
- Federal Register <www.federalregister.gov>.
- George C. Marshall Center <www.marshallcenter.org>.
- Global Trade Alert <www.globaltradealert.org>.
- Government of UK <www.gov.uk>.
- Henry M.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www.jsis.washington.edu>.
- HPC Wire <www.hpcwire.com>.
- Huawei <www.huawei.com>.
- Human Rights Watch <www.hrw.org>.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ww.iea.org>.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www.trade.gov>.
Journal of Petroleum Technology <www.jpt.spe.org>.
MERICS <www.merics.org>.
Nationellt kunskapscentrum om Kina <www.kinacentrum.se>.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www.wwww.orfonline.org>.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
President of Russia <www.en.kremlin.ru>.
Public Intelligence <www.publicintelligence.net>.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www.semiconductors.org>.
Senate Democrats <www.democrats.senate.gov>.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www.silverado.org>.
Statista <www.statista.co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ww.sipri.org>.
STOPfakes.gov <www.stopfakes.gov>.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www.aspi.org.au>.
The Brookings Institution <www.brookings.edu>.
The Climate Action Tracker <climateactiontracker.org>.
The GDELT Project <www.data.gdeltproject.org>.
The GDELT Project <www.gdeltproject.or>.
The White House <www.whitehouse.gov>.
The World Bank <www.worldbank.org>.
Tortoise <www.tortoisemedia.com>.
UN <www.un.org>.
US Bureau of Labor Statics <www.data.bls.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www.cbp.gov>.
US department of Commerce <www.bis.doc.gov>.
Ústav pamäti národa <www.upn.gov.sk>.

Wilson Center <www.wilsoncenter.org>.

Worldometer <www.worldometers.info>.

WTO <www.wto.org>.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www.samr.gov.cn>.

北京大学开放研究数据平台 <www.opendata.pku.edu.cn>.

中国人大网 <www.npc.gov.cn>.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www.fta.mofcom.gov.cn>.

中国政府网 <www.gov.cn>.

中国海警局 <www.ccg.gov.cn>.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www.ndrc.gov.cn>.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www.big5.mofcom.gov.cn>.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www.mofcom.gov.cn>.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www.fmprc.gov.cn>.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www.mfa.gov.cn>.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www.stats.customs.gov.cn>.

天大研究院 <www.tiandainstitute.org>.

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www.tuiir.tsinghua.edu.cn>.

김선재.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3.

박지원.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3.

조인호·김찬우. “미중공급망 경쟁에 관한 양적방법론 탐색.”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3.

차정미.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3.

2023 NEAR WATCH FORUM 외교안보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 자료집.

“미중 기술 전쟁과 한국의 대응,” 2023.

INSS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세미나자료집, 2022.

Tech & Trade 포럼 발표자료. “기후변화와 ESG: 동향과 전망,”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4차 북한경제연구포럼자료집.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북한 경제의 대응,” 2023.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한-호주, 한-뉴질랜드 정책대화 자료집, 2023.

제13차 NEAR담론: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자료집. “미중 갈등

및 경제블록화 속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 2023.

한국무역협회-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 주관 세미나 자료집, 2023.

한중금융산업 포럼 자료집. “미중 전략기술경쟁 속 한중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2023.

가상준·정연정.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 연구.” 국회의교통일위원회,

2017.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H.R.5515, 2018.

Chanlett-Avery, Emma and Mi Ae Taylor.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Strengthening American Cybersecurity Act of 2022, S. 3600.

GDELT Event Database 버전 2.0(Gobal Knowledge Graph: GKG).

IHS PIERS Database.

Blanga-Gubbay, M. and S. Rubínov. “Is the global economy

- fragmenting?” WTO. Staff Working Paper, forthcoming.
- 재인용: WTO. “World Trade Report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2023.
- 이주미.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022, 2020). 재인용: 정혜영.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탈중국 현상과 베트남의 공급망 역할(1): GVC의 탈(脫)중국 기업과 베트남 정부의 공급망 강화 노력.” CSF중국전문가포럼, 2021.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 김석진·홍제환 |
|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 최규빈 외 |
|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 이지순 외 |
|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 김수암 외 |
|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 이우태 외 |
|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 민태은 외 |
|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 전병곤 외 |
|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 이재영 외 |
|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 정성윤 |
|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 정은미 외 |
|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 오경섭 외 |
|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 김진하 외 |
|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 홍제환·김석진 |
|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 정은미 외 |
| 2021-15 KINU 통일외교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 이상신 외 |
|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 황수환 외 |
|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 나용우 외 |
|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 김형수 외 |
|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 박영자 외 |
|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 이윤진 외 |
|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신종호 외 |
|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 이기태 외 |
|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 최희식 외 |
|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 박은주 외 |
|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 이재영 외 |

| | |
|--|-------|
|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 장철은 외 |
|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 최지영 외 |
|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 최지영 외 |
|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김갑식 외 |
| 2021-31-01 평화공동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박주화 외 |
|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
|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이무철 외 |
|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정은이 외 |
|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조한범 외 |

〈정책연구시리즈〉

| | |
|--|---------|
|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 이상신 외 |
|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 황진태·백일순 |
|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 황태연 |
|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 이상신·이재원 |

〈Study Series〉

| | |
|---|--|
|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uk-Jin Kim |
|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 Jea Hwan Hong·Suk-Jin Kim |
|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
|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 Soo-Am Kim et al. |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 이규창 외 |
|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 김석진·홍제환 |
|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 이지순·최선경 |
|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 최규빈 외 |
|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 나용우 외 |
|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 나용우·이우태 |
|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 정은이·이해정 |
| 2022-08 북한의 중산층 | 정은미 외 |

| | |
|---|---------|
|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 민태은·박동준 |
|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 황수환·권재범 |
|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 현승수 외 |
|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 조한범 외 |
|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 김상기 외 |
|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 이무철 외 |
|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 장철운 외 |
|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 정성윤 외 |
|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 도경옥 외 |
|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 이재영 외 |
|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2-20 KINU 통일의식조사 2022 | 박주화 외 |
|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 황진태 외 |
|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 김진하 외 |
|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 최지영 외 |
|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 홍 민 |
|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홍재환 외 |
|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 김감식 외 |
|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 박영자 외 |
|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 홍 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 |
|--|-------|
|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 전병근 외 |
|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 박은주 |
|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 민태은 외 |
|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 한동호 외 |
|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 홍 민 외 |

〈Study Series〉

| | |
|--|-------------------------|
|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 Hyeong-Jung Park et al. |
|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 Ji Sun Yee et al. |
|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 Eun Joo Park et al. |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 2023-01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 황진태 |
| 2023-02 |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 김석진 |
| 2023-03 |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3-04 |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 정은이 · 이해정 |
| 2023-05 | 비핵·평화·변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 김갑식 외 |
| 2023-06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 장철운 외 |
| 2023-07 |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 조한범 외 |
| 2023-08 |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 이무철 외 |
| 2023-09 | 한반도 비핵·평화·변영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추진방안 | 현승수 외 |
| 2023-10 |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 이상신 외 |
| 2023-11 |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 나용우 외 |
| 2023-12 |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 나용우 · 이우태 |
| 2023-13 |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 최규빈 외 |
| 2023-14 |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 이지순 외 |
| 2023-15 |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 이재영 외 |
| 2023-16 |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 정성운 · 김민성 |
| 2023-17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 최지영 외 |
| 2023-18 |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 정은미 · 박희진 |
| 2023-19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 조정아 외 |
| 2023-20 |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 박형중 외 |
| 2023-21 |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 조정아 외 |
| 2023-22 |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 박영자 외 |
| 2023-23 | 일본 기사다 정부의 대외전략 | 이기태 외 |
| 2023-24 |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 황수환 외 |
| 2023-25 |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 황태연 외 |
| 2023-26 |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 홍 민 외 |
| 2023-27 |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 홍 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23-01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 오경섭 외 |
| 2023-02 |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 정성윤 외 |
| 2023-03 |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 한동호 외 |
| 2023-04 |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이재영 외 |

〈Study Series〉

| | |
|---------|--|
| 2023-01 |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
| 2023-02 |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
| 2023-03 |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
| 2023-04 |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
| 2023-05 |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

KINU Insight

| | | |
|---------|---|-------|
| 2020-01 |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 2020-02 |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 장철운 |
| 2020-03 |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 김유철 |
| 2020-04 |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최지영 |
| 2021-01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 홍 민 외 |
| 2021-02 |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 홍 민 외 |
| 2021-03 |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 최지영 |
| 2022-01 |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 홍제환 외 |
| 2022-02 |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 정성윤 외 |

북한인권백서

| | |
|---|-------|
| 북한인권백서 2021 | 오경섭 외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 오경섭 외 |
| 북한인권백서 2022 | 이우태 외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 이우태 외 |
| 북한인권백서 2023 | 이우태 외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 2021 | 2022 |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2 | 2023 |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3 | 2024 |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타

| | | |
|------|---|------------|
| 2021 |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 서보혁·옹혜민 엮음 |
| 2022 |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 홍민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 | | | |
|----------------------------------|-----------|----------|--------------|
|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 | 소 속* | |
| 간 행 물* 받 을 주 소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입※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 이메일 서비스 | 수신 () | | 수신거부 () |
| 회 원 구 분* |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성 명 (인)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 업무내용 |
|----------------|--------------|
| (주) 코리아디엠 |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